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521-01



프랑스 형법

2008. 11



법 무 부

발 간 사

법무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했던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형사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형법 총칙의 범죄론·형법론 분야에서부터 형법 각칙 및 각종 형사특별법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중국·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형사법을 국내 법조계·학계와 해당 국가의 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에는 일본 형법을 번역하였고, 금년 3월에는 중국 형사법을, 금년 4월에는 독일 형사법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형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프랑스 신형법전은 1791년의 혁명법전과 1810년의 제국형법전을 기초로 제정되어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정 이후에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3월까지 수십 번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형법을 소개한 이 자료집이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프랑스 형법 제도 연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자료의 번역 및 발간을 위해 애쓴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김택수 교수님, 한라대학교 경영사회대학 손병현 교수님 및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8. 11.

법무부 검찰국장

최동민

목 차

제1부

프랑스 신형법전의 제정 및 개정

- 1. 프랑스 신형법의 제정과정 3
- 2. 프랑스 신형법의 개정과정 6

제2부

법률형식 (Législative)의 형법

제1권 총 칙

- 제1편 형벌법규 13
 - 제1장 일반원칙 13
 -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14
 -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15
 - 제1절 프랑스 영토 내의 범죄 15
 - 제2절 프랑스 영토 외의 범죄 16
- 제2편 형사책임 18
 - 제1장 일반규정 18
 - 제2장 책임면제 및 책임 감경사유 20
- 제3편 형 벌 22
 - 제1장 형벌의 성질 22
 -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22
 - 제1관 중죄의 형벌 22
 - 제2관 경죄의 형벌 23
 - 제3관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28
 - 제4관 위경죄의 형벌 29

제5관 기타 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32
제6관 사회사법이행	42
제7관 보안처분에 의한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45
제2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46
제1관 중죄 및 경죄의 형벌	46
제2관 위경죄의 형벌	48
제3관 특정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50
제2장 형의 집행제도	51
제1절 일반규정	51
제1관 범죄경합에 적용되는 형벌	51
제2관 누범에 적용되는 형벌	53
제3관 재범에 적용되는 형벌	57
제4관 형의 선고	57
제5관 보안기간	60
제2절 형의 인적 개별화 방식	61
제1관 반자유, 시설외처우 및 전자감시 처우	62
제2관 형의 분할	64
제3관 단순집행유예	64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68
제5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75
제6관 형의 면제 및 선고유예	76
제3절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대한 정의	80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84
제1절 시 효	84
제2절 특별사면	85
제3절 일반사면	85
제4절 복 권	86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인류 및 인간에 대한 중죄	88
제1 부속편 반인륜적 범죄	88

제1장 집단살해범죄	88
제2장 기타 반인류적 범죄	89
제3장 공통규정	90
제2 부속편 인류에 대한 범죄	91
제1장 우생 및 복제배아에 관한 범죄	91
제2장 공통규정	92
제2편 인류에 반하는 다른 중죄	93
제1장 사람의 생명에 관한 침해	93
제1절 살 인	93
제2절 과실치사	97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99
제2장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 완전성 침해	101
제1절 고의에 의한 사람의 완전성 침해	101
제2절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성 침해	116
제3절 성적 침해	119
제3의 2절 정신적 학대	123
제3의 3절 폭행영상의 녹화 및 배포	124
제4절 마약거래	124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27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30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31
제1절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	131
제2절 유 기	132
제3절 원조조치의 방해 및 불구조	133
제4절 인체실험	134
제5절 낙 태	134
제6절 자살의 교사	135
제6의 2절 무지 또는 쇠약상태의 기만적 남용	136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37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139
제1절 약취 및 감금	139
제2절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의 탈취	142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3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144
제1절 차별행위	144
제1의 2절 인신매매	146
제2절 매춘영업죄 및 유사범죄	149
제2의 2절 미성년자 또는 특별히 쇠약한 자의 성매매 행위	153
제2의 3절 구걸영업	154
제3절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 및 기숙조건	156
제3의 2절 집단 괴롭힘	157
제4절 사자에 대한 존경의 침해	158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59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60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161
제1절 사생활 침해	161
제2절 인상 침해	163
제3절 무 고	164
제4절 비밀침해	165
제5절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권리 침해	166
제6절 유전적 특질실험 또는 유전자지문식별에 기인한 사람에 대한 침해	171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72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173
제1절 미성년자의 유기	173
제2절 부양의무 불이행	174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175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176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77
제6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84
제7절 자연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보충형	185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186
제1장 절 도	186
제1절 단순절도 및 기증절도	186
제2절 일반규정	190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0
제2장 강 요	192
제1절 강 요	192
제2절 공 갈	195
제2의 2절 강제에 의한 금전요구	195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5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197
제1절 사 기	197
제2절 사기 유사범죄	198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199
제4장 유 용	200
제1절 횡 령	200
제2절 질물(質物) 또는 압류물의 유용	201
제3절 강제집행면탈	202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203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204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204
제1절 장물취급	204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205

제4장 특 칙	232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235
제1장 테러행위	235
제2장 특 칙	239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241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241
제1절 표현, 노동,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침해	241
제2절 불온다중참가	242
제3절 불법시위	244
제4절 무장단체에 관한 죄	24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7
제1절 행정작용 침해	247
제2절 개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	247
제3절 청렴의무 위배	250
제4절 보충형	253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침해	254
제1절 뇌물제공	254
제2절 공무에 대한 협박 및 방해	255
제3절 공물손괴 등의 죄	256
제4절 공무원 모독	257
제5절 공무집행저항	258
제6절 공공사업집행저항	259
제7절 공무집행개입	259
제8절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260
제9절 자격부정사용	260
제10절 자격부정게재	261
제11절 민사신분침해	261
제1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62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264
제1절 사법작용 개시방해	264
제2절 사법권행사에 대한 방해	266
제3절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침해	273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79
제5장 공권력, 유럽공동체법원의 작용, 유럽공동체회원국 및 기타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침해	281
제1절 공권력에 대한 침해	281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81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82
제3관 공통조항	283
제2절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283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83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84
제3관 공통조항	286
제4관 사법행위에 대한 기타침해	286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87
제6장 사적용병활동에의 참여	288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289
제1장 문서위조	289
제2장 통화위조	293
제3장 유가증권위조	297
제4장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299
제5장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부패행위	301
제1절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수동적·능동적부패 ...	301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과 법인의 형사책임	303
제5편 범죄단체조직가담	304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305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305
제1절 인종의 보호	305
제2절 인체의 보호	306
제3절 사람의 배의 보호	312
제4절 기타규정,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316
제2편 기타 규정	317
단일장 중대한 동물학대	317

제6권 위경죄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및 누벨칼레도니에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319
제1장 총 칙	319
제2장 제1권의 적용	320
제3장 제2권의 적용	321
제4장 제3권의 적용	323
제5장 제4권의 적용	323
제6장 제5권의 적용	325
제7장 기타규정	330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	332
제1장 총 칙	332
제2장 제1권의 적용	332
제3장 제2권의 적용	333

제3부
국사원령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4장 제3권의 적용	335
제5장 제4권의 적용	335
제6장 제5권의 적용	337
제7장 기타규정	342

제1권 총 칙

제1편 형벌법규	347
제2편 형사책임	347
제3편 형 벌	347
제1장 형벌의 성질	347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347
제1관 운전면허정지, 차량의 운전 및 이용금지	347
제2관 사회봉사형	351
제3관 시민성연수의 형벌	358
제4관 징벌배상형	361
제5관 악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형	362
제6관 친권자의 책임성연수형	362
제7관 동물의 몰수형	363
제2장 형벌제도	364
제1절 총 칙	364
제2절 형벌개별화의 유형	364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64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365
제2절 특별사면	365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반인류범죄	365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366

제1장 생명침해	366
제2장 사람의 신체적 · 정신적 완전성 침해	366
제3장 사람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366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366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366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367
제1절 사생활 침해	367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371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371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371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371
제1절 장물취급	371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371
제1관 동산등록부 기장의무	371
제2관 기타의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한 등록부 기장의무규정	374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375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375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375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376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376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376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376

제1절 국방을 해하는 죄	376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378
제4장 특 칙	378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378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378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378
제1절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378
제2절 불온다중참가	379
제3절 불법시위	380
제4절 무기단체에 관한 죄	380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0
제3장 사인에 의한 공무 침해	380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380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380
제5편 범죄결사가담	381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381
---------------------	-----

제6권 위경죄

제1편 총 칙	381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382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382
제1절 공연성 없는 명예훼손 및 모욕	382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383
제1절 경미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383
제2절 위험한 동물의 방치	384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384

제1절 폭행의 협박	384
제2절 소음의 발생	384
제3절 위험한 동물 이용행위	385
제4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거래 ...	385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385
제1절 경미한 폭행	385
제2절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386
제3절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및 모욕	387
제4절 취학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무위반	388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389
제1절 폭 행	389
제2절 과실에 의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390
제3절 차별행위 등의 교사	391
제4절 유객행위	392
제5절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거래	392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393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393
단일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393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394
단일절 오물 등의 방치	394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395
제1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395
제2절 기타의 동산거래 규제위반	395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396
제1절 생명위해의 우려 없는 파괴 등의 협박	396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397
제1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397
제2절 강매형식의 통신판매	398

제3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398
제4절 오물 등의 방치	399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400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400
단일절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방치	400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401
제1절 사법·행정기관의 요청 불응	401
제2절 통화에 대한 침해	401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403
제1절 공권력이 전용하는 표장의 남용	403
제2절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404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404
제1절 무허가 군사시설 접근	404
제2절 도로교통 방해	405
제3절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 규제위반	405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406
제1절 반인류행위의 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부착	406
제2절 군사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진촬영 등	407
제3절 사람의 민사신분에 대한 침해행위	407
제4절 재판상 증거서류 부정취득	408
제5절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409
제5의 2절 조정위원 칭호 또는 지위의 참칭	409
제6절 위조·변조된 통화표시물의 인도거부	410
제7절 사용된 우표 또는 인지 등의 위조·변조	411
제8절 학교시설침입	412
제5편 기타의 위경죄	413
제1장 제1급 위경죄	413
제2장 제2급 위경죄	413

제3장 제3급 위경죄	413
단일절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413
제4장 제4급 위경죄	414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414
제5장 제5급 위경죄	414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414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415
제1장 총 칙	415
제2장 제1권의 적용	416
제3장 제2권의 적용	418
제4장 제3권의 적용	418
제5장 제4권의 적용	418
제6장 제5권의 적용	418
제7장 제6권의 적용	419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	419
제1장 총 칙	419
제2장 제1권의 적용	419
제3장 제2권의 적용	421
제4장 제3권의 적용	421
제5장 제4권의 적용	422
제6장 제5권의 적용	422
제7장 제6권의 적용	422

부록

• Code pénal	423
--------------------	-----

제 1 부

프랑스 신형법전의 제정 및 개정

【프랑스 신형법전의 제정 및 개정】

1. 프랑스 신형법의 제정과정

오늘날의 프랑스 형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형법전(le Nouveau Code Pénal)에 의거하는 데 이 신형법전의 모태는 프랑스 최초로 형법의 법전화를 도모했던 1791년의 혁명법전과 1810년 2월 12일에 제정되어 부분 개정을 거듭하면서 1994년 2월말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제국형법전이다.

프랑스의 구 형법전에 해당하는 1810년에 제정된 형법전은 18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당시 유럽 여러 국가들의 형사입법의 모델이 되었다. 구 형법전의 내용에는 Montesquieu의 신봉자였던 이탈리아의 Beccaria의 ‘죄형균형론’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하여 범죄인의 처벌은 사회방어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해져야한다는 영국의 Bentham의 사상이 함께 내포되었다는 점이 혁신적인 형법모델의 이미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19세기말부터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형법전의 개혁을 프랑스정부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모색해온 끝에 1992년 7월 22일자 네 가지의 법률과 1993년 3월 29일자 최고 행정재판소로써의 기능과 정부에 대한 행정자문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사원(le Conseil d'Etat)명령을 모태로 하여 프랑스 신형법전이 구비되어 1994년 3월 1일부터 신형법전의 시행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 형법전은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명령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법률편의 조항에는 단순히 조문번호(숫자)만 기재되지만 규정편의

조항은 그것이 국사원의 명령임을 알려주기 위해 조문번호 앞에 명령임을 뜻하는 R(Réglement)을 붙여서 나타낸다. 이렇게 형법전이 두 가지의 편으로 나뉜 것은 형법 제111-2조에 제1항에 의거해서, “법률은 중죄와 경죄를 규정하며 이러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적용할 형벌을 결정한다”고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국사원 명령은 위경죄를 규정하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위경죄 위반자에게 적용할 형벌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형법전의 명령편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법률편에 연이어서 위치 하며 일반적 형법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제1권부터 제5권)과 위경죄목록(제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두 가지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보다 엄한 처벌이 예견되는 경우의 법률의 불소급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프랑스 형법은 중죄(le crime), 경죄(le délit), 위경죄(la contravention)의 범죄 삼분법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네 종류의 법원이 관할한다. 법익의 침해가 중대한 중죄는 중죄법원(la cour d'assises)에서, 법익의 침해가 다소 경한 경죄는 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에서, 법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경죄는 위경죄법원(le tribunal de police) 또는 인접법원(la juridiction de proximité)에서 관할한다. 만약 피의자가 여러 범죄로 재판 받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신형법전을 제정하려는 입법안은 원래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발레리 지스까르 테스팅(Valéry Giscard d'Estaing)에 의해 지명된 입법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당시 형사법학계의 입법안에 대한 심한 비판으로 포기되었다. 1981년 5월에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당인 사회당이 주도하는 여러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호베르 바덴테르(Robert Badinter)가 법무부장관직을 5년 동안 역임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여러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를테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프랑스 국내법원 뿐 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형 대신 일수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구금형의 대체형벌을 도입하는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법제들의 변화로 인하여 형법전을 전면개정할 필요성이 다시금 인정되었다.

신형법초안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되었다. 1991년 표결된 초안의 내용은 보수적 색채를 지닌 상원의회의 영향으로 원래의 입법초안보다는 다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제 또는 범죄 진압을 위해 부수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가결한 억압적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결국 1992년 7월 22일자 법률을 통해 의회를 통과하여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적인 개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9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의 화폐로 도입된 유로(Euro)화폐가 그동안에 사용되던 프랑스 프랑(France Franc)화폐를 대신하게 되어 형법전상의 벌금형도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2000년 9월 19일자 법률명령(Ordonnance) 제2000-916호에 의거하여 일괄 유로로 변경되었다(형법전의 번역내용 중 단순히 벌금액이 유로로 바뀐 점을 명시하는 상기의 법률명령 제2000-916호의 표기는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신형법전은 1810년 구형법전의 부분개정을 통한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상당한

기간의 형사입법적인 숙고와 그에 따른 입법화 준비단계를 거쳐 현대라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하나의 혁신적 새로운 형법전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신형법전의 구성은 형식상 법률형식(Législative)의 제1부와 명령형식의 국사원령(Décrets en Conseil d'Etat)의 제2부로 나뉘어져있으며 내용상 현재 7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 제1권 : 총칙(1992년 7월 22일자 법률 제92-683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2권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1992년 7월 22일자 법률 제92-684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3권 :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1992년 7월 22일자 법률 제92-685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4권 :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1992년 7월 22일자 법률 제92-686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5권 : 기타의 중죄 및 경죄(1992년 12월 16일자 법률 제92-1336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6권 : 법률편이 아닌 국사원령에 위치하는 위경죄(1992년 12월 16일자 법률 제92-1336호에 의거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7권 : 프랑스령 해외에도 적용되는 규정(법률명령 제96-267호에 의거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

2. 프랑스 신형법의 개정과정

신형법전이 시행된 이후에도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의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성범죄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신중

범죄에 대처할 필요성과 형사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형사절차법에 관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마찬가지로 실체형법에 관한 규정들도 새롭게 신형법전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프랑스의 경우 형사법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식은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와 같이 형사특별법이 형법과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형법전에 그대로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형법전은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범죄를 규율하는 구성요건체계와 형벌체계가 통일적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형사법의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신형법전의 제정 이후에 2008년 3월까지 수십 번에 걸쳐 형법전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곤란하여 형법전의 주요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에 대하여만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가. 1998년 6월 17일자 법률 제98-468호 -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유전자은행의 설치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고될 수 없는 보충형을 재정비하였으며 누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처분의 하나인 사회사법 이행조치(*suivi socio-judiciaire*)를 신설하였다. 또한 해외섹스관광을 처벌하기 위하여 프랑스인이 외국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프랑스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신설하였다.

나. 2002년 1월 17일자 법률 제2002-73호 - 사회적 현대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정신적 학대에 관한 범죄행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 2002년 9월 9일자 법률 제2002-1138호 - 사법의 방향성 및 프로그램화에 관한 법률

률초안을 제안할 당시 법무부장관(Dominique Perben)의 이름을 따라 일명 ‘Perben I법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형법전 제122-8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라. 2003년 3월 18일자 법률 제2003-239호 - 내무치안에 관한 법률

2007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직을 역임하는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2003년 법률초안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일명 ‘Sarkozy II법률’로 알려져 있는 이 법률은 이전까지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극적인 호객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위협적인 구걸행위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 2003년 6월 12일자 법률 제2003-495호 - 도로안전의 강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 운전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피해를 가한 경우 및 인명사고의 누범에 대하여 종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교육의 이수를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2004년 3월 9일자 법률 제2004-204호 - 범죄 진화에 대한 사법의 적응에 관한 법률

일명 ‘Perben II법률’로 알려져 있는 이 법률은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잠입수사 및 감청 등의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자수자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확대하였다. 특히 조직범죄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사. 2005년 12월 12일자 법률 제2005-1549호 - 누범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누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관찰부 기소유예의 선고를 제한 하며 특정 범죄에 대하여 전자 팔찌의 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죄 및 3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죄의 누범에 대하여 최소 형량을 정하여 최초의 누범에 대하여는 최소 형량 이하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누범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 2007년 3월 5일자 법률 제2007-297호 -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년범죄의 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가정폭력, 성범죄, 마약류의 투약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개별화하여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형을 판사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폭력을 가중처벌하고 폭력적 또는 선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하며 누범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마약류의 투약자에 대해 판사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랑스 신형법전 번역본의 내용에서 특별히 법전의 명칭을 쓰지 않고 조문만을 쓴 경우는 모두 프랑스 형법의 조문을 지칭한다.

이 번역본은 2008년 3월 7일까지 개정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번역하였으며 프랑스 형법전의 개정 및 보완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제 2 부

법률형식(Législative)의 형법

제1권 총 칙

제1편 형벌법규

제1장 일반원칙

제111-1조 【범죄의 분류】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중죄, 경죄 및 위경죄로 분류한다.

제111-2조 【범죄 및 형벌의 규정】 ① 중죄와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② 위경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은 법률이 정하는 한계내의 구별에 따라 명령으로 정한다.

제111-3조 【죄형법정주의】 ① 누구든지 구성요건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구성요건이 명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위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범죄가 중죄 또는 경죄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위경죄인 경우에는 명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11-4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11-5조 【형사법원의 잠재관할 및 권능】 형사법원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의 해결이 법규적 또는 개별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에 달려있는 경우 그것을 해석하고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제112-1조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①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만 처벌할 수 있다.

② 행위시에 적용 가능한 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제112-2조 【즉시 적용되는 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들은 본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즉시 적용된다.

1. 재판관할 및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 다만 제1심법원에서 실제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형사소추의 방식 및 재판진행의 형식을 정하는 법률
3. 형벌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법률, 다만 형을 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 선고되는 유죄판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12-3조 【상소에 관한 법률】 상소의 종류 및 상소기간, 상소권자의 자격 등 상소요건과 관련된 법률은 그 법률 시행 후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에 적용된다. 상소는 상소제기 당시 효력을 가지는 절차규정에 따른다.

제112-4조 【형벌법규의 즉시적용의 효과】 ① 신법의 즉시 적용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제113-1조 【프랑스영토】 본장의 적용에 있어 프랑스의 영토는 그 부속해역 및 영공을 포함한다.

제1절 프랑스 영토 내의 범죄

제113-2조 【속지주의】 ① 프랑스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 ② 범죄 구성사실중의 일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13-3조 【선박에 관한 기국주의】 프랑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동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선박의 위치와 관계없이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하며, 프랑스 해군의 선박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동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선박의 위치에 관계없이 프랑스 형벌법규만을 적용한다.

제113-4조 【항공기에 관한 기국주의】 프랑스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동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위치와 관계없이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하며, 프랑스 군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동 군항공기에 대하여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위치와 관계없이 프랑스 형벌법규만을 적용한다.

제113-5조 【국외범의 공범】 프랑스 및 외국 법률에 의하여 동시에 중죄 또는 경죄로 처벌되는 범죄가 외국에서 행하여지고 외국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해 확인된 때에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에 대하여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제2절 프랑스 영토 외의 범죄

제113-6조 【적극적 속인주의】 ①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의 영토 외에서 행한 중죄에 대하여는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②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영토 외에서 행한 경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③ 행위자가 범행 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조를 적용한다.

제113-7조 【프랑스 국민에 대한 국외범】 피해자가 범행당시에 프랑스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 또는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 외에서 행한 중죄 및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에 대하여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제113-8조 【소추요건】 제113-6조 및 제113-7조의 경우에 경죄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소추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나 그 승계인의 고소 또는 범죄지 국가당국에 의한 공식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제113-8-1조 【범죄인인도의 거부】 ① 제113-6조 내지 제113-8조의 적용에 영향 없이, 프랑스 형벌법규는 범죄인인도 요구의 이유가 된 행위가 프랑스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처해지거나, 대상인이 절차 및 방어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 보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해당국가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되거나, 대상행위가 정치적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경우의 사유로서 프랑스 당국이 범죄인인도 요청을 거부한 외국인에 의해 프랑스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모든 중죄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경죄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언급한 범죄에 대한 소추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제기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던 범죄지 국가당국의 공식 고발이 있어야 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113-9조 【이중처벌의 금지】 제113-6조 및 113-7조의 경우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 또는 그 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받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추할 수 없다.

제113-10조 【프랑스에 대한 국외범】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본법 제4권 제1편에 규정된 중죄 또는 경죄, 국채, 화폐, 은행권, 국공채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으로서 제442-1조, 제442-2조, 제442-5조, 제442-15조, 제443-1조 및 제 444-1조에서 규정된 범죄 및 프랑스의 외교나 영사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그 시설에 대하여 행하여진 모든 중죄나 경죄에 대하여는 프랑스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2001.12.11. 개정, 법률2001-1168>

제113-11조 【프랑스에 등록되지 않은 항공기에 대한 중죄·경죄】 ① 프랑스에

등록되지 아니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동 항공기를 상대로 행하여진 중죄 또는 경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13-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는 경우
2. 항공기가 중죄 또는 경죄 후에 프랑스에 착륙한 경우
3. 항공기가 프랑스의 주된 영업지 또는 거주지를 둔 자에게 승무원 없이 대여된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경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은 제113-6조 제3항 및 제113-7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1992.12.16. 신설, 법률92-1336>

제113-12조 【영해 외 범죄】 프랑스 형벌법규는 국제조약 및 법률이 그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영해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적용한다.<1996.02.26. 신설, 법률96-151>

제2편 형사책임

제1장 일반규정

제121-1조 【자기행위책임의 원칙】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제12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구 또는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기구는 위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¹⁾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③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121-3조 제4항 규정의 유보 하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정범 또는 공범이 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21-3조 【고의처벌의 원칙】 ① 중죄나 경죄를 범할 의사가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타인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하는 때에도 경죄가 성립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부주의, 태만 또는 법령에 규정된 신중 또는 안전의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임무 또는 직무의 속성, 자신의 능력 및 그가 처분할 수 있었던 권한 및 수단들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정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마찬가지로 경죄가 성립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피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상황에 기여하였거나 그런 상황을 조성한 자연인 또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자연인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신중 또는 안전의 특별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무시할 수 없는 특별히 중대한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구체적 과실을 범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경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07.10. 개정, 법률2000-647>

1)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물의 공급, 학교급식의 공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121-4조 【정범】 범죄의 정범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범죄를 실행한자
2. 중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경죄를 실행하려고 한 자

제121-5조 【미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상황의 이유로 중단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를 구성한다.

제121-6조 【공범의 처벌】 제121-7조에서 규정하는 공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21-7조 【공범의 범위】 ① 중죄나 경죄의 공범이라 함은 정을 알면서 원조나 지지에 의하여 중죄나 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를 말한다.

- ② 공여, 약속, 협박, 명령 또는 직권이나 권한의 남용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거나 지시한 자도 공범으로 본다.

제2장 책임면제 및 책임 감경사유

제122-1조 【책임무능력, 한정책임능력】 ① 행위 시에 정신장애 또는 신경성 정신장애로 사리분별 또는 행위의 통제를 상실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 ② 행위 시에 정신장애 또는 신경성 정신장애로 사리분별 또는 행위의 통제가 곤란하였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한다. 다만, 법원은 형벌을 결정하고 그 집행조건을 정함에 있어 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2-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강제의 영향 하에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제122-3조 【법률의 착오】 불가피한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제122-4조 【정당행위】 ①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허용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하여 지시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5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그 즉시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다만, 이용된 방위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산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살인²⁾이외의 방위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이 경우 방위행위는 이용된 수단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하며 추구된 목적을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122-6조 【정당방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야간에 문호·장벽의 손괴, 폭력 또는 속임수의 방법으로 사람이 현주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격퇴하는 행위
2. 폭력을 수반한 절도³⁾나 약탈 행위자에 대하여 자기를 방위하는 행위

2) 여기서 살인(l'homicide volontaire)이라함은 우리 형법상 '살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2권 제2편 제1장 제1절에 규정된 보통살인, 가중보통살인, 모의살인, 독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제311-1조의 각주 참조.

제122-7조 【긴급피난】 자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현재 또는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다만, 이용된 수단과 위협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8조 【미성년자】 ① 분별력 있는 미성년자는 유죄로 인정된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호, 지원, 감시 및 교육 처분들을 규정한 특별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들 하에서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법률은 연령상의 이유로 누릴 수 있는 책임의 감경을 고려하여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선고될 수 있는 교육적 제재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처할 수 있는 형벌을 아울러 정한다. <2002.09.09. 개정, 법률2002-1138>

제3편 형 벌

제1장 형벌의 성질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1관 중죄의 형벌

제131-1조 【중죄의 형벌】 ① 자연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중죄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징역형 또는 금고형⁴⁾

4) 징역형(la réclusion criminelle)과 금고형(la détention criminelle)은 중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자유형으로써 징역형은 보통법(le droit commun)상의 죄를 범한 경우, 금고형은 정치적 범죄(l'infraction politique)를 범한 경우에 부과한다.

2. 3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3.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4.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 ②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의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31-2조 【벌금형 또는 보충형의 병과】 벌금형 및 제131-10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은 중죄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병과할 수 있다.

제2관 경죄의 형벌

제131-3조 【경죄의 형벌】 자연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경죄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구금형
2. 벌금형
3. 일수벌금형
4. 시민성교육
5. 사회봉사형
6.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7.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
8. 징벌배상형<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4조 【경죄의 구금형의 단계】 경죄에 부과하는 구금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0년 이하
2. 7년 이하

3. 5년 이하
4. 3년 이하
5. 2년 이하
6. 1년 이하
7. 6월 이하
8. 2월 이하<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131-5조 【일수벌금형】 법원은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수벌금형은 일정 일수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하는 1일 벌금부과액으로부터 산출되는 총금액을 피고인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며 1일 부과액은 1,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일수벌금형의 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60일을 초과할 수 없다.⁵⁾<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5-1조 【시민성교육】 법원은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시민성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민성교육의 세부 절차, 기간, 내용은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지며, 사회가 토대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공화국적 가치를 경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비용이 위경죄 제3급의 벌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 교육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 형벌은 시민성교육을 거부하거나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될 수 없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5) 일수벌금형은 제131-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으나 사회봉사형, 벌금형,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과는 병과될 수 없으며, 개별 법률이 법정형으로 직접적으로 일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라면 구금형의 대체형벌로써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LARGUIER J., Droit pénal général, Mémentos Dalloz, 21éd., 2008, p. 156)

제131-6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박탈형이나 권리제한형 중 하나 또는 수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5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다만, 운전면허정지는 국사원령⁶⁾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한정은 보충형으로 선고되는 운전면허정지가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에 한정할 수 없는 경죄에는 불가능하다.
2. 5년 이하의 특정차량운전금지
3.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의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취소
4. 피고인이 소유하는 하나 또는 수대의 차량몰수
5. 국사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피고인 소유의 하나 또는 수대의 차량에 대한 1년 이하의 운행금지
6.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소지 또는 휴대 금지
7.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몰수
8.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의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취소
9.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및 지불카드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언론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 할 수 없다.

6) 원문은 'Decrets en Conseil d'Etat'로써 국사원(le Conseil d'Etat)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을 말한다. 국사원은 종래 '국참사원'으로 번역되었으나, 국가법령안의 제정 등에 관하여 이를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과 행정재판의 중심으로써의 기능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위원회', '최고행정심의원' 등으로 번역하할 수도 있겠으나 종래의 예와 프랑스어 상의 명칭을 존중하여 본 프랑스 신형법전에서는 '국사원' 및 '국사원령'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11. 의도적으로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으로 인한 편의를 범죄의 준비 또는 실행에 이용한 경우 그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에 대한 5년 이하의 수행금지. 다만, 선거에 의한 위임사무 또는 노동조합의 책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할 수 없으며, 언론범죄의 준비나 실행과 관련된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 역시 금지할 수 없다 .
12.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범행 장소 및 법원이 결정하는 일정장소 또는 일정부류의 장소의 출입금지
13.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법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일정한 유죄선고인 특히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과의 접촉금지
14.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법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일정한 사람 특히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금지<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7조 【벌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벌금형에만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8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사회봉사형】 ① 법원은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공법상의 법인이나 사회봉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면서 공역무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에서 40시간 내지 210시간의 무보수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형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형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8-1조 【징벌배상형】 ①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에 대하여 법원은 구금형을 대체하거나 또는 구금형과 동시에 징벌배상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죄가 본형으로서 벌금형으로만 처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징벌배상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간 내에 법원이 정하는 세부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이다.

③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의하에 배상은 현물로 집행될 수 있다. 배상은 따라서 범행의 기회에 피해를 입은 재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있다. 원상회복은 유죄선고인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직업인에 의해 실현된다.

④ 배상의 집행은 지방검찰청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한다.

⑤ 징벌배상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형의 최고일수 또는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최고 금액을 정한다. 형벌적용판사는 만일 유죄선고인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전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경죄가 벌금형으로만 처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액수만을 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결정의 선고 후에 유죄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1-9조 【병과금지】 ① 구금형은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이나 권리제한형, 사회봉사형과 병과하여 선고될 수 없다.

② 제131-5-1조, 제131-6조 또는 제131-8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구금형의 최고기간 또는 벌금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는 유죄선고인이 선고된 형에 기인한 의무 또는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은 결정의 선고 후에 유죄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법원이 정하는 구금형 또는 벌금형은 유죄판결에 선고되는 경죄 및 형법 제434-41조에 규정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을 적용하는 경우 형법 제434-4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일수벌금형은 벌금형과 병과하여 선고될 수 없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관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제131-10조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중죄나 경죄에 대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자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보충형에는 금지, 실권, 권리무능력 또는 권리의 취소, 치료 또는 의무부과 명령, 물건의 이동금지 또는 몰수, 동물의 몰수, 영업소의 폐쇄, 언론매체 또는 기타 모든 전기통신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등이 포함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11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① 경죄가 제131-10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보충형만을 선고하거나 본형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따라서 구금형의 최고기간 또는 벌금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선고인이 선고된 형에 기인한 의무 또는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은 결정의 선고 후에 유죄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법원이 정하는 구금형 또는 벌금형은 유죄판결에 선고되는 경죄 및 형법 제434-41조에 규정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을 적용하는 경우 형법 제434-4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관 위경죄의 형벌

제131-12조 【위경죄의 형벌】 ① 자연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위경죄의 형벌⁷⁾은 다음과 같다 .

1. 벌금형
2. 제131-14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3. 제131-15-1조에 규정된 징벌배상형

② 전항의 형벌에 제131-16조 및 제137-17 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을 병과할 수 있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13조 【위경죄 벌금형의 액】 법률이 3,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위경죄를 구성한다.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급 위경죄에 대하여 38유로 이하
2. 제2급 위경죄에 대하여 150유로 이하
3. 제3급 위경죄에 대하여 450유로 이하
4. 제4급 위경죄에 대하여 750유로 이하
5.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1,500유로 이하. 다만, 법률이 위경죄의 누범을 경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에 의하여 누범에 대하여는 3,000유로 까지 가중할 수 있다.<2005.01.26. 개정, 법률2005-47>

제131-14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모든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권리 박탈형 이나 권리제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7) 신형법의 채택으로 위경죄에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한정은 보충형으로 선고되는 운전면허 정지가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에만 한정할 수 없는 위경죄에는 불가능하다.

2. 6월 이하의 피고인 소유의 하나 또는 수대의 차량운행금지
3.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물수
4. 1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의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1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및 지불카드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
으로 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언론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06.12. 개정, 법률2003-495>

제131-15조 【병과금지】 ① 벌금은 제131-14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이나
권리제한형과 병과하여 선고 될 수 없다.

② 동조에 규정된 권리제한형 또는 권리박탈형은 병과하여 선고될 수 있다.

제131-15-1조 【징벌배상형】 ① 모든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형을
대체하거나 동시에 제131-8-1조에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라 징벌배상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법원은 1,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벌금액을
정한다. 형벌적용판사는 만일 유죄선고인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1-16조 【위경죄에 대한 보충형】 위경죄를 규정하는 명령은 피고인이 자연인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을 정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다만, 운전면허정지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한정을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소지 또는 휴대 금지
3.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3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6. 면허가 필요 없는 운전도 포함하여 3년 이하의 일정 육상자동차의 운전금지
7.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 이수 의무
8. 경우에 따라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시민성교육의 이수 의무
9.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제131-35-1조가 정하는 세부절차에 따른 친권자 책임성교육의 이수 의무
10. 범행에 이용되거나 대상이 된 동물의 몰수
11. 3년 이하의 동물 점유금지<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17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수표발행 금지, 사회봉사형】 ① 제5급 위경죄를 규정하는 명령은 3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를 보충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5급 위경죄를 규정하는 명령은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보충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1-18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위경죄가 제131-16조 및 제131-17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두 조문에 규정된 보충형 중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관 기타 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제131-19조 【수표의 발행금지】 ① 수표의 발행금지는 피고인 또는 그 수임자가 소지하는 수표용지를 교부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한다 .

②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보충형으로써 수표의 발행금지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지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1-20조 【지불카드의 사용금지】 ① 지불카드의 사용금지는 피고인 또는 그 수임자가 소지하는 지불카드를 교부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한다.

②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보충형으로써 전항의 사용금지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1-21조 【몰수】 ① 법률이나 명령이 정하는 경우에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몰수는 중죄 및 언론에 관한 경죄를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하는 경죄에 대해 필요하다.

② 몰수는 선의취득자의 권리유보 하에 재물의 분할가능여부,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유죄선고인 소유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몰수는 또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성질의 재물을 제외하고 범죄의

대상이거나 또는 직·간접적인 산물인 모든 재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만일 범죄의 산물이 하나 또는 수개의 재물취득을 위하여 본래 합법적인 자본과 혼합된 경우에 몰수는 이 산물의 평가가액에 상당하는 재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몰수는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명령이 정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한 중죄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의 경우에 몰수는 분할가능여부,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를 불문하고 몰수가 고려된 재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에도 그 출처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죄선고인 소유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중죄 또는 경죄를 규정하는 법률이 예정하는 경우에 몰수는 또한 재물의 성질, 분할가능여부,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를 불문하고 유죄선고인의 재물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⑦ 법령에 의하여 위협하거나 해를 줄 수 있는 물건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에 대하여 유죄선고인의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몰수는 필요하다.

⑧ 몰수된 물건이 압수되거나 제출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사법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⑨ 몰수된 물건은 그 폐기 또는 귀속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게 설정된 물권은 그 가액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지 않는다.

⑩ 몰수된 물건이 차량으로서 소송 중에 압수 또는 견인되지 않은 경우에 유죄선고인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 차량을 폐기 또는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21-1조 【동물의 몰수】 ① 보충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동물 한 마리 또는 일정 부류의 동물에 대한 몰수는 범행 또는 범행의 기도에 사용되거나 범행의 대상이 된 동물에 한정한다.

② 몰수는 동물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었거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 유죄선고인의 소유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동물에 국한한다.

③ 동물의 몰수를 신고하는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협회 또는 재단에 동물을 인계하여 자유롭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이 소송 중에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유죄선고인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1-21조 제4항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동물이 소송 중에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몰수를 신고하는 법원은 유죄선고인의 비용으로 보호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위험한 동물의 경우 법원은 경우에 따라 유죄선고인의 비용으로 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1-21-2조 【동물의 소지금지】 보충형으로 동물의 소지 금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일정 동물 또는 일정부류의 동물에 한정할 수 있다. 만일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이 금지는 확정 또는 한시적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5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1-22조 【사회봉사형】 ① 사회봉사형을 신고하는 법원은 18개월을 한도로 사회봉사형의 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은 사회봉사가 완수된 때 종료되며 기간의 진행은 의료, 가족, 직업 또는 사회상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될 수 있다. 기간의 진행은 유죄피고인이 수감된 기간 또는 국가의무를 다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사회봉사형 및 기간정지의 집행방법은 사회봉사형을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가 결정한다. 사회봉사형을 받은 자가 프랑스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속하는 형벌적용판사가 이를 결정한다.

③ 도로교통법전에 규정된 경죄에 대하여 또는 제221-6-1조, 제222-19-1조, 제222-20-1조 및 제434-10조에 근거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담당하는 전문화된 기관에서 사회봉사형을 우선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규정된 기간 중에 유죄선고인은 제132-55조가 규정하는 통제조치에 따라야 한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1-23조 【근로규정과 사회봉사형】 사회봉사형의 수행은 야간근로, 위생, 안전, 여성 및 소년 근로자의 근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봉사형은 직업 활동의 수행과 겸할 수 있다.

제131-24조 【국가의 책임】 ① 국가는 사회봉사형을 받은 자가 그 수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

③ 배상 및 구상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1-25조 【일수벌금형의 집행방법】 ①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총액은 선고된 일수벌금의 일수에 상당하는 기간의 종료 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된 일수벌금 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행형시설에 수용한다. 그 절차는 사법강제의 경우와 동일하며, 수감방법은 구금형 집행절차에 따른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26조 【권리행사금지의 대상】 ①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 행사 금지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사법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원의 감정인이 될 권리,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조력할 권리
4. 단순진술의 경우를 넘어 법정 증언할 권리
5.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 될 권리. 단, 가족회의의 진술을 청취하고 후견법관과 부합하는 의견에 따라 자녀의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 될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②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행사의 금지기간은 중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는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이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행사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④ 본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의 금지에는 공무수행금지 또는 공무수행 부적합판정도 포함한다.

제131-27조 【보충형과 공무수행금지 등】 ①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보충형으로 선고되는 공무나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의 수행금지는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금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선거에 의한 수입사무나 노동조합 책임사무의 수행은 금지할 수 없으며, 언론범죄에 대하여도 같다.⁸⁾

제131-28조 【수행금지의 내용】 직업이나 사회활동의 수행금지는 직업이나 사회활동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형사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다른 모든 직업 및 사회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1-29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수행금지의 기간】 제131-26조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행사금지 또는 공무, 직업 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수행금지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는 자유형에 수반되는 경우 자유형 집행 개시부터 적용되며, 그 집행은 자유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죄판결에 정한 기간 동안 이어진다.

제131-30조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 ①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은 당연히 국외추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경우 구금형 또는 징역형의 종료 시에 집행된다.

③ 영토입국금지형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는 자유형에 수반되는 경우

8) 제131-2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언론에 관련된 직업 활동의 수행 중 언론범죄를 범한 경우에 그 직업 활동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집행의 기간 동안 그 적용이 정지된다. 자유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죄판결에 의해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진행된다.

④ 구금형과 동시에 선고된 영토입국금지형은 금지, 실권 또는 무능력의 면제, 반자유 조치, 시설 외 수용, 전자적 감시에 의한 수용, 외출허가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2003.11.26. 개정, 법률2003-1119>

제131-30-1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제한】 경죄사안에 있어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외국인의 개인적 및 가족적 상황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일부다처의 상태에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의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단 이 미성년자의 출생 시부터 또는 최소 1년 전부터 민법전 제371-2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양육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최소 3년 전부터 프랑스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단 혼인은 유죄판결의 사유가 되는 사실 이전에 이뤄지고 공동생활이 혼인 시부터 중지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는 프랑스의 국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여하한 수단에 의해 15년 이상 전부터 프랑스에서 상주하였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외국인, 단 전체기간 동안 “학생”의 자격으로 단기체류증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10년 이상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5. 프랑스 기관으로부터 근로사고 또는 직업병 연금을 받는 자로서 영구적 불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외국인<2006.07.24. 개정, 법률2006-911>

제131-30-2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금지】 ①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없다.

1. 최고 13세부터 프랑스에 상주하였다는 사실을 여하한 수단에 의해 정당화하는 외국인
2.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
3.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중혼상태에 있지 않으며 최소 4년 동안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인과 혼인한 상태의 외국인, 단 이 혼인은 유죄판결의 사유가 된 사실 이전에 이뤄지고 공동생활이 혼인 시부터 중지되지 않거나 또는 같은 조건하에서 1호에 속하는 외국인과 이뤄져야 한다.
4.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중혼상태에 있지 않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단 출생 또는 최소 1년 전부터 민법전 제371-2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양육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5. 1945년 11월 2일자 제45-2658호 프랑스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조건에 관한 명령 제12조의2 제11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②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들은 유죄판결의 이유가 된 사유가 당해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대하여 범해졌거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녀에게 범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제4권 제1편 제1, 2, 4장과 제413-1조 내지 제413-4조, 제413-10조 및 제413-11조에 규정된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침해와 제4권 제2장에 규정된 테러행위, 제431-14조 내지 제431-17조에 규정된 전투단체 및 해산무장단체재건범죄, 제442-1조 내지 제442-4조에 규정된 통화위조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6.07.24. 개정, 법률2006-911>

제131-31조 【체류금지형】 ① 체류금지형은 법원이 정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와 감시·지원처분을 포함한다. 금지장소의 목록 및 감시·지원처분은 형벌적용판사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체류금지기간은 중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1-32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체류금지 기간】 ① 체류금지형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는 자유형에 수반되는 경우 자유형 집행 개시 시부터 적용되며, 자유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판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된다.

② 체류금지 중에 행하여진 모든 구금기간은 체류금지기간에 산입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76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금지형은 형을 선고 받은 자가 65세가 된 때에 종료한다.

제131-33조 【영업소 폐쇄형】 영업소 폐쇄형은 범죄의 기화가 된 영업소에서의 직업 활동의 금지를 포함한다.

제131-34조 【공계약 배제형】 공계약 배제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연합기구 및 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연합단체가 인가하거나 감독하는 기업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의 금지를 포함한다.

제131-35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①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동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게시

또는 공고의 비용은 동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판결의 전부나 일부 또는 대중들에게 판결이유나 주문을 알리기 위한 보도 자료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게시 또는 공고되는 판결의 요지 및 보도 자료의 문언을 결정한다.

③ 판결이나 보도 자료의 게시 또는 공고의 내용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권리승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없다.

④ 판결의 게시형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 다만 형사처벌법률에 반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게시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게시물이 제거, 은닉 또는 손괴된 경우에는 동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부담으로 새롭게 게시가 행하여진다.

⑤ 판결의 공고는 판보, 하나 또는 수개의 언론출판물, 또는 하나 또는 수개의 전기적 방식에 의한 대중매체에 의한다. 이러한 공고를 맡은 출판물 또는 전기적 방식에 의한 대중매체물은 법원에 의해 지정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들은 공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131-35-1조 【수강명령의 집행】 ①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교육, 약물 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 교육 또는 친권자의 책임성교육의 이수 의무가 보충형으로 선고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② 법원은 교육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인지를 명시해야 해야 한다.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교육은 항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용으로 집행된다.

③ 교육을 이수하면 확인서를 발부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지방검찰청장에게 통보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36조 【본관 규정의 적용방법】 ① 본관 규정의 적용 방법은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② 사회봉사형의 봉사활동 수행조건 및 봉사활동의 성질 역시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③ 국사원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정한다.

1. 형벌적용판사가 검사 및 범죄방지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모든 공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서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사회봉사활동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합산되기 위한 요건
3. 제131-8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에 대한 권한 부여 요건
4. 제131-35-1조에 언급된 교육실행에 참여할 책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명요건<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6관 사회사법이행

제131-36-1조 【사회사법이행의 결정】 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판결법원은 사회사법이행을 명할 수 있다. 사회사법이행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의 통제 하에 판결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누범의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지원조치들에 따를 의무의 부과를 포함한다. 사회사법이행의 기간은 경죄에 대하여는 10년, 중죄에 대하여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죄에 있어 이 기간은 판결법원이 특별한 이유를 부기한 결정에 의하여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의 경우 이 기간은 30년이다.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의 경우 형벌적용법원이 형사소송법전 제712-7조에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후에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보 하에 중죄법원은 사회사법이행이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죄판결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선고되는 구금형의 최장 기간을 동시에 정한다. 이 구금형은 경죄의 경우 3년, 중죄의 경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벌적용판사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금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다.

③ 재판장은 판결의 선고 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의무 및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36-2조 【사회사법이행의 내용】 ① 사회사법이행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시조치는 제132-44조에 규정된 것들이다.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또한 판결 또는 형벌적용판사에 의해 제132-45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수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특별히 지정된 장소 또는 장소범주 전체 및 특히 미성년자들을 통상 수용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금지
 2. 일정한 사람 또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 및 특히 미성년자들과 왕래하거나 접촉하는 행위의 금지 단,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미성년자와 일상적 접촉을 포함하는 직업적 또는 무보수 활동의 금지
- <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1-36-3조 【지원조치의 목적】 사회사법이행을 선고받은 자가 따라야 할 지원의 조치들은 사회적 재복귀를 위한 노력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1-36-4조 【치료명령】 ① 법원의 반대결정을 제외하고 사회사법이행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전에 의해 규정된 조건하에서 명령된 의학적 감정의 결과에 따라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진 때에 공중보건 법전 제3711-1조 이하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한다. 재판장은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치료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가해지지 않지만 제시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선고된 구금형은 제131-36-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집행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판결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고 동시에 당사자가 유예가 없는 자유형으로 처단되는 경우에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형의 집행기간동안 치료를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 준다.
<2007.08.10. 개정, 법률2007-1198>

제131-36-5조 【집행】 ① 사회사법이행이 유예 없는 자유형을 수반하는 경우에 자유형이 종료되는 일부부터 기산하여 판결 선고에 의해 정한 기간 동안 적용된다.

② 사회사법이행은 그 집행동안 개입된 모든 구금에 의해 정지된다.

③ 사회사법이행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유로 명령된 구금은 흡수의 가능성이 없이 조치의 집행동안에 범해진 범죄에 대하여 선고된 자유형과 병합된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1-36-6조 【보호관찰부 유예의 특칙】 사회사법이행은 전체 또는 일부의 보호관찰부 유예를 수반하는 구금형과 동시에 명령될 수 없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1-36-7조 【주형】 경죄에 있어서 사회사법이행은 주형으로 명령될 수 있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1-36-8조 【세부절차】 사회사법이행의 집행에 대한 세부절차는 형사소송법전 제5권 제7의2편에 의해 정해진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7관 보안처분에 의한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제131-36-9조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사회사법이행은 본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보안처분에 의한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1-36-10조 【대상자】 전자적 이동감시처우는 자유형이 종료되는 날부터 누범의 방지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자유형에 선고되고 의학감정이 대상자의 위험성을 확인한 성년에 대하여만 명령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1-36-11조 【결정방식】 ① 경죄법원에 의하여 명령된 경우 전자적 이동감시처우는 사유를 부기한 결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

② 중죄법원에 의해 명령된 경우 최고형의 선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전 제362조에 규정된 과반수의 조건하에서 결정돼야 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1-36-12조 【집행방식】 ①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죄에 대하여는 1회, 중죄에 대하여는 2회 갱신이 가능한 2년 동안 전 국토내의 원거리에서 위치확인이 항상 가능한 발신 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가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될 수 없으나 동의가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131-36-1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금고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1-36-13조 【세부절차】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형사소송법전 제5권 제7의3편에 의해 정해진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2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1관 중죄 및 경죄의 형벌

제131-37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죄, 경죄의 형벌】 ①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중죄 또는 경죄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벌금형

2.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131-39조에 규정된 형벌

② 경죄에 있어 법인은 또한 제131-39-1조에 규정된 징벌배상형을 선고받는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38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의 액】 ① 법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의 상한은 형사법률이 자연인에 대하여 정하는 액의 5배로 한다.

② 자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죄의 경우에 법인에 대한 벌금은 100만 유로이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1-39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 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중죄 또는 경죄의 특별 형벌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수개로 한다.

1.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또는 중죄나 자연인이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설립취지를 일탈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
2.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5년 이하의 사법감시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5.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6.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업자금공모금지
7.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9.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모든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나 공고
10.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의 몰수
11.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동물소지금지

② 전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은 형사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공법상의 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당, 정치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전항 제1호에 규정된 형벌은 종업원 대의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39-1조 【징벌배상형】 ① 경죄에 있어 법원은 법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형에 대신하여 또는 동시에 제131-8-1조에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른 징벌배상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벌금의 최고금액을 정한다. 단 이 벌금은 75,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해당 경죄에 대하여 법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을 초과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배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 벌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2관 위경죄의 형벌

제131-40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위경죄의 형벌】 ①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위경죄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벌금형
2. 제131-42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3. 제131-44-1조에 규정된 징벌배상형

② 전항의 형은 제131-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과 병과할 수 있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41조 【위경죄의 벌금액】 법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의 상한은 형사처벌명령이 자연인에 대하여 정하는 액의 5배로 한다.

제131-42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대체형】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형은 다음의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의 하나 또는 수개로 대체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수표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131-43조 【특별보충형】 위경죄를 처벌하는 명령은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제131-16조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보충형을 정할 수 있으며,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제131-17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형을 정할 수 있다.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1-44조 【보충형의 선고방법】 위경죄가 제131-43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원은 보충형만을 선고하거나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1-44-1조 【징벌배상형】 ① 제5급의 위경죄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벌금형에 대신하여 또는 동시에 제131-8-1조에 규정된 세부절차에 따른 징벌배상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최고금액을 정한다. 단 이 벌금은 7,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배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형사소송법전 제712-6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 벌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3관 특정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제131-45조 【법인해산결정의 효과】 법인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해산을 위한 사건은 재산청산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제131-46조 【법인의 사법감시】 ① 법인을 사법감시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형벌적용판사는 사법감시를 선고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감시를 선고한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거나 사법감시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131-47조 【기업자금공모금지의 효과】 자금공모의 금지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증권 또는 주식을 운용하기 위하여 신용기관,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 또는 모든 공모절차에 의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1-48조 【보충형의 내용】 ① 하나 또는 수개의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는 형의 금지범위는 제131-28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② 하나 또는 수개의 영업소 폐쇄형의 경우는 제131-33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③ 공계약 배제형의 경우는 제131-34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④ 수표 발행금지형의 경우는 제131-1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 ⑤ 몰수형은 제131-21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선고한다.
- ⑥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형은 제131-35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선고한다.

제131-49조 【국사원 위임사항】 제131-45조 내지 제131-4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종업원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의 요건은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형의 집행제도

제132-1조 【집행원칙】 법률 또는 명령이 범죄를 규정하는 경우 선고되는 형벌의 체계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본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절 일반규정

제1관 범죄경합에 적용되는 형벌

제132-2조 【범죄경합】 다른 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범죄가 범해진 때에 범죄의 경합이 있다.

제132-3조 【동일절차의 경우】 ①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경합하는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이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1개의 형만을 선고한다.

- ② 선고된 형은, 경합하는 범죄의 각 법정형 상한⁹⁾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범죄에 공통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2-4조 【분리절차의 경우】 다른 공판절차에서 경합하는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은 가장 무거운 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병과하여 집행된다. 다만, 최종 선고법원의 결정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동종의 형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흡수가 명령될 수 있다.¹⁰⁾

제132-5조 【범죄경합과 형벌의 적용】 ① 제132-3조 및 제132-4조를 적용함에 있어 자유형은 동종의 형으로 보며, 모든 자유형은 무기형에 흡수된다.

② 필요한 경우 누범상태를 고려한다.

③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경합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아니할 경우 유기징역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으로 한다.

④ 일수벌금형의 1일 부과액과 일수 그리고 사회봉사 기간의 상한은 각각 제131-5조 및 13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9) 법정형의 상한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 선택(법정형이 무기징역이어도 제132-18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유기징역의 장기는 제132-5조 제3항에 따라 30년이다. 또한 제3편 제1장 제1절 제2관 형의 대체 참조)을 거쳐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형에 대한 상한을 의미하며, 제1항에서 사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의 상한’이라는 용어도 그와 같이 선택, 대체 등을 거친 뒤 가장 무거운 형의 범위를 의미한다.

10) 형의 흡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정형이 5년의 구금형인 범죄에 대하여 4년의 구금형이 선고된 후, 법정형이 3년의 구금형인 경합범죄에 대하여 1년을 선고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상한 범위 내에서 병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5년간 구금형을 집행할 수 있으나, 후자에 대하여 2년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형의 흡수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흡수가 이루어진 뒤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상한인 5년이다. 형의 흡수는 동종의 형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중 한 개의 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유예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수반하지 않는 동종의 형에 대한 집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132-6조 【범죄경합과 특별사면 또는 면제판결의 효과】 ① 형이 특별사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형의 흡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처분 또는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형의 흡수 후에 이루어진 형의 면제는 형의 흡수로부터 나오는 형에 적용한다.
③ 형감경의 기간은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흡수 후에 받게 될 형의 기간에서 공제된다.<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132-7조 【위경죄의 경합】 전 여러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경죄에 대한 벌금형은 상호간에 그리고 경합하는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법정형 또는 선고형과 병과한다.

제2관 누범에 적용되는 형벌

제1 자연인

제132-8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중죄누범】 중죄 또는 법률에 의하여 10년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중죄를 범한 경우, 이 중죄에 대한 자유형의 장기가 20년 또는 30년인 경우에는 무기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가중하며, 자유형의 장기가 15년인 경우에는 징역형 및 금고형의 장기를 30년으로 가중한다.

제132-9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① 중죄 또는 10년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된 형의 집행 종료시 또는 시효완성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에 처해지는 경죄를 범한 경우 구금형의 장기 및 벌금형의 다액은 2배로 가중한다.

② 중죄 또는 10년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한 경우 구금형의 장기 및 벌금형의 다액은 2배로 가중한다.<1992.07.23. 신설, 법률92-683>

제132-10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경죄 또는 누범규정에 비추어 동종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죄를 범한 경우 구금형의 장기 및 벌금형의 다액은 2배로 가중한다.

제132-11조 【제5급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위경죄누범】 ①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급 위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경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의 다액은 3,000유로까지 가중한다.

② 법률로 제5급 위경죄의 누범이 경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죄가 범해진 때에 누범이 성립한다.<2003.06.12. 개정, 법률2003-495>

제2 법인

제132-12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중죄 또는 자연인에 관하여 법률상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법인이 다시 중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의 다액은 10배로 가중한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39조에 규정된 형을 동조 제2항 규정의 유보 하에 선고할 수 있다.

- 제132-13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① 중죄 또는 자연인에 관하여 법률상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법인이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의 다액은 10배로 가중한다.
- ② 중죄 또는 자연인에 관하여 법률상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법인이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연인에 관하여 법률상 다액 15,000유로 이상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의 다액은 10배로 가중한다.
- ③ 전 2항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제131-39조에 규정된 형을 동조 제2항 규정의 유보 하에 선고할 수 있다

제132-14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경죄의 누범】 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법인이 확정된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경죄 또는 누범규정에 비추어동종의 것으로 간주되는 경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의 다액은 자연인이 같은 경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가중한다.

제132-15조 【제5급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위경죄 누범】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급 위경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법인이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경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의 다액은 자연인이 같은 위경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 명령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가중한다.

제3 일반규정

제132-16조 【재산범죄의 동종누범】 누범 적용시 절도죄,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 및 횡령죄는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

제132-16-1조 【성범죄의 동종누범】 누범 적용시 성적가해범죄 및 성적 침해범죄들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132-16-2조 【과실치사상죄의 동종누범】 ① 누범 적용시 제221-6-1조, 제222-19-1조 및 제222-20-1조에 규정된 육상자동차의 운행 중에 범해진 과실치사상의 경죄들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

② 누범 적용시 도로법 제L. 221-2조, 제L. 234-1조, 제L. 235-1조 및 제L. 413-1조에 규정된 범죄들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 범죄들은 또한 누범성립의 후행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전항에 언급된 범죄와 동종으로 본다.<2003.06.12. 신설, 법률2003-495>

제132-16-3조 【인신매매범죄의 동종누범】 제225-4-1조, 제225-4-2조, 제225-4-8조, 제225-5조 내지 제225-7조 및 제225-10조에 규정된 인신매매 및 매매춘업에 관한 범죄들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2-16-4조 【폭행범죄의 동종누범】 누범 적용시 사람에 대한 폭행경죄 및 폭행의 가중사유를 수반한 모든 경죄는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2005. 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2-16-5조 【직권에 의한 누범확인】 법정 누범상태는 비록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에 대하여 고지를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때에는 판결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132-16-6조 【외국판결의 누범반영】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속한 형사 법원에 의해 선고된 유죄판결은 본관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누범에 고려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3관 재범에 적용되는 형벌

제132-16-7조 【재범의 의의 및 형의 적용방식】 ①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법정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를 범한 때에는 재범에 해당한다.

② 재범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은 초범당시의 유죄판결에 확정적으로 선고된 형에 흡수되지 않으며 양적 제한 없이 반복하여 누적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4관 형의 선고

제132-17조 【형벌의 선고방식】 ① 어떠한 형벌도 법원의 명시적인 선고가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

② 법원은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벌만을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2-18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① 범죄가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범죄가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법정형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2-18-1조 【중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① 법정 누범에 해당하는 중죄에 대한 구금, 징역 또는 금고형은 다음의 기준 미만으로 할 수 없다.

1. 중죄가 15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중죄가 20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7년
3. 중죄가 30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4. 중죄가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② 단 법원은 범죄의 정황, 범인의 성행 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회복귀 혹은 재복귀의 보장수단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법정 누범에 해당하는 중죄를 재차 범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복귀 또는 재복귀의 특별한 보장수단을 제시한 경우에만 위의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7.08.10. 신설, 법률2007-1198>

제132-19조 【구금형의 선고】 ① 범죄가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법정형 이하의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이 경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없는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단 법정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2-19-1조 【경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법정 누범에 해당하는 경죄에 대한 구금형은 다음의 기준 미만으로 할 수 없다.

1. 경죄가 3년의 구금에 해당하는 경우 1년
2. 경죄가 5년의 구금에 해당하는 경우 2년
3. 경죄가 7년의 구금에 해당하는 경우 3년
4. 경죄가 10년의 구금에 해당하는 경우 4년

② 단 법원은 이유를 설시한 결정에 의하여 범죄의 정황, 범인의 성행 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회복귀 혹은 재복귀의 보장수단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형 또는 구금이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누범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죄 중 어느 하나를 재차 범한 경우에 구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폭행
2. 폭행의 가중사유를 수반한 경죄
3. 성적가해 및 침해
4. 10년 이하의 구금에 해당하는 경죄

④ 단 피고인이 사회복귀 혹은 재복귀의 특별한 보장수단을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이유를 설시한 결정에 의하여 본조에 규정된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⑤ 본조의 규정은 벌금형 및 하나 또는 수개의 보충형의 병과를 배제하지 않는다.<2007.08.10. 신설, 법률2007-1198>

제132-20조 【벌금형의 선고】 범죄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법정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 2005-1549>

제132-20-1조 【누범에 대한 경고】 범죄의 정황 또는 범인의 성행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형의 선고시에 피고인에게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한다.
<2007.08.10. 신설, 법률2007-1198>

제132-21조 【금지, 실권 또는 무능력의 명시적 선고 및 면제】 ① 유죄판결의 선고로부터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금지는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
② 특별규정에 따라 유죄의 판결로 당연히 금지, 실권 또는 무능력을 선고받은 자라도 선고판결 또는 추후의 판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그 기간의 단축을 포함하여 금지, 실권, 무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2-22조 【사법기관에 대한 금융 세무정보의 제공】 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사판사 또는 수소법원은, 비밀보호의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유용한 금융 또는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5관 보안기간

제132-23조 【보안기간 중 집행절차】 ①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¹¹⁾ 집행의 유예가 없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

11) 각칙 제212-1조 제2항과 같이 각 범죄에 대한 보안기간의 적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을 받은 자는 보안기간 중 형의 정지 또는 분할, 시설외처우, 외출허가, 반자유 또는 가석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② 보안기간은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무기징역에 대하여는 18년으로 한다. 다만, 중죄법원 또는 일반형사법원은 특별한 결정으로 보안기간을 형기의 3분의 2까지, 무기징역에 대하여는 22년까지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규정된 외에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5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된 형집행정차상의 어떠한 은전도 받을 수 없는 보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선고된 형의 형기의 3분의2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는 2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안기간 중 형의 감경은 보안기간에 해당하는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2절 형의 인적 개별화 방식

제132-24 【형의 인적 개별화】 ①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성행을 고려하여 형벌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절차를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범인의 자산과 부담,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② 선고되는 형벌의 성질, 양, 집행절차는 사회의 효과적 보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피해자의 이익이 유죄판결 받은 자의 사회복귀 또는 재복귀를 원활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2007.08.10. 개정, 법률2007-1198>

제1관 반자유, 시설외처우 및 전자감시 처우

제1 반자유 및 시설외처우

제132-25조 【요건】 ① 1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업 활동의 수행, 직업교육에의 성실성, 사회복귀를 위한 임시고용 또는 견습, 가족생활유지의 불가피성 또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에 대하여 반자유의 방식으로 구금형을 집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또한 구금형이 시설외처우의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97-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구금 또는 그 계속이 명령된 경우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원은 반자유 또는 시설외처우의 임시적 집행을 명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26조 【집행】 ① 반자유 상태에서의 구금형 집행이 결정된 자는 반자유 절차가 승인된 목적인 직업 활동, 직업교육, 견습, 가족생활의 유지,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형벌적용판사가 정하는 세부절차에 따라 행형시설에 복귀할 의무를 지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행형시설 밖에서의 의무가 중단된 일수동안은 행형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② 시설외처우의 결정을 받은 자는 행형시설 이외에서 행정청에 의해 통제되는 작업에 고용된다.

③ 판결법원은 반자유 또는 시설외처우가 결정된 자로 하여금 제132-43조 내지 제132-46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 전자감시 처우

제132-26-1조 【요건】 ① 판결법원이 1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직업 활동의 수행, 직업교육에의 성실성, 사회복귀를 위한 임시고용 또는 견습, 가족생활유지의 불가피성 또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감시 처우의 방식으로 구금형을 집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자감시 처우의 결정은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변호사협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변호인을 포함하여 동의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결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97-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구금 또는 그 계속이 명령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판결법원은 전자감시처우의 임시적 집행을 명할 수 있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132-26-2조 【집행】 전자감시 처우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 적용판사가 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주소지 또는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는 모든 다른 장소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다. 이 기간과 장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의한 직업 활동의 수행,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이수, 견습의 실시 또는 임시취업의 사실, 가족생활의 유지, 의학적 치료의 처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자감시 처우는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는 모든 공적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132-26-3조 【동전】 판결법원은 또한 전자감시 처우가 결정된 자로 하여금

제132-43조 내지 제132-46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관 형의 분할

제132-27조 【구금형의 분할】 경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건강상, 가족관계상, 직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유를 참작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분할간의 기간은 2일을 하회할 수 없다.

제132-28조 【벌금 등의 분할】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건강상, 가족관계상, 직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유를 참작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일수벌금형 또는 운전면허정지형을 선고받은 자연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단 법률 또는 명령이 운전면허정지형이 직업상 활동 이외의 운전에만 한정될 수 없음을 예정한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하여는 분할할 수 없다.<2003.06.12. 신설, 법률2003-495>

제3관 단순집행유예

제132-29조 【단순집행유예】 ①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본관에 규정된 경우 및 요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 재판장은 단순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형의 선고 후에 제132-35조 및 제132-37조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의 새로운 범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제1 단순집행유예의 요건

제132-30조 【단순집행유예의 제한】 ① 중죄나 경죄에 대하여 단순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자연인인 때에는 행위시로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중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구금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기간 중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로 60,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2-31조 【자연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① 단순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자연인으로서 5년 이하의 구금형, 벌금형 또는 일수벌금형, 몰수를 제외한 제131-6조의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몰수, 영업소의 폐쇄 및 판결의 게시를 제외한 제131-10조의 보충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32-30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징역 또는 구금형 이외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단순집행유예는 구금형에 한하여 명령될 수 있다.

③ 법원은 구금형의 일부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2-32조 【법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이나 제131-39조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132-33조 【위경죄와 집행유예의 제한】 ① 위경죄에 대하여 단순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자연인인 때에는 행위시로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중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구금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기간 중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로 1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32-34조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 ① 자연인에 대한 단순집행유예는 몰수를 제외한 제131-14조의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제131-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보충형, 제131-17조 제1항의 보충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법인에 대하여는 제131-42조 및 제131-43조에 규정된 수표의 발행 또는 지불카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제2 단순집행유예의 효과

제132-35 【중죄, 경죄와 집행유예의 효과】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단순 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판결은 그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이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없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32-36조 【새로운 구금형, 징역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 ① 구금형이나 징역의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새로운 유죄판결은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②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구금형이나 징역 이외의 형의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새로운 유죄판결은 집행이 유예된 형이 구금형이나 징역 이외의 형인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제132-37조 【위경죄의 집행유예의 효과】 위경죄에 대한 단순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판결은 그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이 일반법상의 중죄나 경죄 또는 제5급 위경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제132-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32-38조 【집행유예의 취소의 효과】 ① 단순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형은 나중에 선고된 형에 흡수되지 않고 집행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유를 붙인 특별한 결정에 의하여,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만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취소 면제의 효과를 기존에 선고된 하나 또는 수개의 집행유예에 한정할 수 있다.

제132-39조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의 효과】 형의 일부의 집행만을 유예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때에는 유죄판결은 그것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일수벌금형이나 벌금형 또는 벌금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제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허가요건

제132-40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 ① 구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다음 조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그 집행의 유예를 명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연인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부 유예기간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를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새로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부과된 통제처분과 특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할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품행이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유죄판결에 대한 무효선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보충형으로 10년 이하의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이 유예된다.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41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적용요건】 ① 보통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러하다.

②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력을 갖는 날로부터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③ 법원은 제132-16조 내지 제132-16-4조의 규정상에 동일하거나 동일범죄에 준하는 경죄에 대하여 이미 2회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수반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중죄, 폭행경죄, 성적가해 또는 침해경죄 또는 폭행의 가중사유를 수반한 경죄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동일범죄에 준하는 범죄에 대하여 이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수반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단 이 규정들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제132-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고된 구금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132-42조 【보호관찰기간】 ① 형사법원은 12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결정한다.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재차 법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간은 7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② 법원은 구금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적용됨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금형의 일부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 보호관찰의 집행절차

제132-43조 【통제처분 · 특별의무】 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호관찰기간중 제132-44조에 규정된 통제처분에 따라야 하고, 제132-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갇생보호를 위한 구조조치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행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보호관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같다. <1992.07.23. 신설, 법률92-683>

제132-44조 【통제처분의 내용】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통제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벌적용판사 또는 지명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수인하고, 동인에게 생활수단과 의무이행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보호관찰관에게 직업의 변경을 사전에 통지할 것
4. 보호관찰관에게 거소의 변경 또는 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여행을 사전에 통지하고 귀소를 보고할 것
5. 모든 외국여행 및 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고용 및 거소의 변경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의 사전허가를 얻을 것<2000.06.15. 개정, 법률2000-516>

제132-45조 【특별의무의 내용】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법원 또는 형벌적용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중 하나 또는 수개를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직업 활동을 수행할 것 또는 학교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
2. 일정 장소에 거소를 정할 것
3. 의료검사, 치료 또는 간호처분을 받고 경우에 따라 병원수용을 수인할 것, 만일 피고인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습적이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조치들은 공중보건법전 제L. 3413-1조 내지 제L. 3413-4조에 규정된 치료명령에 의한다.
4. 가족부양을 분담하거나 채무를 지고 있는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
5. 부대사소에 대한 결정이 없더라도 부담능력에 따라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할 것
6. 유죄판결 후에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에 납입의무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

7. 도로법에 의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지는 특정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
8. 직업 활동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
9.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
10. 도박, 특히 경마도박에 관여하지 않을 것
11. 주류제공점에 출입하지 않을 것
12. 특히 정범이나 공범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일정한 자와 만나지 않을 것
13. 특히 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자와 만나지 않을 것
14. 무기를 보유하거나 휴대하지 않을 것
15. 육상자동차의 운전을 기화로 범해진 범죄의 경우에 본인의 부담으로 도로안전의 중요성교육을 이수할 것
16. 단독 또는 공동저자로서 전체 또는 일부가 범해진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저서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배포를 하지 않으며, 해당 범죄와 관련한 모든 공개적 출연을 하지 않을 것, 본호의 규정들은 생명에 대한 고의적 침해, 성적가해 또는 침해의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17.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보호가 위탁된 사람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
18. 시민성교육을 이수할 것
19. 배우자,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연결된 동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동거인, 동반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 부부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이외에 거주할 것과 경우에 따라 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 출입하거나 그 주변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보건, 사회적 또는 심리학적 조치들의 대상이 될 것,

보호의 규정들은 범죄가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나 공동체시민
협약에 의한 연결되었던 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이 경우 관련된 주소는 피해자의 주소로 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2-45-1조 【치료명령】 ① 사회사법이행에 처해지는 범죄들 중 하나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수반된 구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명령된 의학적 감정 후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 법원의 반대취지의 결정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법전 제L. 3711-1조 이하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치료명령의 경우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치료도 동의
없이는 취해지지 않으며 제안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선고된 구금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만일 판결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수반하지 않는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이 형의 집행동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7.08.10. 신설, 법률2007-1198>

제132-46조 【갱생보호처분】 ① 갱생보호처분은 범행 후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자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갱생보호처분은 보호관찰기관에 의하여 사회적 원조 또는 물질적 원조의
형태로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모든 공적·사적 조직의 협조 아래 실시된다.

제3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제132-47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① 판결법원은 제132-48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형벌적용판사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통제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행해진 통제조치와 의무에 대한 여하한 미준수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단 집행유예의 취소는 유죄판결이 확정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 명령될 수 없다. 만일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적 성격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취소가 명령된 때에는 이 취소는 유죄판결이 추후에 파기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 실효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48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이 일반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법원은 형벌적용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집행유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취소는 새로운 범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판결이 확정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 명령될 수 없다.

② 프랑스 영토입국금지처분은 본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에 있어 당연히 집행력을 갖는다.<2003.11.26. 개정, 법률2003-1119>

제132-49조 【일부취소의 제한 및 효과】 ①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②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는 보호관찰처분의 집행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없는 판결의 효과를 부여하지도 아니한다.

제132-50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보호관찰부 집행

유예가 수반된 형이 선고된 후에 다시 동일한 태양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와 함께 구금형 전부의 집행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먼저 선고된 형을 우선 집행한다. 다만, 이유가 부기된 특별한 결정에 의하여 먼저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2-51조 【집행유예의 취소에 수반하는 시설수용】 집행유예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법원은 이유가 부기된 특별한 결정에 의하여 가집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행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제132-52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형의 전체집행을 명하는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구금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전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132-53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태양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나중에 선고된 유죄판결이 제132-52조 제1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744조에 규정된 요건 및 기간 내에 소멸된 것으로 선언되거나 간주된 때에는 먼저 선고된 유죄판결도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2004.03.09. 개정, 법률 2004-204>

제5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제132-54조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① 법원은 제132-40조 및 제132-41조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법상의 법인 또는 사회봉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단체를 위해 40내지 21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12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없다.

④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절차는 제131-22조 내지 제131-2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사회봉사명령이 완전히 이행된 때에는 제132-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55조 【통제처분】 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는 법원이 정하는 사회봉사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통제처분에 따라야 한다.

1. 형벌적용관사 또는 지명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할 것
2. 형의집행에 앞서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사회봉사활동이 의학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검사를 받을 것
3. 일정한 방식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용 또는 주소의 변경 이유를 설명할 것
4. 일정한 방식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이동에 대하여 형벌적용관사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5.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동인에게 형벌집행에 관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 ②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는 제132-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명하고 12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특별의무처분에 따라야 한다.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56조 【특별의무】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제132-42조 제2항 및 제132-52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회봉사기간 중 준수할 사항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동일하며 제131-22조에 규정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간주된다.

제132-57조 【불출석 재판과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법상의 경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함이 없이 6월 이하의 구금형을 포함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모든 법원은 동 판결이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때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공공단체, 공공시설 또는 비영리 단체를 위해 40 내지 210시간의 무보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제132-54 제3항, 제132-55조 및 제132-5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형벌적용판사는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제131-5조 및 제131-25조의 규정에 따른 일수벌금형의 실행을 결정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6관 형의 면제 및 선고유예

제132-58조 【형의 면제 · 선고유예】 ① 법원은 경죄 또는 제132-63조 내지 제132-6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경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선언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건의 몰수를 선고한 후 아래 조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른 모든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부대사소에 대하여도 선고한다.

제1 형의 면제

제132-59조 【형의 면제】 ① 피고인의 사회복귀 절차가 이루어졌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이 종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취지를 범죄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형의 면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 단순선고유예

제132-60조 【단순선고유예】 ① 피고인의 사회복귀절차가 진행 중이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이 종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판결로 형의 선고기일을 정한다.

③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될 수 있다.

제132-61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유예기간 후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정한 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제132-6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132-62조 【형에 관한 판결기간】 형의 선고는 최초의 유예결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제132-63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① 법원이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32-6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32-64조 【보호관찰의 내용】 제132-43조 내지 제132-46조에 규정된 보호관찰절차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에 적용한다.

제132-65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① 법원은 유예기간 후 보호관찰기간 중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품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제132-63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동의를 받아 선고공판일 30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제712-6조의 규정에 부합한 대심변론 후에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는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제132-66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①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와 동시에 피고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동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의무중 하나 또는 수개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행명령에 대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32-67조 【이행강제금】 ① 법원은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경우 이행 명령의 이행을 위해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법률 또는 명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제금의 금액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한다.

② 강제금의 부과는 이행명령이 이행된 때 종료된다.

제132-68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의 제한】 ① 이행명령부 선고유예는 1회에 한한다. 피고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행명령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② 이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32-69조 【유예기간 후의 조치】 ①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이행명령이 지연이행된 경우 법원은 필요에 따라 강제금을 청산하고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형을 선고한다.

③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필요에 따라 강제금을 청산하고 형을 선고하며 법률 또는 명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선고는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32-70조 【강제금액의 불변경】 ① 선고유예시 결정된 강제금의 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이 늦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강제금을 청산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을 고려하여야한다.

③ 강제금은 사법강제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3절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대한 정의

제132-71조 【범죄조직】 하나 또는 수개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를 예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모든 결성된 집단 또는 의사의 합치는 법률상 범죄조직을 구성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1-1조 【매복】 매복은 일인 또는 수인을 대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일정 시간동안 특정된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말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132-72조 【예모】 예모는 중죄나 특정 경죄의 실행행위 전에 수립된 구상이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3조 【문호·장벽 손괴】 시정장치 또는 여하한 종류의 문호를 강제로 열거나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는 문호·장벽 손괴에 해당한다. 가짜 열쇠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정장치를 열기 위하여 강제로 열거나 훼손함이 없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문호·장벽 손괴로 간주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4조 【무단침입】 담을 넘거나 또는 출입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열고 여하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침입을 구성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5조 【무기】 ① 살해나 상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도구는 무기로 본다.

② 사람에게 대하여 위해를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도구는 살인, 상해 또는 협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소지자가 살인, 상해 또는 협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한 경우 무기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무기와 혼동될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살인이나 상해 또는 협박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소지자가 살인이나 상해의 협박을 위하여 사용하려 한 모든 물건은 무기로 간주한다.

④ 살인이나 상해 또는 협박을 위하여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무기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동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 법원은 동물을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물을 인계받은 단체는 자유로이 동물을 처분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6조 【차별적 동기】 ①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법정형은 범죄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가중사유는 범죄의 실행전후 또는 실행 중에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심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발언, 서면, 영상, 물건 또는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에 성립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7조 【성적성향의 동기】 ①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법정형은 피해자의 성적 성향을 이유로 범해진 경우에 가중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가중사유는 범죄의 실행전후 또는 실행 중에 성적 성향을 이유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심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발언, 서면, 영상 또는 물건의 사용 또는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에 성립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132-78조 【자수】 ①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를 중지케 하거나 범죄의 피해발생을 방지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감경한다.
③ 전항의 규정들은 소추된 중죄 또는 경죄와 동질의 병합된 범죄의 실현을 방지케 하거나 범죄를 중지시키게 하거나 피해발생을 방지케 하거나 또는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본조 규정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나온 진술만을 사유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132-79조 【암호해독】 ① 2004년 6월 21일자 법률 제2004-575호 전자경제에서의 신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암호해독의 수단이 중죄 또는 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자유형의 최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향된다.

1. 범죄가 3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형
2. 범죄가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30년의 징역형
3. 범죄가 1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20년의 징역형
4. 범죄가 10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15년의 징역형
5. 범죄가 7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구금형
6. 범죄가 5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구금형
7. 범죄가 최고 3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두 배

② 단, 본조에 규정들은 행정 또는 사법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해독된 명확한 버전 및 해독에 필요한 암호코드를 인도한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2004.06.21. 신설, 법률2004-575>

제132-80조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 ①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법정형은 범죄가 배우자,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 가중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가중사유는 또한 범죄행위가 과거의 배우자, 과거의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피해자와 결합된 과거의 동반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도 성립된다. 본항의 규정들은 범죄가 행위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였던 관계를 이유로 범해진 경우에 적용된다.<2006.04.04. 신설, 법률2006-399>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제133-1조 【형의 소멸 · 선고의 실효】** ① 형의 집행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사망이나 형사법원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해산, 일반 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된다. 다만, 벌금 및 소송 비용의 징수 및 몰수의 집행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 또는 법인의 해산 뒤 청산절차가 종결할 때까지 이를 행할 수 있다.
- ②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을 종료시킨다.
- ③ 복권에 의하여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1절 시 효

제133-2조 【중죄의 형의 시효】 제21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된다.

제133-3조 【경죄의 형의 시효】 경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된다.

제133-4조 【위경죄의 형의 시효】 위경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된다.
<2002.12.30. 개정, 법률2002-1576>

제133-5조 【불출석판결의 경우】 궤석 또는 불출석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궤석절차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3-6조 【민사책임의 실효】 형사확정판결로부터 발생하는 민사상 채무의 시효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특별사면

제133-7조 【특별사면의 효과】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한다.

제133-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외】 특별사면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3절 일반사면

제133-9조 【일반사면의 효과】 일반사면은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일반사면으로 인하여 피해자환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의하여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은 사면이전의 판결에 있어 부여될 수 있었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이익을 다시 향유한다.

제133-10조 【제3자에 대한 효과】 일반사면은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133-11조 【전과기록의 말소 등】 누구든지 그 직무수행 중 형사처분, 징계처분이나 직무상의 제재, 금지, 실권 및 무능력 등의 선고가 일반사면으로 실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존재를 상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문서에도 그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판결

또는 재판의 정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사면은 배상의 명목으로 명하여진 공고의 집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4절 복 권

제133-12조 【복권】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본절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당연 복권되거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재판상 복권된다.

제133-13조 【자연인에 관한 당연 복권】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연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중죄 또는 경죄로 새로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복권된다.

1. 벌금형 또는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벌금 또는 일수 벌금의 총액의 납부, 사법강제 또는 제131-25조에 규정된 수용기간의 종료 또는 시효의 완성
2. 1년 이하의 구금형만을 선고 받거나 징역, 금고, 구금, 벌금 또는 일수 벌금 이외의 하나의 형만을 선고 받은 경우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시효의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3. 10년 이하의 구금형만을 선고 받거나 합계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개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시효의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② 본조에 규정된 기간은 법정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두 배가 된다.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 2007년 3월 5일자 법률 제2007-297호의 제43조 III : 제2007-297호 제43조의 규정들은 본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따라서 범죄의 완성일에 관계없이 범죄인명부에 항시 기재되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즉시 적용한다. 다만 누범에 있어서의 복권기간의 두 배 연장은 본 법률의 공포일 이후에 범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133-14조 【법인에 관한 당연복권】 ① 형을 선고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중죄 또는 경죄로 새로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된다.

1.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벌금의 납부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2. 벌금형 또는 해산 이외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시효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133-15조 【경합하는 형의 경우】 흡수가 승인된 형은 제133-13조 및 제133-1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1개의 형으로 간주한다.

제133-16조 【복권의 효과】 ① 복권은 제133-10조 및 제133-11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복권에 의하여 유죄판결로 인한 무능력 및 실권은 소멸된다.

② 다만 제131-36-1조의 사회사법이행 또는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접촉을 내포하는 직업 또는 봉사활동의 수행금지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권은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 2007년 3월 5일자 법률 제2007-297호의 제43조 III : 제2007-297호 제43조의 규정들은 본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따라서 범죄의 완성일에 관계없이 범죄인명부에 항시 기재되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즉시 적용한다. 다만 누범에 있어서의 복권기간의 두 배 연장은 본 법률의 공포일 이후에 범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133-17조 【특별 사면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복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사면에 의한 형집행의 면제는 형의 집행과 동일시된다.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인류 및 인간에 대한 중죄

제1 부속편 반인륜적 범죄

제1장 집단살해범죄

제211-1조 【집단살해】 ①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또는 기타 모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사전계획을 통하여 이 그룹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집단살해범죄를 구성한다.

1. 생명에 대한 고의적 침해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3. 집단의 전부나 일부의 말살을 초래하는 생존조건에 놓이게 하는 행위
 4. 출산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조치
 5. 아동의 강제이송
- ② 집단살해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중죄에 적용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장 기타 반인류적 범죄

제212-1조 【정치적 동기 등에 의한 반인류적 행위】 ① 민간인 집단에 대하여 정치, 사상, 인종 또는 종교상의 이유에 의하고 사전계획 하에 조직화된 억류행위, 노예상태에 두는 행위 또는 약식처형, 실종을 수반하는 약취, 고문 또는 비인도적 행위를 대량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중죄에 적용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2-2조 【전시에 있어서의 적용】 ① 전시에 반인류적 범죄행위의 기초가 되는 이념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계획 하에 제212-1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2-3조 【반인류적 행위목적의 단체조직】 ① 하나 또는 수개의 객관적

사실로 표출된 제211-1조, 제212-1조 및 제212-2조의 중죄의 준비를 위한 단체결성 또는 모의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3장 공통규정

제21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공직수행 금지
3. 제131-31조에 규정된 거주금지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3-2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본편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3-3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2.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3-4조 【면책항변】 본 제1 부속편에 규정된 중죄의 정범 또는 공범은 법령에 의하거나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양형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13-5조 【시효에 대한 특례】 본 제1 부속편에 규정된 중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 부속편 인류에 대한 범죄

제1장 우생 및 복제배아에 관한 범죄

제214-1조 【우생실험】 인간의 선별을 조직화하기 위한 우생학적 실험을 실행하는 행위는 30년 이하의 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4-2조 【복제아 출산관여】 다른 생존 또는 사망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녀를 출생케 할 목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30년 이하의 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4-3조 【범죄조직가중】 ① 제214-1조 및 제214-2조에 규정된 범죄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무기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4-4조 【단체결성참여】 ① 하나 또는 수개의 객관적 사실로 표출된 제214-1조 및 제214-2조의 중죄의 준비를 위한 단체결성 또는 모의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기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장 공통규정

제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공직수행 금지
3. 제131-31조에 규정된 거주금지
4.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을 불문하고 피고인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
5. 범행에 사용된 재료의 몰수<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5-2조 【외국인】 ① 본장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② 제131-30조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의 규정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5-3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 제1의 부속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의한 벌금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을 불문하고 피고인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15-4조 【시효에 대한 특례】 ① 본 제1 부속편에 규정된 중죄의 공소 및 선고된 형은 3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② 또한 제214-2조의 복제배아에 관한 중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기간은 배아가 자녀의 출산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부터 기산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0>

제2편 인류에 반하는 다른 중죄

제1장 사람의 생명에 관한 침해

제1절 살 인

제221-1조 【보통살인】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21-2조 【중죄·경죄의 수행 중 보통살인】 ① 다른 중죄의 실행행위의 전후에 또는 실행행위 중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중죄나 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의 편의, 중죄나 경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도주·원조 또는 처벌의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1-3조 【모살】 ① 예모¹²⁾를 수반한 살인은 모살을 구성하며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죄법원은 특별결정으로 보안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거나 무기징역형 선고시 제132-23조에 규정된 어떠한 은전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되는 경우에 보안기간은 사면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형 후 형기와 동일하다.<1994.02.01. 개정, 법률94-89>

제221-4조 【가중보통살인】 ①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3.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¹³⁾, 공공사무

12) 예모의 정의에 대하여는 제132-72조 참조.

- 취급자¹⁴⁾, 국립 군경찰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의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의 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이나 부대사소의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 또는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6.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7. 피해자의 성적 성향의 이유의 경우
8. 범죄조직으로 행동하는 수인에 의한 경우
9.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고문 기타 가혹행위를 한

13) 제313-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각주 참조.

14)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임무를 갖는 자를 합친 개념으로써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업무(예컨대 차량검사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은 자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경우 중죄법원은 이유를 부기한 특별결정으로 보안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거나 무기징역형 선고시 제132-23조에 규정된 형집행절차상의 어떠한 은전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에 의하여 감형되는 경우에 보안기간은 사면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형 후 형기와 동일하다.<2006.04.04. 개정, 법률2006-399>

제221-5조 【독물투여, 독살】 ① 사망을 초래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투여하여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독물투여죄에 해당한다.
② 독물투여죄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③ 독물의 투여가 제221-2조, 제221-3조 및 제221-4조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1-5-1조 【가중살인교사】 모살 또는 독물투여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기부, 선물 또는 여하한 이득을 공여 또는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이 범죄가 범해지거나 기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1-5-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 절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의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는 직업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회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직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21-5-3조 【형의 감면 · 감경사유】 ① 모살 또는 독물투여를 범하려고 기도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모면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독물투여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모면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20년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절 과실치사

제221-6조 【과실치사】 ① 제121-3조의 요건 및 구별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과실치사죄를 구성하며, 3년의 구금형 및 4,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의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1-6-1조 【과실치사의 가중】 ① 과실 또는 제221-6조에 규정된 법령상의 안전 또는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이 육상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 과실치사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1. 운전자가 아래에 열거된 것 이외에 법령에 의한 안전 또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운전자가 만취상태에 있거나 도로법전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농도 이상의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농도에 의해 판단되는 음주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음주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상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3. 운전자의 혈액분석에 의해 운전자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식물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상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4. 운전자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 무효, 정지 또는 압류된 경우
5. 운전자가 법정 최고 제한속도를 50km/h이상 초과한 경우
6.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정지하지 않고 반개 될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피하려고 기도한 경우

③ 과실치사가 본 조 제1호 이하에 규정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2003.06.12. 신설, 법률2003-495>

제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1-6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 ④ 제221-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가로 제131-39조 제4호에 규정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본장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직업적 또는 사회적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활동의 수행금지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3. 5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면허 정지로 한정할 수 있다. 제221-6-1조의 경우에 정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 유예될 수 없으며 직업 활동 이외에 한정될 수 없다. 제221-6-1조의 1호 내지 6호 및 마지막항의 경우 정지의 기간은 10년 이하이다.
4.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
- 4-2. 제131-35-1조의 절차에 따른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 이수 의무
5.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6.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7. 제221-6-1조의 경우에 운전면허 취득이 불필요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5년 이하의 특정한 육상자동차의 운전금지
 8. 제221-6-1조의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도로안전에 관한 민감성교육 이수 의무
 9. 제221-6-1조의 경우에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한 때에 그 차량에 대한 1년 이하의 운행금지
 10. 제221-6-1조의 경우에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한 때에 그 차량에 대한 몰수
- ② 제221-6-1조의 1호 내지 6호 및 마지막 항에 규정된 경죄에 대한 모든 유죄판결은 10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의 당연사유가 된다. 누범의 경우 금지는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며 법원은 이유가 부기된 특별한 결정에 의하여 이 금지가 영구적임을 예정할 수 있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1-9조 【제1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본장 제1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공무수행 금지
3. 제131-21조에 규정된 몰수
4. 제131-31조에 규정된 체류금지

제221-9-1조 【사회사법이행】 ① 본장 제1절의 중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 또한 제131-36-1조 내지 제131-36-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사법이행을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221-10조 【제2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본장 제2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본장 제1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적 또는 10년 이하의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2장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 완전성 침해

제1절 고의에 의한 사람의 완전성 침해

제1 고문 및 가혹행위

제222-1조 【고문 · 가혹행위】 ① 사람에게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2조 【중죄과정 고문 · 가혹행위】 ① 보통살인이나 강간 이외의 중죄의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제22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3조 【가중고문·가혹행위】 제222-1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공공사무취급자, 국립 군경찰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 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 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이나 고소·고발, 부대사소의 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의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 또는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 5-2.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 5-3. 피해자의 성적 성향이 이유인 경우
6.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 7.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 8.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 9. 예비·음모가 있었던 경우
- 10.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 ② 강간 이외의 성적가해가 수반되어 제22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또한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③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제22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 고문·가혹행위】 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그것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범죄조직에 의하거나 상습적으로 제222-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2-5조 【신체일부상실,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고문·가혹행위】

- ① 제222-1조의 죄를 범하여 신체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 장애를 야기한 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6조 【고문 · 가혹행위치사】 ① 제222-1조의 죄를 범하여 고의 없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6-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222-6-2조 【형의 감면 · 감경사유】 ① 본장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려고 기도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본장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중지를 가능케 하거나 범죄가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케 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절반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 폭행

제222-7조 【폭행치사】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22-8조 【가중폭행치사】 ① 제2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공공 사무취급자, 국립 군경찰 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 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나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5-2.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5-3. 피해자의 성적 성향이 이유인 경우

6.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7.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8.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9. 예비·음모가 있었던 경우

10.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②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제222-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9조 【신체의 일부상실·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폭행】 사람을 폭행하여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10조 【전조의 가중】 ① 제222-9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공공 사무취급자,

국립 군경찰 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 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의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나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5-2.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5-3. 피해자의 성적 성향이 이유인 경우

6.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7.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8.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9. 예비·음모가 있었던 경우

10.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②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제222-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11조 【1주 초과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사람을 폭행하여 1주일 초과 노동 불능 상태를 초래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12조 【전조의 가중】 ① 제222-11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의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공공 사무취급자, 국립 군경찰 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 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나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 5-2.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 5-3. 피해자의 성적 성향이 이유인 경우
6.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7. 공공사무대행자 또는 수임인이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회로 죄를 범하는 경우
8.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9. 예비·음모가 있었던 경우
10.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11.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죄를 범하는 경우
12. 미성년자의 원조 또는 도움을 받고 행동하는 성년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경우
13. 여객의 집단운송의 수단 내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장소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14.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남용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경우
- ②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제22-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가 본조 제1호 이하에 규정된

두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세 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죄에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13조 【1주 이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① 사람을 폭행하여

1주일이하의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하거나 어떠한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능력의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거나 양부 또는 양모의 경우
4. 피해자가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공공 사무취급자, 국립 군경찰 소속의 군인, 국립경찰, 세관 또는 교정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업 또는 자원소방관, 부동산 또는 부동산단지의 경비원, 건축법 제12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정원관리 또는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 4-2. 제4호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경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상시 같이 생활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 4-3. 직무수행 중에 있는 대중 여객운송망의 영업소 직원 또는 공역무의 임무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보건직업인의 경우, 단 피해자의 신분이 명백하게 알 수 있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범죄에 관한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그 증언, 고소·고발, 부대사소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피해자나 부대사소신청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 5-2. 민족, 국가, 인종 또는 특정 종교에의 소속 또는 비소속이라는 진실 또는 추측된 이유의 경우
- 5-3. 피해자의 성적 성향이 이유인 경우
6.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7. 공공사무대행자 또는 수임인이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8.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9. 예비·음모가 있었던 경우
10.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11.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죄를 범하는 경우
12. 미성년자의 원조 또는 도움을 받고 행동하는 성년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경우
13. 여객의 집단운송의 수단 내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장소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14.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남용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경우
- ②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제222-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주일 이하의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본조 제1호 이하에 규정된 두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세 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1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폭행】 ① 15세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2.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20년의 징역형
 3. 1주일 초과 of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
 4. 1주일 이하의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 유로의 벌금
- ② 보안기간에 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14-1조 【특수공무원폭행에 대한 가중】 ①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수행의 기회에 있는 국립경찰소속의 공무원, 군경찰소속의 군인, 교정청의 구성원 또는 여타의 공공사무대행자에 대하여 또는 민간 또는 군소방관, 대중여객운송망의 영업직원에게 대하여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에 의한 협박을 수반한 폭행이 범죄조직 또는 모의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 다음 각 호에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2. 신체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20년의 징역형
3. 1주일 초과 of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15년의 구금형
4. 1주일 이하의 노동불능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 유로의 벌금

- ② 보안기간에 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에 적용한다.
- ③ 노동 불능 상태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요구로 형사소송법 제157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의학감정인에 의해 확인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222-15조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의 침해】 ①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유해물질의 투여는 제222-7조 내지 제222-14-1조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전항에 열거된 조항의 구별에 따라 보안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전항의 죄에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15-1조 【매복】 ①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수행의 기회에 있는 국립 경찰소속의 공무원, 군경찰소속의 군인, 교정청의 구성원 또는 여타의 공공사무대행자에 대하여 또는 민간 또는 군소방관, 대중여객운송망의 영업직원에게 대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는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에 의한 협박을 범할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기다리는 행위는 매복을 구성한다.

② 매복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해 범해진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222-16조 【전화·소음의 반복에 의한 침해】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 전화호출 또는 소음발생을 반복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2-16-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222-16-2조 【프랑스법률의 적용특칙】 ① 제222-8조, 제222-10조 또는 제222-12조에 규정된 중죄 및 경죄가 프랑스 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범해진 경우에 제11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률을 적용한다. 경죄에 대하여 제113-8조 제2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2006.04.04. 신설, 법률2006-399>

제3 협박

제222-17조 【협박】 ① 미수범을 처벌하는 중죄나 경죄를 범하겠다고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반복되거나 문서나 영상 기타의 물건으로 표출된 경우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살해의 협박을 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18조 【조건부협박】 ① 사람에 대하여 중죄나 경죄를 범할 것을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 협박한 행위는 요구충족의 지시를 수반한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살해의 협박을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18-1조 【차별적 이유에 의한 협박】 피해자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소속 또는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추정의 이유로 제222-17조 제1항에 규정된 협박이 이뤄진 경우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본조 제2항 및 제222-18조 제1항에 규정된 협박에 대하여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제222-18조 제2항에 규정된 협박에 대하여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협박들이 피해자의 성적성향의 실재 또는 가상의 이유로 표출된 경우 동일한 형벌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2-18-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제222-17조(제2항), 제222-18조 및 제222-18-1조의 범죄에 대하여 제131-19조 제2항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절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성 침해

제222-19조 【3월 초과 행동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① 제121-3조의 요건 및 구별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에게 대하여 3월 초과의 노동 불능 상태를 초래한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명백히 의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19-1조 【과실치상의 가중】 ① 과실 또는 제222-19조에 규정된 법령상의 안전 또는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이 육상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 3월 이상의 노동 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과실치상은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운전자가 아래에 열거된 것 이외에 법령에 의한 안전 또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운전자가 만취상태에 있거나 도로법전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농도 이상의 혈중 또는 호흡알콜농도에 의해 판단되는 음주상태에 있거나 또는 음주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전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3. 운전자의 혈액분석에 의해 운전자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식물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전상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4. 운전자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 무효, 정지 또는 압류된 경우
 5. 운전자가 법정최고제한속도를 50km/h이상 초과한 경우
 6.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정지하지 않고 받게 될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피하려고 기도한 경우
- ③ 과실치상이 본조 제1호 이하에 규정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6.12. 신설, 법률2003-495>

제222-20조 【3월 이하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명백히 의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에게 대하여 3월 이하의 노동 불능 상태를 초래한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20-1조 【과실치상의 가중】 ① 과실 또는 제222-19조에 규정된 법령상의 안전 또는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이 육상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 3월 이하의 노동 불능 상태를 초래하는 과실치상은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5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운전자가 아래에 열거된 것 이외에 법령에 의한 안전 또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운전자가 만취상태에 있거나 도로법전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농도 이상의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농도에 의해 판단되는 음주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음주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전상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3. 운전자의 혈액분석에 의해 운전자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식물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또는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도로법전상의 확인절차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경우
 4. 운전자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 무효, 정지 또는 압류된 경우
 5. 운전자가 법정최고제한속도를 50km/h이상 초과한 경우
 6.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정지하지 않고 받게 될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피하려고 기도한 경우
- ③ 과실치상이 본조 제1호 이하에 규정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6.12. 신설, 법률2003-495>

제222-2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2-19조 및 제222-20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④ 제222-1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가로 제131-39조 제4호에 규정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3절 성적 침해

제222-22조 【성적 침해】 ①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에 의해 범해진 모든 성적 가해는 성적 침해를 구성한다.

② 강간과 다른 성적침해들은 본 절에 규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 혼인관계에 의해 결합된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을 불문하고 성립된다. 이 경우 부부의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의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③ 성적침해가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영토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진 경우 프랑스법률이 제113-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제113-8조 제2문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2006.04.04. 개정, 법률2006-399>

제1 강간

제222-23조 【강간】 ①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람에게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강간죄에 해당한다.

② 강간죄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22-24조 【가중강간】 강간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1.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3.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의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에 의하여 그 미약함이 인식된 경우
4.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

5.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6.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7. 무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무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8.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진 경우
9. 피해자의 성적성향을 이유로 범해진 경우
10.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해진 하나 또는 수개의 다른 강간들과 결합하여 범해진 경우
11.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12.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남용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죄를 범해진 경우<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25조 【강간치사】 ① 사람을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26조 【고문·가혹행위를 수반하는 강간】 ① 강간의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 기타의 성적 침해

제222-27조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를 가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28조 【가중 성적 침해】 제22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해를 초래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
3.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4.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5.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6.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진 경우
7.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한 경우
8.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남용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죄를 범해진 경우<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29조 【소년·약자에 대한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를 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제222-30조 【소년·약자에 대한 가중 성적침해】 제222-29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해를 초래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
3.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4.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5.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 경우
6. 피해자의 성적성향을 이유로 범해진 경우
7.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남용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죄를 범해진 경우<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31조 【전4조의 미수】 제222-27조 내지 제222-30조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2-31-1조 【보호감독권자의 지위박탈】 ① 강간 또는 성적침해가 부모와 같은 보호감독권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판결법원은 민법 제378조와 제379-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자의 전적 또는 부분적인 보호감독지위의 박탈을 선고하여야한다.

② 판결법원은 피해자의 형제자매에 관한 이 자의 보호감독지위의 박탈을 아울러 명할 수 있다.

③ 중죄법원에 소추된 경우에 중죄법원은 배심원의 지원 없이 상기의 문제에 대해 명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222-32조 【공연음란행위】 타인의 시각적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 성적 희롱

제222-33조 【성희롱】 성적인 급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2.01.17. 개정, 법률2002-73>

제222-33-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2-22조 내지 제222-3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3의 2절 정신적 학대

제222-33-2조 【정신적 학대】 타인의 권리 및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직업상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그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하는 반복되는 행동에 의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2.01.17. 신설, 법률2002-73>

제3의 3절 폭행영상의 녹화 및 배포

- 제222-33-3조 【녹화 · 배포】** ① 수단 및 저장장치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식적으로 제222-1조 내지 제222-14조 및 제222-23조 내지 제222-31조에 규정된 사람의 완전성에 대한 고의적 침해에 관한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는 이 범죄들의 방조행위를 구성하며 동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 ② 전항에 해당하는 영상의 녹화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본조는 녹화 및 배포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의 정상적 수행에서 기인하는 경우 또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4절 마약거래

- 제222-34조 【마약조직의 지휘 · 결성】** ① 마약류의 생산, 제조, 수입, 수출, 운반, 소지, 제공, 양도, 취득 또는 불법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지휘하거나 결성한 자는 무기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 제222-35조 【마약류의 불법제조】** ① 마약류를 불법으로 생산하거나 제조한 자는 20년의 징역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행위가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30년의 징역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36조 【마약의 불법수출입】 ①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의 구금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30년의 징역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37조 【마약의 불법소지 등】 ① 마약류를 불법으로 운반, 소지, 제공, 양도, 취득 또는 사용한 자는 10년의 구금형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마약의 불법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허위 또는 반강제적 처방전에 의거하여 마약을 교부받거나, 처방전이 허위 또는 반강제적에 의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마약을 교부하는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38조 【사후협력】 ① 여하한 방법으로 제222-34조 내지 제222-3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수입 또는 재산의 출처에 관한 허위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을 알면서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보관, 은닉, 가공에 협력하는 행위는 10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은 자금세탁이 이뤄진 재산 또는 기금의 가치의 2분의 1까지 상향될 수 있다.

② 범죄가 제222-34조, 제222-35조 및 제222-36조 제2항의 중죄로부터 기인한 재산 또는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위자는 그 정을 알고 있는 중죄의 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2-39조 【불법양도·제공】 ① 개인적 사용의 정을 알면서 마약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요건 하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양도 또는 제공하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마약류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구금형은 10년으로 가중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40조 【미수】 제222-36조 제1항 내지 제222-39조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2-41조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식물】 공중보건법전 제L. 51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식물은 본절의 마약류로 본다.

제222-4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는 제222-34조 내지 제222-39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22-43조 【형의 감경】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의 죄를 범한 정범이나 공범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제보로 다른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자유형의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2-43-1조 【형의 면제】 본 절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제보로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2-44조 【본장의 죄에 대한 보충형】 ① 본장에서 정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직업이나 사회활동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 또는 사회활동의 금지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3. 5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면허 정지로 한정할 수 있다. 제222-19-1조 및 제222-20-1조의 경우에 정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될 수 없으며 직업활동 이외에 한정될 수 없다. 제222-19-1조 제1호 내지 6호와 마지막 호 및 제222-20-1조의 경우 정지의 기간은 10년 이하이다.

4.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
5.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자동차
물수
6.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물수
7.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물수
8. 제222-19-1조 및 제222-20-1조의 경우에 운전면허 취득이 불필요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5년 이하의 특정한 육상자동차의 운전금지
9. 제222-19-1조 및 제222-20-1조의 경우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는 교통
안전교육의 이수 의무
- 9-2. 제131-35-1조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의
이수 의무
10. 제222-19-1조 및 제222-20-1조의 경우에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한 때에 그 차량에 대한 1년 이하의 운행금지
11. 범행을 위하여 이용된 동물의 물수
12. 영구적 또는 한시적 동물보유의 금지
- ② 제222-19-1조의 1호 내지 6호 및 마지막 호에 규정된 경죄에 대한 모든
유죄판결은 10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의 당연사유가 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45조 【기타 보충형】 제1절, 제3절 또는 제4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공직수행의 금지

3. 영구적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의 일상적 접촉이 내재된 직업적 활동 또는 자원봉사 수행의 금지
4. 제131-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시민성교육의 이수 의무
5. 제131-3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친권자의 책임성교육의 이수 의무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2-46조 【기타 보충형】 본장 제2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2-47조 【체류금지】 ① 제222-1조 내지 제222-15조, 제222-23조 내지 제222-30조 및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보충형으로서 제131-31조의 절차에 따른 체류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222-23조 내지 제222-30조의 죄를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하거나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출국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2006.04.04. 개정, 법률2006-399>

제222-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제222-1조 내지 제222-8조, 제222-10조, 제222-14조 제1호 및 제2호, 제222-23조 내지 제222-26조, 제222-30조, 제222-34조 내지 제222-39조 그리고 제222-15조(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의 요건에 따라 영구적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2003. 11.26. 개정, 법률2003-1119>

제222-48-1조 【사회사법이행】 ①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거나 제222-23조 내지 제222-3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은 또한 제131-36-1조 내지 제131-36-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사법이행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② 제222-8조, 제222-10조, 제222-12조, 제222-13조 및 제222-14조에 규정된 범죄의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은 범죄가 피해자의 행위시 또는 과거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공동체시민협약에 의해 피해자와 결합된 동반자에 의해 범해지거나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에 의해 범해진 경우에 제131-36-1조 내지 제131-36-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사회이행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③ 전항에 규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보호관찰부집행유예가 수반된 구금형의 선고를 제외한상습폭행의 경우 또는 경죄법원의 특별한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 이러한 조치를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사회사법이행은 경죄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중죄에 있어 중죄법원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사법이행의 선고에 관하여 평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제222-49조 【몰수】 ①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의 경우에 죄의 실행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거나 그 실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시설, 물건 기타 재산은, 그 소지자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출처나 용도를 모르는 때에는, 그 소유자가 누구이건 또는 발견 장소가 어디이건 간에 모두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222-34조, 제222-35조, 제222-36조, 제222-38조 및 제222-39-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가로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 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인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2-50조 【보충형】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허가의 영구적 취소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영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시설 내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시설폐쇄<1992.12.16. 개정, 법률92-1336>

제222-51조 【시설폐쇄에 따른 영업중지】 ① 제222-50조의 한시적 시설 폐쇄는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영업의 정지를 포함한다. 영업중지로 인한 영업허가권의 소멸기간은 폐쇄기간 중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제222-50조에 따른 시설의 영구적 폐쇄는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영업허가의 영구적 취소를 포함한다.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제1절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

제223-1조 【업무위반에 의해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주어진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해태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사망이나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할만한 급박한 위험상태에 직접 처하게 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3-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서 정하는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형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절 유 기

제223-3조 【유기】 연령 또는 신체나 정신적 상태의 이유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를 장소를 불문하고 유기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4조 【유기치사상】 ① 유기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유기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3절 원조조치의 방해 및 불구조

제223-5조 【원조의 방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 활동 또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재해방지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6조 【범죄의 불저지 및 구조불이행】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자신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3-7-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3-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서 정하는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형
 3. 제223-5조 및 제223-6조의 범죄에 대하여 제131-19조 제1호에 규정된 형
-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4절 인체실험

제223-8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① 본인,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공중 보건법전에 의해 연구의 동의를 받거나 그것의 승인을 위하여 지정된 다른 사람, 당국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생의학적 연구를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도록 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동의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의학적 연구를 실시한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의 규정은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실시된 사람의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또는 유전자지문에 의한 개인식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004.08.09. 개정, 법률2004-806>

제223-9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3-8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5절 낙 태

제223-10조 【동의 없는 낙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녀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11조 <2001년 7월 4일자 법률 2001-588호에 의거 폐지>

제223-12조 <2001년 7월 4일자 법률 2001-588호에 의거 폐지>

제6절 자살의 교사

제223-13조 【자살의 교사】 ①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행위에 착수하게 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14조 【사망을 초래하는 수단의 선전, 광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사망을 초래하는 수단으로서 추천된 제품, 물품 또는 방법을 선전하거나 광고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15조 【언론에 의한 경우】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제223-13조 및 제223-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제223-15-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3-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서 정하는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형
 3. 제223-13조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제131-19조 제1호에 규정된 형
-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6의 2절 무지 또는 쇠약상태의 기만적 남용

제223-15-2조 【무지상태 등의 남용】 ①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특별히 쇠약한 자 또는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위압의 행사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특유한 기술의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복종의 상태에 있는 자의 무지상태 또는 약자적 상황을 당해인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만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복종을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활용할 목적 또는 그것을 효과로 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집단의 주동자에 의하여 범죄가 범해진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15-3조 【보충형】 본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직업적 또는 사회적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활동의 수행금지

3. 5년 이하의 범행에 사용된 영업소의 폐쇄
4. 범행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산출된 물건의 몰수, 단 환부될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5. 제131-31조의 규정에 따른 채류금지
6.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31-35조의 요건 하에서 선고된 판결의 게시 및 공고<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223-15-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서 정하는 벌금형
2. 제131-39조의 형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3-16조 【보충형】 제223-3조 내지 제223-8조, 제223-10조 내지 제223-14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223-17조 【보충형】 ① 제223-3조, 제223-4조, 제223-8조, 제223-10조 내지 제223-14조의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5년 이하의 활동수행 금지
 2. 제131-21조에 규정된 몰수, 제223-13조 및 제223-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실행행위에 제공된 문서, 영상 및 음향자료를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기를 명할 수 있다.
 3.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 ② 제223-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계약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3-18조 【보충형】 제223-1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직업적 또는 사회적 활동수행 금지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소지 금지
3. 5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면허 정지로 한정할 수 있다. 경죄가 육상자동차의 운행의 기회에 범해진 경우 정지는 일부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될 수 없으며 직업활동 이외에 한정될 수 없다.
4.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
- 4-2. 제131-35-1조의 절차에 따른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 이수 의무
- 4-3. 제131-35-1조의 절차에 따른 친권자책임성교육 이수 의무

5. 범죄가 육상자동차의 운행의 기회에 범해진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불필요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5년 이하의 특정한 육상자동차의 운전금지
6. 범죄가 육상자동차의 운행의 기회에 범해진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민감성교육 이수 의무
7. 범죄가 육상자동차의 운행의 기회에 범해진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한 때에 그 차량에 대한 1년 이하의 운행금지
8. 범죄가 육상자동차의 운행의 기회에 범해진 경우 범행에 사용된 자기 소유 자동차의 몰수<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3-19조 【보충형】 제223-10조 및 제223-1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동 조항에 규정된 형 이외에 5년 이하의 의료 및 준의료활동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223-20조 【보충형】 제223-1조 및 제223-8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제1절 약취 및 감금

제224-1조 【체포·감금 등】 ① 법률의 규정이나 적법한 기관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약취, 억류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 또는 감금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피해자를 석방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2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2조 【감금 등의 결과적 가중】 ① 제224-1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이 고의적이거나 감금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음식·간호의 미제공으로 인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제224-1조의 죄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거나 제224-1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4-3조 【집단에 의한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① 수인에 대하여 제224-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항의 죄에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4-1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스스로 피해자를 석방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제224-2조에 규정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4-4조 【기타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① 중죄나 경죄의 실행을 준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죄나 경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명령이나

조건 특히 몸값의 지불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24-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항의 죄에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요건 하에서 인질이 된 피해자를 명령이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류 또는 감금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석방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에 처한다. 다만, 제22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5조 【15세미만 미성년 감금 등 가중】 ① 제224-1조 내지 제224-4조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형이 30년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으로, 20년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30년의 징역형으로 그 형을 각각 가중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4-5-1조 【형의감면 · 감경사유】 ① 본절에 규정된 중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를 중지케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2분의 1로 감경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인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24-5-2조 【범죄조직의 가중】 ① 제224-1조 제1항 및 제224-2조 내지

제224-5조에 규정된 범죄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형은 1,000,000 유로의 벌금 및 다음 각 호의 형으로 가중한다.

1. 법정형이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년의 징역형
 2. 법정형이 3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절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의 탈취

제224-6조 【항공기 등의 탈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이 현재하는 항공기, 선박, 기타 모든 운송수단 또는 대륙붕에 설치된 고정식 해저채굴 장치를 탈취하거나 조종하는 행위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4-7조 【항공기 등의 탈취 가중】 ① 제224-6조의 죄를 범한 경우 동 범죄가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수반한 때 또는 동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224-8조 【운항위험죄】 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운행 중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안전을 고의로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4-8-1조 【형의감면 · 감경사유】 ① 본절에 규정된 중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를 중지케 하거나 범죄가 사망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케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2분의 1로 감경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인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4-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에서 정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활동수행 금지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4. 본장에 규정된 중죄에 대하여 제131-35-1조의 절차에 따른 친권자의 책임성교육의 이수 의무<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4-10조 【사회사법이행의 선고】 본장 제1절에 규정된 중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는 자연인에 대하여 제131-36-1조 내지 제131-36-13조의 절차에 따른 사회사법이행의 의무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제1절 차별행위

제225-1조 【차별행위】 ① 출신, 성별, 가정상태, 임신, 신체외관, 성(姓), 건강상태, 신체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 성적 성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자연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

② 법인의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출신, 성별, 가정상태, 임신, 신체외관, 성(姓), 건강상태, 신체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 성적 성향, 연령,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동 구성원의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법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도 차별행위를 구성한다.

<2006.03.23. 개정, 법률2006-340>

제225-2조 【차별행위에 대한 형】 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225-1조에 규정된 차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 또는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여하한 경제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채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4. 재물 또는 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제225-1조에 규정된 차별 요소 중 하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5. 기업에서의 고용의 제공, 연수 또는 교육기간의 신청에 있어 제225-1조에 규정된 차별요소에 근거한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6. 사회보장법 제412-8조 제2호에 규정된 연수기회의 거부행위

② 제1호에 규정된 차별적 거부가 대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범해지거나 또는 이들의 입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해진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225-3조 【예외적 차별허용】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의 위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 노동능력 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상태를 근거로 한 차별, 단 이러한 차별은 아직 판명되지 않은 질환 또는 유전적 병적체질을 대상으로 한 유전적 조기진단검사의 고려가 그 사유가 되는 경우에 전조의 형에 처한다.
2. 노동법전 제2권 제4편 또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학상 확인된 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거부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강 또는 신체장애에 근거한 차별
3. 노동법전 또는 공직자의 신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성에 속함이 고용 또는 직업 활동수행의 결정적 요건이 되는 경우 고용분야의 성 차별
<2002.03.04. 개정, 법률2002-303>

제225-3-1조 【입증행위의 적용】 본절에 규정된 경죄는 그것이 차별적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225-2조의 재물, 행위, 서비스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일인 또는 수인을 대상으로 범해진 경우에도 성립된다.<2006.03.31. 신설, 법률2006-396>

제225-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2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1의 2절 인신매매

제225-4-1조 【인신매매】 ① 인신매매는 매춘영업, 성적가해 또는 침해, 구걸행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노동 또는 숙식조건에 관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모든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목적으로 보수 또는 기타의 모든 다른 이익을 교환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약속을 교환하여 자신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제3자의 처분하에 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동, 숙박 또는 수용하는 행위이다.

② 인신매매는 7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20. 개정, 법률2007-1631>

제225-4-2조 【인신매매의 가중】 제225-4-1조의 범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
2. 피해자의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 능력의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수인의 경우

4. 프랑스 영토밖에 소재하거나 프랑스 영토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한 경우
5.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진 경우
6. 타인으로 하여금 사망이나 신체의 일부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해의 급박한 위험상태에 직접 처하게 하는 상황에서 범해진 경우
7. 당사자, 가족 또는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협박, 강제, 폭행 또는 기망을 행사한 경우
8. 제225-4-1조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보호 감독권이 있는 자 또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자에 의한 경우
9. 직무상 인신매매에 대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참여하도록 요청된 자에 의한 경우<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4-3조 【범죄조직의 가중】 ① 제225-4-1조에 규정된 범죄는 범죄 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20년의 징역 및 3,0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4-4조 【고문 등의 가중】 제225-4-1조에 규정된 범죄가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수반한 경우 무기징역 및 4,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4-5조 【형의 선택】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해졌거나 예정인 중죄 또는 경죄가 제225-4-1조 내지 제225-4-3조에 따른 법정구금형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처해지는 경우에 인신매매의 범죄는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중죄 또는 경죄에 부착된 형에 처하며 이 중죄 또는 경죄가 가중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그가 인식하고 있는 가중사유들에 부착된 형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4-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4-7조 【미수범처벌】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4-9조 【형의감면 · 감경사유】 ①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를 중지케 하거나 범죄가 사망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케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2분의 1로 감경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20년의 징역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절 매춘영업죄 및 유사범죄

제225-5조 【매춘영업】 ① 매춘영업이라 함은 주체 및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성매매를 돕거나 보조 또는 보호하는 행위
2. 타인의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성매매의 수익의 분배에 관여하거나 또는 상습으로 성매매를 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 유인 또는 약취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거나 계속 하도록 할 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② 매춘영업을 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6조 【매춘영업의 간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체 및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매춘영업으로 간주하여 제225-5조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성매매를 하는 자와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성매매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자를 중개하는 경우
2. 매춘영업자가 수입원을 위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3. 상습으로 성매매를 하는 자와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그중 1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상당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 성매매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시행하는 예방, 통제, 원조 또는 재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7조 【매춘영업의 가중】 ① 매춘영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2.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3. 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
 4. 프랑스 영토 밖에서 또는 프랑스 영토에 도착한 때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자를 상대로 한 경우
 5.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나 감독권이 있는 자에 의한 경우 및 직무상의 권한남용에 의한 경우
 6. 직무상 성매매의 방지, 공중보건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참여 하도록 요청받은 자에 의한 경우
 7. 무기를 소지한 자에 의한 경우
 8. 강제, 폭행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
 9. 정범 또는 공범의 자격을 가지는 수인에 의한 경우. 다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7-1조 【미성년자의 가중】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매춘 영업이 범해진 경우 15년의 구금형 및 3,0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8조 【범죄조직의 가중】 ① 범죄조직에 의하여 제225-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0년의 징역형 및 3,0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9조 【고문 등의 가중】 ① 매춘영업이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수반한 경우 무기징역형 및 4,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0조 【매춘영업의 방조】 ① 직접 또는 타인을 매개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의 징역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매춘영업에 제공되는 시설을 소유, 관리, 경영, 감독, 유지하거나 또는 동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출자하는 행위
 2. 공중에게 개방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소유, 관리, 경영, 감독, 유지하거나 또는 동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출자한 자가 시설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호객행위를 상습으로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3.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를 매도하거나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4.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하한 종류의 자동차를 방식을 불문하고 매도, 임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에 적용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0-1조 【성매매 호객행위】 소극적 태도를 포함한 여하한 수단에 의하여 보수 또는 보수의 약속을 교환하여 성적관계에 유인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아가는 행위는 2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11조 【미수】 본절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1-1조 【형의면제 · 감경사유】 ①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본절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관청에 통보를 하여 범죄를 중지케 하거나 범죄가 사망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케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2분의 1로 감경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인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225-11-2조 【프랑스 법률의적용】 ① 제225-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죄가 외국에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 제113-6조 제2항 및 제113-8조의 제2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률을 적용한다.<2006.04.04. 신설, 법률2006-399>

제225-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5조 내지 제225-10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을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의 2절 미성년자 또는 특별히 쇠약한 자의 성매매행위

제225-12-1조 【미성년자 등】 ①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성매매에 나아가는 미성년자로부터 보수 또는 그 약속을 교환하여 성적인 성격의 관계를 요구, 승인 또는 획득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성매매에 나아가는 자로부터 보수 또는 그 약속을 교환하여 성적인 성격의 관계를 요구, 승인 또는 획득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쇠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2-2조 【형의 가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가 상습적 또는 수인에 대하여 범해진 경우
2.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진 경우
3.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자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
4. 행위자가 의도적 또는 과실로 타인을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폭행을 한 경우

②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6.04.04. 개정, 법률2006-399>

제225-12-3조 【프랑스법률의 적용】 제225-1조 및 제225-12-2조의 범죄가 외국에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 제113-6조 제2항 및 제113-8조의 제2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법률을 적용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2-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5조 내지 제225-10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의 3절 구걸영업

제225-12-5조 【구걸영업】 ① 구걸영업은 주체와 방식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구걸을 조직하는 행위
2. 타인의 구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구걸에 의한 수익의 분배에 관여하거나 또는 상습으로 구걸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구걸에 종사케 할 목적으로 고용, 유인 또는 약취하는 행위 또는 구걸을 하거나 그것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개인적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공도로상에서 헌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 유인 또는 약취하는 행위

② 구걸에 나아가는 일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지속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걸영업으로 간주한다.

③ 구걸영업은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12-6조 【구걸영업의 가중】 구걸영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2.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3. 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
4. 프랑스 영토 밖에서 또는 프랑스 영토에 도착한 때에 구걸을 하도록 유인된 자를 상대로 한 경우
5.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나 감독권이 있는 자에 의한 경우 및 직무상의 권한남용에 의한 경우
6. 구걸에 종사하는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협박, 강제, 폭행 또는 기망을 행사한 경우
7. 정범 또는 공범의 자격을 가지는 수인에 의한 경우. 다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행위한 경우를 제외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12-7조 【범죄조직의 가중】 구걸영업은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10년 구금형 및 1,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3절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 및 기숙조건

제225-13조 【부당역무제공을 받는 행위】 미약상태 또는 의존상태가 분명하거나 그 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상 또는 노동의 중요성과의 명백하게 형평성이 결여된 보수를 지급하고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4조 【부당 근로조건 등】 미약상태 또는 의존상태가 분명하거나 그 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 또는 기숙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5조 【다수피해자 가중】 ① 수인에 대하여 제225-13조 및 제225-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해진 경우에 7년의 구금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일인 또는 수인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인에 대하여 범해진 경우에 10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25-15-1조 【미약상태 등의 간주】 제225-13조 및 제225-14조의 적용을 위하여 미성년자 또는 프랑스 영토에 도착하여 동조에 규정된 행위의 피해자가 된 자들은 미약한 사람 또는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225-1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13조 내지 제225-15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기숙을 목적으로 제225-14조의 범죄를 범하는데 제공된 영업자금의 몰수
<1998.07.29. 개정, 법률98-657>

제3의 2절 집단 괴롭힘

제225-16-1조 【집단 괴롭힘】 폭행, 협박, 성적침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및 사회교육 공간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의 기회에 굴욕적 또는 비하하는 행위들을 받도록 하거나 범하도록 타인을 그의 의사를 불문하고 이끄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16-2조 【집단 괴로힘의 가중】 제225-16-1조에 규정된 범죄는 연령, 질병,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하여 자활능력이 미약함이 명백하거나,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범해진 경우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16-3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16-1조 및 제225-16-2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4절 사자에 대한 존경의 침해

제225-17조 【사체의 완전성 침해】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사체의 완전성에 대한 모든 침해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묘비, 묘소 또는 사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기념물을 해하거나 모독한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체의 완전성을 해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18조 【차별에 의한 가중】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사자의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제225-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동조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제225-18-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5-17조 및 제225-18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형
3. 제225-18조의 범죄에 대하여 제131-39조 제1항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5-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 제1절 및 제3절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5년 이하의 행사금지
2.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3. 피고인이 소유하는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4.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5. 범죄에 제공된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
6. 제131-5-1조의 절차에 따른 시민성교육이수의무<2006.07.24. 개정, 법률 2006-911>

제225-2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 제1의2절, 제2절, 제2의2절, 제2의3절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직업 또는 사회활동수행 금지
3. 체류금지

4. 판결에서 열거하는 공개시설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직접 또는 간접적 경영금지,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동 시설에의 고용금지 또는 동 시설에 대한 출자금지
5.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6. 5년 이하의 출국금지
7. 영구적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일상적 접촉을 내재하는 직업 또는 봉사활동의 수행금지
8. 제131-5-1조의 절차에 따른 시민성교육의 이수 의무<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5-2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금지】 본장 제1의2절, 제2절, 제2의3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제225-22조 【보충형】 제225-10조에서 정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허가의 영구적 취소
2. 성매매에 제공된 시설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3. 영업재산의 몰수

제225-23조 【시설폐쇄에 수반하는 효과】 ① 제225-2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한시적 시설의 폐쇄는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영업의 정지를 포함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영업허가권의 소멸기간은 폐쇄기간 중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제222-22조에 따른 시설의 영구적 폐쇄는 주류판매점 또는 음식점 영업허가의 영구적 취소를 포함한다.<1992.07.22. 개정, 법률92-684>

제225-24조 【보충형】 제225-5조 내지 제225-10조에서 정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동산 및 성매매 행위자 이외의 자가 소지하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물건의 몰수
2. 피해자를 본국에 송환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

제225-25조 【몰수의 보충형】 제225-10-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 본장 제1의2절 및 제2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 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추가로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제1절 사생활 침해

제226-1조 【사생활의 침해】 ①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 ②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제226-2조 【사적 비밀의 이용】 ① 제22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226-3조 【감청장치의 무허가제조 등】 ① 국사원령이 요건을 정하는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26-15조 제2항의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실행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거나 또는 원거리 대화탐지용으로 고안되어 제226-1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의 제조, 수입, 소지, 진열, 제공, 임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제226-1조에 정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제226-1조 및 제226-1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선전하는 행위가 범죄의 실행을 선동하는 것일 때에는 제226-1조의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6-4조 【주거침입】 기망, 협박, 폭행 또는 강제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또는 체류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6-5조 【미수】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6-6조 【친고죄】 제226-1조 및 제226-2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권리승계인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6-7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어느 직업·사회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2절 인상 침해

제226-8조 【인상의 침해】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음성이나 이미지로 구성된 타인의 인상을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인상이 명백하지 아니

하거나 인상의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거론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향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226-9조 【미수, 법인의 형사책임】 제226-5조 및 제226-7조의 규정은 본질의 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절 무 고

제226-10조 【무고】 ① 동원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법부,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의 관리, 고소·고발을 처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관서 또는 신고대상자의 상사나 고용주에게 불이익한 사법, 행정 및 규율상의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소·고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소·고발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무죄판결 또는 수사법원의 무혐의결정이 확정되면 고소·고발된 사실은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간주된다.

③ 기타의 경우, 고소·고발자에 대한 소추를 심리하는 법원은 고소·고발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26-11조 【고소·고발자에 대한 공소제기】 고소·고발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때에는 그에 대한 중급재판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고소·고발자를 상대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제226-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6-10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어느 직업·사회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4절 비밀침해

제1 직업상의 비밀침해

제226-13조 【비밀의 누설】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에 의하거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로 인하여 비밀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누설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14조 【적용제외】 ① 법률상 비밀의 공표가 강제 또는 허가되는 경우에는 제226-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5세미만의 미성년자, 연령 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학대 또는 미보호의 사실을 알고 사법, 의료 또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이를 통보한 자
2. 업무수행 중에 신체 또는 정신상 확인한 것으로 여하한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추정케 하는 학대 또는 미보호 행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한 의사. 단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연령 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자신과 상담한 사람으로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거나 그것을 구입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자의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한 성격을 도지사 및 파리의 경우에는 파리경찰청장에게 통지한 보건 또는 사회활동의 직업인
- ② 본조의 요건 하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행해진 신고는 어떠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 서신비밀의 침해

제226-15조 【서신비밀의 침해】 ① 악의로, 도달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발송된 서신을 개피, 삭제, 지연시키거나 수신처를 바꾸는 행위 또는 부정하게 그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악의로, 원거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발송된 서신을 가로채거나 수신처를 바꾸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또는 서신을 감청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5절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권리 침해

제226-16조 【부정한 정보처리】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에 규정된 전산 정보처리방식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제78-17호 1978년 1월 6일의 전산, 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I의 2호에 규정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전산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16-1-A조 【절차위반】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 전산, 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I 또는 제II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개인 정보의 처리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전산 및 자유위원회가 정하는 간소 또는 면책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16-1조 【주민등록정보의 부정처리】 전산처리가 전조의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자료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17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전산정보처리】 전조의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 제34조에 의한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 정보의 전산처리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18조 【개인정보의 부정수집】 ① 사위(詐僞), 부정 또는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18-1조 【상업적 목적의 부정처리】 ① 당해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를 하는 행위는 이 전산처리가 특히 상업적 시장조사의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이 반대의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19조 【개인정보의 불법보관】 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이나 정치, 철학 또는 종교적 의견, 노동조합에의 소속여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거나 건강 또는 성적성향과 관련되는 개인정보를 전산화된 저장매체에 입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유죄판결 또는 보안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산화된 저장매체에 입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19-1조 【보건연구목적의 전산처리】 ① 보건 분야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집 또는 전달된 개인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열람, 정정 및 이의제기권, 정보의 종류 및 정보의 수취인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또는 사자에 있어서 생존시에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경우
- <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20조 【보관기간의 위반】 ① 국립전산 및 자유위원회에 접수된 승인 또는 의견의 요구 또는 사전신고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이 보관이 법률의 요건 하에서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된 개인정보를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전산처리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21조 【불법정보처리】 정보의 기록, 분류, 전달 또는 기타 모든 정보 처리업무를 행함을 기화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가 정보처리를 허가하는 법령, 법규명령 또는 국립전산 및 자유위원회의 결정 또는 이러한 정보 처리를 위한 사전신고에 규정된 목적을 일탈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22조 【개인정보의 누설】 ① 정보의 기록, 분류, 전달 또는 기타 모든 정보처리업무를 행함을 기화로 누설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본인의 허가가 없음에도 정보를 수수할 자격이 없는 제삼자에게 이를 알게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권리승계인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22-1조 【개인정보의 국외전달】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 유럽 공동체위원회 또는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 제70조에 언급된 국립 전산 및 자유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을 위반하여 유럽공동체에 소속에 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전산처리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대상이 될 예정인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22-2조 【개인정보의 삭제명령】 제226-16조 내지 제226-22-1조의 경우에 범죄의 이유가 된 전산처리의 대상인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가 명령될 수 있다. 국립전산 및 자유위원회의 위원들과 소속 관리들은 자료의 삭제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2004.08.06. 신설, 법률2004-801>

제226-23조 【제226-19조의 확대적용】 제226-19조의 규정은 그 실행이 오로지 개인적 활동수행에만 국한되지 않은 자동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226-2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1>

제6절 유전적 특질실험 또는 유전자지문식별에 기인한 사람에 대한 침해

제226-25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의학적 또는 과학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의 경우에도 민법전 제16-10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의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26-26조 【유전자정보의 부정이용】 유전학적 연구를 통하여 개인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를 의학적 또는 과학적 연구목적을 일탈하여 이용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26-27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민법전 제16-11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학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 식별을 실시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26-28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① 군대 또는 소속 부대의 작전의 기회에 전사한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의학적 또는 비과학적 목적이거나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수사 또는 예심처분 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망명권에 관한 법전 제111-6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해 취해진 민적증명서의 확인이외에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유전자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정보 누설하거나 공중보건법전 제1131-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20. 개정, 법률2007-1631>

제226-29조 【미수】 제226-25조, 제226-26조, 제226-27조 및 제226-28조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26-30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 절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6-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행사의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직업적 또는 사회적 활동의 수행금지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4. 제131-35조에 규정된 판결의 게시 및 공고
5. 제226-1조 내지 제226-3조, 제226-8조, 제226-15조 및 제226-2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실행행위에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물건의 몰수. 제226-3조에 규정된 장치는 몰수하여야 한다.<1994.07.29. 신설, 법률94-653>

제226-32조 【감정인의 자격박탈】 재판상 감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26-28조에 규정된 범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감정인 자격을 박탈한다.<1994.07.29. 신설, 법률94-653>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제1절 미성년자의 유기

제227-1조 【미성년자의 유기】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15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기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유기에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7-2조 【가중유기】 ① 15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기하여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거나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15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절 부양의무 불이행

제227-3조 【부양의무 불이행】 ① 민법전 제1권중 제5편, 제6편, 제7편 및 제8편에 규정된 가족에 대한 의무중 하나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자, 비속, 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양정기금, 분담금, 원조금 기타 모든 성격의 급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상 화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 전항의 행위는 민법 제373조 제3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2005.07.04. 개정, 법률명령2005-759>

제227-4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제227-3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부양 정기금, 분담금, 원조금 기타 모든 성격의 급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에게 주소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4-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1.06.12. 신설, 법률2001-504>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제227-5조 【자의 인도거부】 미성년인 자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6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가 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상 화의에 따라 자녀를 방문하거나 자녀와 동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게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에게 주소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7조 【존속에 의한 자의 약취】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자의 양육을 수탁받은 자 또는 자와 동거하는 자로부터 미성년의 자를 약취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5.07.04. 개정, 법률명령2005-759>

제227-8조 【미성년자의 약취】 제227-7조에 열거된 자 이외의 자가 기망 또는 폭력을 사용함이 없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그 양육을 수탁받은 자 또는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자로부터 미성년의 자를 약취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9조 【형의 가중】 제227-5조 및 제227-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5일을 초과하여 동인을 보호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는 경우
<2002.03.04. 개정, 법률2002-305>

제227-10조 【친권을 박탈당한 자에 의한 자의 불법약취】 친권을 박탈당한 자가 제227-5조 및 제2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11조 【미수】 제227-7조 및 제227-8조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제227-12조 【유기의 교사】 ① 영리의 목적으로 또는 공여, 약속, 협박이나 권한남용에 의하여 부모 또는 그 일방에 대하여 출생한 자 또는 출생할 자의 유기를 교사하는 자는 6개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의 목적으로 양자를 원하는 사람과 출생한 자 또는 출생할 자의 유기를 원하는 사람을 중개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 또는 부부와 출산 후 아이를 인도할 의도로 임신을 승낙하는 부녀를 중개하는 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상습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이를 중개한 때에는 그 형을 2배로 가중한다.

④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7-13조 【민사신분의 침해】 ① 아동의 민사상 신분을 해하는 고의에 의한 아동의 교체, 위장출산 또는 출산은폐의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7-1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제227-15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죄】 ①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적법한 보호 감독권이 있는 자가 음식물 또는 보살핌을 제거하여 그 건강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통행자들의 적선을 얻을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아동을 보도 또는 대중여객수단에 부착된 장소에 머물게 하는 행위는 특히 보살핌의 제거를 구성한다.<2005.07.04. 개정, 법률명령2005-759>

제227-16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치사】 전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27-17조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의 건강위험죄】 ① 법률상 또는 사실

상의 양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의 건강, 안전, 도덕 또는 교육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는 민법 제373조 제3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2005.07.04. 개정, 법률명령2005-759>

제227-17-1조 【취학의무불이행 등】 ① 부모 또는 친권 또는 지속적으로 사실상의 보호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에 의하여 장학관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에 등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계약 외에 학급을 수용하는 사립학교장에 의하여 장학관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제131-1조 및 제131-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기서 실시되는 교육이 의무교육의 대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급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추가로 당해인에 대하여 운영 또는 교육의 금지 및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005.04.23. 개정, 법률2005-380>

제227-17-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7-15조 내지 제227-17-1조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2001.06.12. 개정, 법률2001-504>

제227-18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불법사용교사】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직접적으로 교사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가 15세미만이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18-1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운반 등 교사】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운반, 소지, 제공 또는 양도를 직접적으로 교사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가 15세미만이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19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교사】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상습적이고 과도한 알콜 음료 섭취를 직접적으로 교사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가 15세미만이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1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교사】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중죄 또는 경죄를 상습적으로 범할 것을 직접적으로 교사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가 15세미만이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2조 【미성년자의 타락조장】 ① 미성년자의 타락을 조장하거나 또는 조장하려고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15세미만이거나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문자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범행을 한 행위자와 접촉이 이뤄지거나 강의 또는 교육시설 내, 행정청의 구역 내 및 이 시설 또는 구역주변에서 학생 또는 대중의 출입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가 참석 또는 참가하는 공연음란 또는 성관계가 포함된 집회를 조직하는 성인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0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2-1조 【전기통신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제안】 ① 성년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표현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의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제안을 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안이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227-23조 【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 ① 배포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영상 또는 미성년자의 상징을 촬영, 기록 또는 전달하는 행위는 이 영상 또는 표현이 포르노그래피의 성격을 띠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영상 또는 표현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거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배포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게 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영상 또는 표현의 배포를 위하여 불특정의 대중을 수신자로 하여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항에 규정된 경죄의 미수행위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⑤ 위와 같은 영상 또는 표현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유선의 대중통신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조회하거나 그러한 영상 또는 표현을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보유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⑥ 본조에 규정된 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⑦ 본조의 규정은 또한 신체적 외형이 미성년자와 흡사한 사람의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적용한다. 단 당해인이 촬영 또는 녹음일에 18세 이상이었던 것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4조 【폭력물 등의 제작】 ① 폭력성 또는 포르노그래피의 성질을 띠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메시지를 방법이나 매체 여하를 불문하고 제작, 전달 또는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거나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 3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하거나 유선의 대중통신서비스에 의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5조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성적 위해】 폭력, 강제, 협박에 의하지 않거나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함이 없이 15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적 위해를 가한 성인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26조 【존속 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제227-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
2.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4. 불특정 대중을 수신자로 하는 메시지발송을 위한 전기통신망의 이용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행위자와 접촉을 한 경우
5. 만취상태 또는 마약류의 명백한 영향 하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27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폭력, 강제, 협박에 의하지 않거나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함이 없이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지 아니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 기타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감독권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
2.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제227-27-1조 【프랑스 법률의 적용】 제227-2조, 제227-23조 또는 제227-25조

내지 제227-27조에 규정된 범죄가 외국에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 제113-6조 제2항 및 제113-8조의 제2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률을 적용한다.
<1998.06.17. 신설, 법률98-468>

제227-28조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 제227-18 내지 제227-21조 및 제227-23조에 규정된 경죄가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해 범해진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이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227-28-1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227-18조 내지 제227-26조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2.03.04. 개정, 법률2002-305>

제227-28-2조 【친권자의 권리박탈】 ① 성적 침해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범해진 경우 판결법원은 민법전 제378조 및 제379-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박탈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판결법원은 피해자의 형제에 관하여도 이 권리의 박탈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중죄법원에 소추가 제기된 경우 중죄법원은 배심원의 참여 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선고한다.<2005.12.12. 신설, 법률2005-1549>

제227-28-3조 【교사】 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222-22조 내지 제222-32조, 제225-5조 내지 제225-2조, 제227-22조, 제222-23조 및 제227-25조 내지 제227-28조의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기부, 선물 또는 여하한 이득을 공여 또는 약속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범죄가 범해지거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때에도 경죄의 경우에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중죄의 경우에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6.04.04. 신설, 법률2006-399>

제6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227-29조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보충형】 본장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행사의 금지
 2. 5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다만,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면허정지로 한정할 수 있다.
 3.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 취소
 4. 5년 이하의 출국금지
 5.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예정인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6. 영구적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의 일상적 접촉이 내재된 직업적 활동 또는 자원봉사 수행의 금지
 7. 제131-3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친권자의 책임성교육의 이수 의무
-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227-30조 【판결의 게시】 본장 제4절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7-31조 【사회사법이행】 제227-22조 내지 제227-27조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또한 제131-36-1조 내지 제131-36-13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사법이행을 선고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227-32조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이수의무】 제227-18조 및 제227-18-1조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또한 제131-35-1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이수의무를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7절 자연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보충형

제227-33조 【몰수】 제227-22조 제3항 및 제227-23조 제6항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 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추가로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2007.03.05. 신설, 법률2007-297>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제1장 절 도

제1절 단순절도 및 가중절도

제311-1조 【정의】 절도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것을 말한다.¹⁵⁾

제311-2조 【에너지의 불법영득】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에너지의 불법 영득은 절도로 간주한다.

제311-3조 【절도】 절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4조 【가중절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다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행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하는 경우
3.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사무취급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

15) 프랑스 형법은 '탈취행위를 동반하는 모든 불법영득행위'를 'vo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강도', '강도치사'로 이해되는 것도 'vol'의 가중된 형태로 분류(des vols aggravés)하고 있다.

4.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¹⁶⁾에 타인을 폭행한 경우 다만, 폭행의 결과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5. 타인¹⁷⁾의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 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6. 기망,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무단침입의 방법으로 주거 또는 현금, 유가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재의 보관 장소로 이용되거나 또는 그러한 용도에 일시 사용되는 장소에 들어가 죄를 범하는 경우
 7.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을 위한 장소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8.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손괴, 훼손, 효용상실 행위를 한 경우
 9.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사자의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죄를 범하는 경우
- ② 전항 각호 중 2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으로, 3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각각 가중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16) ‘실행행위 전’은 실행에 착수한 뒤 기수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며, ‘실행행위 후’는 실행의 직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침입절도가 폭행을 한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담을 넘어 재물을 탐색하던 중 발각되자 폭행을 한 경우는 실행행위 전의 폭행이며,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발각되자 폭행을 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폭행으로 무력화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행행위 중의 폭행이며, 재물을 취득한 직후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항거를 폭행으로 무력화하는 경우는 실행행위 후의 폭행이라 할 수 있다.(LARGUIER J. et A.-M. & PHILIPPE C., Droit pénal spécial, mémentos dalloz, 14e éd., 2007, p. 132)

17) 피해자 및 물건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gardien de la chose)와 같은 제3자도 포함한다. (LARGUIER J. et A.-M. & PHILIPPE C., op. cit., ibid.)

제311-4-1조 【미성년자의 원조】 ① 성년이 정범 또는 공범에 해당하는 일인 또는 수인의 미성년자의 원조를 받아 절도를 한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년이 일인 또는 수인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원조를 받아 절도를 한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2.09.09. 신설, 법률2002-1138>

제311-5조 【절도폭행】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1주이하의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 절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6조 【절도상해】 ①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1주 초과와 노동불능을 초래한 경우 절도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1-7조 【절도 중상해】 ①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절도는 15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1-8조 【무기사용절도】 ①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소지허가 대상이 되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절도는 20년의 구금형 및 1,0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1-9조 【조직적 절도】 ①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죄를 범한 경우 절도는 15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한 때에는 20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그 죄를 범하거나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소지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기를 소지한 자가 그 죄를 범하는 경우에 3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1-9-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절도】 ① 제311-9조에 규정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범죄조직에 의한 절도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진행 중인 범죄의 중지를 가능케 하거나 범죄로 사망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케 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절반으로 감경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311-10조 【절도치사 등】 ① 실행행위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절도는 무기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1-11조 【절도폭행의 준용】 절도 후¹⁸⁾ 정범 또는 공범의 도주를 원조

하거나 그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제311-4조, 제311-5조, 제311-6조, 제311-7조, 제311-9조 및 제311-10조 중 폭행을 동반하는 예에 의해 처벌한다.

제2절 일반규정

제311-12조 【친족 간의 범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절도¹⁹⁾는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2. 자기의 배우자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다만, 별거 중이거나 또는 별거를 허가받은 배우자에 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조의 규정은 절도가 신분증명, 외국인의 체류 또는 주거자격관련 또는 지불수단 서류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 또는 서류에 대하여 범해진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2006.04.04. 개정, 법률2006-399>

제311-13조 【미수】 본장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11-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8) 범죄 직후인 ‘실행행위 후’보다 다소 뒤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점(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주체는 절도행위를 한 정범 또는 공범이다.

19) 단순절도뿐 아니라 절도의 가중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이하 다른 재산범의 경우도 같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금지기간은 제311-6조 내지 제311-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또는 한시적인 것으로 하며, 제311-3조 내지 제311-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4.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11-6조 내지 제311-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6. 제131-5-1조에 따른 시민성 교육이수의무<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11-15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제311-6조 내지 제311-10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311-1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형. 그 기간은 제311-6조 내지 제311-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며, 제311-3조 내지 제311-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3. 제131-39조 제8호에 규정된 형

-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장 강 요

제1절 강 요

제312-1조 【강요】 ① 강요라 함은 폭행, 폭행의 협박 또는 강제에 의하여 서명을 하게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게 하거나,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또는 비밀을 알아내거나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강요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2조 【가중강요】 다음 각호의 경우 강요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1주이하의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
2. 타인의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3.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또는 성적성향을 이유로 죄를 범한 경우<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12-3조 【강요상해】 ①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1주 초과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 15년의 징역형 및 15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2-4조 【강요중상해】 ①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강요는 2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2-5조 【무기사용강요】 ①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소지허가 대상이 되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강요는 3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2-6조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①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강요는 2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타인을 폭행하여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무기의 사용 또는 무기를 이용한 협박을 통하여 죄를 범하거나 행위자가 소지가 금지되거나 소지허가 대상이 되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강요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2-6-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① 제312-6조에 규정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강요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만일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통보를 하여 범죄의 실현을 방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②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의 정범 또는 공범에게 처해지는 자유형은 만일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여 진행 중인 범죄의 중지를 가능케 하거나 범죄로 사망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케 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정범 또는 공범자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때에는 절반으로 감경한다. 형량이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2004.03.09. 신설, 법률2004-204>

제312-7조 【강요치사 등】 ①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강요는 무기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12-8조 【강요폭행의 준용】 강요 후 정범 또는 공범의 도주를 원조하거나 그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제312-2조, 제312-3조, 제312-4조, 제312-6조 및 제312-7조 중 폭행을 동반하는 예에 의한다.

제312-9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①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제311-12조의 규정은 본절의 죄에 적용한다.

제2절 공 갈

제312-10조 【공갈】 ① 공갈은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만한 사실을 폭로 또는 전가할 것을 협박함으로써 서명을 하게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게 하거나,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또는 비밀을 폭로시키거나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공갈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11조 【가중공갈】 공갈을 행한 자가 그 협박의 내용을 실행한 때에는 그 형을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312-12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①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제311-12조의 규정은 본절의 죄에 적용한다.

제2의 2절 강제에 의한 금전요구

제312-12-1조 【금전 등의 요구】 합동의 공격적 방식에 의하거나 또는 위험한 동물에 의한 위협 하에 공도로상에서 금전, 유가증권 또는 재물의 교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12-1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에서 정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과한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금지기간은 제312-3조 내지 제312-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으로 하며, 제312-1조, 제312-2조 및 제 312-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4.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6. 제131-5-1조에 따른 시민성 교육이수의무
7. 제131-35-1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 교육 이수의무<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312-14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제312-2조 내지 제312-7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312-15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제1절 사 기

제313-1조 【사기】 ① 사기라 함은 허위의 성명 또는 자격을 이용하거나 진실한 자격을 남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사술을 동원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망하여 그 자 또는 제3자의 손해로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을 교부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채무이행 또는 채무의 면제를 승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기는 5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2조 【가중사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기는 7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1.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회로 죄를 범하는 경우
2. 공공사무취급자의 자격을 사칭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
3. 증권의 발행 또는 인도적·사회적 구호를 목적으로 자금모집을 담당하는 자가 실행하는 경우
4.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능력이 미약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② 사기가 범죄조직에 의해 범해진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0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13-3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①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제311-12조의 규정은 사기죄에 적용한다.

제2절 사기 유사범죄

제313-4조 <2001년 6월 12일자 법률 2001-504호에 의거 폐지>

제313-5조 【시설 등의 부정이용】 ① 시설 등의 부정이용이라 함은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에서 식음료를 제공받는 행위
 2. 숙박의 임대시설로부터 하나 또는 수개의 방을 배정받아 10일이하의 기간 동안 이를 점유하는 행위
 3. 급유업자로부터 연료 또는 윤활유를 제공받아 자동차의 저장탱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우는 행위
 4. 택시 또는 좌석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케 하는 행위
- ② 시설 등의 부정이용은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6조 【경매·입찰의 방해】 ① 공경매·입찰에 있어서 금품의 공여, 약속,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매인을 탈락시키거나 경매·입찰 가격 또는 응모를 제한하는 자는 6월의 구금형 및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유형력의 행사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공경매·입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공경매·입찰 개시 후 법률사무종사자²⁰⁾의 관여 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행위

③ 본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20) 법률사무종사자(l'officier ministériel)라 함은 공무원은 아니나 일정한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국사원 변호사, 파기원 변호사, 중죄법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상사법원 서기 등을 지칭한다.

제313-6-1조 【타인소유부동산의 임대행위】 임대료의 지불을 받기 위한 주거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타인에게 속하는 부동산을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자의 허가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서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신설, 법률2003-239>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제313-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313-1조, 제313-2조, 제313-4조, 제313-6조 및 제313-6-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5년 이하의 수행금지
3.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5년 이하의 폐쇄
4.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6.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313-8조 【공계약 배제】 제313-1조, 제313-2조, 제313-6조 및 제313-6-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5년 이하의 공계약배제를 선고할 수 있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313-9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13-1조 내지 제313-3조 및 제313-6-1조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4장 유 용

제1절 횡령

제314-1조 【횡령】 ① 횡령은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물에 대하여 그 반환, 관리 또는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유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횡령은 3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2조 【가중횡령】 다음 각호의 경우 횡령은 7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기업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경영자나 담당자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는 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
2.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자로서 부수적인 것을

포함하여 상습적으로 제3자의 재산운용에 협력을 제공하거나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

3. 인도적·사회적 구호를 목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자금모집을 하는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능력이 미약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14-3조 【특수횡령】 재산관리인²¹⁾ 또는 법률사무종사자²²⁾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회로 또는 그 자격을 이용하여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314-4조 【친족 간의 범행】 제311-12조의 규정은 횡령죄에 적용한다.

제2절 질물(質物) 또는 압류물의 유용

제314-5조 【질물 유용】 ① 채무자, 임차인 또는 담보를 제공한 자가 질물을 손괴 또는 유용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14-6조 【압류물 손괴】 ① 압류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물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관리에 놓여진 압류물을 손괴 또는 취거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21) 프랑스 형법상 'le mandataire de justice'를 말하며 유산관리인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22) 제313-6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사무종사자에 덧붙여 증권거래중개인(l'agent de change)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3절 강제집행면탈

제314-7조 【강제집행면탈】 ① 채무의 존재가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형사법원의 재산상 유죄판결이나 불법행위, 준불법행위 또는 부양사건에 관한 민사법원의 재산형의 유죄판결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의 증가나 채권의 감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재산의 은닉을 통하여 지급불능을 조성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경영자가 형사사건 또는 불법행위나 준불법행위 사건과 관련된 유죄판결로 인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면탈 목적으로 전항의 경우와 같이 지급불능을 조성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14-8조 【연대책임】 ① 법원은 제314-7조에 정한 죄의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현금이나 물건의 시가 한도 내에서 정범이 면탈하려고 하였던 유죄판결로 인한 금전상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형사법원에 의하여 재산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선고되는 형과 이미 선고된 형 사이에 형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공소시효는 채무자가 집행을 면탈하려고 한 유죄판결의 선고 시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유죄판결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최후로 이루어진 때부터 기산한다.

제314-9조 【간주유책판결】 제314-7조를 적용함에 있어 급부금, 원조금 또는 혼인비용의 분담금의 지불의무를 부과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재판상 화의는 부양사건에 관한 유책판결로 동일하게 간주된다.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14-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314-1조, 제314-2조 및 제314-3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5년 이하의 수행금지
3.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5년 이하의 폐쇄
4. 5년 이하의 공계약배제
5.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314-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314-5조, 제314-6조 및 제314-7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1992.07.22. 신설, 법률92-685>

제314-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14-1조 및 제314-2조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314-13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14-5조, 제314-6조 및 제314-7조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제1절 장물취급

제321-1조 【장물취급】 ① 장물취급은 정을 알면서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²³⁾을 은닉,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는

23)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생긴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누출된 증권시장에 관한 특수정보’등 무형의 것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파기원은 장물취급죄에 해당이 되려면 장물의 내용에 ‘어떠한 물성(une certaine matérialité)’이 부여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Crim. 3 avr. 1995, Bull. n° 142)

행위를 말한다.

- ② 정을 알면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는 장물취급에 해당한다.
- ③ 장물취급은 5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2조 【가중장물취급】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물취급은 10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 1. 상습으로 또는 직업 활동의 수행으로 기인한 편의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 2.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제321-3조 【벌금증액】 제321-1조 및 제321-2조에 규정된 벌금은 375,000유로 이상 장물 가액의 절반까지 증액할 수 있다.

제321-4조 【본범의 형적용】 장물을 발생시킨 죄의 자유형의 법정형이 제321-1조 또는 제321-2조의 죄의 구금형의 법정형을 상회하는 경우 장물 취득 등 행위자가 인식한 죄에 따른 형에 처한다. 인식한 죄에 가중사유가 따르는 때에는 인식한 사유에 의하여 가중되는 형으로 처벌한다.

제321-5조 【누범】 누범의 적용에 관하여 장물취급은 장물을 발생시킨 죄와 동일한 죄로 간주한다.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제321-6조 【장물취급죄의 준용】 ① 중죄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

지는 경죄를 저지르며 이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와 일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수입원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죄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를 저지르며 이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들을 위하여 허위의 수입원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6.01.23. 개정, 법률2006-64>

제321-6-1조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한 보호감독권자의 책임】 ① 제321-6조에 규정된 형은 미성년자에 의해 중죄 및 경죄가 범해지고 그에 대한 보호감독권한을 가지는 자가 수입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조의 형은 범해진 범죄가 인신매매죄, 강요죄 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구성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투약을 하는 자와 일상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 마약밀매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7년의 구금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항에 열거된 범죄가 일인 또는 수인의 미성년자에 의하여 범해진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6.01.23. 신설, 법률2006-64>

제321-7조 【기장의무위반】 ① 중고의 동산이나 제조업자 또는 상인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동산의 판매를 직업으로 하는 자가 국사원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매나 교환의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성상과 양도인의 신원에 대하여 기록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 하는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사무종사자를 제외하고, 공공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항에 규정된 물건의 판매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자가 국사원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에 대하여 기록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 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판매활동이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제2항의 행사를 기획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자가 기록의무를 진다.

제321-8조 【허위기재, 제출거부】 ① 전조의 의무자가 부정확한 기재를 하는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조의 의무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대하여 기록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2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금지기간은 제321-2조 및 제3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하며, 제321-1조, 제321-6조, 제321-7조 및 제321-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3.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폐쇄기간은 제321-2조 및 제3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하며, 제321-1조, 제321-6조, 제321-7조 및 제321-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4. 공계약 배제. 배제기간은 제321-2조 및 제3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하며, 제321-1조, 제321-6조, 제321-7조 및 제321-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5.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8. 제321-1조 내지 제3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채류금지
9.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10. 제131-3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친권자의 책임성교육이수의무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321-10조 【본범의 보충형의 병과】 제321-1조 내지 제3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장물을 발생시킨 중죄나 경죄의 본범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충형을 아울러 선고할 수 있다.

제321-10-1조 【몰수】 ① 제321-6조 및 제321-6-1조의 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 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추가로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

② 행위자와 일상적인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범해진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보충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2006.01.23. 신설, 법률2006-64>

제321-1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제321-2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32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21-1조 내지 제321-4조, 제321-7조 및 제321-8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321-1조 내지 제321-4조의 범한 경우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제321-7조 및 제321-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31-39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형

③ 제131-37조 제1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제1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제322-1조 【재물 및 시설물손괴】 ① 타인의 재물을 손괴,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 결과 손해가 경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의 외벽, 차량, 도로 또는 노상시설에 대하여 문자, 기호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자는 행위 결과 손해가 경미한 경우 3,750유로의 벌금과 사회봉사형에 처한다.<2002.09.09. 개정, 법률2002-1138>

제322-2조 【객체에 의한 가중】 ① 손괴, 훼손 또는 효용에 해를 입은 객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22-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동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500유로의 벌금으로 각각 가중한다.

1.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무취급자에게 속하는 물건으로서 공용 또는 공용 장식에 쓰이는 것
2. 공공기관의 등록부, 문서 또는 증서의 정본
3. 기념물로 분류되거나 등록된 부동산이나 동산, 발굴에 의하거나 우연한 발견에 의한 고고학적 물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관에 속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 소장되거나 등록된 물품
4.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관이 기획하는 역사, 문화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시회에 출품된 물건

② 전항 제3호의 경우 행위자가 손괴, 훼손 또는 효용이 상실된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322-1조 제1항에 규정한 죄가 사실상 또는 예측으로 재물의 주인 또는 사용자가 일정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한다거나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행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2.03 개정, 법률2003-88>

제322-3조 【행위태양에 의한 가중】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322-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동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5,000유로의 벌금과 사회봉사형에 각각 처한다.

1.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하는 경우
2. 타인의 연령, 질병, 신체나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자활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하거나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3. 사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률사무종사자, 기타 모든 공공사무취급자의 이익에 반하여 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4. 증인, 피해자 또는 배상명령(부대상소)신청자의 이익에 반하여 그 증언, 고소·고발, 배상명령(부대상소)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이를 행하였음을 이유로 죄를 범하는 경우
5. 기망,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무단침입의 방법으로 주거 또는 현금, 유가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재의 보관 장소로 이용되거나 또는 그러한 용도에 충당된 장소에 들어가 죄를 범하는 경우

② 제322-1조 제1항의 죄를 종교장소, 학교, 취미교육장소, 어린이수송차량 내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2003.02.03. 개정, 법률2003-88>

제322-4조 【미수】 본 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22-4-1조 【지역 및 타인소유의 토지점거】 ① 여행자의 주거와 접객에 관한 2000년 7월 5일자 법률 제2000-614호 제2조에 의한 도 정비계획의 의무사항에 적합한 지방에 속하는 또는 설령 그 지방이 아닌 다른 소유주의 대지위에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집단을 이루어 주거형태를 세우는 행위는 행위자가 그의 정당한 허가권한 또는 대지의 이용권을 증명하지 않는 한 6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량을 이용한 타인의 대지점거의 경우 그 차량이 전적으로 점거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형사법원에서 몰수를 위해 압수할 수 있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2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제322-5조 【과실폭발, 화염에 의한 손괴 등】 ①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폭발 또는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 훼손, 파괴되거나 그 효용이 상실된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형을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③ 타인 소유의 나무, 숲, 황야, 관목지대, 농장, 식림지대에서의 화재의 경우는 제1항에 해당하면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화재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를 초래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면 3년의 구금형과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5년의 구금형과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⑤ 화재가 타인에게 8일 이상의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면 5년의 구금형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7년의 구금형과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⑥ 화재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면 7년의 구금형과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10년의 구금형과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22-6조 【폭발, 화염, 화재에 의한 손괴 및 인적환경피해】 ① 폭발성, 인화성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케 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나무, 숲, 황야, 관목지대, 농장, 식림지대에서의 화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를 초래한 경우 15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22-6-1조 【핵물질 등을 통한 파괴엔진 제작공정의 확산】 ①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과 같이 직업적인 목적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말 또는 폭발성분, 핵·미생물·화학물질을 통해 정제된 파괴장치의 제작을 허용하는 공정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그러한 행위가 공정의 배포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자통신망을 이용했다면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22-7조 【중상해초래의 가중처벌】 ① 제322-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8일 이상의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에는 15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② 타인 소유의 나무, 숲, 황야, 관목지대, 농장, 식림지대에서의 화재로 상기 제1항의 경우를 초래하면 20년의 징역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22-8조 【조직적 손괴 등의 가중처벌】 ① 제322-6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죄를 범한 경우
 2. 타인에게 8일 이상의 노동 불능을 초래한 경우
 3. 사실상 또는 예측으로 재물의 주인 또는 사용자가 일정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한다거나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경우
<2003.02.03 개정, 법률2003-88>
 4. 타인 소유의 나무, 숲, 황야, 관목지대, 농장, 식림지대에서의 화재인 경우 30년의 징역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²⁴⁾ 및 제2항²⁵⁾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322-9조 【중대한 신체장애경우의 가중처벌】 ① 제322-6조의 죄를 범하여 타인의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나무, 숲, 황야, 관목지대, 농장, 식림지대에서의 화재로 상기 제1항의 경우를 초래하면 무기징역형 및 2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22-10조 【타인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① 제322-6조의 죄를 범하여

- 24) 형법 제132-23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고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자는 보안처분기간동안 형의 정지 또는 분할, 시설외 유치, 외출허가, 반자유, 조건부석방에 관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25) 제132-23조 제2항에 의하면 보안처분기간은 자유형의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무기징역형의 경우는 18년이다. 그러나 중죄법원 또는 일반 형사법원은 특별결정으로 보안처분기간을 형기의 3분의 2까지, 무기징역형의 경우에는 22년까지 연장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단축할 수도 있다.

타인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때에는 무기징역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0.09.19. 개정, 법률명령²⁶⁾2000-916>

제322-11조 【미수】 제322-6조에서 정하는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22-11-1조 【폭발성, 인화성물질 소지 또는 운반】 ① 제322-6조에서 정하는 죄를, 하나 혹은 몇 가지의 물질적 사실로 특정의 준비에 해당하는 폭발물 또는 화재를 일으키는 엔진의 결합에 들어가는 요소나 성분들과 아울러 화재를 일으키는 성분 또는 물질을 소지 또는 운반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과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조직의 형태로 상기 제1항의 경우를 초래하면 10년의 구금형 및 50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③ 상기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하고 적법한 동기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소지 또는 운반한 때에는 1년의 구금형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2-6조에서 정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폭발성분 또는 폭발물질의 소지 또는 운반이 특정관리체제에 의해 단속되지 않는 경우
2. 제322-6조에서 정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폭발물 또는 화재를 일으키는 장치의 결합에 들어가는 요소나 성분들과 아울러 화재를 일으키는 성분 또는 물질의 소지 또는 운반이 긴급성 또는 공공질서의 침해위험성으로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 금지되어있던 경우<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26)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법령용어정비사업팀,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321면 이하 참조.

제3절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등

제322-12조 【손괴 등의 협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손괴, 훼손 또는 효용상실 행위를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그 취지를 문서나 영상 기타의 수단으로 표현하는 때에는 6개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13조 【조건부 손괴 등의 협박】 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손괴, 훼손 또는 효용상실 행위를 하겠다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인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14조 【손괴 등의 허위유포】 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손괴, 파괴 또는 효용상실 행위가 실행되려고 한다거나 실행되었다고 오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재해가 야기된 것으로 오신시켜 무용한 구조 활동의 착수를 재촉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22-1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금지기간은 제322-6조 내지 제322-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며, 제322-1조, 제322-2조, 제322-3조, 제322-5조, 제322-12조, 제322-13조 및 제32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4. 제322-7조 내지 제322-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1조의 규정에 따른 체류금지
5. 제131-5-1조의 방식에 의한 시민성교육 이행의무
6. 제131-35-1조의 방식에 의한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 이행의무<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32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322-4-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2. 주거용도를 제외한 범죄에 사용된 차량의 몰수<2003.03.18. 개정, 법률 2003-239>

제322-16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 제322-7조 내지 제322-10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131-3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14-5조, 제314-6조 및 제314-7조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형. 다만, 제322-1조, 제322-3조, 제322-5조, 제322-12조, 제322-13조 및 제322-1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금지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제322-6조 내지 제322-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금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322-18조 【사회사법이행】 제322-6조부터 제322-1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제131-36-1조부터 제131-36-13조의 방식에 따른 사회사법이행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제323-1조 【부정접근 등】 ① 부정하게 전산정보처리장치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접속하거나 체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로 처리장치내 정보의 삭제, 변경 또는 기능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323-2조 【전산업무방해】 전산정보처리장치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그 동작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323-3조 【자료부정조작】 부정하게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 장치에 보존된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323-3-1조 【전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 제323-1조 내지 제323-3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기 위해 특별히 적응되거나 고안된 장치, 도구,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를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가동하는 행위는 각 죄에 정한 형 또는 그 가중형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323-4조 【범죄단체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제323-1조 내지 제323-3-1조에 규정된 범죄의 준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나 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각 죄에 정한 형 또는 그 가중형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323-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의 5년 이하 행사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5년 이하의 수행금지
3.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5년 이하의 폐쇄

5. 5년 이하의 공계약배제
6.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323-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14-1조 및 제314-2조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323-7조 【미수】 제323-1조 내지 제323-3-1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6.21. 개정, 법률2004-575>

제4장 자금세탁

제1절 단순 및 가중 자금세탁

제324-1조 【자금세탁】 ① 자금세탁이라 함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중죄나 경죄를 범한 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은 재산이나 수익의 출처에 관한 허위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긴 재산이나 수익 등의

이전, 은닉 또는 가공 등에 협력하는 행위도 자금세탁으로 본다.

③ 자금세탁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2조 【가중자금세탁】 ① 자금세탁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상습으로 죄를 범하거나 또는 직업 활동으로 인한 편의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때
2.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죄를 범한 때<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3조 【벌금의 가중】 제324-1조 내지 제324-2조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벌금은 자금세탁행위의 대상이 된 재산이나 수익의 평가가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가중할 수 있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4조 【본범의 형적용】 자금세탁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죄의 자유형의 법정형이 제324-1조 또는 제324-2조의 구금형의 법정형을 상회하는 경우 그 인식한 죄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자를 처벌한다. 그 인식한 죄에 가중사유가 따르는 때에는 인식한 사유에 의하여 가중되는 형으로 처벌한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5조 【누범】 누범의 적용에 관하여 자금세탁은 자금세탁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죄와 동일한 죄로 간주한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3-6조 【미수】 본절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제32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324-1조 및 제324-2조의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금지기간은 제324-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영구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며, 제324-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로 한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3.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5. 5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6. 피고인이 소유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차량 몰수
7.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8.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10.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 금지
11. 5년 이하의 출국금지
12. 동산·부동산, 가분·불가분등 재산의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인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제324-1조 및 제324-2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324-9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324-1조 및 제324-2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1996.05.13. 개정, 법률96-392>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제410-1조 【국가의 기본적 이익】 본편에서 국가의 기본적 이익이라 함은 자주독립, 영토의 보전, 안전의 보장, 제도의 공화적 형태, 국방 및 외교의 수단, 프랑스 및 외국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 자연환경 및 기타의 환경과의 균형, 과학·경제적인 능력 및 문화적 유산의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제411-1조 【이적, 간첩】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군 복무자가 제411-2조 내지 제411-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이적으로 보며, 기타의 자가 이를 범하는 경우에는 간첩으로 본다.

제1절 외국에 대한 영토 등의 인도

제411-2조 【군대·영토의 인도】 ① 외국정부, 외국의 단체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 또는 그 요원에 대하여 프랑스 군 소속 부대 또는 국토의 전부나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무기 금고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제411-3조 【국방설비 등의 인도】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에 대하여 국방을 위하여 배치된 물자, 건축물, 장비, 설비, 기구를 인도하는 경우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외국과의 내통

제411-4조 【내통】 ① 프랑스에 대한 적대행위 또는 침략행위를 교사할 목적으로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과 내통하는 경우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에게 프랑스에 대한 적대행위 또는 침략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11-5조 【단순내통】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과 내통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이익에 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10년의 금고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외국에 대한 정보의 인도

제411-6조 【정보의 인도】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에 대하여 정보, 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인도하거나 이들을 입수하게 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이용, 누설 또는 수집이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15년의 금고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1-7조 【정보의 부정입수】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정보, 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입수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이용, 누설 또는 수집이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10년의 금고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1-8조 【정보의 부정수집활동】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요원을 위하여 장치, 정보, 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취득하거나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이용, 누설 또는 수집이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10년의 금고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절 태 업

제411-9조 【태업, 이적태업】 ① 모든 문서, 물자, 건축물, 장비, 설비, 기구, 기술적 장치 또는 데이터자동처리시스템이나 파일을 손괴, 훼손, 그 효용을 해하거나 또는 그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 행위가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성질을 갖는 때에는 15년의 금고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 또는 조직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20년의 금고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절 허위정보제공

제411-10조 【허위정보제공】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 또는 조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정부기관 또는 군사기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정보에 의하여 착오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해하게 되는 때에는 7년의 금고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6절 본장에 규정한 중죄의 교사

제411-11조 【교사의 실패】 이익의 공여 약속, 공여, 강압, 협박 또는 폭행에 의하여 본장에 규정된 중죄를 실행하는 것을 직접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정으로 교사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 때에도 7년의 금고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제1절 헌정파괴와 음모

- 제412-1조 【헌정파괴】** ① 입헌제도를 파괴하거나 국토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폭력행사는 헌정파괴를 구성한다.
- ② 헌정파괴는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무기금고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 제412-2조 【헌정파괴음모】** ① 2인 이상의 자가 헌정파괴의 실행을 모의하는 경우 동 모의가 객관적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된 때에는 헌정파괴음모를 구성한다.
- ② 헌정파괴 음모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항의 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20년의 금고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내란

- 제412-3조 【내란】** 입헌공화국제도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토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집단폭력행사는 내란을 구성한다.

제412-4조 【내란참가】 다음 각 호의 태양으로 내란에 참가하는 경우 15년의 금고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장애물, 참호를 구축하거나, 공권력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저지할 목적 아래 토목작업에 임하는 행위
2. 위력의 과시 또는 책략으로 건조물 또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내란참가자의 수송, 그 물자보급 또는 통신을 확보하는 행위
4.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내란참가자의 집결을 교사하는 행위
5. 무기를 휴대하는 행위
6. 적법한 공적기관을 교체하는 행위

제412-5조 【가중내란참가】 다음 각 호의 태양으로 내란에 참가하는 행위는 20년의 금고형 및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약탈 또는 공권력 무장해제를 통하여 무기, 탄약, 폭발물, 위험물 기타 모든 종류의 물질을 탈취하는 행위
2. 내란참가자에 대하여 무기, 탄약, 폭발물 또는 위험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12-6조 【내란수괴】 내란을 지휘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는 무기금고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군령권침해, 군사력 모집, 불법무장 교사

제412-7조 【군령권침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적근거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허가 없이 군사상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2.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없이 군대를 철수하는 행위

제412-8조 【불법무장교사】 ① 국가기관 또는 다중에 대하여 무장할 것을 교사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사의 결과 효과가 발생한 경우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교사가 행하여진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3장 국방에 대한 기타침해

제1절 군사력의 안전과 국방요충지에 대한 침해

제413-1조 【외국모병교사】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프랑스군에 속하는 군인에 대하여 외국정부의 군무에 종사하도록 교사하는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3-2조 【군사물자 운용방해】 ①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군사물자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군사요원 또는 군사물자의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13-3조 【불복종교사】 ①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군인 또는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종을 교사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413-4조 【군대 사기저하】 ①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군대의 사기저하 공작에 참가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413-5조 【불법침입】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 없이 군 당국에 소속되거나 그 지배하에 있는 건축물 또는 동력기관 또는 장비 안에 침입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3-6조 【국방관련기관 및 그 시설물 운영방해】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공사를 불문하고 국방에 관계된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3-7조 【불법출입】 ① 공사를 불문하고 국방에 관계된 기관, 시설 또는 기업 중 자유통행이 금지되거나 폐쇄적인 장소에 허가 없이 침입하는 경우 그 출입제한 목적이 설비, 물자의 보호 또는 연구, 조사 및 제조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 토지의 출입제한 및 허가요건은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제413-8조 【미수】 제413-2조 및 제413-5조 내지 제413-7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제413-9조 【국방의 비밀】 ① 본 절에서 국방의 비밀이라 함은 국방에 관계되는 정보, 제작기법, 물건,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로서 보호를 위한 배포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누설될 경우 국방을 해하는 성질을 갖거나 또는 국방의 비밀 추적이 가능해지는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은 전항의 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방의 비밀에 관계되는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의 분류기준 및 그 보호태양을 정할 권한 있는 기관은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제413-10조 【국방의 비밀 누설】 ①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에 의하거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로 인하여 국방의 비밀의 성격을 갖는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손괴, 횡령, 취거, 복제 또는 공표하거나 자격 없는 자에게 이를 알리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보유하는 자가 그 손괴, 횡령, 취거, 복제행위를 방지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부주의 또는 태만에 의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3-11조 【기타 국방의 비밀의 누설】 제413-10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전조의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확보하는 행위
2.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전항의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손괴, 횡령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3. 전항의 정보, 제작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을 공표하거나 또는 이를 자격 없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

제413-12조 【미수】 제413-10조 제1항 및 제413-11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장 특 칙

제414-1조 【비상시의 범죄】 ① 계엄령 또는 긴급사태가 선포된 경우 또는 정부에 의하여 총동원 또는 경계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413-1조 내지 제413-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금고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413-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국방을 해할 목적으로 제413-2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하는 자는 10년의 금고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제413-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14-2조 【형의 면제】 제411-2조, 제411-3조, 제411-6조, 제411-9조 및 제412-1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범죄의 실현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필요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모두 그 형을 면제한다.

제414-3조 【형의 면제】 제412-2조에 규정된 헌정파괴모의실행에 참가한 자가 소추에 앞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를 제보하고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414-4조 【형의 경감】 ① 제411-4조, 제411-5조, 제411-7조, 제411-8조 및 제412-6조의 죄를 범한 정범이나 공범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제보로 다른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사람의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의 발생을 피하게 하고 필요시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자유형의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② 전항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금고형인 때에는 20년의 금고형로 감경한다.

제414-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편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3.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제414-6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본편 제1장, 제2장 및 제4장 및 제413-1조 내지 제413-4조, 제413-10조 및 제413-1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14-7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편에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14-8조 【북대서양조약서명국가에 대한 확대적용】 제411-1조 내지 제411-11조 및 제413-1조 내지 제413-12조는 다음 각 호의 이익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적용한다.

1. 북대서양조약 서명국
2. 북대서양조약기구<2007.03.05. 개정, 법률2007-288>

제414-9조 【국제안전보장협정에 의거한 정보에 대한 확대적용】 제411-6조 내지 제411-11조 및 제413-9조 내지 제413-12조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프랑스와 외국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어 공포 및 분류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교환된 정보
2. 프랑스와 유럽공동체기구 또는 기관 간에 체결되어 유럽공동체관보를

통해 공포된 정보보호규약에 근거한 분류되어 교환된 정보<2007.03.05.
개정, 법률2007-288>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제1장 테러행위

제421-1조 【테러행위】 개인 또는 집단의 획책 아래 의도적으로²⁷⁾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범죄는 테러행위를 구성한다.

1. 본법 제2권(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에 규정된 고의에 의한 생명 및 사람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약취, 감금 및 항공기, 선박 기타 모든 수송수단의 탈취
2. 본법 제3권(재물에 대한 중죄 및 경죄)에 규정된 절도, 강요, 손괴, 훼손, 효용상실 및 정보처리
3. 본법 제431-13조부터 제431-17조까지 규정된 해산된 무장단체에 관련한 범죄와 동법 제434-6조와 제441-2조부터 제441-5조까지 규정된 범인은닉 등의 원조행위, 공문서위조, 위조한 공문서소지 및 행사, 공문서부정발급
4. 국방법전²⁸⁾ 제1333-9조 제2호, 제4호, 제5호와 제2339-2조, 제2339-5조, 제2339-8조, 제2339-9조, 제2341-1조, 제2341-4조, 제2342-57조부터 제2342-62조 까지, 제2353-4조, 제2353-5조 제1호, 제2353-13조에 규정된 무기, 폭발물, 핵물질에 관련된 범죄

27) 1996년 7월 22일자 법률 제96-647호에 의거하여 고의범에 한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라는 부분이 첨가되었다.

28) le Code de la défense

5. 상기 본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범죄행위들 중에서 비롯된 산출물의 은닉
6. 본법 제3권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
7. 재정통화법전²⁹⁾ 제465-1조에 규정된 자신의 금융시장과 관련한 업무, 지위, 특수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2005.12.12. 개정, 법률2005-1550>

제421-2조 【준테러행위】 개인 또는 집단의 획책 아래 의도적으로 위협 또는 공포를 주어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안전을 해하거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가하는 성질의 물질을 대기, 지상, 지하, 음식물 또는 음식물의 재료 안³⁰⁾, 수중 및 영해에 투여 또는 방출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를 구성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21-2-1조 【준테러행위】 상기의 조문들이 언급한 테러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위해 마련된 합의체 또는 형성된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를 구성한다.

제421-2-2조 【준테러행위】 테러조직을 위해 주식이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는 재산 등을 결합 또는 관리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 부분적으로건 전체적으로건 그러한 재산들의 증식에 결국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테러행위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도운 행위도 테러행위를 구성한다.³¹⁾<2001.11.15. 개정, 법률2001-1062>

29) le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30) 2004년 3월 9일자 법률 제2004-204호에 의거하여 첨가된 조항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안전을 해하거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가하는 성질을 띤 물질투여의 가능한 범위를 넓힌 것이다.

31) 2001년 11월 15일자 법률 제2001-1062호에 의거하여 첨가된 조항으로 테러단체임을 알면서 경제적 도움이나 조언을 하는 행위도 테러행위에 준하는 행위임을 명시한 것이다.

제421-2-3조 【테러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 제421-1조 내지 제421-2-2조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획책하는 자와 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생활형편에 해당하는 수입원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과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³²⁾<2003.03.18. 개정, 법률 2003-239>

제421-3조 【형의 가중】 ① 제421-1조에 열거된 범죄가 테러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들 범죄에 관한 자유형의 법정 형기를 아래와 같이 가중한다.

1. 범죄를 3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무기징역형으로 한다.
2. 범죄를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30년의 징역형으로 한다.
3. 범죄를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20년의 징역형으로 한다.
4. 범죄를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15년의 징역형으로 한다.
5. 범죄를 7년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우는 10년의 구금형으로 한다.
6. 범죄를 5년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우는 7년의 구금형으로 한다.
7. 범죄를 3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우 형기를 2배로 한다.

② 보안처분기간에 관한 규정³³⁾인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제42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죄와 10년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경죄에 적용된다.

제421-4조 【준테러행위】 ① 형법 제421-2조에 규정된 테러행위는 20년의 징역형과 3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³⁴⁾

32) 2003년 5월 18일자 법률 제2003-239호에 의거하여 첨가된 부분으로 테러단체구성원으로 부터의 공작금에 해당하는 금품수수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처벌을 하려는 입법의지이다.

33)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보안처분기간동안 형의 정지 또는 분할, 조건 부석방 등의 적용이 안 되고, 법원의 특별결정으로 보안처분기간이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34) 2002년 9월 9일자 법률 제2002-1138호에 의거하여 그 전까지 본조 제1항을 15년의 징역형과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했던 테러범죄의 법정형을 조정하여 높인 경우다.

- ② 전항의 테러행위로 사람의 사람을 야기한 때에는 무기징역형 및 7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
<2002.09.09. 개정, 법률2002-1138>

제421-5조 【준테러행위】 ① 제421-2-1조와 제421-2-2조에 규정된 테러행위는 10년의 징역형과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21-2-1조에 규정된 모임 또는 합의체를 지휘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는 20년의 징역형과 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21-2-2조에 규정한 경죄의 미수는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④ 보안처분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과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된다.

제421-6조 【단체형태의 테러준비】 ① 형법 제421-2-1조에 규정된 모임이나 단체 또는 합의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준비를 목적으로 할 때 20년의 징역형과 3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21-1조 제1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중죄
- 2. 제421-1조 제2호에 규정된 폭발물 또는 화재가 다수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파괴
- 3. 다수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법 제421-2조에 규정된 테러행위.

② 이러한 모임이나 단체 또는 합의체를 지휘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는 30년의 징역형과 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보안처분기간에 관한 동법 제132-23조 제1항과 제2항은 본조의 죄에도 적용된다.<2006.01.23. 개정, 법률2006-64>

제2장 특 칙

제422-1조 【형의 면제】 테러행위를 시도한 자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범죄의 실현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필요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422-2조 【형의 감경】 테러행위를 범한 정범이나 공범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다른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사람의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의 발생을 피하게 하고 필요시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자유형의 기간을2분의 1로 감경하며, 법정형이 무기징역형인 때에는20년의 징역형으로 감경한다.

제422-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21-1조 및 제421-2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다만, 금지기간의 상한은 중죄의 경우 15년으로 하고 경죄의 경우 10년으로 한다.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다만, 금지기간의 상한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0년으로 한다.
3. 제131-31조의 규정에 따른 체류금지. 단, 금지기간의 상한은 중죄의 경우 15년으로 하고 경죄의 경우 10년으로 한다.<1996.07.22. 개정, 법률96-647>

제422-4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본편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3. 11.26. 개정, 법률2003-1119>

제422-5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테러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³⁵⁾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³⁶⁾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22-6조 【자연인, 법인에 대한 보충형】 테러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는 동산, 부동산, 분할, 공동에 상관없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에 대한 몰수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³⁷⁾<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422-7조 【테러행위와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장기금】 테러행위로 유죄가

35) 법인에 대해 선고하는 벌금의 상한은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액의 5배로 한다. 만약 자연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벌금 부과액은 1,000,000 유로로 한다(제131-38조).

36) 중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때 또는 법정형 3년 이상의 경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법인의 해산, 법인의 영구적 또는 5년 이내의 직업적 사회적 활동금지, 5년 이내의 사법감시, 범죄에 공여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내의 폐쇄, 영구적 또는 5년 이내의 공계약 배제 또는 기업자금 공모금지, 5년 이내의 수표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보증된 수표는 제외, 범죄에 제공된 또는 제공하기로 된 물건과 범죄로 생긴 물건의 압수, 언론출판물과 전자통신을 통한 시청각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를 든다.

37) 2003년 3월 18일자 법률 제2003-239호 제31조에 의거 새로이 형법전에 추가된 내용으로 테러범죄행위자에 대해 자연인, 법인 관계없이 주형이외에 보충형까지 동원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조항이다.

인정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적 제재에서 비롯된 산출물은 ‘테러 행위와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장기금’³⁸⁾에 충당된다.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제1절 표현, 노동,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침해

제431-1조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① 타인의 협력 아래 협박의 방법으로 표현, 노동, 결사,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38) 1986년 9월 9일자 법률 제86-1020호는 테러행위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1990년 7월 6일자 법률 제90-589호에 계승되어 피해자 보상체계를 단일화하지 않은 채 개정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있었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법적 지원을 받기위한 피해자의 월수입에 따른 단계적 기준이나 제한은 있었다(형소법 제706-3조 이하). 결국 이 두 법률을 기반으로 보장기금인 '테러행위와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장기금(les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의 알선 하에 재산보험에 의해 확립된 보험료와 부담금, 벌금수입과 테러행위자에 선고된 보충형인 몰수를 기초로 범죄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422-7조). 보험법전(Le Code des assurances) 제L. 126-1조, 제L. 422-1조, 제R. 126-1조, 제R. 422-1조로 채택된 1986년 9월 9일자 법률의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졌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 테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테러범죄행위로 부터 기인한 심리적인 피해까지를 포함하는 신체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가능케 한다. 피해보상을 요구한 한 달 이내에 보장기금은 테러행위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망 시 직계가족 등의 권리승계인에게 지불예치금을 지불하여야한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하면 신체적 피해가 아닌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의 보상은 제외되지만 물질적 피해보상의 경우도 만약 재산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NUCCI J.-F.,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ctes de terrorisme, D. 1987, chr. 187.) 범죄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한 후 보장기금은 실제 테러범죄에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한다.(COUVRAT P., La loi du 6 juillet 1990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Actualité législative Dalloz, 1990.143.).

② 타인의 협력 아래 본법에 규정된 구타, 폭력, 손괴 또는 훼손의 방법으로 전항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31-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3.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소지 또는 휴대금지

제2절 불온다중참가

제431-3조 【불온다중】 ①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집합은 불온다중을 구성한다.

② 직무상의 표식을 부착한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 치안유지의 책임이 있는 사법경찰관 또는 여타의 사법경찰관이 불온다중에 대해 해산을 명하는 최고를 2회 발동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력³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③ 전항에 규정한 최고는 불온다중의 일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절차는 국사원령으로 규정한다. 전항의 자가 착용해야 할 표식도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39) 경찰력(la force publique)은 국립경찰과 국립군경찰(la gendarmeri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불온다중의 해산을 요청받은 경찰력의 책임자는 경찰력에 대한 폭력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점거장소를 방어할 수 없는 경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1-4조 【단순불온다중참가】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자가 최고가 있는 후에도 임의로 계속하여 불온다중의 일원으로 남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5조 【무기휴대 불온다중참가】 ① 무기를 휴대하고 불온다중의 일원이 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무기를 휴대한 자가 최고가 있는 후에도 임의로 계속하여 불온다중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6조 【무장한 불온다중에 대한 교사】 ① 외침이나 연설 또는 벽보 또는 전단에 의한 글, 말, 영상의 전달수단으로 무장의 불온다중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동의 효과가 발휘되면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31-5조 및 제431-6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3.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몰수
4.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제431-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제431-5조 및 제431-6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절 불법시위

제431-9조 【불법시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상시위를 조직하는 행위
2.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노상시위를 조직하는 행위
3. 계획된 시위의 목적 및 요건에 관한 착오를 야기하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신고행위

제431-10조 【무기휴대 시위참가】 무기를 휴대하고 시위 또는 대중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31-10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소지 또는 휴대 금지
3.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제431-12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제431-10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절 무장단체에 관한 죄

제431-13조 【무장단체】 무장단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소지하거나 입수가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일정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공공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431-14조 【무장단체참가】 무장단체에 참가하는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15조 【해산단체 재건참가】 ① 전투 집단 및 민병대에 관한 1936년 1월 10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산된 결사나 단체의 유지 또는 재건에 참가하는 행위는 유지 또는 재건행위가 공연한 것이든 위장된 것이든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유지 또는 재건된 결사나 단체가 제431-14조에 규정된 무장단체에 해당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16조 【무장단체조직】 무장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17조 【해산무장단체재건】 전투 집단 및 민병대에 관한 1936년 1월 10일자 법률에 의거하여 해산된 무장단체를 유지하거나 재건하는 행위는

공연하게 행하여진 것이든 위장된 것이든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1-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 절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35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판결 또는 판결이유 및 주문을 공표하는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3.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제431-19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본절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국내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03.11.26. 개정, 법률 2003-1119>

제431-20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절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31-21조 【특별몰수】 본 절에 규정된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형을 과한다.

1. 무장단체 또는 해산 후 유지되거나 재건된 결사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몰수
2. 무장단체 또는 해산 후 유지되거나 재건된 결사 또는 단체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제복, 표식, 표장, 무기 및 모든 물자의 몰수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절 행정작용 침해

제432-1조 【법률집행 방해조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2-2조 【법률집행 방해】 제432-1조의 범죄로 효과가 발생된 경우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2-3조 【위법직무수행】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종료시키는 결정 또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통지받고도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개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

제1 개인의 자유 침해

제43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①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침해행위로 7일 이상의 체포 및 감금을 행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2-5조 【불법감금방치】 ① 직무수행 중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불법감금 사실을 안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석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관할 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직무수행 중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불법감금에 대한 항의를 접수한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로서 필요한 확인을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관할 당국에 그 항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동 감금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어 소추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2-6조 【교도관의 불법구금】 교도관이 법률에 의한 영장, 판결 또는 수용명령 없이 사람을 수감하거나 구금기간을 넘겨 구금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 차별행위

제432-7조 【공무원의 차별행위】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225-1조에 규정된 차별을 한 경우 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이익을 거부하는 경우
2. 경제적 활동의 정당한 실행을 방해하는 경우<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3 주거평온의 침해

제432-8조 【공무원의 주거평온침해】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또는 침입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 통신의 비밀 침해

제432-9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①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통신의 수신처 변경, 내용의 말소, 내용의 개피, 내용의 누설을 자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자 또는 공공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근무자 또는 통신사무취급자가 직무수행 중에 발송, 수령 또는 중개되는 통신의 불법취득, 수신처 변경, 내용의 이용, 내용의 누설을 자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7.09. 개정, 법률2004-669>

제3절 청렴의무 위배

제1 불법징수

제432-10조 【불법징수】 ①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조세, 분담금 및 기타 공과금을 납부의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또는 그 납부를 요구 또는 명하거나, 납무의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세금, 분담금 및 기타 공과금의 납부에 대한 면제행위를 한 때에는 그 방법 및 이유를 불문하고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 뇌물

제432-11조 【수뢰】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임을 받은 자가 법적 근거 없이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이익을 청하거나 받아들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의 수수, 요구 또는 이익의 약속의 목적이 공무의 수행 및 포기과 관련된 경우
2.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공무원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경우<2007.11.13 개정, 법률 2007-1598>

제3 영리의 불법취득

제432-12조 【영리행위】 ①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감독, 운영, 청산, 지급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상 기업으로부터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수하거나 또는 이를 유지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3,500명 이하인 시의 시장, 부시장 및 시장의 위임을 받거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시의원은 연간 16,000유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와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역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당해 시와 개인주거 건설을 위한 토지분양계약 또는 개인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의 체결은 자산 감정을 거친 후 시의회로부터 이유를 붙인 결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자는 직무의 개시 또는 직무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시 소유물품을 취득할 수 있되, 취득가격은 감정가격을 밑돌아서는 아니 되며, 취득가액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취득계약은 모두 시의회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결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3항의 적용에 대하여 시는 국토지방자치기본법⁴⁰⁾ 제L. 2122-26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대표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은 그 계약과 관련된 시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동법 L. 2121-1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는 비공개상태로 의결할 수 없다.

40) le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

제432-13조 【사후영리행위】 ① 사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 사기업과의 계약체결 업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견표명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가 직무종료 후 3년 이내에 관계 사기업에 대한 용역, 자문 및 자금의 제공행위를 하거나 이를 승낙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사기업과 자본의 30% 이상을 공유하거나 전항의 사기업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용역, 자문 및 자금 등에 관여하는 행위 역시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사법적 원리에 따라 경쟁적 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본조의 사기업으로 간주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공공영조물, 국유기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혼합경제회사⁴¹⁾의 임원 그리고 우편 및 프랑스전기통신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조직에 관한 1990년 7월 2일자 법률 제90-568호에 규정된 공공 사업주에 적용한다.

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자본이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007.02.02 개정, 법률2007-148>

제4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제432-14조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및 선거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수탁사인, 공공역무를 담당하는 국영 또는 민영형태가 혼합된 공사 또는 혼합경제회사의 대표, 임원 및 계약 담당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나 위에 열거된 자의 계산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에 대한 부분적 위임을 받고 일정 조직을 감독하거나 통할하는 임무를 띤 국가와 민간부분이 지분을 나누어 출자한 형태를 말한다.

자가 공계약 및 공무원임의 공정⁴²⁾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또는 명령의 규정에 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 직무상 공공재산침해

제432-15조 【직무상 공물손괴 등】 ①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공공회계 책임자, 공공재산관리자 또는 그 부하직원이 유가증권, 증서 또는 기타 그 직무로 인하여 인도받은 물품을 손괴, 횡령 또는 절취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32-16조 【직무상 공물관리태만】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공공회계 책임자, 공공재산관리자가 직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제432-15조에 규정된 재물을 손괴, 횡령하거나 또는 절취한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절 보충형

제432-17조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42) 누구에게나 공계약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참여후보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는 공정을 말한다.

3. 제131-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행위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 및 물품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32-7조와 제432-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원침해

제1절 뇌물제공

제433-1조 【증퇴】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임을 받은 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언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이익 또는 이익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의 수수, 요구 또는 이익의 약속의 목적이 공무의 수행 및 포기와 관련된 경우
2.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공무원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한 경우

② 공무원 등 공공사무취급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임을 받은 자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법적 근거 없는 뇌물의 요구를 한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동인에게 재물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사인의 행위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3-2조 【제3자간 뇌물수수】 ① 그 주체가 누구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또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언제든지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이익을 청하거나 받아들여서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적근거 없이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이익의 청탁을 받아들인 행위가 특정대우, 직업, 시장 또는 여타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2절 공무에 대한 협박 및 방해

제433-3조 【공무방해위협】 ① 선거직공무원, 법관, 배심원, 변호사, 법원 소속공무원, 군경찰군인, 경찰공무원, 세관공무원, 노동 감독관, 교정직 공무원, 기타 공권력의 위임에 의한 공무원과 직업소방대와 자원봉사 소방대, 선서한 주택관리인, 주택건설 및 주택법⁴³⁾ 제L. 127-1조에 규정한 건물의 경비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이 외관상 명확하거나 범죄자격을 안 경우에 이들 공무수행자나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 중죄·경죄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을 한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또한 상기의 공무수행자와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는 업무수행자와 공무수행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와 주거를 일상적으로 같이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43)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② 또한 직업적으로 건강의료직 종사자 및 대중교통 또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업무수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협박을 받은 때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이 외관상 명확하거나 범죄자가 이를 안 경우에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협박의 정도가 살해 또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재산침해와 관련될 때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 등 공무취급자에 대하여 그 직무, 임무 또는 위임에 의거하는 행위 또는 그 직무, 임무 또는 위임받은 행위에 의하여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하게 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권한 있는 자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 고용, 입찰 또는 기타 모든 유리한 결정을 얻을 목적으로 현실의 또는 예상되는 영향력을 남용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기타 모든 위협행위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6.01.05. 개정, 법률2006-11>

제3절 공물손괴 등의 죄

제433-4조 【공물손괴 등】 ① 공무원 등 공무취급자, 공공회계책임자, 공공 재산관리자 또는 그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인도된 증권 또는 증서, 공채 또는 사채, 유가증권, 증명서, 대용증명서 또는 기타의 물품을 파괴, 영득 하거나 또는 절취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절 공무원 모독

제433-5조 【공무원 모독】 ①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존엄 또는 그 직무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경의를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는 언사, 동작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러한 성질을 갖는 문서나 영상 기타 물건을 송부하는 행위는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권한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공공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모독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가 교육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거나 학생들의 등·하교하는 학교입구나 교육기관의 주변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본조 제1항의 모독행위가 단체로 행하여진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본조 제2항의 모독행위가 집단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2.09.09. 개정, 법률2002-1138>

제433-5-1조 【프랑스국가 또는 국기모독】 ① 공권력에 의해 조직화되고 규정화된 시위도중에 프랑스의 국가 또는 국기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는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집단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5절 공무집행저항

제433-6조 【공무집행저항】 공무원 등 공무취급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행위는 공무취급자가 그 직무의 수행 중에 법률, 공권력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공무집행저항으로 본다.

제433-7조 【집단공무집행저항】 ① 공무집행저항은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집단으로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433-8조 【특수공무집행저항】 ① 무기를 가지고 행하여진 공무집행저항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집단으로 무기를 가지고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제433-9조 【형의 병과】 공무집행저항행위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저항행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제132-2조 내지 제132-5조의 규정의 예외로, 구금형의 이유가 된 범죄에 대하여 동인이 복역하는 형 또는 선고된 형에 흡수되지 않고 병과된다.

제433-10조 【공무집행저항 교사】 ① 공무집행저항을 직접 교사하는 행위는 환호 또는 공개적 연설, 게시 또는 배포된 문서 또는 글, 언어 또는 영상 기타의 전달수단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2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유책자의 결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6절 공공사업집행저항

제433-11조 【공공사업집행저항】 공공토목사업 또는 공익토목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폭력으로써 저항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절 공무집행개입

제433-12조 【직무개입】 권한 없이 공무집행에 개입하여 그 직무권한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3-13조 【공무집행 위장】 다음 각호의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으로 하여금 공무담당자 또는 법률사무종사자의 직무수행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공중으로 하여금 사법증서나 공증문서 또는 행정문서로 오인할만한 외관을 지닌 문서 또는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제8절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제433-14조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법적근거 없이 공연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이 규정하는 복장, 제복 또는 장식의 착용
2. 공공기관이 규정하는 자격증명 문서 또는 표장의 사용
3.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표장을 외부에 부착한 차량의 사용

제433-15조 【유사자격표시사용】 공중으로 하여금 국가경찰관 또는 군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복장, 제복, 차량, 표장 또는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3-16조 【자격표시사용 가중처벌】 제433-14조 및 제433-15조에 규정된 범죄가 중죄나 경죄의 실행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9절 자격부정사용

제433-17조 【자격부정사용】 공공기관이 정하는 직업에 붙여진 칭호나 공인자격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여요건이 정하여지는 자격을 법적근거 없이 사용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절 자격부정게재

제433-18조 【자격부정게재】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법적 또는 사실상의 창설자나 경영자가 자신이 창설하거나 경영하고자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을 언급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부, 의회, 유럽의회, 지방공공단체의 대의기관, 헌법위원회, 국사원, 경제사회위원회, 최고사법관회의, 대법원, 회계원, 프랑스학술원, 프랑스 국립은행이사회 또는 법률에 의하여 감독이나 자문의 임무를 띠고 있는 합의기관의 전·현직 구성원의 자격과 성명
2. 전·현직 사법관이나 공무원 또는 법률사무종사자의 직무내용과 성명
3.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서훈과 함께 이를 수여받은 자의 성명

② 은행원 또는 방문판매원이 전항의 광고를 사용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11절 민사신분침해

제433-18-1조 【출생신고위반】 분만 시 입회한 자가 민법 제56조에 근거한 출생신고를 동법 제55조에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3>

제433-19조 【차명위장】 공문서나 공정증서 또는 공권력의 집행에 이용되는 행정문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현행규정에 의하여 차명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분증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명 또는 보조성명을 사용하는 것
2. 신분증서에 기재된 성명 또는 보조성명을 변경하는 것

제433-20조 【중혼】 ①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전혼을 해소하기 전에 또 혼인계약을 맺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인을 증명한 공증인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33-21조 【무증명 종교혼인수행】 사전에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혼인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상습적으로 종교상의 혼인 의식을 거행한 성직자는 모두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3-21-1조 【장례절차무시】 사자의 의사 또는 사법상의 결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자는 모두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제433-2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에 대한 5년 이하의 수행금지
3.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433-23조 【몰수】 제433-1조, 제433-2조 및 제433-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범죄행위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 또는 물품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3-2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33-8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5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2.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무기의 몰수

제433-25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 제1절, 제6절, 제7절, 제9절 및 제10절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형의 적용
3. 제131-21조에 규정된 몰수
4. 제131-35조에 규정된 선고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제1절 사법작용 개시방해

제434-1조 【범죄불고지】 ① 중죄를 방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발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또는 중죄를 범한 행위자가 새로운 중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사실을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중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죄의 정범이나 공범의 직계친족, 직계친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중죄의 정범이나 공범의 배우자 또는 그와 명백한 동거관계에 있는 자

③ 제226-13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비밀유지의무자⁴⁴⁾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4-2조 【공안범죄불고지】 제434-1조 제1항의 중죄가 본법 제4권 제1편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제4권 제2편에서 정하는 테러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3조 【학대 등 불고지】 ① 15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장애, 신체적인 결함, 정신적인 결함 또는 임신에 의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가 결핍이나 학대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⁴⁵⁾ 피박

44)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로 인하여 비밀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누설할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26-13조).

45) 1998년 6월 17일자 법률 제98-468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당하는 여러 피박상태에 대한 열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조를 위해 추가된 부분이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2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4-4조 【증거은닉 등】 ① 사실의 발견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적 또는 징표의 위조, 변조 또는 인멸에 의하거나 또는 어떠한 물건의 공급, 이동 또는 철거에 의하여 중죄 또는 경죄의 발생장소의 상태를 변경

2. 중죄 또는 경죄의 발견, 증거의 수집 또는 범인의 유죄판결에 유용하게 쓰이는 공적 또는 사적인 문서나 물건을 파괴, 사취, 은닉하거나 또는 변경

② 직무상 사실의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4-1조 【미성년자행방불명사실인지 후 불고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행방불명사실을 아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74-1조에 규정된 수색절차의 실행을 늦추게 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그 사실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형법 제226-13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비밀유지의무자에게는 범죄불고지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⁴⁶⁾ <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46) 2007년 3월 5일자 법률 제2007-297호 제41조에 의거하여 미성년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 및 탐문을 위한 절차의 확립방편으로 새로이 형법전에 첨가된 조항이다.

제434-5조 【피해자에 대한 협박】 중죄 또는 경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소를 취소하도록 결의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협박 또는 기타 모든 위협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6조 【범인은닉】 ① 중죄 또는 구금 10년 이상의 테러행위⁴⁷⁾의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 주거, 은신처, 금전적 원조, 생활수단 또는 기타 모든 수사나 체포를 면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범행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죄 또는 테러행위의 정범이나 공범의 직계친족, 직계친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중죄 또는 테러행위의 정범이나 공범의 배우자 또는 그와 명백한 사실 혼관계에 있는 자

제434-7조 【사체은닉·유기】 살해당한 자 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은닉하거나 또는 유기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사법권행사에 대한 방해

제434-7-1조 【재판거부】 사법관, 기타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직에 있는 자가 청구를 받고 재판을 거부하고 상급자로부터 경고

47) 1996년 7월 22일자 법률 제96-647호에 의거하여 테러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으로는 경죄인 10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테러행위범인에 대한 은닉죄의 처벌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 거부하는 때에는 7,500유로의 벌금 및 5년 이상 20년 이하의 공직활동금지에 처한다.

제434-7-2조 【수사 또는 예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누설】 ① 피의자의 방어권을 해침이 없이, 중죄 또는 경죄에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전의 규정이 적용된 수사 또는 예심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를 취득한 자가 의식적으로 정범, 공범, 범인은닉자와 같이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누설한 경우 이러한 폭로가 사실의 조사전개를 왜곡할 생각으로 실현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누설이 형사소송법 제706-73조에 규정된 조직범죄의 형태로 행해진 중죄 또는 법정형 10년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죄에 관한 수사 또는 예심의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5.12.12. 개정, 법률2005-1549>

제434-8조 【사법직무종사자 협박】 사법관, 배심원 기타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자, 중개인, 통역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9조 【사법직무종사자 수뢰, 뇌물공여】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건, 제3자를 위해서건 공여의 의사 표시의 목적이 사법직무종사자의 직무의 수행 및 포기와 관련된 경우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법관, 배심원 및 사법직무종사자양성관련자

2. 법원서기
 3. 법정감정인, 지정감정인
 4. 사법당국 또는 화해 및 조정의 임무를 띤 행정법원의 감독 하에 있는 자
 5. 중재국내법상의 중재자
- ②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법직무종사자의 법적 근거 없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언제든지의 요구에 따라 동인에게 재물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공여의 의사표시의 목적이 직무의 수행 및 포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범죄가 사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함에 관계없이 15년의 징역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4-9-1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제3자간의 뇌물수수】 ① 그 주체가 누구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또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언제든지 공여, 약속, 증여, 선물, 이익을 청하거나 받아들여서 제434-9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청탁을 받아들이거나 법적근거 없이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공여, 약속, 증여, 선물 등 여하한 이익을 제의하는 행위가 제434-9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유리한 결정을 얻게끔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4-10조 【교통사고 후 도주】 ① 육상, 하천 또는 해상의 운송수단의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정지하지 않거나 자기에겐 부과될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회피하려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1-6조 및 제222-1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로 가중하나 제221-6-1조, 제222-19-1조와 222-20-1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3.06.12. 개정, 법률2003-495>

제434-11조 【무혐의 인지 후 증언거부】 ① 중죄 또는 경죄로 미결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증언 또는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시기가 늦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증언 또는 진술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추의 이유가 된 범죄의 정범이나 공범, 그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그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형사소추의 이유가 된 범죄의 정범이나 공범의 배우자 또는 그와 명백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④ 제22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4-12조 【유책증언거부】 중죄나 경죄의 범인을 알고 있다고 공언히 밝힌 자가 그 점에 대한 법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13조 【위증】 ① 모든 재판기관 또는 수사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는 경우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증을 한 자가 수사법원 또는 판결법원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 증언을 철회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434-14조 【가증위증】 허위의 증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대가를 지급받고 증언한 때
2.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중죄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제434-15조 【증인매수】 소송의 진행 중에 또는 재판상의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 신고 또는 증명서 발급을 하거나 증언, 신고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재물의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 압력, 협박, 폭력행위, 위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가 성공하지 아니한 때에도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15-1조 【위증】 증인이 된 자가 불출석의 해명 또는 정당화 없이 수사판사 또는 수사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의 면전에 출두하지 않거나 선서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2.09.09. 개정, 법률2002-1138>

제434-15-2조 【암호해독거부】 ①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거나 준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에 사용된 비밀암호해독법에 대한 지식을 지닌 자가 사법당국에게 전술한 암호해독법의 재생을 거부하거나 형사소송법전 제1권(기소와 예심의 실행)에 속하는 제2편(심문과 불심검문) 제3편(예심법원)의 적용을 위한 사법당국의 암호해독법의 실행청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만약 그 암호해독법을 재생 또는 실행함으로써 중죄 또는 경죄가 범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거나 범죄효과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거부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1.11.15. 개정, 법률2001-1062>

제434-16조 【재판의 부정적 논평】 ① 법원의 종국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증인의 증언이나 수사법원 또는 판결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성질의 논평을 공표하는 행위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범죄가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책임자의 확정은 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434-17조 【허위선서】 민사와 관련된 허위의 선서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18조 【허위통역】 통역인이 번역된 대화 또는 서류의 내용을 속이는 때에는 제434-13조 및 제434-14조의 구별에 따라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 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19조 【통역인매수】 통역인의 매수는 제434-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4-20조 【허위감정】 감정인이 서면보고 또는 구두설명을 함에 있어 자료 또는 감정결과를 속이는 때에는 제434-13조 및 제434-14조의 구별에 따라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 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21조 【감정인매수】 감정인의 매수는 제434-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4-22조 【공무상 표시무효】 ① 공공기관에 의하여 시행된 봉인을 파기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봉인파기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봉인된 물건 또는 사법권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의 횡령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34-23조 【성명도용】 ① 성명의 도용으로 제3자에 대한 형사소추가 결정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인의 성명을 도용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2-2조 내지 제13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형은 성명도용이 행하여진 본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에 흡수되지 않고 병과 된다.
③ 허위신고로 제3자에 대한 형사소추가 결정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동인의 신분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제3절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침해

제1 사법권에 대한 경의 침해

제434-24조 【사법 모독】 ① 언어나 동작 또는 협박, 공개되지 아니한 문서나 영상 기타 물건의 송부에 의하여 사법관, 배심원 기타 직무로 또는 직무수행의 기회에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존경 또는 그 직무에 대하여 나타내야 할 경의를 침해하는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판결법원 또는 수사법원의 심리 중에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25조 【사법 권위침해】 ① 행위, 언사, 문서 또는 영상에 의하여 공연히 법원의 결정 또는 행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법권의 권위나 독립을 저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전문적인 논평, 재판의 변경, 파기 또는 재심을 구하는 행위, 언어, 문서 또는 영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책임자의 확정은 언론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④ 행위 시로부터 3월 이내에 본조의 죄에 대하여 수사 법원의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제434-26조 【허위신고】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필요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 도주

제434-27조 【도주】 ① 피구금자가 복종해야 할 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주를 구성한다.

② 도주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도주가 폭력,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매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폭력,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매수가 도주자와 함께 공모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도 같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34-28조 【피구금자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자는 본절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구금자로 본다.

1. 경찰유치자
2. 경찰유치 후 사법당국의 면전에 출석하는 과정에 있는 자 또는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 중에 있는 자
3. 효력을 가지는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
4. 자유형의 집행을 받거나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체포된 자
5.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자

제434-29조 【준도주】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보건기관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감시를 받는 피구금자가 감시상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2. 행형시설 외의 유치의 결정을 받거나 전자감시장치 하의 유치 또는 반자유 또는 외출허가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3. 구금형의 집행정지 또는 분할 또는 시설 외의 유치, 반자유 또는 외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행형시설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전자감시장치 하의 유치처분을 받은 자가 형벌적용판사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 내에서 자신의 위치추적을 감지하는 장치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무력화시킨 행위<1997.12.29. 개정, 법률97-1273>

제434-30조 【가중도주】 ① 도주행위가 무기, 폭발물, 인화성 물질 또는 독물에 의한 협박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제434-27조 및 제434-29조 제1호에 규정된 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주행위가 무기, 폭발물, 인화성 물질 또는 독물을 사용하거나 조직된 범죄단체가 범죄를 한 때에는 도주자의 범죄단체의 구성원여부에 상관없이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34-31조 【형의 불흡수】 제132-2조 내지 제13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도주 당시 집행 받고 있던 형 또는 구금의 이유가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고되는 형에 흡수되지 않고 병과 된다.

제434-32조 【도주원조, 가중도주원조】 ① 피구금자에 대하여 도주의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주수단 제공행위가 폭력,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매수를 수반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도주수단 제공행위가 무기, 폭발물, 인화성 물질 또는 독물의 제공이나 사용을 수반하는 때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33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① 피구금자의 간수를 담당하는 자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준비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직무상 행형시설에 출입하거나 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구금자와 접촉할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③ 본조에서 규정하는 도주수단 제공행위가 무기, 폭발물, 인화성 물질 독물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인 때에는 15년의 징역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34조 【손해배상 연대책임】 구금의 이유가 된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부대사소신청에 의하여 피구금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434-32조 및 제434-3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34-35조 【물품 부정반입】 ①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피구금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을 함과 더불어 금전, 서신, 물품 또는 어떠한 물자를 제공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입수하게 하거나 또는 동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거나 그 접수를 중개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형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만약 피구금자를 감시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이거나 직무상 행형시설에 출입하거나 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피구금자와 접촉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434-35-1조 【교도소 무단침입】 법령 또는 행형규정에 의한 권한 없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교도소장벽을 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3.18. 개정, 법률2003-239>

제434-36조 【미수】 본절 제2관에 정한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34-37조 【형의 면제】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본절 제2관에서 정하는 범죄의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알려 도주실현을 방지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제3 형사사법의 권위에 대한 기타 침해

제434-38조 【체류금지위반】 ① 체류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체류하는 경우 또는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체류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관에 의하여 명하여진 감시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34-39조 【판결게시물 손괴 등】 ① 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게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을 위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때에는 6개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죄를 범한 자의 부담으로 다시 판결의 게시를 명한다.

제434-40조 【직업 활동금지위반】 제131-27조 내지 제131-29조에 규정된

직업·사회적 활동금지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41조 【권리박탈 등 위반】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제131-5-1조, 제131-6조, 제131-10조, 제131-14조, 제131-16조 및 제131-17조의 적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특정육상차량금지, 일정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또는 일정한 자와의 접촉금지, 일정연수를 완수할 의무, 무기의 보유나 휴대 금지, 수렵면허 취소, 동물보유금지, 수표의 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의 사용금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공계약 배제의 형벌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또는 금지에 위반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1-6조, 제131-10조, 제131-14조 및 제131-16조의 적용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차량, 몰수된 차량이나 무기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영득하거나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전술한 조항들의 적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수렵면허취소 또는 차량이나 무기, 동물 기타 물건의 몰수를 선고하는 판결의 송달을 받은 자가 판결의 집행임무를 맡고 있는 자에 대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증 또는 몰수된 동물이나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제1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434-42조 【사회봉사형 의무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주형 또는 보충형으로 선고된 사회봉사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34-43조 【법인의 형사책임수반의무위반】 ① 법인에 대하여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중에서 하나를 선고하는 경우 자연인이 그 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1-39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해산이 선고된 법인의 유지, 재결성에 자연인이 드러나게 또는 감춰진 형태로 참여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인의 해산이 누범으로 범해진 범죄 또는 본조 제2항의 범죄에 대해서 선고된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2001.06.12. 개정, 법률2001-504>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제434-4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제434-4조 내지 제434-9-1조, 제434-11조, 제434-13조 내지 제434-15조, 제434-17조 내지 제434-23조, 제434-27조, 제434-29조, 제434-30조, 제434-32조, 제434-33조, 제434-35조, 제434-36조 및 제434-40조 내지 제434-43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 법상의 권리행사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제434-9조, 제434-9-1조, 제434-16조 및 제434-2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제434-9조, 제434-9-1조, 제434-33조 및 제434-3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본장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4-45조 【운전면허정지】 제434-10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5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없다.<2003.06.12. 개정, 법률2003-495>

제434-46조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제434-9조 제8항, 제434-9-1조, 제434-30조, 제434-32조 제3항 및 제434-33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4-47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434-9조 제8항, 제434-9-1조 제2항, 제439-39조 및 제434-43조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형의 5년 이하의 적용
3. 제131-21조에 규정된 몰수
4. 제131-3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5. 제434-43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 제131-39조 제1호의 법인의 해산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5장 공권력, 유럽공동체법원의 작용, 유럽공동체회원국 및 기타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침해

제1절 공권력에 대한 침해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제435-1조 【수뢰】 공권력의 수탁자, 공무담당자 또는 외국의 선거를 통한 공무를 부여받은 자가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권한 없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직무나 사명 또는 재임,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청원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수락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2조 【제3자간 뇌물수수】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특정대우, 직업, 거래나 공권력의 수탁자, 공무담당자 또는 외국의 선거를 통한 공무를 부여받은 자의 원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취득하기위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청원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제435-3조 【증퇴】 ① 공권력의 수탁자, 공무담당자 또는 외국의 선거를 통한 공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권한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직무나 사명 또는 재임,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의 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권한 없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직무나 사명 또는 재임,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된 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청원하는 본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담당자의 요구에 따른 때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 2007-1598>

제435-4조 【제3자간 뇌물수수】 ①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권한 없이 제의하여, 특정대우, 직업, 거래 또는 공권력의 수탁자, 공무담당자 또는 국제공공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원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취득하려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하여 본조 제1항의 공무

담당자로 부터 특정대우, 직업, 거래 또는 공무담당자 본연의 결정과 다른 유리한 결정을 취득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른 제3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3관 공통조항

제435-5조 【국제공공기구 간주】 본절의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유럽공동체 협약의 시행으로 창설된 조직들은 국제공공기구와 같이 간주된다.<2007. 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6조 【유럽공동체회원국 공무담당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이 유럽공동체회원국 중의 한 회원국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유럽협약을 적용하기위해 창설된 기구의 공무담당자에게 제의되거나 인정된 경우 및 제3자에게 공무담당자의 유리한 결정을 획득하도록 하거나 공무를 통한 수월성 또는 공무담당행위를 완수하게하거나 또는 완수를 자제하게하려는 제3자에 의한 청탁 또는 수락의 경우 제435-1조 내지 제435-4조에 규정한 범죄의 기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소제기 될 수 있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2절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제435-7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수뢰】 다음 각 호의 자가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권한 없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직무나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청원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수락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외국 또는 국제법정에서 사법직을 행사하는 자
2. 외국법정 또는 국제법정에서 법원서기직을 행사하는 자
3. 상기의 법정 또는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
4. 상기의 법정 또는 법원에 의한 화해나 조정의 임무를 맡은 자
5. 중재에 관한 외국법의 영향 하에서 중재임무를 실행하는 자<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8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우호적 결정을 위한 제3자간 뇌물수수】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제435-7조에 규정된 자의 우호적인 결정이나 의사를 취득하기위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청원하거나 그러한 이익의 제공을 수락하는 제3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제435-9조 【사법업무관련자에 대한 증뢰, 뇌물요구수락】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권한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그의 직무나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의 하는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외국 또는 국제법정에서 사법직을 행사하는 자
2. 외국법정 또는 국제법정에서 법원사무직을 행사하는 자
3. 상기의 법정 또는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
4. 상기의 법정 또는 법원에 의한 화해나 조정의 임무를 맡은 자
5. 중재에 관한 외국법의 영향 하에서 중재임무를 실행하는 자

② 누구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권한 없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직무나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된 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수행을 자제할 목적으로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청원하는 본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의 요구에 따른 때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10조 【제3자를 통한 능동적 뇌물수수】 ①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권한 없이 제의하여 제435-9조에 규정한 자가 국제법정에서 사법직무를 행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법정에 의해 지명된 경우 그 자의 우호적 결정이나 의사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자신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하여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자의 우호적 결정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제의를 수락한 때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3관 공통조항

제435-11조 【유럽공동체회원국 사법업무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이 유럽공동체회원국 중의 한 회원국에서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유럽협약을 적용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의 사법업무자에게 제의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그들의 우호적 결정이나 의사를 획득하도록 하거나 업무를 통한 수월성 또는 업무행위를 완수하게하거나 또는 완수를 자제하게하려는 제3자에 의한 청탁 또는 수락의 경우 제435-7조 내지 제435-10조에 규정한 범죄의 기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소제기 될 수 있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관 사법행위에 대한 기타침해

제435-12조 【회유 및 협박 등을 통한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누구든지

약속, 증여, 선물, 압력, 협박, 폭력행위, 계책을 동원하여 외국 또는 국제 법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하거나 거짓된 증명을 하거나 또는 고소 또는 고발 및 증명을 취소하게 한 때에는 비록 그 교사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도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13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 누구든지 협박, 폭력, 위협을

하여 외국 또는 국제법정의 사법관, 배심원, 사법직무종사자의 양성자 기타 재판업무관계자, 범죄탐지 및 방지업무관계자의 임무에 근거하여 또는 임무를 담당하는 편의성으로 직무를 완수하게하거나 또는 완수의 자제를 하게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제435-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본장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범한 자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한다.

1. 권리행사를 규정한 제131-26조의 방식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 법상의 권리의 금지
2. 5년 이내의 공무담당 또는 범죄와 관련되었던 직업적, 사회적 활동의 금지
3.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4. 제131-21조의 방식에 따른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② 본장에 규정한 범죄 중 하나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제131-30조 내지 131-30-2조에 따른 영구적 또는 10년 이내의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35-15조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제121-2조에 의해 제435-3조, 제435-4조, 제435-9조, 제435-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한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
2.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을 다룬 제131-39조에서 규정한 5년 이내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권리금지
3. 제131-21조의 방식에 따라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4.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6장 사적용병활동에의 참여

제436-1조 【사적용병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분쟁당사국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분쟁국에 임무를 띤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소속도 아닌 채 어떠한 국가의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사적인 적대감의 직접적인 일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교전상대국의 전투부대원의 유사 직무와 계급과 비교하여 봉급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거나 이를 약속받아서 군사 분쟁 중에서 전투하기위해 특별히 모집된 자
2. 체제의 전복 또는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을 침해하기 위해 획책된 행위의 일환으로 전투하기위해 특별히 모집되고 이러한 행위를 지휘하는 국가나 그에 반대하는 국가에 부속되지도 않거나 그러한 국가의 소속군인도 아니며 또한 국가의 군사적 임무를 띠고 파병된 적도 없었던 경우로 사의 또는 고액의 봉급의 획득을 위해 특별히 모집된 자<2003.04.14. 개정, 법률2003-340>

제436-2조 【사적용병조직행위】 제436-1조에서 정한 자의 모집, 고용, 봉급, 무장, 군사교육을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3.04.14. 개정, 법률2003-340>

제436-3조 【적극적 속인주의】 본장에서 언급한 범죄가 프랑스인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프랑스 영토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의해서 범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프랑스법률은 제11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제113-8조의 둘째 법문은 적용되지 않는다.<2003.04.14. 개정, 법률2003-340>

제436-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에 규정된 범죄중 하나를 범한 자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한다.

1. 권리행사를 규정한 제131-26조의 방식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금지
2. 제131-35조의 방식에 의한 판결의 전체 또는 부분적 게시 또는 판결이유와 판결주문을 공중에게 알리는 공고
3. 제131-31조의 방식에 따른 체류금지<2003.04.14. 개정, 법률2003-340>

제436-5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은 제121-2조에 의거하여 제436-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선고될 수 있다.

②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형벌을 부과한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
 2.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을 다룬 제131-39조에서 규정한 권리금지
-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2003.04.14. 개정, 법률2003-340>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제1장 문서위조

제441-1조 【문서위조】 ① 권리 또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목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서 또는 기타 모든 사상표현물에 침해를 야기하는 불법적 변경을 가하여 그 진실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문서위조를 구성한다.

- ②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1-2조 【공증명문서위조】 ① 권리, 신분 또는 자격의 증명 또는 허가를 목적으로 행정청이 발행하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에 규정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문서위조 또는 위조문서의 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 등의 공공사무취급자가 그 직무의 수행 중에 죄를 범한 경우
 2.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3. 중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중죄의 행위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제441-3조 【위조공증명문서소지】 ① 제441-2조의 위조공증명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수개의 위조공증명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1-4조 【공정증서위조】 ① 공정증서 또는 관공서의 등록부를 위조하는 행위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에 규정된 증서나 등록부를 행사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공무원 등의 공공사무취급자가 그 직무의 수행 중 제1항의 공정증서나 등록부를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된 공정증서나 등록부를 행사하는 때에는 15년의 징역형 및 22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1-5조 【공증명문서부정발급】 ① 권리, 신분 또는 자격의 증명 또는 허가를 목적으로 행정청이 발행하는 문서를 타인을 위하여 부정하게 발급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범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 등의 공공사무취급자가 그 직무의 수행 중에 죄를 범한 경우
2.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3. 중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중죄의 행위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제441-6조 【공증명문서부정수령】 ① 부정하게 행정관청 또는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권리,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허가 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행정청 또는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당, 지급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41-7조 【부당증명발급 등】 ① 본장에 규정된 경우와 별개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확한 사실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진정한 증명서를 변조하는 행위
3. 부정확하거나 변조된 증명서를 행사하는 행위

② 국고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1-8조 【허위증명문서작성에 관한 증·수뢰】 ① 증명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부정확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부정확한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전항의 요구에 따르거나 폭력 또는 협박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의료나 위생 관련 직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부정확한 내용의 증명서로 질병, 신체장애, 임신사실을 은폐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잘못 증명하거나 또는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1-9조 【미수】 제441-1조, 제441-2조 및 제441-4조 내지 제441-8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41-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본장의 중죄 및 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 권리행사의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 금지
3. 공계약 배제
4.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프랑스영토 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4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장 통화위조

제442-1조 【통화위조】 ①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거나 또는 권한 있는 외국기관이나 국제기관이 발행하는 화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는 30년의 징역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폐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동의 없이 또한 그러한 기관에 의해 정해진 조건을 위반할 목적으로 허가된 부품과 장치의 도움으로 전항에서 언급된 화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는 행위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의 죄에 적용한다.<2004.03.09. 개정, 법률2004-204>

제442-2조 【위조통화의 운반 등】 ① 제442-1조에 규정된 위조되거나 변조된

통화를 운반, 유통시키거나 또는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범죄조직단체의 형태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0년의 징역형 및 4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보안기간에 관한 제132-23조 제1항 및 제2항은 본조 제2항의 죄에 적용한다.<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2-3조 【비통용화폐의 위조】 법정통용력이 없거나 인가되지 아니한 프랑스 또는 외국의 화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2-4조 【비인가통화표시유통】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는 화폐 또는 은행권을 대신할 목적으로 인가되지 아니한 통화표시를 유통시키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2-5조 【통화위조 또는 변조의 예비】 화폐 또는 은행권의 제조,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재료 및 기구를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1.12.11. 개정, 법률 2001-1168>

제442-6조 【통화유사물제조】 제442-1조에 규정된 통화와 외관이 유사함으로써 인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수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인쇄물 또는 서식을 제조, 판매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2-7조 【위조통화의 부정유통】 그 정을 모르고 제442-1조에 규정된 위조되거나 변조된 통화를 수취한 자가 그 정을 알고 이를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는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2-8조 【미수】 제442-2조 제1항, 제442-3조 내지 제442-7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42-9조 【형의 면제】 본장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하여 범죄의 실현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필요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모두 그 형을 면제한다.

제442-10조 【형의 감경】 제442-1조 내지 제442-4조의 죄를 범한 정범이나 공범이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제보로 다른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자유형의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442-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42-1조 내지 제442-6조의 중죄 및 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3. 제1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체류금지

제442-12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제442-1조 내지 제442-4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영토 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2003.11.26. 개정, 법률2003-1119>

제442-13조 【몰수】 ① 본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조되거나 변조된 화폐, 은행권 및 그 제조를 위한 재료나 기구는 몰수하여야 한다.

③ 화폐나 은행권이 위조된 경우 위조되거나 변조된 통화표시는 폐기를 위하여 파리지페국 또는 프랑스국립은행에 인도되어야 하며, 몰수된 재료나 기구로서 동 기관이 지정하는 물건은 폐기를 위하여 동 기관에 인도되어야 한다.

④ 제442-6조에 규정된 물품, 인쇄물 또는 서식 역시 몰수하여야 하며, 전항의 구별에 따라 폐기를 위하여 파리지페국 또는 프랑스국립은행에 인도되어야 한다.<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2-1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제442-13조에 규정된 몰수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42-15조 【법정통화유통 이전의 경우에도 준용】 제442-1조, 제442-2조와 제442-5조 내지 442-14조는 화폐나 은행권이 비록 법정통용력이 있는 기관에 의해 아직 발행되지는 않아서 법정화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은 상태라도 법정화로써 통용될 예정이라면 적용된다.<2001.12.11. 개정, 법률2001-1168>

제442-16조 【물수보충형부과】 제442-1조 내지 제442-3조의 죄를 범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그들의 재산이 분할되었건, 공유이건 또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간에 보충형으로 그 재산의 물수를 부과한다.<2007.03.05. 개정, 법률2007-297>

제3장 유가증권위조

제443-1조 【유가증권의 위조】 국고 또는 외국정부가 인지를 붙이거나 인장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증권을 행사 또는 운반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3-2조 【우표 등의 위조】 우표 또는 기타의 우편에 관계되는 신용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및 재무관청이 발행하는 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나 이들 위조되거나 변조된 우표 또는 유가증권을 판매, 운반, 반포 또는 행사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3-3조 【유가증권유사물의 제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조물 또는 우편 및 전기통신 공공서비스 조직에 관한 1990년 7월 2일자 법률 제568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주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과 외관이 유사함으로 인하여 동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에 갈음하여 수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인쇄물 또는 서식을 제조, 판매, 운반 또는 반포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3-4조 【외국우표 등의 위조】 외국의 우편기관이 발행하는 우표 기타 우편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우표 기타 우편증서를 판매, 양도, 반포 또는 행사하는 자는 6월의 구금형 및 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3-5조 【미수】 본장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43-6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 활동의 수행금지
3.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떠한 경우든 범죄에 의해 조성된 물건은 몰수하여야 하며, 몰수물은 폐기를 목적으로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443-7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입국금지】 제443-1조 및 제443-2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43-8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제443-6조에 규정된 몰수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4장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제444-1조 【국가의 각인 등의 위조, 행사】 국채, 국가의 인지 및 금, 은 또는 백금 제품의 기호에 사용되는 각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채, 인지 및 각인을 행사하는 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7.10.29. 개정, 법률 2007-1544>

제444-2조 【국가의 각인 등의 부정사용】 국채, 국가의 인지 및 금, 은 또는 백금 제품의 기호에 사용되는 각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3조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인장, 인지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는 위조하거나 변조된 인장, 인지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행위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 행정관청 또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공서의 표제가 들어있는 서류 또는 관공서의 인쇄물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들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또는 인쇄물을 판매, 반포 또는 행사하는 행위
3. 프랑스 또는 외국의 위생검사를 필요하였다는 검인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2007.10.29. 개정, 법률2007-1544>

제444-4조 【공인 등의 부정사용】 제444-3조에 규정된 인장 등 기호, 인지, 서류 또는 인쇄물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5조 【공용서류의 모조】 공중으로 하여금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 행정관청 또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공서의 표제가 들어있는 서류 또는 관공서의 인쇄물로 오인시키는 외관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제조, 판매, 반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6조 【미수】 본장에 해당하는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4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본장의 중죄 및 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제131-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무 또는 직업·사회 활동의 수행금지

3. 공계약 배제
4.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어떠한 경우든 범죄를 위하여 조성한 물건은 몰수하여야 하며, 몰수물은 폐기를 목적으로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44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입국금지】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31-3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구히 또는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영토입국금지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44-9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3. 제444-7조에 규정된 몰수

③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5장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부패행위

제1절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수동적·능동적부패

제445-1조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①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직업이나 사회활동의 범위에서, 조직 내에서 직접적으로 공무를 담당하지도 않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제3자에게 권한 없이 제의하여 그가 법적, 계약적인,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직무나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의 자제를 하게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그 주체가 누구이건 언제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하여 그가 법적, 계약적인, 직업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을 자제 하게 하려는 자의 청원을 수락한 때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445-2조 【제3자 간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직업이나 사회활동의 범위에서 조직 내에서 직접적으로 공무를 담당하지도 않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제의, 약속, 증여, 선물 또는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제3자에게 권한 없이 청원하거나 수락하여 그가 법적, 계약적인, 직업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그의 직무나 임무를 통한 수월성에서 비롯하여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러한 수행의 자제를 한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2007.11.13. 개정, 법률2007-1598>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과 법인의 형사책임

제445-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제445-1조와 제445-2조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한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 금지
2. 5년 이내의 공무담당 또는 범죄와 관련되었던 직업적, 사회적 활동의 금지
3. 제131-21조의 방식에 의한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2005.07.04. 개정, 법률2005-750>

제445-4조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제121-2조에 의해 제445-1조와 제445-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한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
2.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을 다룬 제131-39조에서 규정한 5년 이내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권리금지 특히 범죄와 관련되었던 제2호에 언급된 활동의 금지
3. 제131-21조의 방식에 따라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2005.07.04. 개정, 법률2005-750>

제5편 범죄단체조직가담

제450-1조 【범죄단체조직가담】 ①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중죄 또는 5년의 구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죄를 준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또는 동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모의는 범죄단체조직을 구성한다.

② 중죄 또는 10년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단체조직에의 가담은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5년의 구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단체조직에의 가담은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450-2조 【형의 면제】 제450-1조에 규정된 단체 또는 모의에 가담한 자가 형사소추에 앞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를 제보하고 다른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450-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① 제450-1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행사금지
2.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범죄를 범한 경우 제131-27조의 규정에 따른 그 공무 또는 직업·사회활동의 수행금지
3. 제131-31조에 규정된 체류금지

② 중죄 또는 경죄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 또는 모의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기타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50-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 의해 제450-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법인은 형사책임을 진다.

② 해당범죄를 범한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한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권리금지 특히 범죄와 관련되었던 제2호에 언급된 활동금지
3. 제131-21조의 방식에 따라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되도록 정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다만, 환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1-35조에 의한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1998.06.17. 개정, 법률98-468>

제450-5조 【몰수보충형】 제450-1조와 제321-6-1조의 죄를 범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그들의 재산이 분할되었던 공유이건 또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보충형으로 그 재산의 몰수를 부과한다.<2006.01.23. 개정, 법률2006-64>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제1절 인종의 보호

제511-1조 【인간복제를 위한 생식세포제공】 생존한 자 또는 사망한 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아기를 태어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세포 또는

생식세포의 채취에 응한 때에는 10년의 구금형 및 1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1조 【적극적 속인주의】 제511-1조에 규정된 경죄가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영토 내의 지속적인 거주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진 경우 예외적으로 제113-6조 제2항⁴⁸⁾이 적용되고 제113-8조의 둘째 법문⁴⁹⁾은 적용되지 않는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조 【인간복제의 고무 및 선전】 ① 생존한 자 또는 사망한 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아기를 태어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세포 또는 생식세포의 채취에 응하도록 증여, 장래성보장, 위협, 공권력의 남용을 통하여 타인을 고무한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어떠한 형태를 띤 것이건 우생학 또는 재생복제를 위한 선전 또는 광고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2절 인체의 보호

제511-2조 【장기유상취득 등】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사람의 장기를 취득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장기의 유상취득이 용이하도록 중개하거나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48) 제113-6조 【적극적 속인주의】 ②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영토 외에서 행한 경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49) 제113-8조의 후반부의 내용은 소추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즉, “피해자나 그 승계인의 고소 또는 범죄발생지의 국가당국에 의한 공식 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를 가리킨다.

- ③ 외국에서 반입된 장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511-3조 【장기의 무단적출】 ① 공중위생법전 제L. 123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는 동조 제2항과 제5항의 허락 없이 생명 있는 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치료를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여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중위생법전 제L. 1241-3조⁵⁰⁾와 제L. 1241-4조⁵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

- 50) 2004년 8월 6일자 법률 제2004-800호로 개정된 공중위생법전 제L. 124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경우에 형제 또는 자매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로부터 뼈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혈액세포의 채취는 가능하다. ② 그러한 채취가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치료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성별에 속하는 사촌 간이나 삼촌, 숙모, 조카 또는 질녀로부터 뼈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혈액세포의 채취는 가능하다. ③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채취는 이식을 위한 적출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위험에 대해 시술자로부터의 설명을 들은 피채취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그러한 동의는 지방법원장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된 법관 앞에서 자유롭게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위급의 경우에 그러한 동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해 수집된다. 동의는 형식 없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④ 채취를 실행하게 하는 승인은 이식 받는 자에 합치하는 성년의 기증자를 발견하기 위한 모든 선행조치가 이미 행해졌어야 하고 피채취자인 미성년자의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채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해진 상태에서 공중위생법전 L. 1231-3조에 규정한 의사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채취할 수 없다.
- 51) 2004년 8월 6일자 법률 제2004-800호에 의해 상기의 공중위생법전 제L. 1241-3조와 함께 개정된 동법 제L. 124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경우에 형제 또는 자매관계에 있는 자의 법적 보호의 수단으로써 성년자로부터 뼈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혈액세포의 채취는 가능하다. ② 만약 법적 보호된 자가 후견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이 채취는 채취에 관련된 자와 공중위생법전 제L. 1231-3조에 규정한 의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집한 후에 발동하는 후견을 위한 권한 있는 법관의 결정에 구속된다. ③ 만약 보호된 자가 치료조치 또는 사법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 만약 후견을 위한 권한 있는 법관이 그 보호된 자가 채취에 대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면, 이 동의는 L. 1241-3조에 규정된 조건 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1231-3조에 규정한 의사위원회의 승인에 종속된다. 보호된 자가 채취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한 상태 하에서만 시술된다. ④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같은 성별에 속하는 사촌 간이나 삼촌, 숙모, 조카 또는 질녀를 위하여 보호된 자로부터 뼈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혈액세포의 채취는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된 자들이 채취를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치료조치 또는 사법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그들이 후견을 위한 권한 있는 법관에 의해 채취를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된

하고는,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자로부터 장기, 신체조직 또는 세포를 적출하거나 증여를 위한 생성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511-4조 【신체조직 등의 유상적출】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사람으로부터 그 신체의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의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의 유상취득이 용이하도록 중개하거나 타인의 신체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511-5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① 공중위생법전 제L. 1241-1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년자로부터 조직, 세포 또는 그 생성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중위생법전 제L. 1241-3조와 제L. 1241-4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생명 있는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자로부터 뼈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혈액세포를 채취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5-1조 【사자(死者)의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① 공중위생법전 제L. 1232-3조⁵²⁾에 규정한 실험계획을 전달함이 없이 사자(死者)에 대해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동의는 본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의사위원회에 의해 채취의 승인이 발해진다. ⑤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의견 또는 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승인을 작성하기 전에 공중위생법전 제L. 1231-3조에 규정된 의사위원회는 이식받을 자에게서 이식에 적합한 성년 피채취자를 찾는 모든 수단이 이미 실행되었음을 확인해야한다. ⑥ 법적 보호된 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채취할 수 없다.

과학적 목적으로 신체조직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중지되거나 금지된 실험계획을 실행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5-2조 【금지된 인체연구의 계속행위】 I.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유전 연구, 기관, 조직, 세포, 혈액, 인체의 구성부분과 파생된 부산물의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목적을 보존하거나 변형한 경우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위생법전 제L. 1232-3조에 규정된 선행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러한 활동의 실행에 반대하거나 또는 이러한 활동을 중지하거나 금지한 경우

II. 과학적 이용을 위한 양도를 목적으로 유전연구, 기관, 조직, 세포, 혈액, 인체의 구성부분과 파생된 부산물의 연구를 공중위생법전 제L. 1243-3조에 규정된 승인을 사전적으로 얻지 않거나 이러한 승인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거나 변형한 경우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6조 【생식세포무단채취】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생식세포를 채취하거나 적출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52) 2004년 8월 6일자 법률 제2004-800호로 개정된 공중위생법전 제L. 1232-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과학적 목적에 의한 채취는 시술에 앞서서 생의학담당기관(l'Agence de la biomédecine)에게 실험계획을 전달하고 시술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그러한 실험계획이 채취 또는 연구의 적절성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511-7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공중위생법전 제L. 1233-1조, 제L. 1234-2조, 제L. 1242-1조, 제L. 1243-2조 및 제L. 1243-6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또는 허가가 중지되거나 취소된 후에 장기의 적출이나 신체조직의 적출이나 이식, 신체조직의 보존이나 가공 또는 세포의 이식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8조 【장기 등의 배분】 기증을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의 배분 또는 양도에 있어 공중위생법전 제L. 1211-6조에 의한 위생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8-1조 【조직치료를 목적으로 한 배분 또는 양도】 공중위생법전 제L. 1243-5조에 위반하여 사람의 조직치료 또는 세포치료요법을 목적으로 한 배분 또는 양도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8-2조 【사람의 장기, 조직 등의 수입·수출】 공중위생법전 제L. 1235-1조와 L. 1245-5조에 위반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의 수입행위 또는 수출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9조 【생식세포의 유상취득】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생식세포를 취득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생식세포의 처리 또는 보존을 행하는 시설의 용역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생식세포의 유상취득이 용이하도록 이를 중개하거나 제공받은 생식세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511-10조 【생식세포제공에 관한 정보누설】 생식세포를 제공한 사람이나 부부와 이를 제공받은 부부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11-11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임신을 위한 의학적 처치를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공중위생법전 제L. 1211-6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감염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11-12조 【위법한 인공수정】 공중위생법전 제L. 1244-3조⁵³⁾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자은행에 보존되지 않은 미보존상태의 정자 또는 기증받은 정자의 혼합에 의한 인공수정처리⁵⁴⁾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53) 2004년 8월 6일자 법률 제2004-800호로 개정된 공중위생법전 제L. 1244-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정자은행에 보존되지 않은 미보존상태의 기증받은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과 정자의 혼합은 모두 금지된다.

54) 피수술자가 인공수정을 원한다면 기증받은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수태를 하기 위해서는 불임 등의 병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자를 제공하는 자와 이를 제공받는 자가 상호 신원을 알 수 없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 각종 제약이 따르므로(공중위생법전 제L. 2141-5조, 제L. 2141-6조) 본조에서와 같이 정자은행에 보존되지 아니한 미보존정자나 혼합된 정자에 의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정자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출산으로 인한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를 규정한 형법 제227-13조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511-13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공중위생법전 제L. 124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의 부부에게 생식세포를 제공할 것을 임의로 승낙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부부의 지시에 따라 생식세포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11-14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공중위생법전 제L. 1244-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생식세포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채취, 처리, 보존 및 양도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사람의 배⁵⁵⁾의 보호

제511-15조 【인간배아의 유상취득】 ①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배아의 유상취득이 용이하도록 이를 중개하거나 타인의 생식세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55)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거쳐 하나가 된 것을 접합자라고 한다. 동물의 경우에는 접합자를 수정란이라고도 부른다. 이 접합자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 세포분열을 하고, 이렇게 나뉜 세포들은 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발생 과정에서 생명체의 처음 모습에 해당하는 단계를 배(胚, embryo)라고 한다. 발생의 초기 단계인 만큼 분열 능력이 높지만 세포의 기능은 뚜렷하지 않다. 즉 분화 정도는 낮다.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된 후에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정란이 분열하기 시작한 때부터, 발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태아 단계가 되기 전 까지를 배라고 하는 데 이 시기에는 스스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난황이나 태반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신 후 약 8주 정도의 기간까지를 이러한 배(胚, embryo)상태로 간주한다(두산백과사전 참조).

제511-16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공중위생법전 제L. 2141-5조 및 제L. 2141-6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11-17조 【영리목적체외수정 또는 인간복제】 ①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체외에서 인간배아 또는 인간복제를 착수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이용하는 때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8조 【연구실험목적체외수정 또는 인간복제】 연구의 목적으로 체외에서 인간배아 또는 인간복제를 착수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8-1조 【치료목적 인간배아복제】 치료목적으로 인간배아복제에 착수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9조 【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I.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 또는 실험에 착수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공중위생법전 제L. 215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와 서면동의를 사전에 획득하지 못했거나 이 허가가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서면동의가 철회된 경우
2. 법령 또는 허가에 의해 정해진 시효를 지키지 않은 경우

II. 인간배아기원세포에 대한 연구 또는 실험에 착수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공중위생법전 제L. 215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과 서면동의를 사전에 획득하지 못했거나 이 허가가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서면동의가 철회된 경우
2. 법령 또는 허가에 의해 정해진 시효를 지키지 않은 경우<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9-1조 【낙태 후 인간배아 또는 태아조직 또는 세포이용】 낙태 후 공중위생법전 제L. 1241-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또는 진단, 치료, 과학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 또는 태아조직 또는 세포를 선취하거나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9-2조 【인간배아세포의 보관 또는 양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위생법전 제L. 2151-7조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인간배아세포를 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 허가가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공중위생법전 제L. 215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배아세포를 보관하는 행위
3. 공중위생법전 제L. 2151-5조 또는 제L. 2151-7조에서 규정된 허가의 소관 기관이 아닌 곳에 인간배아세포를 양도하는 행위
4. 사전에 생의학기관(l'Agence de la biomédecine)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함이 없이 인간배아세포를 양도한 행위<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19-3조 【허가 없이 인간배아 또는 태아의 조직 수출·수입】 공중위생법전 제L. 2151-6조의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채 인간배아 또는 태아의 조직 또는 세포를 연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한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0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공중위생법전 제L. 2131-1조에 규정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출산 전 진단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11-21조 【불법착상 전 진단】 인간배아의 착상 전 진단행위에 관한 공중위생법전 제L. 2131-4조 및 제L. 2131-4-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2조 【무허가 임신처치】 공중위생법전 제L. 214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실행하는 행위 또는 동조항의 시효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3조 【인간배아 유입 또는 유출】 인간배아를 공중위생법전이 적용되는 영토에 들여오는 행위 또는 공중위생법전 제L. 2141-9조에 규정된 허가 없이 인간배아를 내보내는 행위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4조 【불법 임신처치】 공중위생법전 제L. 2141-2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하는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11-2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I. 공중위생법전 제L.

2141-6조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을 실행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1.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법적 허가를 사전에 얻지 않은 경우
2. 동조 제6항에서 요구되는 감염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동조 제7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허가된 기관 이외의 곳에 인간배아를 두는 경우

II. 배아를 제공한 부부와 이를 제공받은 부부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I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절 기타규정,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제511-26조 【미수】 제511-2조, 제511-3조, 제511-4조, 제511-5조, 제511-5-1조,

제511-5-2조, 제511-6조, 제511-9조 및 제511-15조, 제511-16조, 제511-19조의 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4.08.06. 개정, 법률2004-800>

제511-27조 【보충형】 본장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직업

또는 사회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회로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11-28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본장의 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에 대하여 과하는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에 규정된 형

②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편 기타 규정

단일장 중대한 동물학대

제521-1조 【동물학대】 ① 공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 없이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에 대하여 정도가 중한 학대, 성적인 또는 잔학한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동물을 사법절차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동물의 몰수를 선고할 수 있고 그 동물을 재단에 맡기거나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종국적이건 아니건 간에, 동물의 소지 또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함에 일부러 이용되었던 직업 또는 사회적 활동의 수행금지를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 이 금지는 그러나 선거직의 임기 또는 노동조합책임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에 과하는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

2. 제131-39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규정된 형

⑤ 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계에 대하여도 같다.

⑥ 새로운 투계장을 만드는 행위는 본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⑦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제1항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재번식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0.05. 개정, 법률명령2006-1224>

제521-2조 【동물실험】 국사원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물에 대한 실험 또는 과학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하는 행위는 제511-1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제6권 위경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및 누벨칼레도니에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711-1조 【누벨칼레도니 등의 적용】 본편의 적용조항의 유보 하에 본 법전 중에서 제132-70-1조를 제외한 제1권과 제2권 내지 제5권은 누벨칼레도니(la Nouvelle-Calédonie)⁵⁶⁾ 및 폴리네시아 프랑세즈(la Polynésie française)와 왈리푸튀나섬(îles Wallis-et-Futuna)의 영토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1-2조 【기타】 본 법전의 제1권부터 제5권은 프랑스 남극령(les Terres australes, les antarctiques françaises)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56) 영어로는 뉴칼레도니아섬(New Caledonia I.)이라 한다. 면적 1만 8575km². 인구 21만 1000명(2000)이다. 길이 400km. 너비 평균 50km. 지형은 두 줄기의 산맥이 장축(長軸)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 있으며, 중앙부는 대체로 산이 많으나, 주위에는 넓은 대지와 해안평야가 펼쳐져 있고, 섬 전체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섬은 1774년 제임스 쿡이 발견하여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칼레도니아는 스코틀랜드의 옛 이름)를 기념하여 명명하였는데, 1853년 프랑스가 강제로 이 섬을 점령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본떠서 유형(流刑)식민지로 삼았다. 20세기 초까지 유배된 죄수는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1875년 풍부한 니켈 자원이 발견된 후 정상적인 사회건설의 필요성과 탈주한 죄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잠입하여 영국과 분쟁을 일으킨 일이 원인이 되어 19세기 말부터 유형제도는 폐지되었다. 원주민은 카나카족이라고 하는 종족에 속하나, 형질적으로는 멜라네시아계와 폴리네시아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우세하다. 멜라네시아계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비슷한 신체적 특질을 가지며, 강한 오스트랄로이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원주민 외에 프랑스인을 주로 하는 유럽인과 광산노동자로 일하는 베트남인·인도네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다. (두산백과사전 참조)

제711-3조 【재산형의 선고방식】 누벨 칼레도니, 뿔리네지 프랑세즈 및 왈리퓌튀나섬의 영토에서 본 법전에 의한 재산형은 지역 통화로 선고하며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고려한다.

제711-4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① 제711조에 규정한 영토에서의 본 법전의 적용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즉 “지방법원”⁵⁷⁾은 “제1심 법원”⁵⁸⁾으로, “도”⁵⁹⁾는 “영토”⁶⁰⁾로, “도지사”⁶¹⁾ 및 “부지사”⁶²⁾는 “영토상 정부대표”⁶³⁾로 한다.

② 또한 “이 영토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참조”는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대상을 포함하는 규정을 참조”로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2장 제1권의 적용

제712-1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131-35조 마지막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판결의 공고는 관보, 지역관보, 하나 또는 수개의 출판물 또는 하나 또는 수개의 시청각매체에 의한다. 이러한 공고를 맡은 출판물 또는 시청각매체는 법원에 의해 지정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들은 공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57)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58)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59) le département

60) le territoire

61) le préfet

62) le sous-préfet

63)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territoire

제712-2조 【특별의무의 내용】 제132-45조 제7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운전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특정 육상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3장 제2권의 적응

제71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제223-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생의학적 연구를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도록 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3-2조 <2001년 7월 4일자 법률 제2001-588호에 의거 폐지>

제713-3조 【예외적 차별허용】 제225-3조 제2호 및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건강상태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행위로서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의료 및 공무원에 관한 규정의 범주 내에서 확인된 의학적 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거부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3. 노동법분야 또는 공무원법분야에서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여 특정성에 속함이 고용 또는 직업 활동 수행의 결정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있어 고용분야의 성 차별”<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제226-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사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의학적 목적으로 사람의 유전적 특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가 사법절차의 범주 내에서 실현된 경우
2. 또는 예외적으로 사람의 이익과 신뢰의 존중을 위해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71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제226-2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의학적 목적으로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 식별을 실시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가 사법절차의 범주 내에서 실현된 경우
2. 또는 예외적으로 사람의 이익과 신뢰의 존중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제71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제226-2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군대 또는 소속부대의 작전의 기회에 전사한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의학적 또는 비과학적 목적이거나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수사 또는 예심처분이외에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유전자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국사원령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장 제3권의 적용

제71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제32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기념물로 분류, 등록 또는 보호받는 부동산이나 동산, 발굴에 의하거나 우연한 발견에 의한 고고학적 물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 공공사무취급 또는 공익성이 인정된 공적기관에 속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 소장되거나 등록된 물품”<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5장 제4권의 적용

제71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제421-1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전쟁무기의 제조에 관한 1870년 9월 4일자 명령을 폐지하는 1871년 6월 19일자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살상용 또는 폭발용 기계나 엔진의 제조 또는 소지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폭발물질의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된 폭발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에 의해 제조된 장치의 불법적 구입, 소지 또는 운반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탄약의 소지 및 운반

- 국방법전 제2341-1조 및 제2341-4조에 규정된 범죄“<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제43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자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분야에서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원거리통신망 이용자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사무 취급자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 원거리통신에 의해 발송, 수령 또는 중개되는 통신을 감청 또는 변경을 지시, 실행, 용이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5-3조 【영리행위】 제432-12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3항의 적용에 대하여 시는 지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법 제L. 12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대표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 부시장 또는 시의원은 계약의 체결 또는 승인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법 제L. 122-1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는 비공개로 회합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5-4조 【사후영리행위】 제432-1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3항의 규정은 공공영조물, 국유기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제적으로 혼합된 회사의 임원과 우편 및 원거리통신의 공적서비스의 작용에 개입하는 공공 사업주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5-5조 【유가증권모조】 제443-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조물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의 공적서비스의 작용에 개입하는 공공사업주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과 외관이 유사함으로 인하여 동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에 갈음하여 수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인쇄물 또는 서식을 제조, 판매, 운반 또는 배포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제5권의 적용

제716-1조 【장기의 무단적출】 제51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행위의 위험 및 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사전의 분명한 허락 없이 살아있는 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명 있는 미성년의 기증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의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단 본인의 형제 또는 자매를 위하여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각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정한 요건 하에서 구성된 의료협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③ 전항에 규정된 동의는 제1심 법원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법관에게 제출돼야 한다. 동의는 형식 없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④ 긴급한 경우 동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행해진다.

⑤ 의료협회는 만일 적출이 적합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출사실에 대해 고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미성년자가 거부할 경우 채취할 수 없다.”

제716-1-1조 【척수의 적출】 누벨칼레도니에서 기증을 위해 척수의 적출을 시행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1998.09.02. 신설, 법률명령98-773>

제71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제511-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생명 있는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자로부터 조직, 세포 또는 그 생성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1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제511-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의 적출이나 신체조직의 적출이나 이식, 신체조직의 보존이나 가공 또는 세포의 이식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4조 【장기 등의 배분】 제511-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증을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의 배분 또는 양도에 있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요구하는 위생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5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제511-1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임신을 위한 의학적 처치를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감염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6조 【위법한 인공수정】 제511-1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자은행에 보존되지 않은 미보존상태의 정자 또는 기증받은 정자의 혼합에 의한 인공수정처치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제511-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익명의 제3의 부부에게 생식세포를 제공할 것을 임의로 승낙한 자에 대하여 생식세포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부부의 지시에 따라 생식세포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제511-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받은 비영리의 시설이나 기관 이외의 제공을 통한 생식세포의 채취, 처리, 보존 및 양도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제511-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태의 시초된 부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또는 부부 중 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행위가 제511-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와 제공받은 부부가 출생할 자녀에게 충분한 보살핌의 보장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러한 허가를 발할 수 있다.

②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배아를 받는 부부와 양도하는 부부사이의 익명성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또는 배아를 받는 부부가 오직 제3의 제공자의 도움이 없이는 수태에 대한 의료적 원조가 결과에 도달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경우”

제71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제511-1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 또는 실험을 하는 행위는 7년의 금고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은 인간배아에 대한 침해가 없으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건 하에서 국사원령에 의해 지정된 조건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서면동의를 한 부부의 인간배아와 관련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적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71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제511-2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출산 전 진단행위를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제511-2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인간배아의 착상 전 진단행위에 착수하는 행위는 제511-20조에 규정된

시설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의사에 의해 진단 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특히 중대한 유전적 질환에 걸린 자녀를 출산한 강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착상 전 진단행위에 착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인간배아를 취득·포기하는 부부 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감염의 발견, 방지 및 치료 이외의 목적인 경우
3. 이러한 효과를 위해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제71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제511-2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를 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인공임신에 대한 의료적 처치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14조 【불법 임신처치】 제511-2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임신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하는 행위는 이것이 부부의 친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공수정의 수혜를 받는 부부가 임신할 연령에 있거나 결혼하거나 또는 최소 2년 이상의 공동생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사전에 인간배아의 이식 또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생존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생리학적 특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을 치료하거나 아기에게 특별한 위험을 지니는 질병의 전이를 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의학적 지원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71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제511-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적으로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하여 요구되는 전염병의 추적검사의 결과를 얻지 않고 배아의 이식을 실행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16-16조 【동물실험】 제521-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학문적 또는 경험적 실험 또는 연구를 실시하는 행위는 제521-1조의 형에 처한다.”
<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장 기타규정

제71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① 자신의 고용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허가 없이 책임자 또는 봉급자가 자신의 직무행위 또는 직무에 의해 수월해진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 장래성보장, 공여, 선물, 할인 또는 수당의 증여 또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또는 승인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에 규정된 요구를 수용하거나 그것을 개시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에 경우에 법원은 보충형으로 5년 이하의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의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717-2조 【가격부당조정】 ① 거짓 또는 명예훼손의 정보를 여하한 수단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시세를 혼란케 할 의도로 제의하거나 또는 판매자에 의해 요구된 가격보다 더 유리한 제의를 하거나 기타 기망의 수단으로 재물 또는 서비스, 또는 공채 또는 사채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인위적 가격의 올림 또는 낮춤이 식료품과 관련될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③ 본조의 범죄를 범한 자연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의 금지
2. 제131-25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의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717-3조 【법인의 가격부당조정】 ① 법인은 제121-2조에 규정한 요건 하에서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형사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1-38조에 규정한 방식에 따른 벌금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에 규정한 형벌

③ 제131-39조의 제2호에 규정한 직업 활동의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2편 마요뜨(Mayotte)⁶⁴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721-1조 【프랑스형법의 일반적 적용】 본편의 적용조항의 유보 하에 프랑스형법전 중에서 제132-70-1조를 제외한 제1권과 제2권 내지 제5권은 마요뜨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1-2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① 마요뜨에 프랑스형법의 적용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전환하여 사용한다. 즉, “지방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중죄법원”은 “형사법원”, 행정구역상의 “도”는 “공동체”, “도지사” 및 “부지사”는 “정부대표”로 한다.

② 또한 공동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지역적으로 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대체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2장 제1권의 적용

제722-1조 【특별의무의 내용】 제132-45조 제7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 내용은 “7. 운전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특정 육상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것”<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64)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이다. 면적은 374km², 인구는 약 20만 명(2006.07)이다. 뽀띠뜨 페르와 그랑드 페르의 두 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의 길이는 세로 39km, 가로 22km이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해발 500~600m이다. 주도는 마무추(Mamoudzou)이며 주민의 대부분은 코모로족이다. 주민의 1/3정도는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말라가시어나 스와힐리어의 방언인 코모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의 99% 정도가 이슬람교도이다. 연평균기온은 25℃이며 통용되는 화폐는 유로화이다. 1843년에 프랑스는 마요트를 포함한 코모로 제도를 점령하였고, 그 후 1975년에 코모로 제도의 다른 섬들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마요트 섬은 주민들의 희망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게 되었다.(두산백과사전 참조)

제3장 제2권의 적응

제72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제223-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생의학적 연구를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도록 한 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2000.09.19. 개정, 법률명령2000-916>

제723-2조 【낙태해당내용의 전환】 I. 제223-11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부녀가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0주가 지난 경우”

II. 제223-11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공립병원 또는 지역규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립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3-3조 【예외적 차별허용】 제225-3조 제2호 및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건강상태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행위로서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의료 및 공무원에 관한 규정의 범주 내에서 확인된 의학적 부적합을 이유로 고용거부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3. 노동법분야 또는 공무원법분야에서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하여 특정성에 속함이 고용 또는 직업 활동 수행의 결정적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있어 고용분야의 성 차별”<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제226-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사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의학적 목적으로 사람의 유전적 특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가 사법절차의 범주 내에서 실현된 경우
2. 또는 예외적으로 사람의 이익과 신뢰의 존중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제72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제226-2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의학적 목적으로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 식별을 실시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가 사법절차의 범주 내에서 실현된 경우
2. 또는 예외적으로 사람의 이익과 신뢰의 존중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제72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제226-2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군대 또는 소속부대의 작전의 기회에 전사한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의학적 또는 비과학적 목적이거나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수사 또는 예심처분이외에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유전자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국사원령이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유전자지문에 의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4장 제3권의 적용

제72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제32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기념물로 분류, 등록 또는 보호받는 부동산이나 동산, 발굴에 의하거나 우연한 발견에 의한 고고학적 물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 공공사무취급 또는 공익성이 인정된 공적기관에 속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는 문서보관소에 소장되거나 등록된 물품”<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5장 제4권의 적용

제72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제421-1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전쟁무기의 제조에 관한 1870년 9월 4일자 명령을 폐지하는 1871년 6월 19일자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살상용 또는 폭발용 기계나 엔진의 제조 또는 소지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폭발물질의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된 폭발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에 의해 제조된 장치의 불법적 구입, 소지 또는 운반

-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탄약의 소지 및 운반
- 국방법전 제L. 2341-1조 및 제L. 2341-4조에 규정된 범죄“<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제43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자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분야에서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원거리통신망 이용자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사무 취급자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 원거리통신에 의해 발송, 수령 또는 중개되는 통신을 감청 또는 변경을 지시, 실행, 용이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5-3조 【영리행위】 제432-12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3항의 적용에 대하여 시는 지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법 제L. 12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대표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 부시장 또는 시의원은 계약의 체결 또는 승인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법 제L. 122-1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는 비공개로 회합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5-4조 【사후영리행위】 제432-1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3항의 규정은 공공영조물, 국유기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본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혼합경제회사의 임원과 우편 및 원거리통신의 공적서비스의 작용에 개입하는 공공 사업주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5-5조 【중혼금지 등】 제433-20조와 제433-21조는 보통법상의 민간인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5-6조 【유가증권모조】 제443-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조물 또는 우편 및 원거리통신의 공적서비스의 작용에 개입하는 공공 사업주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과 외관이 유사함으로 인하여 동 증서 기타 신용유가증권에 갈음하여 수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인쇄물 또는 서식을 제조, 판매, 운반 또는 배포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제5권의 적용

제726-1조 【장기의 무단적출】 제51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행위의 위험 및 결과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사전의 분명한 허락 없이 살아있는 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기증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의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단 본인의 형제 또는 자매를 위하여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각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정한 요건 하에서 구성된 의료협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③ 전항에 규정된 동의는 제1심 법원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법관에게 제출돼야 한다. 동의는 형식 없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④ 긴급한 경우 동의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행해진다.

⑤ 의료협회는 만일 적출이 적합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출사실에 대해 고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미성년자가 거부할 경우 채취할 수 없다.”

제72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제511-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생명 있는 미성년자 또는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성년자로부터 조직, 세포 또는 그 생성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제511-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의 적출이나 신체조직의 적출이나 이식, 신체조직의 보존이나 가공 또는 세포의 이식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4조 【장기 등의 배분】 제511-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증을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조직, 세포 또는 생성물의 배분 또는 양도에 있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요구하는 위생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5조 【사전감염검사없는 생식세포채취】 제511-1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임신을 위한 의학적 처치를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감염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6조 【위법한 인공수정】 제511-1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자은행에 보존되지 않은 미보존상태의 정자 또는 기증받은 정자의 혼합에 의한 인공수정처치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제511-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의 부부에게 생식세포를 제공할 것을 임의로 승낙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부부의 지시에 따라 생식세포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제511-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받은 비영리의 시설 또는 기관 이외의 제공으로부터 기인한 생식세포의 채취, 처리, 보존 및 양도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제511-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자는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태의 시초된 부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또는 부부 중 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행위가 제511-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와 제공받은 부부가 출생할 자녀에게 충분한 보살핌의 보장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러한 허가를 발할 수 있다.

② 인간배아를 취득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7년의 구금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배아를 받는 부부와 양도하는 부부사이의 익명성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또는 배아를 받는 부부가 제3의 제공자의 도움이 없이는 수태에 대한 의료적 원조가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제72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제511-1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 또는 실험을 하는 행위는 7년의 금고형 및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은 인간배아에 대한 침해가 없으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건 하에서 국사원령에 의해 지정된 조건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서면동의를 한 부부의 인간배아와 관련된 것이라는 요건 하에서 의료적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72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제511-2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출산 전 진단행위를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2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제511-2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인간배아의 착상 전 진단행위에 착수하는 행위는 제511-20조에 규정된 시설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의사에 의해 진단 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특히 중대한 유전적 질환에 걸린 자녀를 출산한 강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착상 전 진단행위에 착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인간배아를 취득·포기하는 부부 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감염의 발견, 방지 및 치료 이외의 목적인 경우
3. 이러한 효과를 위해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제22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제511-2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허가를 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인공임신에 대한 의료적 처치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14조 【불법 임신처치】 제511-2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임신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하는 행위는 이것이 부부의 친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공수정의 수혜를 받는 부부가 임신할 연령에 있거나 결혼하거나 또는 최소 2년 이상의 공동생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사전에 인간배아의 이식 또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생존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생리학적 특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을 치료하거나 아기에게 특별한 위험을 지니는 질병의 전이를 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의학적 지원활동에 착수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2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제511-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적으로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하여 요구되는 전염병의 추적검사의 결과를 얻지 않고 인간배아의 이식에 착수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7장 기타규정

제72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① 자신의 고용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허가없이 장 또는 봉급자가 자신의 직무행위 또는 직무에 의해 용이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 장래성보장, 공여, 선물, 할인 또는 수당의 증여 또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또는 승인하는 행위는 2년의 금고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에 규정된 요구를 수용하거나 그것을 개시하는 행위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에 경우에 법원은 보충형으로 5년 이하의 제131-26조에 규정된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의 금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727-2조 【가격부당조정】 ① 거짓 또는 명예훼손의 정보를 여하한 수단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시세를 혼란케 할 의도로 제의하거나 또는 판매자에 의해 요구된 가격보다 더 유리한 제의를 하거나 기타 기망의 수단으로 재물 또는 서비스, 또는 공채 또는 사채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인위적 가격의 올림 또는 낮춤이 식료품과 관련될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③ 본조의 범죄를 범한 자연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26조에 따른 공민권 및 민사상, 친족법상의 권리의 금지
2. 제131-25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의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제727-3조 【법인의 가액부당조정】 ① 법인은 제121-2조에 규정한 요건 하에서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형사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1-38조에 규정한 방식에 따른 벌금
2. 제131-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에 규정한 형벌

③ 제131-39조의 제2호에 규정한 직업 활동의 금지의 효과는 어느 활동의 수행 중 또는 이를 기화로 죄를 범한 경우 그 활동의 수행에 미친다.

제 3 부

국사원령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1권 총 칙

제1편 형벌법규

<해당 없음, 무(Néant)>

제2편 형사책임

<해당 없음, 무(Néant)>

제3편 형 벌

제1장 형벌의 성질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1관 운전면허정지, 차량의 운전 및 이용금지

제1 운전면허의 정지

제R. 131-1조 【운전면허정지의 선고】 법원은 운전면허의 정지를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하여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운전할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 필요한 경우 운전이 허용되는 차량의 종류 등을 정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2조 【증명서의 교부】 ① 판결의 집행담당자는 선고를 받은 자에게 면허증과 교환으로 법원서기가 작성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판결의 선고법원, 선고일자, 운전면허의 정지 기간
2.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및 주소
3.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사항,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에 부가된 제한사항 및 한정조건
4. 운전할 수 있는 직업 활동, 장소 및 시간, 필요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②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선고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로법에 관한 국사원령 제R. 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증명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법원서기는 위 증명서와 교환으로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2 차량의 운전금지

제R. 131-3조 【차량운전금지의 선고】 법원은 특정차량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로 운전이 금지되는 차량의 종류 및 금지기간을 정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4조 【증명서의 교부】 ① 선고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경우 판결의 집행담당자는 동인에게 면허증과 교환으로 법원서기가 작성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판결의 선고법원, 선고일자, 운전면허의 정지 기간
 2.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및 주소
 3.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사항,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에 부가된 제한사항 및 한정조건
 4.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종류
- ②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선고를 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로법에 관한 국사원령 제R. 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증명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특정 차량의 운전금지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법원서기는 위 증명서와 교환으로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3 차량의 이용금지

제R. 131-5조 【차량이용금지의 집행기관】 특정차량 이용금지판결의 집행은 사법경찰관⁶⁵⁾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리⁶⁶⁾에 의한다.
<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6조 【이용금지차량의 인도】 집행담당자는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7조 【집행 장소】 ① 차량의 이용금지 판결의 집행 장소는 선고를 받은 자의 거주지가 속하여 있는 도내의 장소로서 동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곳으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65)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66) l'agent de police judiciaire

②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담당자에게 이용이 금지된 차량의 등록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집행담당자는 위 집행 장소에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조서에는 판결의 선고법원, 선고일자, 이용금지기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및 주소, 이용금지의 일시 및 장소, 차량의 식별에 관계되는 사항, 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8조 【이용금지차량의 봉인】 이용금지기간 중 차량에 봉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계적인 이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9조 【집행담당자의 직무】 ① 집행담당자는 이용금지 판결의 집행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집행담당자는 집행상황을 모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10조 【차량이용금지의 해제】 형의 종료와 동시에 차량이용금지는 해제되며 동시에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131-10-1조 【재차 차량이용금지 판결의 경우】 이미 이용금지된 차량에 재차 이용금지판결을 내릴 경우와 도로법 제L. 325-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류장에 차량을 두는 경우 실행되는 차량이용금지는 기존형벌기간에 충당된다.<2005.03.30. 신설, 국사원령2005-320>

제R. 131-11조 【차량이용금지의 제3자적 효력】 차량의 이용금지는 법원에 의한 압류 또는 몰수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유죄판결의 선고 전에 차량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4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 이수 의무

제R. 131-11-1조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 ① 제131-35-1조에 규정된 도로안전에 대한 감수성교육은 도로법 제R. 223-5조부터 제R. 223-13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들 규정에 정한 방식에 의해 승인된 자에 의해서 면제된다.

② 법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병합된 명령은 여러 연수교육의 프로그램과 기간을 그 기간이 5일을 넘지 않는 한 정할 수 있다.

③ 유죄판결 받은 자의 연수교육비용은 제3급 위경죄의 벌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2003.07.11. 신설, 국사원령2003-642>

제2관 사회봉사형

제1 법인의 집행권한 부여 및 사회봉사형의 목록작성

A. : 법인의 집행권한부여방식

제R. 131-12조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 ① 형법 제131-8조 제1항에 규정된 권한의 취득을 희망하는 공공서비스를 임무로 하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봉사형이 수행될 장소를 관할하는 형적용판사(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⁶⁷⁾에게 권한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67) 법령용어정비사업팀,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248면 참조.

② 공공서비스를 임무로 하는 사법상의 법인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가사본
2.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요약본
3. 연간 재무관계서류사본과 과년도 대차대조표

③ 단체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인가를 공시하는 관보의 등본 또는 바랭(Bas-Rhin), 오랭(Haut-Rhin) 및 모젤(Moselle)지역에서 인가된 단체의 경우에는 1심법원의 등록서 등본
2. 단체의 정관, 필요한 경우 단체의 규약
3. 단체의 조직 및 소재지가 표시된 시설목록
4. 단체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증명서, 지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상태 및 본부와의 관계
5. 단체의 집행부 및 이사회의 구성원, 지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부대표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직업 및 주소
6. 결산보고를 포함하는 재무서류, 당해 연도예산 및 대차대조표 또는 유동 자산 및 부동산자산과 부채의 보고서<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13조 【형적용판사에 의한 감독】 ① 형적용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역범죄방지위원회⁶⁸⁾의 자문을 거친 뒤 지방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지방법원 판사와 지방검찰청 검사로 구성된 합동위원회⁶⁹⁾는 형적용판사의 보고를 들은 뒤 출석자의 다수결로 집행권한 부여를 결정한다.

68) Le Conseil departemental de prevention

69) l'assemblee generale des magistrats du siege et du parquet du tribunal

- ③ 의무적으로 합동소위원회⁷⁰⁾를 설치한 법원의 경우에는 합동소위원회가 전항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④ 집행권한 부여기간은 3년으로 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14조 【임시권한부여】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형적용판사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제의 또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임시로 그 법인에게 집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시권한부여는 합동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15조 【신청사항의 변경통지】 제R. 131-12조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은 형벌적용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 2007-1388>

제R. 131-16조 【권한부여의 철회】 ① 권한부여결정은 제R. 131-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권한부여결정의 철회를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형적용판사는 합동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제의 또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임시로 권한부여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70) la commission restreinte de l'assemblée generale des magistrats du siege et du parquet

B. : 사회봉사형목록의 작성

제R. 131-17조 【단체 등의 신청】 ① 형법 제R. 131-36조 (1)에 규정된 목록에 사회봉사활동이 등록되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조물, 공공서비스를 임무로 하는 사법상의 법인 및 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이 수행될 지역을 관할하는 형적용판사에 대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영조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격을 수여 받은 대표자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및 직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집행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공공서비스를 임무로 하는 사법상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부여 신청에 본조 제1항의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사법상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한 부여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에는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회봉사활동의 종류, 수행태양, 그 집행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및 자격, 제공 가능한 인력의 정원수를 첨부하여야 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 2007-1388>

제R. 131-18조 【신청 사본의 송부】 형벌적용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문을 듣기 위하여 신청 사본을 지역범죄방지위원회에 송부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19조 【목록등록결정】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들은 뒤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뒤 형벌적용판사는 사회봉사활동의 사회적 유용성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한 사회복귀 또는 직장복귀의 전망을 고려하여 신청된 사회봉사활동의 목록 등록여부를 결정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20조 【목록삭제】 목록에 기재된 사회봉사활동의 삭제는 제R. 131-1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C. : 기타 규정

제R. 131-21조 【통지】 ① 단체에 대한 집행권한의 임시부여 및 사회봉사활동 목록작성에 관한 결정은 지방법원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단체에 대한 집행권한의 부여 및 철회결정을 도지사 및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22조 【보고】 사회봉사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매년 형벌적용판사에게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2 사회봉사형의 집행

A.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제R. 131-23조 【집행절차의 결정】 ① 형벌적용판사는 사회봉사형의 집행절차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봉사형 집행의 수혜기관
2.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봉사활동
3. 사회봉사형 일정

③ 본조를 적용하여 행하여진 결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제R. 131-24조 【사회봉사형의 지정】 형벌적용판사는 관할지의 사회봉사형 목록 중에서 또는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지역의 사회봉사형 목록에 등록된 사회봉사활동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회봉사형으로 지정한다.

제R. 131-25조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과 사회봉사형시간을 합산한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R. 131-26조 【사회봉사형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통근시간 및 휴식 시간은 사회봉사형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R. 131-27조 【결정의 통지】 형벌적용판사는 형선고를 받은 자 및 사회봉사형 집행의 수혜기관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형벌적용판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제R. 131-28조 【의료검사】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
2.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려고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의학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3.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려고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공·사적 시설여부를 불문하고 공중위생법 제L. 10조에서 정하는 예방조치 또는 주의조치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동 조문에서 정하는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는지의 여부

B. : 사회봉사형 집행의 감독

제R. 131-29조 【집행의 감독】 ① 형벌적용판사는 스스로 또는 보호관찰관을 통하여 사회봉사형의 집행을 감독한다.

② 수행되어야 할 사회봉사활동이 다른 지역의 사회봉사형 목록에 등록된 것인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에게 감독권한을 위임한다.

제R. 131-30조 【책임자의 지명·통지】 사회봉사활동의 수혜기관은 형벌적용판사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봉사활동의 전문적 지휘·감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봉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명된 책임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제R. 131-31조 【사회봉사활동의 감독】 형벌적용판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지명된 책임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으로 사회봉사형 선고받은 자를 방문한다.

제R. 131-32조 【각종상황의 통지】 지명된 책임자는 형벌적용판사 또는 보호관찰관에 대하여 사회봉사형 선고받은 자의 근로의무 위반, 봉사활동 중 동인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해 또는 동인이 입게 된 재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R. 131-33조 【사회봉사활동의 중단】 사회봉사형 선고받은 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거나 사회봉사형 선고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명된 책임자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형벌적용판사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R. 131-34조 【사회봉사활동의 종료】 사회봉사활동 집행의 수혜기관은 형벌적용판사나 보호관찰관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한다.

제3관 시민성연수의 형벌

제1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기간

제R. 131-35조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취지】 ① 형법 제131-5-1조에 규정한 시민성연수와 범죄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자 법률명령 제20-4-1조에 의해 13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에 적용될 시민성연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관용과 인간존엄존중의 공화국의 가치와 사회생활에 내포된 의무와 아울러 민·형사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수는 동시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사회복귀의 원화를 도모한다. ② 이 연수가 제132-76조에 규정된 가중된 상황하의 범죄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련된 경우 관계인에게는 반인류범죄의 존재,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행해진 반인류범죄의 존재를 부각시킨다.<2004.09.27. 개정, 국사원령2004-1021>

제R. 131-36조 【시민성연수의 기간】 ① 시민성연수의 기간은 형의 선고를 받은 성년자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의무를 고려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는 교육적 의무와 가정형편을 고려하는 법원에 의해 정해진다. 연수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일 연수기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연수기간은 연수자의 연령과 성격에 따라 적용되어야한다.<2004.09.27. 개정, 국사원령 2004-1021>

제2 시민성연수의 조직

- 제R. 131-37조 【시민성연수의 통제】** ① 시민성연수는 형선고 받은 자의 인격에 적합한 결합된, 연속 또는 불연속된 교육구성단위로 구성되어있다.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구성단위는 연령에 따라 적응되어야한다.
- ② 이들 시민성연수과정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상소법원의 관할 하에서 열린다.
- ③ 연수는 형집행장소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통제 하에 실행된다. 연수는 사회복귀시설 또는 보호관찰관의 통제 하에 실행될 수 있다.
- ④ 시민성연수의 내용은 연수의 실행을 통제하는 임무를 띤 기관 또는 자의 세심한 계획의 대상을 형성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 제R. 131-38조 【시민성연수를 위한 계약】** ① 시민성연수과정들은 공익 특히 법적 기회의 공평을 임무로 하는 영토내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필요한 경우 사법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다.
- ② 연수의 어떠한 과정이 본조 제1항에 열거한 자와 공동으로 추진된 경우 이 자와 국가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간에 공적계약이 체결된다. 이 계약에는 연수과정의 내용, 기간, 위임된 특수목적, 계약체결 관련 비용 및 연수를 담당하는 사인 또는 기관의 부담금을 명시한다. <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3 시민성연수의 전개 및 종료

- 제R. 131-39조 【시민성연수의 목적과 의무고지】** 연수의 실행에 앞서서 연수를 추진하는 자 또는 기관은 시민성연수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맞아

연수의 목적을 설명한다. 아울러 연수와 관련한 의무 즉 형법 제434-41조에 기인한 의무나 동법 제131-9조의 적용으로 법원에 의해 정해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설명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R. 131-40조 【시민성연수의 증명】 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시민성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발급되면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를 연수의 실행을 통제하는 자 또는 기관에 보내야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4 미성년자에 적용되는 특칙

제R. 131-41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요건】 시민성연수가 미성년자에게 관련될 때에는 청소년사법보호의 공공부문서비스의 통제 하에 실행된다. 연수계획은 이 서비스의 대표관리자에 의해 청소년사법보호지역 책임자에게 전해진다. 이 계획의 실행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동 책임자는 소년범죄담당판사와 연수가 통상적으로 진행될 지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요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R. 131-42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관할기관간의 통지】 ① 형법 제R. 131-38조에 규정한 계약은 당해 조문 제1항에 언급된 자들과 청소년사법보호의 공공부문서비스기관 간에 전해진다.

② 청소년사법보호지역책임자는 소년범죄담당판사와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시민성연수를 실행하는 서비스기관과 동일성을 지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R. 131-43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통제】 ① 형법 제R. 131-39조에서 규정한 설명하는 형식은 부모, 후견인, 미성년자를 맡아온 기관의 장 또는 개인, 정식으로 호출된 자의 면전에서 완수된다.

② 연수는 연수실행의 임무가 주어진 교육담당자의 상시적인 통제 하에서 행해진다. 연수의 집행이 특히 미성년자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연수시설의 장은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그는 지체 없이 소년범죄담당판사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R. 131-44조 【미성년자대상 시민성연수의 평가】 ① 연수종료 시에 연수 조치를 담당한 시설은 연수상황의 평가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본인, 부모, 후견인, 미성년자를 맡아온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을 소집한다.

② 연수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연수시설의 종합보고서가 소년범죄담당판사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된다.<2004.09.27. 신설, 국사원령2004-1021>

제4관 징벌배상형

제R. 131-45조 【징벌배상형의 통제】 ① 선고된 형이 집행될 때부터 징벌 배상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을 고지해야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통지를 늦어도 피해자에게 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하는 정해진 기한 전까지 받는다. 만약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분할된 경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한 배상증명이 매 배상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② 배상이 본질적으로 집행되어 원상회복하려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검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징벌배상형의 집행을 수월하게하기위해 또는 집행을 확인하기위해 피해자와 함께 유죄선고인을 호출할 수 있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5관 약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형

제R. 131-46조 【약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의 목적】 제131-35-1조에 규정한 약물남용의 위험에 관한 감수성연수는 유죄선고인에게 그러한 약물의 사용이 사회와 인간건강에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47조 【시민성연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R. 131-36조부터 제R. 131-44조까지의 규정은 연수과정이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규정된 마약매매와 마약중독자의 척결을 위한 단체와 같이 약물사용자를 돕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사인과 공동으로 계획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② 만약 연수비용이 유죄선고인의 부담이 될 경우 그 비용은 제3급 위경죄의 벌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2007.09.26. 신설, 국사원령2007-1388>

제6관 친권자의 책임성연수형

제R. 131-48조 【친권자의 책임성연수의 목적】 제131-35-1조에 규정한 친권자의 책임성연수는 유죄선고인에게 자녀교육을 포함하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09.26. 신설,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49조 【시민성연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R. 131-36조부터 제R. 131-44조까지의 규정은 연수과정의 사회활동과 가족법전⁷¹⁾ 제L. 141-1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동반을 실행하는 공·사법인과 공동으로 계획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동법 제L. 222-4-1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책임성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만약 연수비용이 유죄선고인의 부담이 될 경우 그 비용은 제3급 위경죄의 벌금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2007.09.26. 신설, 국사원령2007-1388>

제7관 동물의 몰수형

제R. 131-50조 【법인에 대한 동물몰수형】 동물이 동물보호협회 또는 법인의 명칭이 적시되지 않은 재단에 인계되는 제131-21-1조에 규정한 동물의 몰수가 법원에 의해 선고된 때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적용이 결정된 법인에 대해 이 형벌을 집행한다.

제R. 131-51조 【동물소유주가 아닌 자의 동물인치비용부담】 몰수된 동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9-1조의 규정의 적용이 동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유죄선고인의 동물인치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선고한다.<2007.09.26. 신설,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52조 【사법감시업무 수행자의 임명】 제131-46조에 의해 규정된 법원에 의한 사법감시업무 수행자는 상법 제L. 811-2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규정한 목록에서 선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

71) 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법원은 전술한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특수한 경험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이유를 명시한 결정에 의해서 사법감시업무 수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2007.09.26. 신설, 국사원령2007-1388>

제R. 131-53조 【법인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 전술한 또는 판결 법원에 출석하게 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있을 경우 검사는 등기우편으로 적어도 공판 10일 전에 공판일과 공판대상을 통지한다.

②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봉급생활자의 대표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가 기업위원회의 서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기업중앙위원회의 서기관에게 전해진다. 그러한 위원회가 없을 경우는 소관업무가 위임된 자에게 전해진다.<2007.09.26. 신설, 국사원령 2007-1388>

제2장 형벌제도

제1절 총 칙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절 형벌개별화의 유형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제R. 132-45조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연수에 대한 확인】 제131-35-1조 제2항에 규정한 도로안전에 관한 감수성연수의 증명서는 형벌적용판사

또는 이러한 의무의 진행을 담당한 보호관찰 및 사회복귀교도시설에 전해진다.<2003.07.11. 신설, 국사원령2003-642>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제2절 특별사면

제R. 133-1조 【특별사면의 청원】 특별사면의 청원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의해 심사된다.<1995.02.07. 신설, 국사원령95-152>

제R. 133-2조 【특별사면령의 공포】 특별사면령의 공포에는 대통령의 서명 및 수상과 법무부장관의 부서, 필요한 경우 사면의 청원을 조사한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1995.02.07. 신설, 국사원령95-152>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반인류범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제1장 생명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없음, 무(Néant)>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제1절 사생활 침해

제R. 226-1조 【장치의 지정】 ① 형법 제226-3조에서 정하는 장치의 목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개별행정결정에 대한 행정권의 분산에 관한 1997년 1월 15일자 국사원령 제97-34호 제1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제R. 226-3조와 제R. 226-7조에서 규정한 허가는 총리에 의해 행해진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2조 【장치지정 자문위원회】 ① 총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소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뒤 전조의 총리령을 제정한다.

1. 국가방위총괄서기관 또는 대표(위원장)
 2. 법무부 대표 1명
 3. 내무부 대표 1명
 4. 국방부 대표 1명
 5. 관세청 대표 1명
 6. 통상산업부 대표 1명
 7. 정보통신부 대표 1명
 8. 국가안전감청통제위원회⁷²⁾ 대표 1명
 9. 국가주파국⁷³⁾ 대표 1명
 10. 해당분야 식견을 보유한 자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자 2명
- ② 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R. 226-1조와 제R. 226-10조의 적용을 취한 총리령계획에

72) la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interceptions de sécurité

73) l'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

대한 자문의견 제출을 위하여 소집된다. 위원회는 총리령의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④ 위원회는 동시에 제R. 226-3조와 제R. 226-7조의 적용을 위해 제출된 허가요구에 대해 자문한다.

⑤ 위원회의 서기장은 국가방위총괄서기관이 맡는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3조 【장치판매 등의 허가】 제R. 226-1조의 목록에 기재된 장치의 제조, 수입, 전시, 공급, 임대 또는 판매에는 제R. 226-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총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4조 【허가신청】 허가신청은 국가방위총괄서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허가신청은 장치의 종류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상호 및 본점 주소
2. 제R. 226-3조의 행위 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세부사항
3.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장치의 목적 및 기술적인 특징
4. 장치의 제조 기타 제R. 226-3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허가신청에 부수된 지시사항의 준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5조 【허가기간】 ① 제R. 226-3조의 허가기간은 최고 6년으로 한다.

②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대상 행위의 수행조건 및 당해 장치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제R. 226-6조 【형식 등의 표시】 제조, 수입, 수출, 공급, 임대 또는 판매 되는 장치는 각각 허가신청을 위한 표지와 개별적 식별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7조 【장치취득 등의 허가】 제R. 226-1조의 목록에 기재된 장치의 취득 또는 소지에는 제R. 226-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총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8조 【허가신청】 허가신청은 국가방위총괄서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허가신청은 장치의 종류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자의 상호 및 본점 주소
2. 장치의 종류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치의 수량
3. 예견된 사용처
4. 허가신청에 부수된 지시사항의 준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9조 【허가의 교부】 ① 제R. 226-7조의 허가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한다.

- ② 허가를 함에 있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청을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R. 226-10조 【판매 등의 제한】 ① 제R. 226-3조의 허가를 받은 자라도 제R. 226-3조 또는 제R. 226-7조의 허가를 취득한 자 이외의 자에게는

제R. 226-1조에서 정하는 목록에 기재된 장치를 제출, 양도,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② 제R. 226-3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장치의 사용 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동 기록절차는 제R. 226-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총리령으로 정한다.<1997.07.10. 개정, 국사원령97-757>

제R. 226-11조 【허가의 취소】 ① 제R. 226-3조 및 제R. 226-7조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허가가 발부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본질의 규정 또는 허가에 수반된 특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이 된 활동을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취소를 함에 있어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를 받은 자가 제226-1조, 제226-15조 또는 제4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허가는 당연 철회된다.

제R. 226-12조 【허가신청의 기한】 ① 제R. 226-1조의 목록에 기재된 장치를 제조, 수입, 소지, 수출, 공급, 임대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본질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R.226-1조에서 정하는 총리령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들 장치를 파기하거나 제R. 226-3조 또는 제R. 226-7조의 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허가기한을 도과한 경우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해당 없음, 무(Néant)>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제1절 장물취급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제1관 동산등록부 기장의무

제R. 321-1조 【기장의무자의 신고】 ① 제32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산에 대한 등록부 기장의무를 지는 자는 모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관할경찰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군관할경찰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파리의 경우에는 파리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1969년 1월 3일자 법률 제69-3호 제7조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영업소 소재지로 본다.

③ 본조 제1항의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의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국적, 영업지역, 기업의 정관 및 상업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접수필증은 경찰 및 군경찰, 세무관서, 관세관서, 경쟁·소비 및 사기 거래처벌기관⁷⁴⁾의 요구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제R. 321-2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R. 321-1조의 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변경전후의 소재지를 각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도사의 시장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 영업소의 이전 역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접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R. 321-3조 【기장사항】 ① 제321-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재의무 사항에는 판매 또는 교환의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한 동산의 묘사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을 판매 또는 교환에 붙이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맡긴 자의

74) des Servic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성명, 자격 및 주소, 제시된 신분증명서의 성질, 번호 및 발행연월일, 신분증명서를 작성한 관서

2.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을 판매 또는 교환에 붙이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맡긴 법인 관계자의 성명, 자격 및 주소, 동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표시

② 각 동산의 묘사에는 외견상의 특징, 물품에 부착된 것으로서 식별에 유용하게 쓰이는 명칭, 서명, 이니셜, 숫자, 일련번호, 문장 기타 모든 성질의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당해 물품의 단가가 법무부, 내무부 및 통상산업부의 공동 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가액을 넘지 아니하는 때와 당해 물품이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R. 321-4조 【물품에 부여하는 일련번호】 ① 판매에 붙이거나 또는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R. 321-3조 제3항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의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물품마다 또는 물품의 묶음마다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R. 321-5조 【등록부의 기재사항】 등록부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 또는 물품의 묶음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교환, 무상취득 또는 보관의 경우에는 추정평가액
2. 역사적 유적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자 법률에 의거하여, 동산의 전매를 담당하는 자에게 통지한 물품의 분류나 등록 지수

- 제R. 321-6조 【등록부의 인증 · 보존】** ① 등록부는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여백이 있거나 말소 및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등록부는 공개된 영업소 소재지의 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리번호와 함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R. 321-1조의 기장의무를 지는 자가 공개된 영업소를 여러 개 설치한 때에는 영업소마다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④ 공개된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중 1인으로부터 정리번호와 함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등록부는 폐쇄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R. 321-7조 【법인의 경우의 등록부기장의무자】 제R. 321-1조의 기장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경영자가 본관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제R. 321-8조 【동산등록부의 서식】 동산등록부의 서식은 내무부 및 통상 산업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2관 기타의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한 등록부 기장의무규정

제R. 321-9조 【기장의무】 제321-7조 제2항의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동산에 대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상인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중고 동산을 판매 또는 교환에 붙이는 자의 성명, 자격 및 주소, 제시된 신분증명서의 성질, 번호 및 발행연월일, 신분증명서를 작성한 관서
2.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을 판매 또는 교환에 붙인 법인 관계자의 성명, 자격 및 주소, 동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표시

제R. 321-10조 【등록부의 인증】 ① 등록부는 당해 행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리번호와 함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 군경찰, 세무관서, 관세관서, 경쟁·소비 및 사기거래처벌기관은 행사기간 중 등록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등록부는 행사기간이 종료된 뒤 1주일 이내에 행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도 또는 군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R. 321-11조 【법인의 경우의 등록부기장의무자】 당해 행사를 조직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경영자가 본관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제R. 321-12조 【동산등록부의 서식】 동산등록부의 서식은 내무부 및 통상산업부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해당 없음, 무(Néant)>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제1절 국방을 해하는 죄

제R. 413-1조 【보호구역】 제413-7조에 규정된 폐쇄적인 장소 및 토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본절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R. 413-2조 【보호의 필요성결정】 ① 보호의 필요성은 비밀성이 있다고 지정하는 설비, 물자의 관리 또는 조사, 연구 또는 제조를 담당하는 장관이 결정한다.

② 관계되는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을 관할하는 행정당국은 이 보호의 필요성을 결정하기위해 위임된 명령을 수리할 수 있다.<2001.08.24. 개정, 국사원령2001-744>

제R. 413-3조 【보호구역의 설치 및 범위】 ①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주 업무가 보호의 필요를 결정하는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설치 및 범위는 그가 공포하는 부령에 의한다.

②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주 업무가 다른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설치 및 범위는 그 장관과 보호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장관이 공동으로 공포하는 부령에 의한다.

③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을 관할하는 행정당국은 본조에 의해 예견되는 부령을 취하기 위해 위임된 명령을 수리할 수 있다.<2001.08.24. 개정, 국사원령2001-744>

제R. 413-4조 【보호구역설치 등의 통지】 ①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부령은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장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장은 보호의 필요를 결정한 행정당국의 감독 아래 보호구역의 범위 및 대상이 되는 금지조치를 명시하기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부령의 등본은 공지 및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처분의 적용을 위하여 내무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2001.08.24. 개정, 국사원령2001-744>

제R. 413-5조 【보호구역의 출입】 ①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는 보호의 필요를 결정한 장관의 지시와 감독 아래 해당 기관, 시설 또는 기업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연구 또는 제조에 따르는 국방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는 보호의 필요를 결정한 장관이 부여한다.

③ 허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허가는 또한 언제든지 동일한 양식의 서면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제R. 413-6조 【국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413-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비밀의 보호에 관한 1998년 7월 17일자 국사원령 제98-608호에 의해 정해진 국방에 관계되는 정보, 제작기법, 물건,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의 보호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관할 행정당국과 아울러 정보, 제작기법, 물건,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 등의 수준이 국방의 비밀의 성격을 나타내어야 한다.<1998.07.17. 개정, 국사원령98-608>

제4장 특 칙

<해당 없음, 무(Néant)>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제1절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절 불온다중참가

제R. 431-1조 【최고】 ① 제43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불온다중을 공권력으로 해산시키기 전에 최고를 할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성기를 통해 「법을 준수하십시오. 해산하기 바랍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기관의 존재를 알린다.
 2. 확성기를 통해 「첫 번째로 경고합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제1회 최고를 한다.
 3. 확성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마지막으로 제2회 최고를 한다.
- ② 확성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경우 적색의 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최고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온다중을 실력으로 해산시키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최고 또는 이것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를 보완하는 연막탄의 발사는 반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R. 431-2조 【직무상표식의 휴대】 제431-3조 제2항의 기관은 최고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표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도지사 또는 부지사 : 삼색휘장
2. 시장 또는 부시장 : 삼색휘장
3. 국가 사법경찰관 : 삼색휘장
4. 군경찰 사법경찰관 : 삼색완장

제3절 불법시위

<해당 없음, 무(Néant)>

제4절 무기단체에 관한 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3장 사인에 의한 공무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해당 없음, 무(Néant)>

제5편 범죄결사가담

<해당 없음, 무(Néant)>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제R. 511-1조 【중대한 동물학대】 제511-2조에 규정한 동물에 대한 실험 또는 과학적이거나 실험적 연구에 관한 규정은 제521-2조 및 농업법 제L. 214-3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1987년 10월 19일자 국사원령 제87-848호에 따른다.<2000.09.18. 개정, 법률명령2000-914>

제6권 위경죄

제1편 총 칙

제R. 610-1조 【위경죄의 구성요건 및 단계】 위경죄 및 그 단계는 국사원령으로 정한다.

제R. 610-2조 【위경죄의 공범의 처벌】 ① 제121-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국사원령이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한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요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② 제12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경죄의 공범은 제121-6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2001.09.20. 개정, 국사원령2001-883>

제R. 610-3조 【위경죄 벌금의 액】 위경죄의 5개 단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액은 형법 제131-13조에 의한다.

제R. 610-4조 【제5급 위경죄의 벌금】 손해, 배상 또는 범죄 목적물의 가액이나 금액에 비례하는 벌금에 처해지는 위경죄는 제5급 위경죄로 하되, 그 벌금액은 형법 제131-13조 제5호에 규정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R. 610-5조 【경찰명령 등의 위반】 치안에 관한 경찰명령 및 규칙에 의한 금지나 의무위반은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제1절 공연성 없는 명예훼손 및 모욕

제R. 621-1조 【공연성 없는 명예훼손】 ①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1급 위경죄⁷⁵⁾(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에

75) 법령용어정비사업팀,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113면 참조.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⁷⁶⁾

②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진실성은 보도의 자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

제R. 621-2조 【비공연한 모욕】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욕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⁷⁷⁾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제1절 경미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제R. 622-1조 【과실경상해】 ① 제R. 625-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121-3조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동능력의 완전상실을 초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몰수

76)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는 1881년 7월 29일자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77) 공연한 모욕죄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절 위험한 동물의 방치

제R. 622-2조 【위험한 동물의 방치】 ① 사람에게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방치하는 때에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사람에게 대한 제3급 위경죄

제1절 폭행의 협박

제R. 623-1조 【폭행의 협박】 제222-17조 및 제222-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폭행하겠다고 반복하거나 그 취지를 문서나 영상 기타의 수단으로 표현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2절 소음의 발생

제R. 623-2조 【소음】 ① 부당하게 또는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평온을 해한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물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그 정을 알면서 조력을 제공하여 본조에 규정된 위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전2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절 위험한 동물 이용행위

- 제R. 623-3조 【위험한 동물에 대한 선동】** ① 사람에게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로 하여금 통행인에 대하여 공격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공격행위를 말리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거래

- 제R. 623-4조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거래】** ① 제R. 226-3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R. 226-10조 제2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제1절 경미한 폭행

- 제R. 624-1조 【경미한 폭행】** ① 제222-13조 및 제222-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 불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고의에 의한 폭행은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에서 정하는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3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③ 그 정을 알면서 조력을 제공하여 본조에 규정된 위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전2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절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제R. 624-2조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의 유포】 ①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유포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사전요청 없이 타인에게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주소지로 송부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④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3절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및 모욕

제R. 624-3조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5.03.25. 개정, 국사원령2005-284>

제R. 624-4조 【비공연한 차별적 모욕】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모욕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차별적 모욕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2005.03.25. 개정, 국사원령2005-284>

제R. 624-5조 【보충형】 제R. 624-3조 및 제R. 624-4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물수
3.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R. 624-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제R. 624-3조 및 제R. 624-4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4절 취학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무위반

제R. 624-7조 【취학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할 책임】 ① 교육의 의무에 복종하는 취학아동의 부모 둘 중 누구든 또는 자의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계속적 방식으로 친권에 갈음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시설이 장학관에 의해 내려진 경고 후에 교육법 제R. 131-7조에 규정된 취학절차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적법한 동기 또는 유효한 이유를 알리지 않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조력을 제공하여 본조에 규정된 위경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2006.05.23. 개정, 국사원령2006-583>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제1절 폭 행

- 제R. 625-1조 【경상해】** ① 제222-13조 및 제222-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주 이하의 노동불능상태를 야기하는 고의에 의한 폭행은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3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6.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 ③ 그 정을 알면서 조력을 제공하여 본조에 규정된 위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전2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 ④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절 과실에 의한 신체의 완전성 침해

제R. 625-2조 【안전규칙위반에 의한 경상해】 제222-20조와 제222-20-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에게 대하여 3월 이하의 노동불능의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제121-3조에 규정한 구별을 고려하여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2003.07.11. 개정, 국사원령2003-642>

제R. 625-3조 【중대한 안전규칙위반에 의한 상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도적 위반에 의해 법령에 규정한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동불능의 상태를 초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2001.09.20. 개정, 국사원령2001-883>

제R. 625-4조 【보충형】 제R. 625-2조 및 제R. 625-3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3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몰수
6.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제R. 625-5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제R. 625-2조 및 제R. 625-3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몰수

제R. 625-6조 【누범】 제R. 625-2조 및 제R. 625-3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절 차별행위 등의 교사

제R. 625-7조 【비공연 차별교사】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교사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교사하거나 제225-2조와 제432-7조에 규정한 차별을 비공연하게 교사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조의 위경죄들로 유죄가 인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3.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4.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 ④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들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본조에 규정한 위경죄들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2005.03.25. 개정, 국사원령2005-284>

제4절 유객행위

제R. 625-8조 <2004년 9월 27일자 법률 2004-1021호에 의거 폐지>

제5절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거래

제R. 625-9조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 있는 물품판매 등】 ① 제R. 226-3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R. 226-10조의 규정에 반하여 제R. 226-1조의 목록에 등록된 장치를 제공, 양도, 임대 또는 판매를 하는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단일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 제R. 631-1조 【경미한 손괴 등의 협박】** ① 제322-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해를 초래하는데 불과한 손괴, 훼손 또는 효용상실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거나 그 취지를 문서나 영상 기타의 수단으로 표현하여 협박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단일절 오물 등의 방치

- 제R. 632-1조 【오물 등의 방치】** ① 제R. 635-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오물 등의 하적장소로 지정된 곳 이외의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오물, 쓰레기, 건강에 해로운 액체 등 공공도로에 소변을 보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 여하한 성질의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자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장소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거나 동인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오물, 쓰레기 또는 여하한 성질의 물건을 수거하기위한 제거 시에 관계당국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히 오물수거의 날짜와 시간을 어긴 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제1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제R. 633-1조 【신고접수필증의 부제시】 제R. 321-1조의 의무를 지는 자가 권한 있는 관서로부터 요구를 받고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신고접수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3-2조 【일련번호의 미부여】 제R. 321-1조의 의무를 지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품 또는 물품의 묶음에 제R. 321-4조의 규정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3-3조 【동산등록부의 미확인】 제R. 321-1조의 의무를 지는 자가 제R. 321-3조의 동산등록부에 제R. 321-6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3-4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제R. 633-1조, 제R. 633-2조 및 제R. 633-3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을 있음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신고한다.

제2절 기타의 동산거래 규제위반

제R. 633-5조 【동산거래등록부의 미확인】 ① 321-7조 제2항의 의무를 지는

자가 제R. 321-9조의 동산등록부에 제R. 321-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제1절 생명위해의 우려 없는 파괴 등의 협박

제R. 634-1조 【인명위해의 우려가 없는 손괴 등의 협박】 ① 제322-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명위해의 우려가 없는 손괴, 훼손 또는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반복하거나 그 취지를 문서나 영상 기타의 수단으로 표현하여 협박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제1절 경미한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제R. 635-1조 【경미한 손괴 등】 ①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는 그 결과 경미한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불과한 경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는 직업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금지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4. 3년 이하의 기간 중 신규면허 발급신청 금지를 수반하는 수렵면허 취소
5.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6.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③ 그 정을 알면서 조력을 제공하여 본조에 규정된 위경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전2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④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⑥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절 강매형식의 통신판매

- 제R. 635-2조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통신판매】** ① 사전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가액의 불입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다거나 또는 발송인의 부담으로 반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신문을 붙여 물건을 사람에게 송부하는 자는 물품을 수취한 자가 반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3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또는 지급 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절 동산거래 규제위반

제R. 635-3조 【미신고】 제R. 321-1조의 의무를 지는 자가 동조 및 제R. 321-2조

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5-4조 【미성년자로부터의 동산취득】 제R. 321-1조의 의무를 지는 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부, 모 또는 후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5-5조 【등록부 미제출】 제321-7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제R. 321-10조의 요건에 따라 제R. 321-9조의 동산등록부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35-6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전3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한다.

제R. 635-7조 【누범】 제R. 635-3조, 제R. 635-4조 및 제R. 635-5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절 오물 등의 방치

제R. 635-8조 【오물 등의 방치】 ① 권한 있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오물 등의 하적장소로 지정된 곳 이외의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차량의 잔해, 오물, 쓰레기, 건강에 해로운 액체, 기타 여하한 성질의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장소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거나 동인의 허가를 얻은 행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⑤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2007.09.26. 개정, 국사원령2007-1388>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단일절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방치

제R. 641-1조 【무기 등의 방치】 ① 공공장소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 무기 또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드러내거나 중죄나 경죄의 실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기타 모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제1절 사법·행정기관의 요청 불응

제R. 642-1조 【사법·행정기관의 요청불응】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종사하는 사법관이나 사법경찰기관이 발하는 요청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 저해 기타 사람이 위험에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에 요청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2절 통화에 대한 침해

제R. 642-2조 【유통목적 비인가통화표시 취득】 ①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는 화폐 또는 은행권을 대신할 목적으로 인가되지 아니한 통화 표시를 지니는 모든 물건을 취득,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제131-21조 및 제131-4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의 통화표시를 지니는 물건은 몰수하여야 한다.

제R. 642-3조 【통화유통의 수취거부】 ① 표시된 가액에 따라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는 화폐나 은행권을 수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한다.

제R. 642-4조 【통화의 선전이용의 금지】 ①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는 화폐나 은행권 또는 권한 있는 외국기관이나 국제기관이 발행하는 화폐나 은행권을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제2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제131-21조 및 제131-4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의 통화표시를 지니는 물건은 몰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42-1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제1절 공권력이 전용하는 표장의 남용

- 제R. 643-1조 【유사자격표시사용】** ① 제433-1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권력이 규제하는 복장, 제복, 표장 또는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복장이나 제복을 공연히 착용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가진 표장이나 문서를 사용하는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2절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제R. 643-2조 【법령에 위배되는 도량형 사용】 ①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률 및 명령에 규정된 것과 다른 도량형을 사용하는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제1절 무허가 군사시설 접근

제R. 644-1조 【군용지 등에서의 출입】 ① 제41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군 당국에 소속되거나 그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 건축물, 동력기관 또는 장비에 출입, 체류하거나 또는 그 주위를 배회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토지, 건축물, 동력기관 또는 장비가 군 당국에 소속되거나 그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어떠한 표지도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 특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도로교통 방해

- 제R. 644-2조 【도로교통의 방해】** ① 필요 없이 통행의 자유 또는 안전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물질이나 물건을 도로상에 두거나 방치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제3절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 규제위반

- 제R. 644-3조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활동의 규제위반】** ① 공공장소에 관한 치안규칙에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상품을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제1절 반인류행위의 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부착

제R. 645-1조 【반인류적 집단의 제복 등 착용】 ① 1945년 8월 8일자 런던 협정부속 국제군사법원규정 제9조에 따라 범죄기관으로 선언된 기관의 구성원 또는 형법 제211-1조 내지 제211-3조에 규정되거나 1964년 12월 26일자 법률 제64-1326호에 규정된 반인류행위에 대한 중죄에 대하여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자가 착용하거나 전시하였던 것들을 연상시키는 제복, 표장 또는 표식을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수반하는 영화, 연극 또는 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허가를 요하는 무기에 대한 3년 이하의 보유 또는 휴대 금지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무기 몰수
3.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4.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형법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절 군사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진촬영 등

- 제R. 645-2조 【군사금지구역에서의 기록 등】** ① 군사금지구역으로 특별히 표시가 된 지역에서 허가 없이 묘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영상, 음성 기타 모든 성질의 신호를 기록하는 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절 사람의 민사신분에 대한 침해행위

- 제R. 645-3조 【신분증서에 관한 의무위반】** ① 호적공무원 또는 1962년 8월 3일자 법률 제62-921호 제6조에 의하여 동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1. 호적부의 공개 및 기록보존에 관한 규칙 위반행위
 2. 혼인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부, 모 기타의 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민법 제228조에 규정된 기간 전에 혼인의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부터 혼인증서를 접수하는 행위
- ② 호적부가 무효라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본조의 위경죄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R. 645-4조 【출생신고에 관한 의무위반】 출산에 입회한 자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동법 제56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45-5조 【영아의 방치】 영아를 발견한 자가 민법 제58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면서 호적공무원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제R. 645-6조 【매장규정위반】 ① 매장허가를 요하는 경우 관련공공사무 종사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매장기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거나 또는 매장시키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한다.

④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와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절 재판상 증거서류 부정취득

제R. 645-7조 【재판관련 서류의 부정취득】 ① 재판상의 분쟁과 관련하여 증서, 서류 또는 진술서를 제출한 자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거하는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한다.
- ④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형법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5절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 제R. 645-8조 【부실기재 공증명문서 행사】** ① 행정관청이 권리,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거나 허가를 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이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④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5의 2절 조정위원 칭호 또는 지위의 참칭

- 제R. 645-8-1조 【권한 없는 조정행사】** ①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이 철회된 이후에 검사의 위임을 받은 조정위원⁷⁸⁾에게 할당된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78) les délégués ou médiateur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②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2004.09.27. 개정, 국사원령2004-1021>

제6절 위조·변조된 통화표시물의 인도거부

제R. 645-9조 【위조·변조통화의 인도거부】 ① 프랑스에서 법정통용력을 가지는 화폐 또는 은행권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물을 취득한 자가 조폐법⁷⁹⁾ 제38-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프랑스 국립은행 또는 조폐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제131-21조 및 제131-4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의 통화표시를 지니는 물건은 몰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42-1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⑥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2007.02.27. 개정, 국사원령2007-259>

79) le Code des instruments monétaires et des médailles

제7절 사용된 우표 또는 인지 등의 위조·변조

제R. 645-10조 【사용된 우표 또는 인지 등의 변조】 ① 소인을 소거하여 재이용할 목적으로 우표 또는 재무관청이 발행하는 인지를 변조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⑤ 제131-21조 및 제131-4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우표 또는 인지는 몰수하여야 한다.

⑥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R. 645-11조 【효력을 상실된 우표 등의 위·변조】 ① 효력이 상실된 프랑스나 외국의 우표 또는 우편에 관한 신용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위조 또는 변조된 우표 또는 신용유가증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형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를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

- ③ 제121-2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본조의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제131-41조에 규정된 벌금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⑤ 제131-21조 및 제131-4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우표 또는 우편에 관한 유가증권은 몰수하여야 한다.
- ⑥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 및 제132-1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8절 학교시설침입

- 제R. 645-12조 【학교시설침입】** ①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립의 학교시설 구내로 침입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위경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보충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 2. 20시간 내지 120시간의 사회봉사
 - ③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5편 기타의 위경죄

제1장 제1급 위경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2장 제2급 위경죄

<해당 없음, 무(Néant)>

제3장 제3급 위경죄

단일절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제R. 653-1조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동물살상】 ① 과실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제4급 위경죄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제R. 654-1조 【동물학대】 ① 제51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 없이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③ 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계에 대하여도 같다.

제5장 제5급 위경죄

단일절 동물에 대한 학대

제R. 655-1조 【동물학살】 ① 공연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 없이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

③ 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계에 대하여도 같다.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제1장 총 칙

제R. 711-1조 【누벨칼레도니 등의 적용】 ① 본편의 적용조항의 유보 하에 본 법전 중에서 제R. 321-1조부터 제R. 321-12조까지, 제R. 633-1조부터 제R. 633-5조까지, 제R. 635-3조부터 제R. 635-7조까지와 제R. 645-6조를 제외한 본 형법전의 제2부(국사원령)의 제1권부터 제6권까지의 내용은 누벨칼레도니(la Nouvelle-Calédonie) 및 폴리네시아 프랑세즈(la Polynésie française)와 왈리퓌튀나섬(îles Wallis-et-Futuna)의 영토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1-2조 【기타】 본 법전의 제2부(국사원령)의 제1권부터 제5권은 프랑스 남극령(les Terres australes, les antarctiques françaises)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1-3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① 제R. 711-1조에 규정한 영토에서의 본 법전의 적용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즉 “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도”는 “영토”로, “도지사” 및 “부지사”는 “영토상 정부대표”로, “프랑스국립은행”⁸⁰⁾은 “해외도 화폐

80) Banque de France

발행기관”⁸¹⁾으로 한다.

② 또한 이 영토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의 참조는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대상을 포함하는 규정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체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2장 제1권의 적용

제R. 712-1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제R. 13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신고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도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법원에 의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2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제R. 13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신고를 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도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법원이 운전금지를 선고한 자동차의 종류를 제외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3조 【해당 관보명의 수정】 제R. 131-12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관보 또는 해외도 단체신고발행관보의 사본”<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81) Institut d'émission d'outre-mer

제R. 712-4조 【형벌적용판사에 대한 자문】 제R. 131-13조 제1항 둘째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범죄방지시설⁸²⁾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시설은 형벌적용판사에게 3개월 이내에 의견 또는 자문을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5조 【형벌적용판사의 신청사본 송부】 제R. 131-18조 둘째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형벌적용판사는 신청사본을 지역범죄방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송부한다. 이 시설은 형벌적용판사에게 3개월 이내에 의견 또는 자문을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6조 【사회봉사형의 근로시간제한】 제R. 131-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과 사회봉사형시간을 합산한 주당 근로시간이 지역적으로 통용되는 법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7조 【사회봉사활동의 풍토병에 대한 면역여부】 제R. 131-28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려고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공·사적 시설여부를 불문하고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예견되는 질병과 아울러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장티푸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는지의 여부”<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12-8조 【기업위원회의 서기관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통지】 제R. 131-5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법인의 직원이 임금근로자에 관한

82) Le conseil départemental de prevention

규정에 적용을 받을 때 제1항에 언급한 의견은 기업위원회의 서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기업중앙위원회의 서기관에게 전하며 만약 그러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전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3장 제2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4장 제3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5장 제4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6장 제5권의 적응

제R. 716-1조 **【중대한 동물학대】** 제R. 511-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21-2조에 언급한 동물에 대한 실험 또는 과학적이거나 실험적인 연구는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정한다.”

제7장 제6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R. 721-1조 【프랑스형법의 일반적 적용】 본편의 적응조항의 유보 하에 프랑스형법전 중에서 제2부(국사원령)의 제1권부터 제6권은 마요뜨에 적용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721-2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① 마요뜨에 프랑스형법의 적용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전환하여 사용한다. 즉, “지방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중죄법원”은 “형사법원”, 행정구역상의 “도”는 “공동체”, “도지사” 및 “부지사”는 “영토상 정부대표”, “프랑스국립은행”은 “해외도 화폐발행 기관”로 한다.

② 또한 공동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지역적으로 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대체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2장 제1권의 적응

제R. 722-1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제R. 13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신고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도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법원에 의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2조 【법원의 지정조건의 기재】 제R. 13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증명서에는 최근에 촬영된 신고를 받은 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도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법원이 운전금지를 선고한 자동차의 종류를 제외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3조 【형벌적용판사에 대한 자문】 제R. 131-13조 제1항의 두 번째 법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범죄방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시설은 형벌적용판사에게 3개월 이내에 의견 또는 자문을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4조 【형벌적용판사의 신청사본 송부】 제R. 131-18조의 두 번째 법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형벌적용판사는 신청사본을 지역범죄방지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송부한다. 이 시설은 형벌적용판사에게 3개월 이내에 의견 또는 자문을 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5조 【사회봉사형의 근로시간제한】 제R. 131-2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근로

시간과 사회봉사형시간을 합산한 주당 근로시간이 지역적으로 통용되는 법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6조 【사회봉사활동의 풍토병에 대한 면역여부】 제R. 131-28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려고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공·사적 시설여부를 불문하고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예견되는 질병과 아울러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장티푸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는지의 여부”<2001.07.11. 개정, 법률2001-616>

제R. 722-7조 【기업위원회의 서기관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의 통지】 제R. 131-5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법인의 직원이 임금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을 때 제1항에 언급한 의견은 기업위원회의 서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기업중앙위원회의 서기관에게 전하며 만약 그러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전한다.”<2001.07.11. 개정, 법률 2001-616>

제3장 제2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4장 제3권의 적응

<해당 없음, 무(Néant)>

제5장 제4권의 적용

<해당 없음, 무(Néant)>

제6장 제5권의 적용

<해당 없음, 무(Néant)>

제7장 제6권의 적용

<해당 없음, 무(Néant)>

부록

- Code pénal

Partie législative

LIV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TITRE Ier : De la loi pénale.

CHAPITRE Ier : Des principes généraux.

Article 111-1

Les infractions pénales sont classées, suivant leur gravité, en crimes, délits et contraventions.

Article 111-2

La loi détermine les crimes et délits et fixe les peines applicables à leurs auteurs.
Le règlement détermine les contraventions et fixe, dans les limites et selon les distinctions établies par la loi, les peines applicables aux contrevenants.

Article 111-3

Nul ne peut être puni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dont les éléments ne sont pas définis par la loi, ou pour une contravention dont les éléments ne sont pas définis par le règlement.

Nul ne peut être puni d'une peine qui n'est pas prévue par la loi, si l'infraction est un crime ou un délit, ou par le règlement, si l'infraction est une contravention.

Article 111-4

La loi pénale est d'interprétation stricte.

Article 111-5

Les juridictions pénales sont compétentes pour interpréter les actes administratifs, réglementaires ou individuels et pour en apprécier la légalité lorsque, de cet examen, dépend la solution du procès pénal qui leur est soumis.

CHAPITRE II : De l'application de la loi pénale dans le temps.

Article 112-1

Sont seuls punissables les faits constitutifs d'une infraction à la date à laquelle ils ont été commis.

Peuvent seules être prononcées les peines légalement applicables à la même date.

Toutefois, les dispositions nouvelles s'appliquent aux infractions commises avant leur entrée en vigueur et n'ayant pas donné lieu à une condamnation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lorsqu'elles sont moins sévères que les dispositions anciennes.

Article 112-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72 JORF 10 mars 2004

Sont applicables immédiatement à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commises avant leur entrée en vigueur :

- 1° Les lois de compétence et d'organisation judiciaire, tant qu'un jugement au fond n'a pas été rendu en première instance ;

- 2° Les lois fixant les modalités des poursuites et les formes de la procédure ;
- 3° Les lois relatives au régime d'exécution et d'application des peines ; toutefois, ces lois, lorsqu'elles auraient pour résultat de rendre plus sévères les peines prononcées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ne sont applicables qu'aux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des faits commis postérieurement à leur entrée en vigueur ;
- 4° Lorsque les prescriptions ne sont pas acquises, les lois relatives à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t à la prescription des peines.

Article 112-3

Les lois relatives à la nature et aux cas d'ouverture des voies de recours ainsi qu'aux délais dans lesquels elles doivent être exercées et à la qualité des personnes admises à se pourvoir sont applicables aux recours formés contre les décisions prononcées après leur entrée en vigueur. Les recours sont soumis aux règles de forme en vigueur au jour où ils sont exercés.

Article 112-4

L'application immédiate de la loi nouvelle est sans effet sur la validité des actes accomplis conformément à la loi ancienne.

Toutefois, la peine cesse de recevoir exécution quand elle a été prononcée pour un fait qui, en vertu d'une loi postérieure au jugement, n'a plus le caractère d'une infraction pénale.

CHAPITRE III : De l'application de la loi pénale dans l'espace.

Article 113-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inclut les espaces maritime et aérien qui lui sont liés.

Section 1 : Des infractions commises ou réputées commise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113-2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infraction est réputée commis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ès lors qu'un de ses faits constitutifs a eu lieu sur ce territoire.

Article 113-3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à bord des navires battant un pavillon français, ou à l'encontre de tels navires, en quelque lieu qu'ils se trouvent. Elle est seule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à bord des navires de la marine nationale, ou à l'encontre de tels navires, en quelque lieu qu'ils se trouvent.

Article 113-4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à bord des aéronefs immatriculés en France, ou à l'encontre de tels aéronefs, en quelque lieu qu'ils se trouvent. Elle est seule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à bord des aéronefs militaires français, ou à l'encontre de tels aéronefs, en quelque lieu qu'ils se trouvent.

Article 113-5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à quiconque s'est rendu coupabl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comme complice, d'un crime ou d'un délit commis à l'étranger si le crime ou le délit est puni à la fois par la loi française et par la loi étrangère et s'il a été constaté par une décision définitive de la juridiction étrangère.

Section 2 : Des infractions commise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113-6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à tout crime commis par un França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Elle est applicable aux délits commis par des França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i les faits sont punis par la législation du pays où ils ont été commis.

Il est fait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ors même que le prévenu aurait acquis la nationalité française postérieurement au fait qui lui est imputé.

Article 113-7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à tout crime, ainsi qu'à tout délit puni d'emprisonnement, commis par un Français ou par un étranger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orsque la victim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au moment de l'infraction.

Article 113-8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113-6 et 113-7, la poursuite des délits ne peut être

exercée qu'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Elle doit être précédée d'une plainte de la victime ou de ses ayants droit ou d'une dénonciation officielle par l'autorité du pays où le fait a été commis.

Article 113-8-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9 JORF 10 mars 2004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113-6 à 113-8,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également applicable à tout crime ou à tout délit puni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comm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par un étranger dont l'extradition a été refusée à l'Etat requérant par les autorités françaises aux motifs, soit que le fait à raison duquel l'extradition avait été demandée est puni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contraire à l'ordre public français, soit que la personne réclamée aurait été jugée dans ledit Etat par un tribunal n'assurant pas les garanties fondamentales de procédure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a défense, soit que le fait considéré revêt le caractère d'infraction politique.

La poursuit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ne peut être exercée qu'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Elle doit être précédée d'une dénonciation officielle, transmise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de l'autorité du pays où le fait a été commis et qui avait requis l'extradition.

Article 113-9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113-6 et 113-7, aucune poursuite ne peut être exercée contre une personne justifiant qu'elle a été jugée définitivement à l'étranger pour les mêmes faits et,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 été subie ou prescrite.

Article 113-10

Modifié par Loi n°2001-1168 du 11 décembre 2001 - art. 17 (V) JORF 12 décembre 2001

La loi pénale française s'applique aux crimes et délits qualifiés d'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t réprimés par le titre Ier du livre IV, à la falsification et à la contrefaçon du sceau de l'Etat, de pièces de monnaie, de billets de banque ou d'effets publics réprimés par les articles 442-1, 442-2, 442-5, 442-15, 443-1 et 444-1 et à tout crime ou délit contre les agents ou les locaux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français, comm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113-11

Cré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40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13-9,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aux crimes et délits commis à bord ou à l'encontre des aéronefs non immatriculés en France :

- 1° Lorsque l'auteur ou la victim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
- 2° Lorsque l'appareil atterrit en France après le crime ou le délit ;
- 3° Lorsque l'aéronef a été donné en location sans équipage à une personne qui a le siège principal de son exploitation ou, à défaut, sa résidence permanent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ans le cas prévu au 1°, la nationalité de l'auteur ou de la victime de l'infraction est appréci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13-6, dernier alinéa, et 113-7.

Article 113-12

Créé par Loi n°96-151 du 26 février 1996 - art. 9 JORF 27 février 1996

La loi pénale française est applicable aux infractions commises au-delà de la mer territoriale, dès lors que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et la loi le prévoient.

TITRE II :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121-1

Nul n'est responsable pénalement que de son propre fait.

Article 121-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5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31 décembre 2005

Les personnes morales, à l'exclusion de l'Etat, sont responsables pénalement, selon les distinctions des articles 121-4 à 121-7, des infractions commises, pour leur compte, par leurs organes ou représentants.

Toutefoi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urs groupements ne sont responsables pénalement que des infractions commises dans l'exercice d'activités susceptibles de faire l'objet de conventions de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n'exclut pas celle des personnes physiques auteurs ou complices des mêmes fait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21-3.

Article 121-3

Modifié par Loi n°2000-647 du 10 juillet 2000 - art. 1 JORF 11 juillet 2000

Il n'y a point de crime ou de délit sans intention de le commettre.

Toutefois, lorsque la loi le prévoit, il y a délit en cas de mise en danger délibérée de la personne d'autrui.

Il y a également délit, lorsque la loi le prévoit, en cas de faute d'imprudence, de négligence ou d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prudence ou de sécurité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s'il est établi que l'auteur des faits n'a pas accompli les diligences normales compte tenu, le cas échéant, de la nature de ses missions ou de ses fonctions, de ses compétences ainsi que du pouvoir et des moyens dont il disposait. Dans le cas prévu par l'alinéa qui précède, les personnes physiques qui n'ont pas causé directement le dommage, mais qui ont créé ou contribué à créer la situation qui a permis la réalisation du dommage ou qui n'ont pas pris les mesures permettant de l'éviter, sont responsables pénalement s'il est établi qu'elles ont, soit violé de faç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prudence ou de sécurité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soit commis une faute caractérisée et qui exposait autrui à un ris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qu'elles ne pouvaient ignorer.

Il n'y a point de contravention en cas de force majeure.

Article 121-4

Est auteur de l'infraction la personne qui :

1° Commet les faits incriminés ;

2° Tente de commettre un crime ou,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un délit.

Article 121-5

La tentative est constituée dès lors que, manifestée par un commencement d'exécution,

elle n'a été suspendue ou n'a manqué son effet qu'en raison de circonstances indépendantes de la volonté de son auteur.

Article 121-6

Sera puni comme auteur le complice de l'infraction, au sens de l'article 121-7.

Article 121-7

Est complice d'un crime ou d'un délit la personne qui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en a facilité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Est également complice la personne qui par don, promesse, menace, ordre, abus d'autorité ou de pouvoir aura provoqué à une infraction ou donné des instructions pour la commettre.

CHAPITRE II : Des causes d'irresponsabilité ou d'atténuation de la responsabilité.

Article 122-1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était atteinte, au moment des faits, d'un trouble psychique ou neuropsychique ayant aboli son discernement ou le contrôle de ses actes.

La personne qui était atteinte, au moment des faits, d'un trouble psychique ou neuropsychique ayant altéré son discernement ou entravé le contrôle de ses actes demeure punissable ; toutefois, la juridiction tient compte de cette circonstance lorsqu'elle détermine la peine et en fixe le régime.

Article 122-2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a agi sous l'empire d'une force ou d'une contrainte à laquelle elle n'a pu résister.

Article 122-3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justifie avoir cru, par une erreur sur le droit qu'elle n'était pas en mesure d'éviter, pouvoir légitimement accomplir l'acte.

Article 122-4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accomplit un acte prescrit ou autorisé par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accomplit un acte commandé par l'autorité légitime, sauf si cet acte est manifestement illégal.

Article 122-5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devant une atteinte injustifiée envers elle-même ou autrui, accomplit, dans le même temps, un acte commandé par la nécessité de la légitime défense d'elle-même ou d'autrui, sauf s'il y a disproportion entre les moyens de défense employés et la gravité de l'atteinte.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pour interrompre l'exécution d'un crime ou d'un délit contre un bien, accomplit un acte de défense, autre qu'un homicide volontaire, lorsque cet acte est strictement nécessaire au but poursuivi dès lors que les moyens employés sont proportionnés à la gravité de l'infraction.

Article 122-6

Est présumé avoir agi en état de légitime défense celui qui accomplit l'acte :

- 1° Pour repousser, de nuit, l'entrée par effraction, violence ou ruse dans un lieu habité ;
- 2° Pour se défendre contre les auteurs de vols ou de pillages exécutés avec violence.

Article 122-7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face à un danger actuel ou imminent qui menace elle-même, autrui ou un bien, accomplit un acte nécessaire à la sauvegarde de la personne ou du bien, sauf s'il y a disproportion entre les moyens employés et la gravité de la menace.

Article 122-8

Modifi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11 JORF 10 septembre 2002

Les mineurs capables de discernement sont pénalement responsables des crimes, délits ou contraventions dont ils ont été reconnus coupable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une loi particulière qui détermine les mesures de protection, d'assistance, de surveillance et d'éducation dont ils peuvent faire l'objet.

Cette loi détermine également les sanctions éducatives qui peuvent être prononcées à l'encontre des mineurs de dix à dix-huit ans ainsi que les peines auxquelles peuvent être condamnés les mineurs de treize à dix-huit ans, en tenant compte de l'atténuation de responsabilité dont ils bénéficient en raison de leur âge.

TITRE III : Des peines.

CHAPITRE Ier : De la nature des peines.

Section 1 : Des pein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Sous-section 1 : Des peines criminelles.

Article 131-1

Les peines criminell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sont :

- 1° La réclusion criminelle ou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
- 2° La réclusion criminelle ou la détention criminelle de trente ans au plus ;
- 3° La réclusion criminelle ou la détention criminelle de vingt ans au plus ;
- 4° La réclusion criminelle ou la détention criminelle de quinze ans au plus.

La duré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ou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temps est de dix ans au moins.

Article 131-2

Les peines de réclusion criminelle ou de détention criminelle ne sont pas exclusives d'une peine d'amende et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Sous-section 2 : Des peines correctionnelles.

Article 131-3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Les peines correctionnell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sont :

- 1° L'emprisonnement ;
- 2° L'amende ;
- 3° Le jour-amende ;
- 4° Le stage de citoyenneté ;
- 5°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
- 6° 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
- 7° 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
- 8° La sanction-réparation.

Article 131-4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48 JORF 19 mars 2003

L'échelle des peines d'emprisonnement est la suivante :

- 1° Dix ans au plus ;
- 2° Sept ans au plus ;
- 3° Cinq ans au plus ;
- 4° Trois ans au plus ;
- 5° Deux ans au plus ;
- 6° Un an au plus ;
- 7° Six mois au plus ;
- 8° Deux mois au plus.

Article 131-5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09 art. 173 1°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de jours-amende consistant pour le condamné à verser au Trésor une somme dont le montant global résulte de la fixation par le juge d'une contribution quotidienne pendant un certain nombre de jours. Le montant de chaque jour-amende est déterminé en tenant compte des ressources et des charges du prévenu ; il ne peut excéder 1 000 euros. Le nombre de jours-amende es déterminé en tenant compte d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 il ne peut excéder trois cent soixante.

Article 131-5-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à la place de l'emprisonnement, prescrire que le condamné devra 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dont les modalités, la durée et le contenu sont fix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t qui a pour objet de lui rappeler les valeurs républicaines de tolérance et de respect de la dignité humaine sur lesquelles est fondée la société. La juridiction précise si ce stage, dont le coût ne peut excéder celui des amendes contraventionnelles de la troisième classe, doit être effectué aux frais du condamné.

Cette peine ne peut être prononcée contre le prévenu qui la refuse ou n'est pas présent à l'audience.

Article 131-6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à la place de l'emprisonnement, une ou plusieurs d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liberté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selon d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cette limitation n'est toutefois pas possible en cas de délit pour lequel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pendant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3°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4° La confiscation d'un ou de plusieurs véhicules appartenant au condamné ;
- 5° L'immobilisation, pour une durée d'un an au plus, d'un ou de plusieurs véhicules appartenant au condamné, selon d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 6°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7°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8°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9°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et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
- 10°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Toutefois, cette confiscation ne peut pas être prononcée en matière de délit de presse ;

- 1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ès lors que les facilités que procure cette activité ont été sciemment utilisées pour préparer ou commettre l'infraction. Cette interdiction n'est toutefois pas applicable à l'exercice d'un mandat électif ou de responsabilités syndicales. Elle n'est pas non plus applicable en matière de délit de presse ;
- 1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e paraître dans certains lieux ou catégories de lieux déterminés par la juridiction et dans lesquels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13°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e fréquenter certains condamnés spécialement désignés par la juridiction, notamment les 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
- 14°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entrer en relation avec certaines personnes spécialement désignées par la juridiction, notamment la victime de l'infraction.

Article 131-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énumérées à l'article 131-6 peuvent également être prononcées, à la place de l'amende, pour les délits qui sont punis seulement d'une peine d'amende.

Article 131-8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3 JORF 7 mars 2007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escrire, à la place de l'emprisonnement, que le condamné accomplira, pour une durée de quarante à deux cent dix heures,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on rémunéré au profit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so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s à mettre en oe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e peut être prononcée contre le prévenu qui la refuse ou qui n'est pas présent à l'audience. Le président du tribunal, avant le prononcé du jugement, informe le prévenu de son droit de refuser l'accomplissement d'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t reçoit sa réponse.

Article 131-8-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à la place ou en même temps que la peine d'emprisonnement,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Il en est de même lorsqu'un délit est puni à titre de peine principale d'une seule peine d'amende.

La sanction-réparation consiste dans l'obligation pour le condamné de procéder, dans le délai et selon les modalités fixés par la juridiction, à l'indemnisation du préjudice de la victime.

Avec l'accord de la victime et du prévenu, la réparation peut être exécutée en nature. Elle peut alors consister dans la remise en état d'un bien endommagé à l'occasion de la commission de l'infraction ; cette remise en état est réalisée par le condamné lui-même ou par un professionnel qu'il choisit et dont il rémunère l'intervention.

L'exécution de la réparation est constat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on

délégué.

Lorsqu'elle prononce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la juridiction fixe la durée maximum de l'emprisonnement, qui ne peut excéder six mois, ou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qui ne peut excéder 15 000 Euros,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obligation de réparation. Si le délit n'est puni que d'une peine d'amende, la juridiction ne fixe que le montant de l'amende, qui ne peut excéder 15 000 Euros, qui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en avertit le condamné après le prononcé de la décision.

Article 131-9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emprisonnement ne peut être prononcé cumulativement avec une d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ni avec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orsqu'elle prononce une ou plusieurs des peine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5-1, 131-6 ou 131-8, la juridiction peut fixer la durée maximum de l'emprisonnement ou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résultant de la ou des peines prononcées.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en avertit le condamné après le prononcé de la décision. L'emprisonnement ou l'amende que fixe la juridiction ne peuvent excéder les peines

encourues pour le délit pour lequel la condamnation est prononcée ni celles prévues par l'article 434-41 du présent code.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34-41 ne sont alors pas applicables.

La peine de jours-amende ne peut être prononcée cumulativement avec la peine d'amende.

Sous-section 3 :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pour certains crimes ou délits.

Article 131-10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Lorsque la loi le prévoit, un crime ou un délit peut être sanctionné d'une ou de plusieurs peines complémentaires qui, frappant les personnes physiques, emportent interdiction, déchéance, incapacité ou retrait d'un droit, injonction de soins ou obligation de faire, immobilisation ou confiscation d'un objet, confiscation d'un animal, fermeture d'un établissement ou affichage de la décision prononcée ou diffusion de celle-ci soit par la presse écrite,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rticle 131-1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orsqu'un délit est puni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10, la juridiction peut ne prononcer que la peine complémentaire ou l'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à titre de peine principale.

La juridiction peut alors fixer la durée maximum de l'emprisonnement ou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en cas de viol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résultant des peine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en avertit le condamné après le prononcé de la décision. L'emprisonnement ou l'amende que fixe la juridiction ne peuvent excéder les peines encourues pour le délit pour lequel la condamnation est prononcée, ni celles prévues par l'article 434-41 du présent code.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34-41 ne sont pas applicables.

Sous-section 4 : D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Articles 131-12 à 131-18)

Article 131-12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L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sont ;

- 1° L'amende ;
- 2° 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14 ;
- 3°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15-1.

Ces peines ne sont pas exclusives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aux articles 131-16 et 131-17.

Article 131-13

Modifié par Loi n°2005-47 du 26 janvier 2005 - art. 9 JORF 27 janvier 2005 en vigueur le 1er avril 2005

Constituent des contraventions les infractions que la loi punit d'une amende n'excédant pas 3 000 euros.

Le montant de l'amende est le suivant :

- 1° 38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
- 2° 1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
- 3° 4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
- 4° 75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
- 5° 1 500 euros au plu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montant qui peut être porté à 3 000 euros en cas de récidive lorsque le règlement le prévoit, hors les cas où la loi prévoit que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constitue un délit.

Article 131-14

Modifi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5 JORF 13 juin 2003

Pour toutes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une ou plusieurs d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suivantes peuvent être prononcé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un an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cette limitation n'est toutefois pas possible en cas de contravention pour laquelle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mmobilisation, pour une durée de six mois au plus, d'un ou de plusieurs véhicules appartenant au condamné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un an au plus ;
- 5°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un an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et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
- 6°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Toutefois, cette confiscation ne peut pas être prononcée en matière de délit de presse.

Article 131-15

La peine d'amende ne peut être prononcée cumulativement avec une d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énumérées à l'article 131-14.

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énumérées à cet article peuvent être prononcées cumulativement.

Article 131-15-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Pour toutes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à la place ou en même temps que la peine d'amende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8-1.

Dans ce cas, la juridiction fixe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qui ne peut excéder

1 500 Euros,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obligation de réparation.

Article 131-16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JORF 7 mars 2007

Le règlement qui réprime une contravention peut prévoir, lorsque le coupable est une personne physique, 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sauf si le règlement exclut expressément cette limitation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trois ans au plus ;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6°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y compris ceux pour la conduite desquels le permis de conduire n'est pas exigé,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
- 7° L'obligation d'accomplir, à se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 8° L'obligation d'accomplir, le cas échéant à ses frais, un stage de citoyenneté ;
- 9° L'obligation d'accomplir, à ses frais,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
- 10° La confiscation de l'animal ayant été utilisé pour commettre l'infraction ou à l'encontre duquel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1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u plus, de détenir un animal.

Article 131-17

Le règlement qui réprime une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peut en outre prévoir la peine complémentaire d'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Le règlement qui réprime une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peut également prévoir,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 vingt heures.

Article 131-18

Lorsqu'une contravention est punie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mentionnées aux articles 131-16 et 131-17, la juridiction peut ne prononcer que la peine complémentaire ou l'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Sous-section 5 : Du contenu et d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certaines peines.

Article 131-19

L'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emporte pour le condamné injonction d'avoir à

restituer au banquier qui les avait délivrées les formules en sa possession et en celle de ses mandataires.

Lorsque cette interdiction est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our un crime ou un délit, ell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cinq ans.

Article 131-20

L'interdiction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comporte pour le condamné injonction d'avoir à restituer au banquier qui les avait délivrées les cartes en sa possession et en celle de ses mandataires.

Lorsque cette interdiction est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our un crime ou un délit, ell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cinq ans.

Article 131-2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6 JORF 7 mars 2007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est encourue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Elle est également encourue de plein droit pour les crimes et pour les délits punis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supérieure à un an, à l'exception des délits de presse.

La confiscation porte sur tous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quelle qu'en soit la nature, divis ou indivis, ayant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ou qui étaient destinés à la commettre, et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sous réserve des droits du propriétaire de bonne foi,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Elle porte également sur tous les biens qui sont l'objet ou le produit direct ou indirect d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bien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à la victime. Si le produit de l'infraction a été mêlé à des fonds d'origine licite pour l'acquisition d'un ou

plusieurs biens, la confiscation peut ne porter sur ces biens qu'à concurrence de la valeur estimée de ce produit.

La confiscation peut en outre porter sur tout bien meuble ou immeuble défini par la loi ou le règlement qui réprime l'infraction.

S'il s'agit d'un crime ou d'un délit puni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et ayant procuré un profit direct ou indirect, la confiscation porte également sur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quelle qu'en soit la nature, divis ou indivis, appartenant au condamné lorsque celui-ci, mis en mesure de s'expliquer sur l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envisagée, n'a pu en justifier l'origine.

Lorsque la loi qui réprime le crime ou le délit le prévoit, la confiscation peut aussi porter sur tout ou partie des biens appartenant au condamné,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La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objets qualifiés de dangereux ou nuisible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ou dont la détention est illicite, que ces biens soient ou non la propriété du condamné.

Lorsque la chose confisquée n'a pas été saisie ou ne peut être représentée, la confiscation est ordonnée en valeur. Pour le recouvrement de la somme représentative de la valeur de la chose confisquée,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contrainte judiciaire sont applicables.

La chose confisquée est, sauf disposition particulière prévoyant sa destruction ou son attribution, dévolue à l'Etat, mais elle demeure grevée, à concurrence de sa valeur, des droits réels licitement constitués au profit de tiers.

Lorsque la chose confisquée est un véhicule qui n'a pas été saisi ou mis en fourrière au cours de la procédure, le condamné doit, sur l'injonction qui lui en est faite par le ministère public, remettre ce véhicule au service ou à l'organisme chargé de sa destruction ou de son aliénation.

Article 131-21-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Lorsqu'elle est encourue comme peine complémentaire, la confiscation d'un animal ou d'une catégorie d'animal concerne l'animal qui a été utilisé pour commettre ou tenter de commettre l'infraction ou à l'encontre duquel l'infraction a été commise.

Elle concerne également les animaux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si ces animaux étaient susceptibles d'être utilisés pour commettre l'infraction ou si l'infraction aurait pu être commise à leur encontre.

La juridiction qui prononce la confiscation de l'animal prévoit qu'il sera remis à une fondation ou à une association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qui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Si l'animal n'a pas été placé en cours de procédure, le condamné doit, sur injonction qui lui est faite par le ministère public, le remettre à l'organisme visé à l'alinéa précédent. L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31-21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animal a été placé en cours de procédure, la juridiction qui ordonne sa confiscation peut mettre les frais de placement à la charge du condamné.

Lorsqu'il s'agit d'un animal dangereux, la juridiction peut ordonner qu'il soit procédé à son euthanasie, le cas échéant aux frais du condamné.

Article 131-21-2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Lorsqu'elle est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l'interdiction de détenir un animal peut être limitée à certains animaux ou certaines catégories d'animaux.

Lorsqu'elle est encourue pour un crime ou un délit, cette interdiction est soit

définitive, soit temporaire ; dans ce dernier cas, ell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cinq ans.

Article 131-22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9 JORF 13 décembre 2005

La juridiction qui prononce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fixe le délai pendant lequel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doit être accompli dans la limite de dix-huit mois. Le délai prend fin dès l'accomplissement de la totalité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 il peut être suspendu provisoirement pour motif grave d'ordre médical, familial, professionnel ou social. Ce délai es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le condamné est incarcéré ou pendant le temps où il accomplit les obligations du service national.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t la suspension du délai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sont décidées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le condamné a sa résidence habituelle ou, s'il n'a pas en France sa résidence habituell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tribunal qui a statué en première instance.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un délit prévu par le code de la route ou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221-6-1, 222-19-1, 222-20-1 et 434-10, elle accomplit de préférence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dans un des établissements spécialisés dans l'accueil des blessés de la route.

Au cours du délai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le condamné doit satisfaire aux mesures de contrôle déterminées par l'article 132-55.

Article 131-23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st soumis aux prescriptions législatives et réglementaires

relatives au travail de nuit, à l'hygiène, à la sécurité ainsi qu'au travail des femmes et des jeunes travailleurs.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eut se cumuler avec l'exercice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Article 131-24

L'Etat répond du dommage ou de la part du dommage qui est causé à autrui par un condamné et qui résulte directement de l'application d'une décision comportant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tat est subrogé de plein droit dans les droits de la victime.

L'action en responsabilité et l'action récursoire sont portées devant les tribunaux de l'ordre judiciaire.

Article 131-25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09 art. 173 2, art. 198 V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98 (V)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 jours-amende, le montant global est exigible à l'expiration du délai correspondant au nombre de jours-amende prononcés.

Le défaut total ou partiel du paiement de ce montant entraîne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pour une durée correspondant au nombre de jours-amende impayés. Il est procédé comme en matière de contrainte judiciaire. La détention ainsi subie est soumise au régime des peines d'emprisonnement.

Article 131-26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porte sur :

- 1° Le droit de vote ;
- 2° L'éligibilité ;
- 3° Le droit d'exercer une fonction juridictionnelle ou d'être expert devant une juridiction, de représenter ou d'assister une partie devant la justice ;
- 4° Le droit de témoigner en justice autrement que pour y faire de simples déclarations ;
- 5° Le droit d'être tuteur ou curateur ; cette interdiction n'exclut pas le droit, après avis conforme du juge des tutelles, le conseil de famille entendu, d'être tuteur ou curateur de ses propres enfants.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dix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crime et une durée de cinq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déli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l'interdiction de tout ou partie de ces droits.

L'interdiction du droit de vote ou l'inéligibilité prononcé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mportent interdiction ou incapacité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Article 131-27

Lorsqu'elle est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our un crime ou un délit,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est soit définitive, soit temporaire ; dans ce dernier cas, ell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cinq ans.

Cette interdiction n'est pas applicable à l'exercice d'un mandat électif ou de responsabilités syndicales. Elle n'est pas non plus applicable en matière de délit de presse.

Article 131-28

L'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peut porter soit su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de laquell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oit sur toute autr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éfinie par la loi qui réprime l'infraction.

Article 131-29

Lorsque l'interdiction d'exercer tout ou partie des droits énumérés à l'article 131-26, ou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accompagn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elle s'applique dès le commencement de cette peine et son exécution se poursuit, pour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a privation de liberté a pris fin.

Article 131-30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JORF 27 novembre 2003

Lorsqu'elle est prévue par la loi, la pein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un crime ou d'un délit.

L'interdiction du territoire entraîne de plein droit la reconduite du condamné à la frontière, le cas échéant, à l'expiration de sa peine d'emprisonnement ou de réclusion.

Lorsque l'interdiction du territoire accompagn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son application est suspendue pendant le délai d'exécution de la peine. Elle reprend, pour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a privation de liberté a pris fin.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rononcée en même temps qu'une peine d'emprisonnement ne fait pas obstacle à ce que cette peine fasse l'objet, aux fins de préparation d'une demande en relèvement, de mesures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e permissions de sortir.

Article 131-30-1

Modifié par Loi n°2006-911 du 24 juillet 2006 - art. 75 JORF 25 juillet 2006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e tribunal ne peut prononcer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que par une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au regard de la gravité de l'infraction et de la situation personnelle et familiale de l'étranger lorsqu'est en cause :

- 1° Un étranger, ne vivant pas en état de polygamie, qui est père ou mère d'un enfant français mineur résidant en France, à condition qu'il établisse contribuer effectivement à l'entretien et à l'éducation de l'enf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71-2 du code civil depuis la naissance de celui-ci ou depuis au moins un an ;
- 2° Un étranger marié depuis au moins trois ans avec un conjoint de nationalité française, à condition que ce mariage soit antérieur aux faits ayant entraîné sa condamnation, que la communauté de vie n'ait pas cessé depuis le mariage et que le conjoint ait conservé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3° Un étranger qui justifie par tous moyens qu'il réside habituellement en France depuis plus de quinze ans, sauf s'il a été, pendant toute cette période, titulaire d'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portant la mention " étudiant " ;
- 4° Un étranger qui réside régulièrement en France depuis plus de dix ans, sauf s'il a été, pendant toute cette période, titulaire d'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portant la mention " étudiant " ;

- 5° Un étranger titulaire d'une rente d'accident du travail ou de maladie professionnelle servie par un organisme français et dont le taux d'incapacité permanente est égal ou supérieur à 20 %.

Article 131-30-2

Modifié par Loi n°2006-911 du 24 juillet 2006 - art. 75 JORF 25 juillet 2006

Modifié par Loi n°2006-911 du 24 juillet 2006 - art. 77 JORF 25 juillet 2006

La pein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ne peut être prononcée lorsqu'est en cause :

- 1° Un étranger qui justifie par tous moyens résider en France habituellement depuis qu'il a atteint au plus l'âge de treize ans ;
- 2° Un étranger qui réside régulièrement en France depuis plus de vingt ans ;
- 3° Un étranger qui réside régulièrement en France depuis plus de dix ans et qui, ne vivant pas en état de polygamie, est marié depuis au moins quatre ans avec un ressortissant français ayant conservé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condition que ce mariage soit antérieur aux faits ayant entraîné sa condamnation et que la communauté de vie n'ait pas cessé depuis le mariage ou, sous les mêmes conditions, avec un ressortissant étranger relevant du 1° ;
- 4° Un étranger qui réside régulièrement en France depuis plus de dix ans et qui, ne vivant pas en état de polygamie, est père ou mère d'un enfant français mineur résidant en France, à condition qu'il établisse contribuer effectivement à l'entretien et à l'éducation de l'enf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71-2 du code civil depuis la naissance de celui-ci ou depuis au moins un an ;
- 5° Un étranger qui réside en France sous couvert du titre de séjour prévu par

le 11° de l'article 12 bis de l'ordonnance n° 45-2658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Les dispositions prévues au 3° et au 4° ne sont toutefois pas applicables lorsque les faits à l'origine de la condamnation ont été commis à l'encontre du conjoint ou des enfants de l'étranger ou de tout enfant sur lequel il exerce l'autorité parental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prévus par les chapitres Ier, II et IV du titre Ier du livre IV et par les articles 413-1 à 413-4, 413-10 et 413-11, ni aux actes de terrorisme prévus par le titre II du livre IV, ni aux infractions en matière de groupes de combat et de mouvements dissous prévues par les articles 431-14 à 431-17, ni aux infractions en matière de fausse monnaie prévues aux articles 442-1 à 442-4.

Article 131-31

La peine d'interdiction de séjour emporte défense de paraître dans certains lieux déterminés par la juridiction. Elle comporte, en outre, des mesures de surveillance et d'assistance. La liste des lieux interdits ainsi que les mesures de surveillance et d'assistance peuvent être modifiées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L'interdiction de séjour ne peut excéder une durée de dix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crime et une durée de cinq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délit.

Article 131-32

Lorsque l'interdiction de séjour accompagn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elle s'applique dès le commencement de cette peine et son exécution se poursuit, pour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a privation de

liberté a pris fin.

Toute détention intervenue au cours de l'interdiction de séjour s'impute sur la durée de celle-ci.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763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interdiction de séjour cesse de plein droit lorsque le condamné atteint l'âge de soixante-cinq ans.

Article 131-33

La peine de fermeture d'un établissement emporte l'interdiction d'exercer dans celui-ci l'activité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131-34

La peine d'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emporte l'interdiction de particip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tout marché conclu par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urs groupements et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ainsi que par les entreprises concédées ou contrôlées par l'Etat ou pa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leurs groupements.

Article 131-35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La peine d'affichage de la décision prononcée ou de diffusion de celle-ci est à la charge du condamné. Les frais d'affichage ou de diffusion recouvrés contre ce dernier ne peuvent toutefois excéder le maximum de l'amende encourue.

La juridiction peut ordonner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intégralité ou d'une partie de la décision, ou d'un communiqué informant le public des motifs et du dispositif de celle-ci. Elle détermine, le cas échéant, les extraits de la décision et les termes du

communiqué qui devront être affichés ou diffusés.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ou du communiqué ne peut comporter l'identité de la victime qu'avec son accord ou celui de son représentant légal ou de ses ayants droit.

La peine d'affichage s'exécute dans les lieux et pour la durée indiqués par la juridiction ; sauf disposition contraire de la loi qui réprime l'infraction, l'affichage ne peut excéder deux mois. En cas de suppression, dissimulation ou lacération des affiches apposées, il est de nouveau procédé à l'affichage aux frais de la personne reconnue coupable de ces faits.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est faite par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r une ou plusieurs autres publications de presse, ou par un ou plusieur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Les publications ou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chargés de cette diffusion sont désignés par la juridiction. Ils ne peuvent s'opposer à cette diffusion.

Article 131-35-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JORF 7 mars 2007

Lorsqu'elle est encouru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ou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est exécutée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éfinitive.

La juridiction précise si le stage est exécuté aux frais du condamné. Le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est toujours exécuté aux frais du condamné.

L'accomplissement du stage donne lieu à la remise au condamné d'une attestation que celui-ci adress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131-36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1° JORF 7 mars 2007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ous-section.

Ce décret détermine égale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exécutera l'activité des condamnés à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insi que la nature des travaux proposés.

Il détermine en outr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

- 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établit, après avis du ministère public et consultation de tout organisme public compétent en matière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la list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susceptibles d'être accomplis dans son ressort ;
- 2°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eut, pour les condamnés salariés, se cumuler avec la durée légale du travail ;
- 3° Sont habilitées les associa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8 ;
- 4° Sont désignées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hargées de participer à la mise en oeuvre des stages mentionnés à l'article 131-35-1.

Sous-section 6 : Du suivi socio-judiciaire.

Article 131-36-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6 JORF 10 mars 2004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ordonner un suivi socio-judiciaire.

Le suivi socio-judiciaire emporte, pour le condamné, l'obligation de se soumettre,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pendant une durée déterminé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à des mesures de surveillance et d'assistance destinées à prévenir la récidive. La durée du suivi socio-judiciaire ne peut excéder dix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délit ou vingt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crime. Toutefois, en matière correctionnelle, cette durée peut être portée à vingt ans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de la juridiction de jugement ; lorsqu'il s'agit d'un crime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cette durée est de trente ans ; lorsqu'il s'agit d'un crime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a cour d'assises peut décider que le suivi socio-judiciaire s'appliquera sans limitation de durée, sous réserve de la possibilité pou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mettre fin à la mesure à l'issue d'un délai de trente an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fixe également la durée maximum de l'emprisonnement encouru par le condamné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Cet emprisonnement ne peut excéder trois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délit et sept an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crim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en tout ou partie, l'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sont fixé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après le prononcé de la décision, avertit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qui en résultent et des conséquences qu'entraînerait leur inobservation.

Article 131-36-2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Les mesures de surveillance applicables à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ont celles prévues à l'article 132-44.

Le condamné peut aussi être soumis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ou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ux obligations prévues à l'article 132-45. Il peut également être soumis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suivantes :

- 1° S'abstenir de paraître en tout lieu ou toute catégorie de lieux spécialement désigné, et notamment les lieux accueillant habituellement des mineurs ;
- 2° S'abstenir de fréquenter ou d'entrer en relation avec certaines personnes ou certaines catégories de personnes, et notamment des mineurs, à l'exception, le cas échéant, de ceux désignés par la juridiction ;
- 3° Ne pas 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Article 131-36-3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Les mesures d'assistance auxquelles est soumise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ont pour objet de seconder ses efforts en vue de sa réinsertion sociale.

Article 131-36-4

Modifi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7 JORF 11 août 2007 en vigueur le 1er mars 2008

Sauf décision contraire de la juridiction,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est soumise à une injonction de soi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3711-1 et suivant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s'il est établi qu'ell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après une expertise médicale ordonn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e président avertit alors

le condamné qu'aucun traitement ne pourra être entrepris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s'il refuse les soins qui lui seront proposés, l'emprisonnement prononcé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injonction de soins et que la personne a été également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non assortie du sursis, le président informe le condamné qu'il aura la possibilité de commencer un traitement pendant l'exécution de cette peine.

Article 131-36-5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Lorsque le suivi socio-judiciaire accompagn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il s'applique, pour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a privation de liberté a pris fin.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suspendu par toute détention intervenue au cours de son exécution.

L'emprisonnement ordonné en raison de l'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résultant du suivi socio-judiciaire se cumule,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l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prononcées pour des infractions commises pendant l'exécution de la mesure.

Article 131-36-6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Le suivi socio-judiciaire ne peut être ordonné en même temps qu'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 en tout ou pa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131-36-7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e suivi socio-judiciaire peut être ordonné comme peine principale.

Article 131-36-8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 JORF 18 juin 1998

Les modalités d'exécution du suivi socio-judiciaire sont fixées par le titre VII bis du livre V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us-section 7 :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Article 131-36-9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9 JORF 13 décembre 2005

Le suivi socio-judiciaire peut également comprendre,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ous-section.

Article 131-36-10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9 JORF 13 décembre 2005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ne peut être ordonné qu'à l'encontre d'une personne majeure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sept ans et dont une expertise médicale a constaté la dangerosité, lorsque cette mesure apparaît indispensable pour prévenir la récidive à compter du jour où la privation de liberté prend fin.

Article 131-36-11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9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il est ordonné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doit faire l'objet d'une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Lorsqu'il est ordonné par la cour d'assises, il doit être décidé dans les conditions de majorité prévues par l'article 362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pour le prononcé du maximum de la peine.

Article 131-36-12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9 JORF 13 décembre 2005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emporte pour le condamné l'obligation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deux ans, renouvelable une fois en matière délictuelle et deux fois en matière criminelle, un émetteur permettant à tout moment de déterminer à distance sa localisation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avertit le condamné 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ne pourra être mis en oeuvre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à défaut ou s'il manque à ses obligations, l'emprisonnement prononcé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Article 131-36-13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9 JORF 13 décembre 2005

Les modalités d'exécution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sont fixées par le titre VII ter du livre V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ection 2 : Des peines applicables aux personnes morales.

Sous-section 1 : Des peines criminelles et correctionnelles.

Article 131-3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Les peines criminelles ou correctionnell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
- 2°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es peines énumérées à l'article 131-39.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es personnes morales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39-1.

Article 131-38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55 JORF 10 mars 2004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aux personnes morales est égal au quintuple de celui prévu pour les personnes physiques par la loi qui réprime l'infraction.

Lorsqu'il s'agit d'un crime pour lequel aucune peine d'amende n'est prévue à l'encontre des personnes physiques, l'amend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de 1 000 000 Euros.

Article 131-3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Lorsque la loi le prévoit à l'encontre d'une personne morale, un crime ou un délit peut être sanctionné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suivantes :

- 1° La dissolution, lorsque la personne morale a été créée ou, lorsqu'il s'agit d'un crime ou d'un délit puni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d'une

- peine d'emprisonnement supérieure ou égale à trois ans, détournée de son objet pour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ociales ;
- 3° Le placemen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
- 4° La fermeture définitive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5°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6°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faire appel public à l'épargne ;
- 7°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ou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
- 8°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9° L'affichage de la décision prononcée ou la diffusion de celle-ci soit par la presse écrite,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
- 10° La confiscation de l'animal ayant été utilisé pour commettre l'infraction ou à l'encontre duquel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11°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détenir un animal.

Les peines définies aux 1° et 3° ci-dessus ne sont pas applicables aux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dont la responsabilité pénale est susceptible d'être engag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partis ou groupements politiques ni aux syndicats professionnels. La peine définie au 1° n'est pas applicable aux institutions représentatives du personnel.

Article 131-39-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En matière délictuelle,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à la place ou en même temps que l'amende encourue par la personne morale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8-1.

Dans ce cas, la juridiction fixe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qui ne peut excéder ni 75 000 Euros ni l'amende encourue par la personne morale pour le délit considéré,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obligation de réparation.

Sous-section 2 : D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Article 131-40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L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
- 2° 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42 ;

3°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44-1.

Ces peines ne sont pas exclusives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43.

Article 131-41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aux personnes morales est égal au quintuple de celui prévu pour les personnes physiques par le règlement qui réprime l'infraction.

Article 131-42

Pour toutes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a peine d'amende peut être remplacée par une ou plusieurs d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un an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ou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Article 131-43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JORF 7 mars 2007

Le règlement qui réprime une contravention peut prévoir, lorsque le coupable est une personne morale, les peines complémentaires mentionnées aux 5°, 10° et 11° de l'article 131-16.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e règlement peut, en outre, prévoir la peine complémentair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17.

Article 131-44

Lorsqu'une contravention est punie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43, la juridiction peut ne prononcer que la peine complémentaire ou l'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Article 131-44-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4 JORF 7 mars 2007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à la place ou en même temps que l'amende encourue par la personne morale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8-1.

Dans ce cas, la juridiction fixe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qui ne peut excéder 7 500 Euros, do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ra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en tout ou parti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obligation de réparation.

Sous-section 3 : Du contenu et d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certaines peines.

Article 131-45

La décision prononçant la dissolution de la personne morale comporte le renvoi de celle-ci devant le tribunal compétent pour procéder à la liquidation.

Article 131-46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45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de la personne morale comporte la désignation d'un mandataire de justice dont la juridiction précise la mission. Cette mission ne peut porter qu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Tous les six mois, au moins, le mandataire de justice rend compt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Au vu de ce compte rend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aisir la juridiction qui a prononcé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Celle-ci peut alors soit prononcer une nouvelle peine, soit relever la personne morale de la mesure de placement.

Article 131-47

L'interdiction de faire appel public à l'épargne emporte prohibition, pour le placement de titres quels qu'ils soient, d'avoir recours tant à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établissements financiers ou sociétés de bourse qu'à des procédés quelconques de publicité.

Article 131-48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ociales emporte les conséquences prévues à l'article 131-28.

La peine de fermeture d'un ou de plusieurs établissements emporte les conséquences prévues à l'article 131-33.

La peine d'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emporte les conséquences prévues à l'article 131-34.

La peine d'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emporte les conséquence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19.

La pein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est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31-21.

La peine d'affichage de la décision ou de diffusion de celle-ci est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31-35.

Article 131-49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1-45 à 131-47 et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représentants du personnel sont avisés de la date d'audience

CHAPITRE II : Du régime des peines.

Article 132-1

Lorsque la loi ou le règlement réprime une infraction, le régime des peines qui peuvent être prononcées obéit, sauf dispositions législatives contraires, aux règles du présent chapitre.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Sous-section 1 : Des peines applicables en cas de concours d'infractions.

Article 132-2

Il y a concours d'infractions lorsqu'une infraction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avant que celle-ci ait été définitivement condamnée pour une autre infraction.

Article 132-3

Lorsque, à l'occasion d'une même procédure, la personne poursuivie est reconnue coupable de plusieurs infractions en concours, chacune des peines encourues peut être prononcée. Toutefois, lorsque plusieurs peines de même nature sont encourues, il ne peut être prononcé qu'une seule peine de cette nature dans la limite du maximum légal le plus élevé.

Chaque peine prononcée est réputée commune aux infractions en concours dans la limite du maximum légal applicable à chacune d'entre elles.

Article 132-4

Lorsque, à l'occasion de procédures séparées, la personne poursuivie a été reconnue coupable de plusieurs infractions en concours, les peines prononcées s'exécutent cumulativement dans la limite du maximum légal le plus élevé. Toutefois, la confusion totale ou partielle des peines de même nature peut être ordonnée soit par la dernière juridiction appelée à statuer, soi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132-5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47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32-3 et 132-4, l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sont de même nature et tout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st confondue avec une peine perpétuelle.

Il est tenu compte, s'il y a lieu, de l'état de récidive.

Lorsqu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ncourue pour l'une ou plusieurs des

infractions en concours, n'a pas été prononcée, le maximum légal est fixé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 maximum légal du montant et de la durée de la peine de jours-amende et celui de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ont fixés respectivement par les articles 131-5 et 131-8.

Le bénéfice du sursis attaché en tout ou partie à l'une des peines prononcées pour des infractions en concours ne met pas obstacle à l'exécution des peines de même nature non assorties du sursis.

Article 132-6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48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orsqu'une peine a fait l'objet d'une grâce ou d'un relèvement, il est tenu compte, pour l'application de la confusion, de la peine résultant de la mesure ou de la décision.

Le relèvement intervenu après la confusion s'applique à la peine résultant de la confusion.

La durée de la réduction de peine s'impute sur celle de la peine à subir, le cas échéant, après confusion.

Article 132-7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les peines d'amende pour contraventions se cumulent entre elles et avec celles encourues ou prononcées pour des crimes ou délits en concours.

Sous-section 2 : Des peines applicables en cas de récidive

Paragraphe 1 : Personnes physiques.

Article 132-8

Lorsqu'une personne physiqu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par la loi, commet un crime, le maximum de la pein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ou de la détention criminelle est la perpétuité si le maximum fixé par la loi pour ce crime est de vingt ou trente ans. Le maximum de la peine est porté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ou de détention criminelle si le crime est puni de quinze ans.

Article 132-9

Créé par Loi 92-683 1992-07-22 JORF 23 juillet 1992 rectificatif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orsqu'une personne physiqu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par la loi, commet, dans le délai de dix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un délit puni de la même peine, le maximum des peines d'emprisonnement et d'amende encourues est doublé.

Lorsqu'une personne physiqu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par la loi, commet, dans le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supérieure à un an et inférieure à dix ans, le maximum des peines d'emprisonnement et d'amende encourues est doublé.

Article 132-10

Lorsqu'une personne physiqu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délit, commet, dans le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soit le même délit, soit un délit qui lui est assimilé au regard des règles de la récidive, le maximum des peines d'emprisonnement et d'amende encourues est doublé.

Article 132-11

Modifi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4 JORF 13 juin 2003

Dans les cas où le règlement le prévoit, lorsqu'une personne physiqu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e contravention de la 5e classe, commet, dans le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la même contravention, le maximum de la peine d'amende encourue est porté à 3000 euros.

Dans les cas où la loi prévoit que la récidive d'une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constitue un délit, la récidive est constituée si les faits sont commis dans le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Paragraphe 2 : Personnes morales.

Article 132-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rsqu'une personne moral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par la loi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de 100 000 euros d'amende, engage sa responsabilité pénale par un crime,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est égal à dix fois celui qui est prévu par la loi qui réprime ce crime. Dans ce cas, la personne morale encourt, en outre,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cet article.

Article 132-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rsqu'une personne moral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par la loi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de 100 000 euros d'amende, engage sa responsabilité pénale, dans le délai de dix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par un délit puni de la même peine,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est égal à dix fois celui qui est prévu par la loi qui réprime ce délit.

Lorsqu'une personne moral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par la loi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de 100 000 euros d'amende, engage sa responsabilité pénale, dans le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par un délit puni par la loi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d'une peine d'amende supérieure à 15 000 euros,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est égal à dix fois celui qui est prévu par la loi qui réprime ce délit.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a personne morale encourt, en outre,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cet article.

Article 132-14

Lorsqu'une personne moral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délit, engage sa responsabilité pénale, dans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soit par le même délit, soit par un délit qui lui est assimilé au regard des règles de la récidive,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est égal à dix fois celui qui est prévu par la loi qui réprime ce délit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Article 132-15

Dans les cas où le règlement le prévoit, lorsqu'une personne morale, déjà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e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engage sa responsabilité pénale, dans le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expiration ou de la prescription de la précédente peine, par la même contravention,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est égal à dix fois celui qui est prévu par le règlement qui réprime cette contravention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Paragraphe 3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132-16

Le vol, l'extorsion, le chantage, l'escroquerie et l'abus de confiance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Article 132-16-1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0 JORF 18 juin 1998

Les délits d'agressions sexuelles et d'atteintes sexuelles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Article 132-16-2

Cré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4 JORF 13 juin 2003

Les délits d'homicide involontaire ou d'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prévus par les articles 221-6-1, 222-19-1 et 222-20-1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L. 221-2, L. 234-1, L. 235-1 et L. 413-1 du code de la route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Ils sont également assimilés aux délits mentionnés à l'alinéa précédent lorsqu'ils constituent le second terme de la récidive.

Article 132-16-3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 JORF 13 décembre 2005

Les délits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et de proxénétisme prévus par les articles 225-4-1, 225-4-2, 225-4-8, 225-5 à 225-7 et 225-10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Article 132-16-4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 JORF 13 décembre 2005

Les délits de violences volontaires aux personnes ainsi que tout délit commis avec la circonstance aggravante de violences sont considérés, au regard de la récidive, comme une même infraction.

Article 132-16-5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6 JORF 13 décembre 2005

L'état de récidive légale peut être relevé d'offic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même lorsqu'il n'est pas mentionné dans l'acte de poursuites, dès lors qu'au cours de l'audience la personne poursuivie en a été informée et qu'elle a été mise en mesure d'être assistée d'un avocat et de faire valoir ses observations.

Article 132-16-6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 JORF 13 décembre 2005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pénales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sont prises en compte au titre de la récidive conformément aux règles prévues par la présente sous-section.

Sous-section 3 : Des peines applicables en cas de réitération d'infractions.

Article 132-16-7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Il y a réitération d'infractions pénales lorsqu'une personne a déjà été condamnée définitivement pour un crime ou un délit et commet une nouvelle infraction qui ne répond pas aux conditions de la récidive légale.

Les peines prononcées pour l'infraction commise en réitération se cumulent sans limitation de quantum et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les peines définitivement prononcées lors de la condamnation précédente.

Sous-section 4 : Du prononcé des peines.

Article 132-17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Aucune peine ne peut être appliquée si la juridiction ne l'a expressément prononcée.

La juridiction peut ne prononcer que l'une des peines encourues pour l'infraction dont elle est saisie.

Article 132-18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une infraction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ou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ou de détention criminelle à temps, ou une peine d'emprisonnement qui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deux ans.

Lorsqu'une infraction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ou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temps,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ou de détention criminelle pour une durée inférieure à celle qui est encourue, ou une peine d'emprisonnement qui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an.

Article 132-18-1

Cré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1 JORF 11 août 2007

Pour les crime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a peine d'emprisonnement, de réclusion ou de détention ne peut être inférieure aux seuils suivants :

- 1° Cinq ans, si le crime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ou de détention ;
- 2° Sept ans, si le crime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ou de détention ;
- 3° Dix ans, si le crime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ou de détention ;
- 4° Quinze ans, si le crime est puni de la réclusion ou de la détention à perpétuité.

Toutefois,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inférieure à ces seuils en considération d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de la personnalité de son auteur ou des garanties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présentées par celui-ci.

Lorsqu'un crime est commis une nouvelle fo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a juridiction ne peut prononcer une peine inférieure à ces seuils que si l'accusé présente des garanties exceptionnelles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Article 132-19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17 JORF 13 décembre 2005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une infraction est punie d'une peine d'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pour une durée inférieure à celle qui est encourue.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a juridiction ne peut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qu'après avoir spécialement motivé le choix de cette peine. Toutefois, il n'y a pas lieu à motivation spéciale lorsque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Article 132-19-1

Cré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2 JORF 11 août 2007

Pour les délit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a peine d'emprisonnement ne peut être inférieure aux seuils suivants :

- 1° Un an, si le délit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
- 2° Deux ans, si le déli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
- 3° Trois ans, si le délit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
- 4° Quatre ans, si le délit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Toutefois,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par une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une peine inférieure à ces seuils ou une peine autre que l'emprisonnement en considération d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de la personnalité de son auteur ou des garanties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présentées par celui-ci.

La juridiction ne peut prononcer une peine autre que l'emprisonnement lorsque est commis une nouvelle fo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un des délits suivants :

- 1° Violences volontaires ;
- 2° Délit commis avec la circonstance aggravante de violences ;
- 3° Agression ou atteinte sexuelle ;
- 4°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la juridiction peut toutefois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aux seuil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si le prévenu présente des garanties exceptionnelles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exclusives d'une peine d'amende et d'une ou plusieurs peines complémentaires.

Article 132-20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une infraction est punie d'une peine d'amende, la juridiction peut prononcer une amende d'un montant inférieur à celle qui est encourue.

Article 132-20-1

Cré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3 JORF 11 août 2007

Lorsque l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ou la personnalité de l'auteur le justifient,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avertit, lors du prononcé de la peine, le condamné des conséquences qu'entraînerait une condamnation pour une nouvelle infraction commise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Article 132-21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L'interdiction de tout ou partie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mentionnés à l'article 131-26 ne peut, nonobstant toute disposition contraire, résulter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pénale.

Toute personne frappée d'une interdiction, déchéance ou incapacité quelconque qui résulte de plein droit, en application de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une condamnation pénale, peut, par le jugement de condamnation ou par jugement ultérieur, être relevée en tout ou partie, y compris en ce qui concerne la durée, de cette interdiction, déchéance ou incapacité,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132-22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ou le tribunal saisi peuvent obtenir des parties, de toute administration, de tout établissement financier, ou de toute personne détenant des fonds du prévenu, la communication des renseignements utiles de nature financière ou fiscale, sans que puisse être opposée l'obligation au secret.

Sous-section 5 : De la période de sûreté.

Article 132-23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 JORF 13 décembre 2005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non assortie du sursis, dont la durée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ix ans, prononcée pour les infractions spécialement prévues par la loi, le condamné ne peut bénéficier, pendant une période de sûreté, des dispositions concernant la suspension ou le fractionnement de la peine, le placement à l'extérieur, les permissions de sortir, la semi-liberté et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La durée de la période de sûreté est de la moitié de la peine ou, s'il s'agit d'une condamnation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de dix-huit ans. La cour d'assises ou le tribunal peut toutefois, par décision spéciale, soit porter ces durées jusqu'aux deux tiers de la peine ou, s'il s'agit d'une condamnation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jusqu'à vingt-deux ans, soit décider de réduire ces durées.

Dans les autres cas, lorsqu'elle prononc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cinq ans, non assortie du sursis, la juridiction peut fixer une période de sûreté pendant laquelle le condamné ne peut bénéficier d'aucune d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pein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La durée de cette période de

sûreté ne peut excéder les deux tiers de la peine prononcée ou vingt-deux ans en cas de condamnation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réductions de peines accordées pendant la période de sûreté ne seront imputées que sur la partie de la peine excédant cette durée.

Section 2 : Des modes de personnalisation des peines.

Article 132-24

Modifi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4 JORF 11 août 2007

Dans les limites fixées par la loi, la juridiction prononce les peines et fixe leur régime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et de la personnalité de son auteur. Lorsque la juridiction prononce une peine d'amende, elle détermine son montant en tenant compte également des ressources et des charges de l'auteur de l'infraction.

La nature, le quantum et le régime des peines prononcées sont fixés de manière à concilier la protection effective de la société, la sanction du condamné et les intérêts de la victime avec la nécessité de favoriser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du condamné et de prévenir la commission de nouvelles infractions.

Sous-section 1 : De la semi-liberté, du placement à l'extérieur et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aragraphe 1er : De la semi-liberté et du placement à l'extérieur.

Article 132-25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09 art. 185 II, III, IV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un an d'emprisonnement, elle peut décider à l'égard du condamné qui justifie,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oit de son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ou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encore d'un stage ou d'un emploi temporaire en vue de son insertion sociale, soit de sa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sa famille, soit de la nécessité de subir un traitement médical, que la peine d'emprisonnement sera exécutée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Dans les cas prévus par l'alinéa précédent, la juridiction peut également décider que la peine d'emprisonnement sera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à l'extérieur.

Lorsque a été ordonné le placement ou le maintien en détention du condamn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7-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 juridiction qui fait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peut ordonner l'exécution provisoir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Article 132-26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09 art. 185 II, III, V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e la semi-liberté est astreint à rejoindr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elon l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fonction du temps nécessaire à l'activité, à l'enseignemen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au stage, à la participation à la vie de famille ou au

traitement en vue duquel il a été admis au régime de la semi-liberté. Il est astreint à demeurer dans l'établissement pendant les jours où, pour quelque cause que ce soit, ses obligations extérieures se trouvent interrompues.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u placement à l'extérieur est employé en dehors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à des travaux contrôlés par l'administration.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également soumettre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aux mesure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3 à 132-46.

Paragraphe 2 :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132-26-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peine égale ou inférieure à un an d'emprisonnement, elle peut décider à l'égard du condamné qui justifie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oit de son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ou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encore d'un stage ou d'un emploi temporaire en vue de son insertion sociale, soit de sa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sa famille, soit de la nécessité de subir un traitement médical, que la peine d'emprisonnement sera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ne peut être prise qu'avec l'accord du prévenu préalablement informé qu'il peut demander à être assisté par son avocat, le cas échéant désigné d'office par le bâtonnier à sa demande, avant de donner son accord. S'il s'agit d'un mineur non émancipé, cette décision ne peut être

prise qu'avec l'accord des titulaires de l'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Lorsque a été ordonné le placement ou le maintien en détention du condamn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7-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 juridiction de jugement qui fait 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peut ordonner l'exécution provisoir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132-26-2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mporte, pour le condamné, interdiction de s'absenter de son domicile ou de tout autre lieu désign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dehors des périodes fixées par celui-ci. Les périodes et les lieux sont fixés en tenant compte :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par le condamné ; du fait qu'il suit un enseignement ou une formation, effectue un stage ou occupe un emploi temporaire en vue de son insertion sociale ; de sa participation à la vie de famille ; de la prescription d'un traitement médical.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mporte également pour le condamné l'obligation de répondre aux convocations de toute autorité publique désign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132-26-3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également soumettre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ux mesure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3 à 132-46.

Sous-section 2 : Du fractionnement des peines.

Article 132-27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a juridiction peut, pour motif grave d'ordre médical, familial, professionnel ou social, décider que l'emprisonnement prononcé pour une durée d'un an au plus sera,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trois ans, exécuté par fractions, aucune d'entre elles ne pouvant être inférieure à deux jours.

Article 132-28

Modifi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5 JORF 13 juin 2003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contraventionnelle, la juridiction peut, pour motif grave d'ordre médical, familial, professionnel ou social, décider que la peine d'amende sera,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trois ans, exécutée par fractions. Il en est de même pour les personnes physiques condamnées à la peine de jours-amende ou à la peine de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 le fractionnement de la peine de suspension de permis de conduire n'est toutefois pas possible en cas de délits ou de contraventions pour lesquels la loi ou le règlement prévoit que cette peine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Sous-section 3 : Du sursis simple.

Article 132-29

La juridiction qui prononce une peine peut, dans les cas et selon les conditions prévus ci-après, ordonner qu'il sera sursis à son exécution.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après le prononcé de la peine assortie du sursis simple,

avertit le condamné, lorsqu'il est présent, des conséquences qu'entraînerait une condamnation pour une nouvelle infraction qui serait commise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es articles 132-35 et 132-37.

Paragraphe 1 : Des conditions d'octroi du sursis simple.

Article 132-3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n matièr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le sursis simple ne peut être ordonné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que lorsque le prévenu n'a pas été condamné, au cours des cinq années précédant les faits, pour crime ou délit de droit commun, à une peine de réclusion ou d'emprisonnement.

Le sursis ne peut être ordonné à l'égard d'une personne morale que lorsque celle-ci n'a pas été condamnée, dans le même délai, pour un crime ou un délit de droit commun, à une amende d'un montant supérieur à 60 000 euros.

Article 132-31

Le sursis simple est applicable,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aux condamnations à l'emprisonnement prononcées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à l'amende ou à la peine de jours-amende, aux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6, à l'exception de la confiscation, et aux peines complémentair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10, à l'exception de la confiscation, de la fermeture d'établissement et de l'affichage.

Le sursis simple ne peut être ordonné que pour l'emprisonnement lorsque le prévenu a

été condamné dans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132-30 à une peine autre que la réclusion ou l'emprisonnement.

La juridiction peut décider que le sursis ne s'appliquera à l'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que pour une partie dont elle détermine la durée dans la limite de cinq ans.

Article 132-32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49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e sursis simple est applicable,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morales, aux condamnations à l'amende et aux peines mentionnées aux 2°, 5°, 6° et 7° de l'article 131-39.

Article 132-3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n matière contraventionnelle, le sursis simple ne peut être ordonné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que lorsque le prévenu n'a pas été condamné, au cours des cinq années précédant les faits, pour crime ou délit de droit commun, à une peine de réclusion ou d'emprisonnement.

Le sursis simple ne peut être ordonné à l'égard d'une personne morale que lorsque celle-ci n'a pas été condamnée, dans le même délai, pour crime ou délit de droit commun, à une amende d'un montant supérieur à 15 000 euros.

Article 132-34

Le sursis simple est applicable,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physiques, aux

condamnations aux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14, à l'exception de la confiscation, aux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par les 1°, 2° et 4° de l'article 131-16 ainsi qu'à la peine complémentaire prévu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17. Il est également applicable à l'amende prononcé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morales, le sursis simple est applicable à la peine d'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ou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prévue par les articles 131-42 et 131-43. Il est également applicable à l'amende prononcé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Paragraphe 2 : Des effets du sursis simple.

Article 132-35

La condamnation pour crime ou délit assortie du sursis simple est réputée non avenue si le condamné qui en bénéficie n'a pas commis, dans le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celle-ci, un crime ou un délit de droit commun suivi d'une nouvelle condamnation sans sursis qui emporte révocation.

Article 132-36

Toute nouvell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ou de réclusion révoque le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 quelle que soit la peine qu'il accompagne.

Toute nouvelle condamnation d'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à une peine autre que l'emprisonnement ou la réclusion révoque le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 qui accompagne une peine quelconque autre que l'emprisonnement ou la réclusion.

Article 132-37

La condamnation pour contravention assortie du sursis simple est réputée non avenue si le condamné qui en bénéficie n'a pas commis, pendant le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celle-ci, un crime ou un délit de droit commun ou une contravention de la 5e classe suivie d'une nouvelle condamnation sans sursis emportant révocation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132-36.

Article 132-38

En cas de révocation du sursis simple, la première peine est exécutée sans qu'elle puisse se confondre avec la seconde.

Toutefois, la juridiction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ire que la condamnation qu'elle prononce n'entraîne pas la révocation du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 ou n'entraîne qu'une révocation partielle, pour une durée qu'elle détermine, du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 Elle peut également limiter les effets de la dispense de révocation à l'un ou plusieurs des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s.

Article 132-39

Lorsque le bénéfice du sursis simple n'a été accordé que pour une partie de la peine, la condamnation est réputée non avenue dans tous ses éléments si la révocation du sursis n'a pas été encourue, la peine de jours-amende ou l'amende ou la partie de l'amende non assortie du sursis restant due.

Sous-section 4 :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Paragraphe 1 : Des conditions d'octroi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132-40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a juridiction qui prononce un emprisonnement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ci-après, ordonner qu'il sera sursis à son exécution, la personne physique condamnée étant placée sous le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Après le prononcé de l'emprisonnement assorti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notifie au condamné, lorsqu'il est présent, les obligations à respecter durant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et l'avertit des conséquences qu'entraînerait une condamnation pour une nouvelle infraction commise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ou un manquement aux mesures de contrôle et aux obligations particulières qui lui sont imposées. Il l'informe de la possibilité qu'il aura de voir déclarer sa condamnation non avenue s'il observe une conduite satisfaisante.

Lorsque la juridiction prononc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la pein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il est sursis à son exécution durant le temps de la mise à l'épreuve prévue au premier alinéa.

Article 132-41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5 JORF 13 décembre 2005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6 JORF 13 décembre 2005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est applicable aux condamnations à l'emprisonnement prononcées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en raison d'un crime ou d'un délit de droit commun. Lorsque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il est applicable aux condamnations à l'emprisonnement prononcées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Toutes les fois que la juridiction n'a pas prononcé l'exécution provisoire, la mise à l'épreuve n'est applicable qu'à compter du jour où la condamnation devient exécutoire selon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8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 juridiction pénale ne peut prononcer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à l'encontre d'une personne ayant déjà fait l'objet de deux condamnations assorties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pour des délits identiques ou assimilés au sens des articles 132-16 à 132-16-4 et se trouvan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orsqu'il s'agit soit d'un crime, soit d'un délit de violences volontaires, d'un délit d'agressions ou d'atteintes sexuelles ou d'un délit commis avec la circonstance aggravante de violences, la juridiction ne peut prononcer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à l'encontre d'une personne ayant déjà fait l'objet d'une condamnation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pour des infractions identiques ou assimilées et se trouvan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Toutefois,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e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ne porte que sur une partie de la peine d'emprisonnement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2-42.

Article 132-4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5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31 décembre 2006

La juridiction pénale fixe le délai d'épreuve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ouze mois ni supérieur à trois ans. Lorsque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ce délai

peut être porté à cinq ans. Ce délai peut être porté à sept ans lorsque la personne se trouve à nouveau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Elle peut décider que le sursis ne s'appliquera à l'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que pour une partie dont elle détermine la durée. Cette partie ne peut toutefois excéder cinq ans d'emprisonnement.

Paragraphe 2 : Du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Article 132-43

Créé par Loi 92-683 1992-07-22 JORF 23 juillet 1992 rectificatif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le condamné doit satisfaire aux mesures de contrôle qui sont prévues par l'article 132-44 et à celles des obliga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par l'article 132-45 qui lui sont spécialement imposées. En outre, le condamné peut bénéficier de mesures d'aide destinées à favoriser son reclassement social.

Ces mesures et obligations particulières cessent de s'appliquer et le délai d'épreuve es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le condamné est incarcéré. Le délai d'épreuve est égalemen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le condamné accomplit les obligations du service national.

Article 132-44

Modifié par Loi n°2000-516 du 15 juin 2000 - art. 124 JORF 16 juin 2000

Les mesures de contrôle auxquelles le condamné doit se soumettre sont les suivantes :

- 1° Répondre aux convocat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du travailleur social désigné ;

- 2° Recevoir les visites du travailleur social et lui communiquer les renseignements ou documents de nature à permettre le contrôle de ses moyens d'existence et de l'exécution de ses obligations ;
- 3° Prévenir le travailleur social de ses changements d'emploi ;
- 4° Prévenir le travailleur social de ses changements de résidence ou de tout déplacement dont la durée excéderait quinze jours et rendre compte de son retour ;
- 5° Obtenir l'autorisation préalab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tout déplacement à l'étranger et, lorsqu'il est de nature à mettre obstacle à l'exécution de ses obligations, pour tout changement d'emploi ou de résidence.

Article 132-45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9 JORF 7 mars 2007

La juridiction de condamnation o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imposer spécialement au condamné l'observation de l'une ou de plusieurs des obligations suivantes :

- 1° 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uivre un enseignement ou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
- 2° Etablir sa résidence en un lieu déterminé ;
- 3° Se soumettre à des mesures d'examen médical, de traitement ou de soins, même sous le régime de l'hospitalisation. Ces mesures peuvent consister en l'injonction thérapeutique prévue par les articles L. 3413-1 à L. 3413-4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orsqu'il apparaît que le condamné fait usage de stupéfiants ou fait une consommation habituelle et excessive de boissons alcooliques ;

- 4° Justifier qu'il contribue aux charges familiales ou acquitte régulièrement les pensions alimentaires dont il est débiteur ;
- 5° Réparer en tout ou partie, en fonction de ses facultés contributives, les dommages causés par l'infraction, même en l'absence de décision sur l'action civile ;
- 6° Justifier qu'il acquitte en fonction de ses facultés contributives les sommes dues au Trésor public à la suite de la condamnation ;
- 7° S'abstenir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déterminés par les catégories de permis prévues par le code de la route ;
- 8° Ne pas se livrer à l'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9° S'abstenir de paraître en tout lieu spécialement désigné ;
- 10° Ne pas engager de paris, notamment dans les organismes de paris mutuels ;
- 11° Ne pas fréquenter les débits de boissons ;
- 12° Ne pas fréquenter certains condamnés, notamment les 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
- 13° S'abstenir d'entrer en relation avec certaines personnes, notamment la victime de l'infraction.
- 14° Ne pas détenir ou porter une arme ;
- 15° En cas d'infraction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accomplir, à se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 16° S'abstenir de diffuser tout ouvrage ou oeuvre audiovisuelle dont il serait l'auteur ou le co-auteur et qui porterait, en tout ou partie, sur l'infraction commise et s'abstenir de toute intervention publique relative à cette infraction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ne sont applicables qu'en cas de condamnation pour crimes ou délits d'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d'agressions sexuelles ou d'atteintes sexuelles ;

17° Remettre ses enfants entre les mains de ceux auxquels la garde a été confiée par décision de justice ;

18° 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

19° En cas d'infraction commise soit contre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soit contre ses enfants ou ceux de son conjoint, concubin ou partenaire, résider hors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u couple et, le cas échéant, s'abstenir de paraître dans ce domicile ou cette résidence ou aux abords immédiats de celui-ci, ainsi que, si nécessaire, faire l'objet d'une prise en charge sanitaire, sociale ou psychologique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19°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ncien conjoint ou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a personne ayant été liée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 domicile concerné étant alors celui de la victime.

Article 132-45-1

Créé par Loi n°2007-1198 du 10 août 2007 - art. 8 JORF 11 août 2007 en vigueur le 1er mars 2008

Sauf décision contraire de la juridiction, la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pour l'une des infractions pour lesquelles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est soumise à une injonction de soi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3711-1 et suivant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s'il est établi qu'ell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après une expertise médicale ordonn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En cas d'injonction de soins, le président avertit le condamné qu'aucun traitement ne pourra être entrepris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s'il refuse les soins qui lui seront proposés, l'emprisonnement prononcé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qui n'est pas intégralement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e président informe le condamné qu'il aura la possibilité de commencer un traitement pendant l'exécution de cette peine.

Article 132-46

Les mesures d'aide ont pour objet de seconder les efforts du condamné en vue de son reclassement social.

Ces mesures, qui s'exercent sous forme d'une aide à caractère social et, s'il y a lieu, d'une aide matérielle, sont mises en oeuvre par le service de probation avec la participation, le cas échéant, de tous organismes publics et privés.

Paragraphe 3 : De la révocation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en cas de nouvelle infraction.

Article 132-4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2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3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peut être révoqué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2-48.

Il peut également l'êtr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lorsque le condamné n'a pas satisfait aux mesures de contrôle et aux obligations particulières qui lui étaient imposées. Tout manquement à ces mesures et obligations commis après que la mise à l'épreuve est devenue exécutoire peut justifier la révocation du sursis. Toutefois, la révocation ne peut être ordonnée avant que la condamnation ait acquis un caractère définitif. Si cette révocation est ordonnée alors que la condamnation n'avait pas encore acquis un caractère définitif, elle devient caduque dans le cas où cette condamnation serait ultérieurement infirmée ou annulée.

Article 132-48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9 JORF 27 novembre 2003

Si le condamné commet,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un crime ou un délit de droit commun suivi d'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après avi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rdonner la révocation en totalité ou en partie du ou des sursis antérieurement accordés. Cette révocation ne peut être ordonnée pour des infractions commises avant que la condamnation assortie du sursis ait acquis un caractère définitif.

La mesur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est exécutoire de plein droit en cas de révocation total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Article 132-49

La révocation partielle du sursis ne peut être ordonnée qu'une fois.

La décision ordonnant la révocation partielle du sursis ne met pas fin au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et n'attache pas à la condamnation les effets d'une condamnation sans sursis.

Article 132-50

Si la juridiction ordonne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l'emprisonnement et si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 été accordé après une première condamnation déjà prononcée sous le même bénéfice, la première peine est d'abord exécutée à moins que,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elle ne dispense le condamné de tout ou partie de son exécution.

Article 132-51

Lorsque la juridiction ordonne la révocation du sursis en totalité ou en partie, elle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exécutoire par provision, faire incarcérer le condamné.

Paragraphe 4 : Des effets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132-52

La condamnation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est réputée non avenue lorsque le condamné n'a pas fait l'objet d'une décision ordonnant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l'emprisonnement.

Lorsque le bénéfic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n'a été accordé que pour une

partie de l'emprisonnement, la condamnation est réputée non avenue dans tous ses éléments si la révocation du sursis n'a pas été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132-53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3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Si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 été accordé après une première condamnation déjà prononcée sous le même bénéfice, cette première condamnation est réputée non avenue si la seconde vient elle-même à être déclarée ou réputée non avenue dans les conditions et les délais prévu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2-52 ci-dessus ou par l'article 74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us-section 5 : Du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132-5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7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8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a juridiction peu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articles 132-40 et 132-41, prévoir que le condamné accomplira, pour une durée de quarante à deux cent dix heures,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u profit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 à mettre en oe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La juridiction peut décider que les obligations imposées au condamné perdureront au-delà de l'accomplissemen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dans un délai qui ne peut excéder douze mois.

Le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e peut être ordonné lorsque le prévenu le refuse ou n'est pas présent à l'audienc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ont régies par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1-22 à 131-24. Dès l'accomplissement de la totalité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a condamnation est considérée comme non avenue sauf s'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prévue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2-55.

Article 132-5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7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Au cours du délai fixé par la juridiction pour 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 condamné doit, outre l'obligation d'accomplir le travail prescrit, satisfaire aux mesures de contrôle suivantes :

- 1° Répondre aux convocat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du travailleur social désigné ;
- 2° Se soumettre à l'examen médical préalable à l'exécution de la peine qui a pour but de rechercher s'il n'est pas atteint d'une affection dangereuse pour les autres travailleurs et de s'assurer qu'il est médicalement apte au travail auquel il est envisagé de l'affecter ;

- 3° Justifier des motifs de ses changements d'emploi ou de résidence qui font obstacle à 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
- 4° Obtenir l'autorisation préalab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tout déplacement qui ferait obstacle à 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
- 5° Recevoir les visites du travailleur social et lui communiquer tous documents ou renseignements relatifs à l'exécution de la peine.

Il doit également satisfaire à celles des obliga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à l'article 132-45 que la juridiction lui a spécialement imposées et dont celle-ci a précisé la durée qui ne peut excéder douze mois.

Article 132-56

Le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uit les mêmes règles que celles qui sont prévues pour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à l'exception de celles qui sont contenues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132-42 et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132-52 ;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st assimilée à 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et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131-22 assimilé au délai d'épreuve.

Article 132-5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79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Lorsqu'une condamnation pour un délit de droit commun comportant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de six mois au plus a été prononcé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lorsque cette condamnation n'est plus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e

voie de recours par le condamné, ordonner qu'il sera sursis à l'exécution de cette peine et que le condamné accomplira, au profit d'une collectivité publique, d'un établissement public ou d'une association,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on rémunéré d'une durée qui ne pourra être inférieure à quarante heures ni supérieure à deux cent-dix heures. L'exécution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st soumise aux prescrip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2-54 et des articles 132-55 et 132-56.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décider que le condamné effectuera une peine de jours-amen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31-5 et 131-25.

Sous-section 6 : De la dispense de peine et de l'ajournement.

Article 132-58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sauf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132-63 à 132-65, en matière contraventionnelle, la juridiction peut, après avoir déclaré le prévenu coupable et statué, s'il y a lieu, sur la confiscation des objets dangereux ou nuisibles, soit dispenser le prévenu de toute autre peine, soit ajourner le prononcé de celle-ci dans les cas et conditions prévus aux articles ci-après.

En même temps qu'elle se prononce sur la culpabilité du prévenu, la juridiction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Paragraphe 1 : De la dispense de la peine.

Article 132-59

La dispense de peine peut être accordée lorsqu'il apparaît que le reclassement du

coupable est acquis, que le dommage causé est réparé et que le trouble résultant de l'infraction a cessé.

La juridiction qui prononce une dispense de peine peut décider que sa décision ne sera pas mentionnée au casier judiciaire.

La dispense de peine ne s'étend pas au paiement des frais du procès.

Paragraphe 2 : De l'ajournement simple.

Article 132-60

La juridiction peut ajourner le prononcé de la peine lorsqu'il apparaît que le reclassement du coupable est en voie d'être acquis, que le dommage causé est en voie d'être réparé et que le trouble résultant de l'infraction va cesser.

Dans ce cas, elle fixe dans sa décision la date à laquelle il sera statué sur la peine.

L'ajournement ne peut être ordonné que si la personne physique prévenue ou le représentant de la personne morale prévenue est présent à l'audience.

Article 132-61

A l'audience de renvoi, la juridiction peut soit dispenser le prévenu de peine, soit prononcer la peine prévue par la loi, soit ajourner une nouvelle fois le prononcé de la peine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2-60.

Article 132-62

La décision sur la peine intervient au plus tard un an après la première décision d'ajournement.

Paragraphe 3 : De l'ajournement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132-63

Lorsque le prévenu, personne physique, est présent à l'audience, la juridiction peut ajourner le prononcé de la peine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définies à l'article 132-60 en plaçant l'intéressé sous le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pendant un délai qui ne peut être supérieur à un an.

Sa décision est exécutoire par provision.

Article 132-64

Le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tel qu'il résulte des articles 132-43 à 132-46, est applicable à l'ajournement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132-6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80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5

A l'audience de renvoi, la juridiction peut, en tenant compte de la conduite du coupable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soit le dispenser de peine, soit prononcer la peine prévue par la loi, soit ajourner une nouvelle fois le prononcé de la peine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2-63.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trente jours avant l'audience de renvoi, prononcer lui-même la dispense de pein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tenu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 décision sur la peine intervient au plus tard un an après la première décision d'ajournement.

Paragraphe 4 : De l'ajournement avec injonction.

Article 132-66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lois ou les règlements qui répriment des manquements à des obligations déterminées, la juridiction qui ajourne le prononcé de la peine peut enjoindre à la personne physique ou à la personne morale déclarée coupable de se conformer à une ou plusieurs des prescriptions prévues par ces lois ou règlements.

La juridiction impartit un délai pour l'exécution de ces prescriptions.

Article 132-67

La juridiction peut assortir l'injonction d'une astreinte lorsque celle-ci est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 dans ce cas, elle fixe, dans les limites prévue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e taux de l'astreinte et la durée maximale pendant laquelle celle-ci sera applicable.

L'astreinte cesse de courir le jour où les prescriptions énumérées par l'injonction ont été exécutées.

Article 132-68

L'ajournement avec injonction ne peut intervenir qu'une fois ; il peut être ordonné même si la personne physique prévenue ou le représentant de la personne morale prévenue n'est pas présent.

Dans tous les cas, la décision peut être assortie de l'exécution provisoire.

Article 132-69

A l'audience de renvoi, lorsque les prescriptions énumérées par l'injonction ont été exécutées dans le délai fixé, la juridiction peut soit dispenser le coupable de peine,

soit prononcer les peines prévue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orsque les prescriptions ont été exécutées avec retard, la juridiction liquide, s'il y a lieu, l'astreinte et prononce les peines prévue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orsqu'il y a inexécution des prescriptions, la juridiction liquide s'il y a lieu l'astreinte, prononce les peines et peut en outre, dans les cas et selon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ordonner que l'exécution de ces prescriptions sera poursuivie d'office aux frais du condamné.

Sauf dispositions contraires, la décision sur la peine intervient au plus tard un an après la décision d'ajournement.

Article 132-70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10 art. 198 V JORF 10 mars 2004

Le taux de l'astreinte, tel qu'il a été fixé par la décision d'ajournement, ne peut être modifié.

Pour la liquidation de l'astreinte, la juridiction apprécie l'inexécution ou le retard dans l'exécution des prescriptions en tenant compte, s'il y a lieu, de la survenance d'événements qui ne sont pas imputables au coupable.

L'astreinte ne donne pas lieu à contrainte judiciaire.

Section 3 : De la définition de certaines circonstances entraînant l'aggravation, la diminution ou l'exemption des peines.

Article 132-7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Constitue une bande organisée au sens de la loi tout groupement formé ou toute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une ou de plusieurs infractions.

Article 132-71-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JORF 7 mars 2007

Le guet-apens consiste dans le fait d'attendre un certain temps une ou plusieurs personnes dans un lieu déterminé pour commettre à leur rencontre une ou plusieurs infractions.

Article 132-7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La préméditation est le dessein formé avant l'action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déterminé.

Article 132-73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L'effraction consiste dans le forçement, la dégradation ou la destruction de tout dispositif de fermeture ou de toute espèce de clôture. Est assimilé à l'effraction l'usage de fausses clefs, de clefs indûment obtenues ou de tout instrument pouvant être frauduleusement employé pour actionner un dispositif de fermeture sans le forcer ni le dégrader.

Article 132-7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L'escalade est le fait de s'introduire dans un lieu quelconque, soit par-dessus un élément de clôture, soit par toute ouverture non destinée à servir d'entrée.

Article 132-7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Est une arme tout objet conçu pour tuer ou blesser.

Tout autre objet susceptible de présent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est assimilé à une arme dès lors qu'il est utilisé pour tuer, blesser ou menacer ou qu'il est destiné, par celui qui en est porteur, à tuer, blesser ou menacer.

Est assimilé à une arme tout objet qui, présentant avec l'arme définie au premier alinéa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créer une confusion, est utilisé pour menacer de tuer ou de blesser ou est destiné, par celui qui en est porteur, à menacer de tuer ou de blesser.

L'utilisation d'un animal pour tuer, blesser ou menacer est assimilée à l'usage d'une arm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Article 132-76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8 JORF 10 mars 2004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es peines encourues pour un crime ou un délit sont aggravé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La circonstance aggravante définie au premier alinéa est constituée lorsque l'infraction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propos, écrits, images, objets ou actes de toute nature portant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victime ou d'un

groupe de personnes dont fait partie la victime à raison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Article 132-7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es peines encourues pour un crime ou un délit sont aggravé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La circonstance aggravante définie au premier alinéa est constituée lorsque l'infraction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propos, écrits, utilisation d'images ou d'objets ou actes de toute nature portant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victime ou d'un groupe de personnes dont fait partie la victime à raison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vraie ou supposée.

Article 132-78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JORF 10 mars 2004

La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est,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le cas échéant, d'identifier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a durée d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une personne ayant commis un crime ou un délit est réduit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d'éviter que l'infraction ne produise un dommage ou d'identifier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a personne a permis soit d'éviter la réalisation d'une infraction connexe de même nature que le crime ou le délit pour lequel elle était poursuivie, soit de faire cesser une telle infraction, d'éviter qu'elle ne produise un dommage ou d'en identifier les auteurs ou complices.

Aucune condamnation ne peut être prononcée sur le seul fondement de déclarations émanant de personnes ayant fait l'objet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32-79

Cré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37 JORF 22 juin 2004

Lorsqu'un moyen de cryptologie au sens de l'article 29 de la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a été utilisé pour préparer ou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ou pour en faciliter la préparation ou la commission, le maximum d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est relevé ainsi qu'il suit :

- 1° Il est porté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2° Il est porté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3° Il est porté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4° Il est porté à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
- 5° Il est porté à dix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
- 6° Il est porté à sept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

7° Il est porté au doub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au plu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toutefois pas applicables à l'auteur ou au complice de l'infraction qui,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leur a remis la version en clair des messages chiffrés ainsi que les conventions secrètes nécessaires au déchiffrement.

Article 132-80

Cré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7 JORF 5 avril 2006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es peines encourues pour un crime ou un délit sont aggravé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e conjoint, le concubin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a circonstance aggravante prévue au premier alinéa est également constituée lorsque les faits sont commis par l'ancien conjoint, l'ancien concubin ou l'ancien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applicables dès lors que l'infraction est commise en raison des relations ayant existé entre l'auteur des faits et la victime.

CHAPITRE III : De l'extinction des peines et de l'effacement des condamnations.

Article 133-1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53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e décès du condamné ou la dissolution de la personne morale, sauf dans le cas où la dissolution est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pénale, la grâce et l'amnistie, empêchent ou arrêtent l'exécution de la peine. Toutefois, il peut être procédé au recouvrement de l'amende et des frais de justice ainsi qu'à l'exécution de la confiscation après le décès du condamné ou après la dissolution de la personne morale jusqu'à la clôture des opérations de liquidation.

La prescription de la peine empêche l'exécution de celle-ci.

La réhabilitation efface la condamnation.

Section 1 : De la prescription.

Article 133-2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13-5, les peines prononcées pour un crime se prescrivent par vingt années révolu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Article 133-3

Les peines prononcées pour un délit se prescrivent par cinq années révolu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Article 133-4

Modifié par Loi - art. 81 (V) JORF 31 décembre 2002

Les peines prononcées pour une contravention se prescrivent par trois années révolu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Article 133-5

Les condamnés par contumace ou par défaut dont la peine est prescrite ne sont pas admis à purger la contumace ou à former opposition.

Article 133-6

Les obligations de nature civile résultant d'une décision pénale devenue définitive se prescrivent d'après les règles du code civil.

Section 2 : De la grâce.

Article 133-7

La grâce emporte seulement dispense d'exécuter la peine.

Article 133-8

La grâce ne fait pas obstacle au droit, pour la victime, d'obtenir réparation du préjudice causé par l'infraction.

Section 3 : De l'amnistie.

Article 133-9

L'amnistie efface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Elle entraîne, sans qu'elle puisse donner lieu à restitution, la remise de toutes les peines. Elle rétablit l'auteur ou le complice de l'infraction dans le bénéfice du sursis qui avait pu lui être accordé lors d'une condamnation antérieure.

Article 133-10

L'amnistie ne préjudicie pas aux tiers.

Article 133-11

Il est interdit à toute personne q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a connaissance de condamnations pénales, de sanctions disciplinaires ou professionnelles ou d'interdictions, déchéances et incapacités effacées par l'amnistie, d'en rappeler l'existence sous quelque forme que ce soit ou d'en laisser subsister la mention dans un document quelconque. Toutefois, les minutes des jugements, arrêts et décisions échappent à cette interdiction. En outre, l'amnistie ne met pas obstacle à l'exécution de la publication ordonnée à titre de réparation.

Section 4 : De la réhabilitation.

Article 133-12

Toute personne frappée d'une peine criminelle, correctionnelle ou contraventionnelle peut bénéficier, soit d'une réhabilitation de plein droi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soit d'une réhabilitation judiciaire accord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133-13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3 JORF 7 mars 2007 en vigueur le 7 mars 2008

La réhabilitation est acquise de plein droit à la personne physique condamnée qui n'a,

dans les délais ci-après déterminés, subi aucune condamnation nouvelle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

- 1° Pour la condamnation à l'amende ou à la peine de jours-amende après 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du paiement de l'amende ou du montant global des jours-amende, de l'expiration de la contrainte judiciaire ou du délai de l'incarcér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25 ou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
- 2° Pour la condamnation unique soit à un emprisonnement n'excédant pas un an, soit à une peine autre que la réclusion criminelle, la détention criminelle, l'emprisonnement, l'amende ou le jour-amende, après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soit de l'exécution de la peine, soit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
- 3° Pour la condamnation unique à un emprisonnement n'excédant pas dix ans ou pour les condamnations multiples à l'emprisonnement dont l'ensemble ne dépasse pas cinq ans, après un délai de dix ans à compter soit de l'expiration de la peine subie, soit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Les délai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doublés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des fait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orsqu'il s'agit de condamnations assorties en tout ou partie du sursis,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ou du sursis avec 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s délais de réhabilitation courent, pour chacune de ces condamnations et y compris en cas de condamnations multipl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non avenue.

Article 133-13

Modifié par Loi 2004-204 2004-03-10 art. 198 V JORF 10 mars 2004

La réhabilitation est acquise de plein droit à la personne physique condamnée qui n'a, dans les délais ci-après déterminés, subi aucune condamnation nouvelle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

- 1° Pour la condamnation à l'amende ou à la peine de jours-amende après 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du paiement de l'amende ou du montant global des jours-amende, de l'expiration de la contrainte judiciaire ou du délai de l'incarcér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25 ou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
- 2° Pour la condamnation unique soit à un emprisonnement n'excédant pas un an, soit à une peine autre que la réclusion criminelle, la détention criminelle, l'emprisonnement, l'amende ou le jour-amende, après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soit de l'exécution de la peine, soit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
- 3° Pour la condamnation unique à un emprisonnement n'excédant pas dix ans ou pour les condamnations multiples à l'emprisonnement dont l'ensemble ne dépasse pas cinq ans, après un délai de dix ans à compter soit de l'expiration de la peine subie, soit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Article 133-14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3 JORF 7 mars 2007 en vigueur le 7 mars 2008

La réhabilitation est acquise de plein droit à la personne morale condamnée qui n'a, dans les délais ci-après déterminés, subi aucune condamnation nouvelle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

- 1° Pour la condamnation à l'amende, après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u jour du paiement de l'amende ou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

2° Pour la condamnation à une peine autre que l'amende ou la dissolution, après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soit de l'exécution de la peine, soit de la prescription accomplie.

Les délai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doublés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des fait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orsqu'il s'agit d'une condamnation assortie du sursis, les délais de réhabilitation courent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non avenue.

Article 133-15

Les peines dont la confusion a été accordée sont considérées comme constituant une peine unique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3-13 et 133-14.

Article 133-16

Modifi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41 JORF 18 juin 1998

La réhabilitation produit les mêmes effets que ceux qui sont prévus par les articles 133-10 et 133-11. Elle efface toutes les incapacités et déchéances qui résultent de la condamnation.

Toutefois,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au suivi socio-judiciaire prévu à l'article 131-36-1 ou à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la réhabilitation ne produit ses effets qu'à la fin de la mesure.

La réhabilitation n'interdit pas la prise en compte de la condamnation, par les seules autorités judiciaires, en cas de nouvelles poursuites, pour l'application des règles sur la récidive légale.

Article 133-17

Pour l'application des règles sur la réhabilitation, la remise gracieuse d'une peine équivaut à son exécution.

LIVRE 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TITRE Ier :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SOUS-TITRE Ier :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CHAPITRE Ier : Du génocide.

Article 211-1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Constitue un génocide le fait, en exécution d'un plan concerté tendant à la destruction totale ou partielle d'un groupe national, ethnique, racial ou religieux, ou d'un groupe déterminé à partir de tout autre critère arbitraire, de commettre ou de faire commettre, à l'encontre de membres de ce groupe, l'un des actes suivants :

- 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
- atteinte grave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
- soumission à des conditions d'existence de nature à entraîner la destruction totale ou partielle du groupe ;

- mesures visant à entraver les naissances ;
- transfert forcé d'enfants.

Le génocide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 crime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CHAPITRE II : Des autres crimes contre l'humanité.

Article 212-1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 déportation, la réduction en esclavage ou la pratique massive et systématique d'exécutions sommaires, d'enlèvements de personnes suivis de leur disparition, de la torture ou d'actes inhumains, inspirées par des motifs politiques, philosophiques, raciaux ou religieux et organisées en exécution d'un plan concerté à l'encontre d'un groupe de population civile sont punies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12-2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orsqu'ils sont commis en temps de guerre en exécution d'un plan concerté contre ceux qui combattent le système idéologique au nom duquel sont perpétrés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les actes visés à l'article 212-1 sont punis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12-3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 participation à un groupement formé ou à une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e l'un des crimes définis par les articles 211-1, 212-1 et 212-2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 crime prévu au présent article.

CHAPITRE III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213-1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sous-t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4°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Article 213-2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titre.

Article 213-3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e crimes contre l'human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2°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Article 213-4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uteur ou le complice d'un crime visé par le présent sous-titre ne peut être exonéré de sa responsabilité du seul fait qu'il a accompli un acte prescrit ou autorisé par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ou un acte commandé par l'autorité légitime. Toutefois, la juridiction tient compte de cette circonstance lorsqu'elle détermine la peine et en fixe le montant.

Article 213-5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ction publique relative aux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sous-titre, ainsi que les peines prononcées, sont imprescriptibles.

SOUS-TITRE II : Des crimes contre l'espèce humaine

CHAPITRE Ier : Des crimes d'eugénisme et de clonage reproductif

Article 214-1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mettre en oeuvre une pratique eugénique tendant à l'organisation de la sélection des personnes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7 5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14-2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une intervention ayant pour but de faire naître un enfant génétiquement identique à une autre personne vivante ou décédée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7 5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14-3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14-1 et 214-2 sont punies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 5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bande organisé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14-4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 participation à un groupement formé ou à une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e l'un des crimes définis par les articles 214-1 et 214-2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 500 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CHAPITRE II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215-1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sous-t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4°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
- 5° La confiscation du matériel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Article 215-2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sous-titre.

Les dispositions des sept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31-30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215-3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sous-tit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Article 215-4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JORF 7 août 2004

L'action publique relative aux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sous-titre, ainsi que les peines prononcées, se prescrivent par trente ans.

En outre, pour le crime de clonage reproductif prévu par l'article 214-2, le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à courir, lorsque le clonage a conduit à la naissance d'un enfant, qu'à partir de la majorité de cet enfant.

CHAPITRE II : Des autres crimes contre l'humanité.

CHAPITRE Ier : Des atteintes à la vie de la personne

Section 1 : D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Article 221-1

Le fait de donner volontairement la mort à autrui constitue un meurtre. Il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1-2

Le meurtre qui précède, accompagne ou suit un autre crime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 meurtre qui a pour objet soit de préparer ou de faciliter un délit, soit de favoriser la fuite ou d'assurer l'impunité de l'auteur ou du complice d'un délit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1-3

Modifié par Loi n°94-89 du 1 février 1994 - art. 6 () JORF 2 février 1994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e meurtre commis avec préméditation constitue un assassinat. Il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Toutefois, lorsque la victime est

un mineur de quinze ans et que l'assassinat est précédé ou accompagné d'un viol,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a cour d'assises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soit porter la période de sûreté jusqu'à trente ans, soit, si elle prononc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décider qu'aucune des mesure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23 ne pourra être accordée au condamné ; en cas de commutation de la peine, et sauf si le décret de grâce en dispose autrement, la période de sûreté est alors égale à la durée de la peine résultant de la mesure de grâce.

Article 221-4

Modifi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0 () JORF 5 avril 2006

Le meurtre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il est commis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3°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6°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7°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bande organisée.

9°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Toutefois, lorsque la victime est un mineur de quinze ans et que le meurtre est précédé ou accompagné d'un viol,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a cour d'assises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soit porter la période de sûreté jusqu'à trente ans, soit, si elle prononc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décider qu'aucune des mesure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23 ne pourra être accordée au condamné ; en cas de commutation de la peine, et sauf si le

décret de grâce en dispose autrement, la période de sûreté est alors égale à la durée de la peine résultant de la mesure de grâce.

Article 221-5

Le fait d'attenter à la vie d'autrui par l'emploi ou l'administration de substances de nature à entraîner la mort constitue un empoisonnement.

L'empoisonnement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Il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il est commis dans l'une des circonstances prévues aux articles 221-2, 221-3 et 221-4.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1-5-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e fait de faire à une personne des offres ou des promesses ou de lui proposer des dons, présents ou avantages quelconques afin qu'elle commette un assassinat ou un empoisonnement est puni, lorsque ce crime n'a été ni commis ni tenté,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1-5-2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221-5-3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crimes d'assassinat ou d'empoisonnement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mort de la victim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empoisonnement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éviter la mort de la victim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Section 2 : Des atteintes involontaires à la vie.

Article 22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causer,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3,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a mort d'autrui constitue un homicide involontaire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En cas d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es peines encouru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1-6-1

Cré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1 () JORF 13 juin 2003

Lorsque la maladresse, l'imprudence, l'inattention, la négligence ou l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législative ou réglementai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 par l'article 221-6 est commis par le conducteur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homicide involontair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lorsque :

- 1° Le conducteur a commis un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ci-après ;
- 2° Le conducteur se trouvai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était sous l'empire d'un état alcoolique caractérisé par une concentration d'alcool dans le sang ou dans l'air expiré égale ou supérieure aux taux fixé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du code de la route,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ce code et destinées à établir l'existence d'un état alcoolique ;
- 3° Il résulte d'une analyse sanguine que le conducteur avait fait usage de substances ou de plantes classées comme stupéfiants,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a route destinées à établir s'il conduisait en ayant fait usage de stupéfiants ;

- 4° Le conducteur n'était pas titulaire du permis de conduire exigé par la loi ou le règlement ou son permis avait été annulé, invalidé, suspendu ou retenu ;
- 5° Le conducteur a commis un dépassement de la vitesse maximale autorisée égal ou supérieur à 50 km/h ;
- 6° Le conducteur, sachant qu'il vient de causer ou d'occasionner un accident, ne s'est pas arrêté et a tenté ainsi d'échapper à la responsabilité pénale ou civile qu'il peut encourir.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 000 Euros d'amende lorsque l'homicide involontaire a été commis avec deux ou plus des circonstances mentionnées aux 1° et suivant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1-7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1-6.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les cas visés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221-6, est en outre encourue la peine mentionnée au 4° de l'article 131-39.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1-8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2°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1-6-1, la suspension ne peut pas être assortie du sursis, même partiellement, et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1° à 6° et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221-6-1, la durée de cette suspension est de dix ans au plus ;
- 4°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4° bis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
- 5°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6°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7°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1-6-1,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y compris ceux pour la conduite desquels le permis de conduire n'est pas exigé,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8°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1-6-1, l'obligation d'accomplir, à se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9°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1-6-1, l'immobilisation, pendant une durée d'un an au plus, du véhicule dont le condamné s'est servi pour commettre l'infraction, s'il en est le propriétaire ;

10°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1-6-1, la confiscation du véhicule dont le condamné s'est servi pour commettre l'infraction, s'il en est le propriétaire.

Toute condamnation pour les délits prévus par les 1° à 6° et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221-6-1 donne lieu de plein droit à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un nouveau permis pendant dix ans au plus. En cas de récidive, la durée de l'interdiction est portée de plein droit à dix ans et le tribunal peut,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prévoir que cette interdiction est définitive.

Article 221-9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section 1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3° La confisc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21 ;

4°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221-9-1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3 () JORF 13 décembre 2005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prévus par la section 1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Article 221-10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section 2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affichage ou de diffusion de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131-35.

Article 221-11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section I du présent chapitre.

CHAPITRE II :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Section 1 : Des atteintes 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Paragraphe 1 : Des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Article 222-1

Le fait de soumettre une personne à des tortures ou à des actes de barbarie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2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lle précède, accompagne ou suit un crime autre que le meurtre ou le viol.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commise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5° bis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5° ter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6°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7°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9° Avec préméditation ou avec guet-apens ;

10°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égalemen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accompagnée d'agressions sexuelles autres que le viol.

La peine encourue est portée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commis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e mineu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commise en bande organisée ou de manière habituell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ou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5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a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6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lle a entraîné la mort de la victime sans intention de la donne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6-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5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paragraph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222-6-2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paragraphe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des crimes prévus au présent paragraphe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Paragraphe 2 : Des violences.

Article 222-7

Les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sans intention de la donner sont punies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2-8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7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commise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 5° bis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 5° ter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 6°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7°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9° Avec préméditation ou avec guet-apens ;
- 10°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La peine encourue est portée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7 est commis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e mineu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violences aya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sont punie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222-10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9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commise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5° bis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5° ter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6°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7°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9° Avec préméditation ou avec guet-apens ;

10°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La peine encourue est port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9 est commis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e mineu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violences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sont punie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12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54 ()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1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5° bis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5° ter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6°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7°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9° Avec préméditation ou avec guet-apens ;

10°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

11° Dan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

12° Par un majeur agissant avec l'aide ou l'assistance d'un mineur ;

13° Dans un moyen de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ou dans un lieu destiné à l'accès à un moyen de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

14°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Les peines encouru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11 est commis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e mineur.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infraction est commise dans deux des circonstances prévues aux 1° et suivants d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dans trois de ces circonstance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cédent alinéa.

Article 222-13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44 II, art. 48 II , art. 54 2°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s violences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de travail inférieure ou égale à huit jours ou n'ayant entraîné aucune incapacité de travail sont punie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

- 1°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2°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eur auteur.
- 3° Sur un ascendant légitime ou naturel ou sur les père ou mère adoptifs ;
- 4° Sur un magistrat, un juré,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 4° bis Sur le conjoint, les ascendants et l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4° ou sur toute autre personne vivant

- habituellement à leur domicile, en raison des fonctions exercées par ces personnes ;
- 4° ter Sur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sur 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 5° Sur un témoin, une victime ou 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s faits,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 5° bis A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
- 5° ter A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 6°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7°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 8°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9° Avec préméditation ou avec guet-apens ;
- 10°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
- 11°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
- 12° Par un majeur agissant avec l'aide ou l'assistance d'un mineur.

13° Dans un moyen de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ou dans un lieu destiné à l'accès à un moyen de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

14°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Les peines encouru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au premier alinéa est commise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e mineur. Les peines sont égaleme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infraction,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inférieure ou égale à huit jours, est commise dans deux des circonstances prévues aux 1° et suivants d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dans trois de ces circonstances.

Article 222-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violences habituelles sur un mineur de quinze ans ou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eur auteur sont punies :

1°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s ont entraîné la mort de la victime ;

2°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s o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

3°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o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

4°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n'ont pas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cas prévus aux 1° et 2°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2-14-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bande organisée ou avec guet-apens, les violences commises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sur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un membre du personnel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sur un sapeur-pompier civil ou militaire ou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dans l'exercice, à l'occasion de l'exercice ou en raison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sont punies :

1°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s ont entraîné la mort de la victime ;

2°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s o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

3°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s o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

4°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d'amende lorsqu'elles n'ont pas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est, à la demande de la victime ou de la personne poursuivie, constatée par un médecin exper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57 et suivant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222-15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L'administration de substances nuisibles ayant porté atteinte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autrui est punie des pei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222-7 à 222-14-1 suivant les distinctions prévues par ces article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dans les mêmes cas que ceux prévus par ces articles.

Article 222-15-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Constitue une embuscade le fait d'attendre un certain temps et dans un lieu déterminé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un membre du personnel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ainsi qu'un sapeur-pompier civil ou militaire ou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dans le but, caractérisé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e commettre à son encontre,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es violences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L'embuscad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d'amende.

Lorsque les faits sont commis en réunion,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d'amende.

Article 222-16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49 () JORF 19 mars 2003

Les appels téléphoniques malveillants réitérés ou les agressions sonores en vue de troubler la tranquillité d'autrui, sont puni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16-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6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paragraph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222-16-2

Cré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4 () JORF 5 avril 2006

Dans le cas où les crimes et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8, 222-10 ou 222-12 sont commis à l'étranger sur une victime mineur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13-7. S'il s'agit d'un déli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Paragraphe 3 : Des menaces.

Article 222-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menace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dont la tentative est punissable est punie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soit réitérée, soit matérialisée par un écrit, une image ou tout autre objet.

La peine est porté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000 euros d'amende s'il s'agit d'une menace de mort.

Article 222-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menace,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faite avec l'ordre de remplir une condition.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s'il s'agit d'une menace de mort.

Article 222-18-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9 () JORF 10 mars 2004

Lorsqu'elles sont commises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les menace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22-17 sont punies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celles prévues au second alinéa de cet article e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22-18 sont punies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et celles prévues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222-18 sont punie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Les mêmes peines sont encourues lorsque ces menaces sont proférées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Article 222-18-2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9 () JORF 10 mars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paragraph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à 9° de l'article 131-39 ;
- 3° La peine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9 pour les infractions définies par les articles 222-17 (deuxième alinéa), 222-18 et 222-18-1.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2 : Des atteintes in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rticle 222-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causer à autrui,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3,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trois moi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n cas d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es peines encouru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19-1

Cré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2 () JORF 13 juin 2003

Lorsque la maladresse, l'imprudence, l'inattention, la négligence ou l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législative ou réglementai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 par l'article 222-19 est commis par le conducteur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trois mois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lorsque :

- 1° Le conducteur a commis un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prudence ou de sécurité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ci-après ;
- 2° Le conducteur se trouvai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était sous l'empire d'un état alcoolique caractérisé par une concentration d'alcool dans le sang ou dans l'air expiré égale ou supérieure aux taux fixé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du code de la route,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ce code et destinées à établir l'existence d'un état alcoolique ;

3° Il résulte d'une analyse sanguine que le conducteur avait fait usage de substances ou de plantes classées comme stupéfiants,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a route destinées à établir s'il conduisait en ayant fait usage de stupéfiants ;

4° Le conducteur n'était pas titulaire du permis de conduire exigé par la loi ou le règlement ou son permis avait été annulé, invalidé, suspendu ou retenu ;

5° Le conducteur a commis un dépassement de la vitesse maximale autorisée égal ou supérieur à 50 km/h ;

6° Le conducteur, sachant qu'il vient de causer ou d'occasionner un accident, ne s'est pas arrêté et a tenté ainsi d'échapper à la responsabilité pénale ou civile qu'il peut encourir.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 été commise avec deux ou plus des circonstances mentionnées aux 1° et suivant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2-2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causer à autrui, par la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trois mois,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20-1

Cré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2 () JORF 13 juin 2003

Lorsque la maladresse, l'imprudence, l'inattention, la négligence ou l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législative ou réglementai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 par l'article 222-19 est commis par le conducteur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trois mois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 000 Euros d'amende lorsque :

- 1° Le conducteur a commis un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prudence ou de sécurité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ci-après ;
- 2° Le conducteur se trouvai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était sous l'empire d'un état alcoolique caractérisé par une concentration d'alcool dans le sang ou dans l'air expiré égale ou supérieure aux taux fixé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du code de la route,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ce code et destinées à établir l'existence d'un état alcoolique ;
- 3° Il résulte d'une analyse sanguine que le conducteur avait fait usage de substances ou de plantes classées comme stupéfiants, ou a refusé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a route destinées à établir s'il conduisait en ayant fait usage de stupéfiants ;
- 4° Le conducteur n'était pas titulaire du permis de conduire exigé par la loi ou le règlement ou son permis avait été annulé, invalidé, suspendu ou retenu ;

5° Le conducteur a commis un dépassement de la vitesse maximale autorisée égal ou supérieur à 50 km/h ;

6° Le conducteur, sachant qu'il vient de causer ou d'occasionner un accident, ne s'est pas arrêté et a tenté ainsi d'échapper à la responsabilité pénale ou civile qu'il peut encourir.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 000 Euros d'amende lorsque l'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 été commise avec deux ou plus des circonstances mentionnées aux 1° et suivant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2-2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19 et 222-20.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les cas visé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22-19 est en outre encourue la peine mentionnée au 4° de l'article 131-39.

Section 3 : Des agressions sexuelles.

Article 222-22

Modifi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1 () JORF 5 avril 2006

Constitue une agression sexuelle toute atteinte sexuelle commise avec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e.

Le viol et les autres agressions sexuelles sont constitués lorsqu'ils ont été imposés à la victime dans les circonstance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quelle que soit la nature des relations existant entre l'agresseur et sa victime, y compris s'ils sont unis par les liens du mariage. Dans ce cas, la présomption de consentement des époux à l'acte sexuel ne vaut que jusqu'à preuve du contraire.

Lorsque les agressions sexuelles sont commises à l'étranger contre un mineu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Paragraphe 1 : Du viol.

Article 222-23

Tout acte de pénétration sexuelle, de quelque nature qu'il soit, commis sur la personne d'autrui par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e est un viol.

Le viol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2-24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4 3° JORF 7 mars 2007

Le viol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1° Lorsqu'il a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
- 2° Lorsqu'il est commis sur un mineur de quinze ans ;
- 3° Lorsqu'il est commis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
- 4° Lorsqu'il est commi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
- 5° Lorsqu'il est commis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6° Lorsqu'il est commis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7° Lorsqu'il est commis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
- 8° Lorsque la victime a été mise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
- 9° Lorsqu'il a été commis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 10° Lorsqu'il est commis en concours avec un ou plusieurs autres viols commis sur d'autres victimes ;
- 11° Lorsqu'il est commis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12° Lorsqu'il est commis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Article 222-25

Le viol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il a entraîné la mort de la victim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26

Le viol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Paragraphe 2 : Des autres agressions sexuelles.

Article 222-2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agressions sexuelles autres que le viol sont punies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28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4 4°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27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 a entraîné une blessure ou une lésion ;
- 2°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
- 3°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4° Lorsqu'elle est commise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5° Lorsqu'elle est commise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
- 6° Lorsque la victime a été mise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
- 7° Lorsqu'elle est commise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le partenaire lié à la victim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8°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Article 222-2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agressions sexuelle autres que le viol sont punie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imposées :

- 1° A un mineur de quinze ans ;
- 2° A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Article 222-30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5°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2-29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 a entraîné une blessure ou une lésion ;
- 2°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

- 3°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4° Lorsqu'elle est commise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5° Lorsqu'elle est commise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
- 6° Lorsqu'elle a été commise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a victime ;
- 7°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Article 222-31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27 à 222-30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2-31-1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1 ()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e le viol ou l'agression sexuelle est commis contre un mineur par une personne titulaire sur celui-ci de l'autorité parentale, la juridiction de jugement doit se prononcer sur le retrait total ou partiel de cette autorité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78 et 379-1 du code civil.

Elle peut alors statuer sur le retrait de cette autorité en ce qu'elle concerne les frères et soeurs mineurs de la victime.

Si les poursuites ont lieu devant la cour d'assises, celle-ci statue sur cette question sans l'assistance des jurés.

Article 222-3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hibition sexuelle imposée à la vue d'autrui dans un lieu accessible aux regards du public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Paragraphe 3 : Du harcèlement sexuel.

Article 222-33

Modifié par Loi n°2002-73 du 17 janvier 2002 - art. 179 () JORF 18 janvier 2002

Le fait de harceler autrui dans le but d'obtenir des faveurs de nature sexuel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2-33-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8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22 à 222-31.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3 bis : Du harcèlement moral

Article 222-33-2

Créé par Loi n°2002-73 du 17 janvier 2002 - art. 170 () JORF 18 janvier 2002

Le fait de harceler autrui par des agissements répétés ayant pour objet ou pour effet une dégrad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susceptible de porter atteinte à ses droits et à sa dignité, d'altérer sa santé physique ou mentale ou de compromettre son avenir professionnel,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Section 3 ter : De l'enregistrement et de la diffusion d'images de violence

Article 222-33-3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JORF 7 mars 2007

Est constitutif d'un acte de complicité des atteintes 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1 à 222-14-1 et 222-23 à 222-31 et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par ces articles le fait d'enregistrer sciemment,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sur tout support que ce soit, des images relatives à la commission de ces infractions.

Le fait de diffuser l'enregistrement de telles imag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présen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lorsque l'enregistrement ou la diffusion résulte de l'exercice normal d'une profession ayant pour objet d'informer le public ou est réalisé afin de servir de preuve en justice.

Section 4 : Du trafic de stupéfiants.

Article 222-3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groupement ayant pour objet la production, la fabrication, l'importation, l'exportation, le transport, la détention, l'offre, la cession, l'acquisition ou l'emploi illicites de stupéfiants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0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production ou la fabrication illicites de stupéfiants sont punies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7500000 euros d'amende.

Ces faits sont punis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7500000 euros d'amende lorsqu'ils sont commis en bande organisé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importation ou l'exportation illicites de stupéfiants sont punie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0 euros d'amende.

Ces faits sont punis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7500000 euros d'amende lorsqu'ils sont commis en bande organisé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transport, la détention, l'offre, la cession, l'acquisition ou l'emploi illicites de stupéfiants sont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faciliter,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l'usage illicite de stupéfiants, de se faire délivrer des stupéfiants au moyen d'ordonnances fictives ou de complaisance, ou de délivrer des stupéfiants sur la présentation de telles ordonnances en connaissant leur caractère fictif ou complaisant.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 euros d'amende le fait de faciliter, par tout moyen, la justification mensongère de l'origine des biens ou des revenus de l'auteur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222-34 à 222-37

ou d'apporter son concours à une opération de placement, de dissimulation ou de conversion du produit de l'une de ces infractions. La peine d'amende peut être élevée jusqu'à la moitié de la valeur des biens ou des fonds sur lesquels ont porté les opérations de blanchiment.

Lorsque l'infraction a porté sur des biens ou des fonds provenant de l'un des crimes mentionnés aux articles 222-34, 222-35 et 222-36, deuxième alinéa, son auteur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pour les crimes dont il a eu connaissanc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s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2-3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a cession ou l'offre illicites de stupéfiants à une personne en vue de sa consommation personnelle sont punies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a peine d'emprisonnement est portée à dix ans lorsque les stupéfiants sont offerts ou cédés,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linéa précédent, à des mineurs ou dan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222-40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36 (premier alinéa) à 222-39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2-41

Constituent des stupéfiants au sens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les substances ou plantes classées comme stupéfiant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132-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222-4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34 à 222-39.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222-43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35 à 222-39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ou judiciaires,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es agissements incriminés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222-34, la pein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2-43-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Section 5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2-44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25 II 6°, art 53 3°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9-1 et 222-20-1, la suspension ne peut pas être assortie du sursis, même partiellement, et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1° à 6° et le dernier alinéa des articles 222-19-1 et 222-20-1, la durée de cette suspension est de dix ans au plus ;
- 4°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5° La confiscation d'un ou plusieurs véhicules appartenant au condamné ;
 - 6° La confiscation d'une ou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7°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8°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9-1 et 222-20-1,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y compris ceux pour la conduite desquels le permis de conduire n'est pas exigé,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9°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9-1 et 222-20-1, l'obligation d'accomplir, à leur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 9° bis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
 - 10°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9-1 et 222-20-1, l'immobilisation, pendant une durée d'un an au plus, du véhicule dont le condamné s'est servi pour commettre l'infraction, s'il en est le propriétaire ;
 - 11° La confiscation de l'animal ayant été utilisé pour commettre l'infraction ;
 - 1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temporaire, de détenir un animal.
- Toute condamnation pour les délits prévus par les 1° à 6° et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222-19-1 donne lieu de plein droit à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un nouveau permis pendant dix ans au plus.

Article 222-45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sections 1, 3 et 4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
- 3° L'interdiction d'exercer,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
- 4°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5-1 ;
- 5°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222-46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section 2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affichage ou de diffusion de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131-35.

Article 222-47

Modifi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5 () JORF 5 avril 2006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 à 222-15, 222-23 à 222-30 et 222-34 à 222-40, peut être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23 à 222-30, lorsqu'ils sont commis sur des mineurs, et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peut être également prononcée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quitte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222-48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 JORF 27 novembre 2003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1 à 222-8 et 222-10, aux 1° et 2° de l'article 222-14, aux articles 222-23 à 222-26, 222-30, 222-34 à 222-39 ainsi qu'à l'article 222-15 dans les cas visés au deuxième alinéa de cet article.

Article 222-48-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3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ou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23 à 222-32 peuvent également être condamnées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2-8, 222-10, 222-12, 222-13 et 222-14 peuvent également être condamnées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soit par le conjoint ou le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e partenaire lié à celle-ci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par son ancien conjoint, son ancien concubin ou l'ancien partenaire lié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soit, sur un mineur de quinze an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Pour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linéa précédent,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obligatoire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orsqu'il s'agit de violences habituelles, sauf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ou si le tribunal correctionnel considère,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qu'il n'y a pas lieu de prononcer cette mesure ; en matière criminelle, la cour d'assises délibère de façon spécifique sur le prononcé d'un suivi socio-judiciaire.

Section 6 : Dispositions commun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aux personnes morales.

Article 222-49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doit être prononcée la confiscation des installations, matériels et de tout bien ayant servi,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a commission de l'infraction, ainsi que tout produit provenant de celle-ci, à quelque personne qu'ils appartiennent et en quelque lieu qu'ils se trouvent, dès lors que leur propriétaire ne pouvait en ignorer l'origine ou l'utilisation frauduleuse.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34, 222-35, 222-36, 222-38 et 222-39-1, peut également être prononcée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s biens du condamné,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Article 222-50

Modifié par Loi n°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 358 ()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e retrait définitif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
- 2° La fermeture,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tout établissement ouvert au public ou utilisé par le public dans lequel ont été commises, par l'exploitant ou avec la complicité de celui-ci, les infractions définies par ces articles.

Article 222-51

La fermeture temporaire prévue par l'article 222-50 emporte suspension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pour la même durée. Le délai de péremption de celle-ci est suspendu pendant la durée de la fermeture.

La fermeture définitive prévue par l'article 222-50 emporte retrait définitif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CHAPITRE III : De la mise en danger de la personne

Section 1 : Des risques causés à autrui.

Article 223-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xposer directement autrui à un risque immédiat de mort ou de blessures de nature à entraîner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par la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3-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3-1.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2 : Du délaissement d'une personne hors d'état de se protéger.

Article 223-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délaissement, en un lieu quelconque, d'une personne qui n'est pas en mesure de se protéger en raison de son âge ou de son état physique ou psychiqu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3-4

Le délaissement qui a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 délaissement qui a provoqué la mort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ection 3 : De l'entrave aux mesures d'assistance et de l'omission de porter secours.

Article 22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ntraver volontairement l'arrivée de secours destinés à faire échapper une personne à un péril imminent ou à combattre un sinistre présentant un danger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22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Quiconque pouvant empêcher par son action immédiate, sans risque pour lui ou pour les tiers, soit un crime, soit un délit contre l'intégrité corporelle de la personne s'abstient volontairement de le fair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Sera puni des mêmes peines quiconque s'abstient volontairement de porter à une personne en péril l'assistance que, sans risque pour lui ou pour les tiers, il pouvait lui prêter soit par son action personnelle, soit en provoquant un secours.

Article 223-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Quiconque s'abstient volontairement de prendre ou de provoquer les mesures permettant, sans risque pour lui ou pour les tiers, de combattre un sinistre de nature à créer un danger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223-7-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9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à 9° de l'article 131-39 ;
- 3° La peine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9 pour l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223-5 et 223-6.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4 : De l'expérimentation sur la personne humaine.

Article 223-8

Modifié par Loi n°2004-806 du 9 août 2004 - art. 94 () JORF 11 août 2004

Le fait de pratiquer ou de faire pratiquer sur une personne une recherche biomédicale sans avoir recueilli le consentement libre, éclairé et exprès de l'intéressé,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tuteur ou d'autres personnes, autorités ou organes désignés pour consentir à la recherche ou pour l'autoriser,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s mêmes peines sont applicables lorsque la recherche biomédicale est pratiquée alors que le consentement a été retiré.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à l'examen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ou à son identification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effectués à des fins de recherche scientifique.

Article 223-9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3-8.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5 : De l'interruption illégale de la grossesse.

Article 223-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interruption de la grossesse sans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Section 6 : De la provocation au suicide.

Article 223-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provoquer au suicide d'autrui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u suicide ou d'une tentative de suici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victime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linéa précédent est un mineur de quinze ans.

Article 223-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propagande ou la publicité, quel qu'en soit le mode, en faveur de produits, d'objets ou de méthodes préconisés comme moyens de se donner la mort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223-15

Lorsque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3-13 et 223-14 sont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223-15-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10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à 9° de l'article 131-39 ;
- 3° La peine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9 pour l'infraction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23-13.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6 bis : De l'abus frauduleux de l'état d'ignorance ou de faiblesse

Article 223-15-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l'abus frauduleux de l'état d'ignorance ou de la situation de faiblesse soit d'un mineur, soit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et connue de son auteur, soit d'une personne en état de sujétion psychologique ou physique résultant de l'exercice de pressions graves ou réitérées ou de techniques propres à altérer son jugement, pour conduire ce mineur ou cette personne à un acte ou à une abstention qui lui sont gravement préjudiciabl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e dirigeant de fait ou de droit d'un groupement

qui poursuit des activités ayant pour but ou pour effet de créer, de maintenir ou d'exploiter la sujétion psychologique ou physique des personnes qui participent à ces activité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0 euros d'amende.

Article 223-15-3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20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u délit prévu à la présente section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3° La fermetu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5°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6°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 7°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223-15-4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20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7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3-16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3-3 à 223-8, 223-10 à 223-14 encourent également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Article 223-1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223-3, 223-4, 223-8, 223-10 à 223-14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2° La confiscation définie à l'article 131-21 ;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223-13 et 223-14, peuvent être saisis ou confisqués les documents écrits, visuels ou sonores ayant servi à réaliser l'infraction ; la juridiction peut en outre ordonner la destruction, en tout ou partie, de ces documents ;

3° La fermeture définitive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l'un, de plusieurs ou de l'ensemble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223-8, peut être également prononcée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Article 223-18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2°, art. 65 II 4°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3-1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3°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si le délit a été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a suspension ne peut pas être assortie du sursis,

- même partiellement, et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4°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4° bis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
- 4° ter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
- 5°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y compris ceux pour la conduite desquels le permis de conduire n'est pas exigé,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6°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obligation d'accomplir, à leur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 7°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immobilisation, pendant une durée d'un an au plus, du véhicule dont le condamné s'est servi pour commettre l'infraction, s'il en est le propriétaire ;
- 8°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a confiscation du véhicule dont le condamné s'est servi pour commettre l'infraction, s'il en est le propriétaire.

Article 223-19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3-10 et 223-11 encourent, outre les peines mentionnées par ces articles,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activité de nature médicale ou para-médicale.

Article 223-20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3-1 et 223-8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affichage ou de diffusion de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131-35.

CHAPITRE IV : Des atteintes aux libertés de la personne

Section 1 : De l'enlèvement et de la séquestration.

Article 224-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sans ordre des autorités constituées et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d'arrêter, d'enlever, de détenir ou de séquestrer une personne,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Toutefois, si la personne détenue ou séquestrée est libérée volontairement avant le septième jour accompli depuis celui de son appréhension, la peine est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sauf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224-2.

Article 224-2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4-1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a victime a subi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provoquée volontairement ou résultant soit des conditions de détention, soit d'une privation d'aliments ou de soins.

Elle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lle est précédée ou accompagnée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ou lorsqu'elle est suivie de la mort de la victim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4-3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224-1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est commise à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Toutefois, si la personne détenue ou séquestrée ou toutes les personnes détenues ou séquestrées sont libérées volontairement dans le délai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224-1, la peine est de dix ans d'emprisonnement, sauf si la victime ou l'une des victimes a subi l'une des atteintes à son intégrité physique mentionnées à l'article 224-2.

Article 224-4

Si la personne arrêtée, enlevée, détenue ou séquestrée l'a été comme otage soit pour

préparer ou faciliter la commission d'un crime ou d'un délit, soit pour favoriser la fuite ou assurer l'impunité de l'auteur ou du complice d'un crime ou d'un délit, soit pour obtenir l'exécution d'un ordre ou d'une condition, notamment le versement d'une rançon,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224-1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Sauf dans les cas prévus à l'article 224-2, la peine est de dix ans d'emprisonnement si la personne prise en otag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au premier alinéa est libérée volontairement avant le septième jour accompli depuis celui de son appréhension, sans que l'ordre ou la condition ait été exécuté.

Article 224-5

Lorsque la victime de l'un des crimes prévus aux articles 224-1 à 224-4 est un mineur de quinze ans, la peine est portée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si l'infractio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i l'infraction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4-5-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crime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des crimes prévu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4-5-2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orsqu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24-1 et par les articles 224-2 à 224-5 sont commises en bande organisé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1 000 000 Euros d'amende et à :

- 1°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i l'infraction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2°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si l'infractio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dans les cas prévus aux 1° et 2°.

Section 2 : Du détournement d'aéronef, de navire ou de tout autre moyen de transport.

Article 224-6

Le fait de s'emparer ou de prendre le contrôle par violence ou menace de violence

d'un aéronef, d'un navire ou de tout autre moyen de transport à bord desquels des personnes ont pris place, ainsi que d'une plate-forme fixe située sur le plateau continental,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Article 224-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4-6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lle est accompagnée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ou s'il en est résulté la mort d'une ou de plusieurs personne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sont applicables à cette infraction.

Article 224-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quiconque, en communiquant une fausse information, de compromettre sciemment la sécurité d'un aéronef en vol ou d'un navir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e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4-8-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crime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des crimes prévu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4-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
- 2° L'interdic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4° S'il s'agit des crimes visés à la section 1 du présent chapitre,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224-10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3 () JORF 13 décembre 2005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prévus par la section 1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CHAPITRE V : Des atteintes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Section 1 : Des discriminations.

Article 225-1

Modifié par Loi n°2006-340 du 23 mars 2006 - art. 13 () JORF 24 mars 2006

Constitue une discrimination toute distinction opérée entre les personnes physiques à raison de leur origine, de leur sexe, de leur situation de famille, de leur grossesse, de leur apparence physique, de leur patronyme, de leur état de santé, de leur handicap, de leur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e leurs mœurs,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de leur âge, de leurs opinions politiques, de leurs activités syndicales,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Constitue également une discrimination toute distinction opérée entre les personnes morales à raison de l'origine, du sexe, de la situation de famille, de l'apparence physique, du patronyme, de l'état de santé, du handicap,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es mœurs, de l'orientation sexuelle, de l'âge, des opinions politiques, des activités syndicales,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des membres ou de certains membres de ces personnes morales.

Article 225-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1 () JORF 10 mars 2004

La discrimination définie à l'article 225-1, commise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orsqu'elle consiste :

- 1° A refuser la fourniture d'un bien ou d'un service ;
- 2° A entraver l'exercice normal d'une activité économique quelconque ;
- 3° A refuser d'embaucher, à sanctionner ou à licencier une personne ;
- 4° A subordonner la fourniture d'un bien ou d'un service à une condition fondée sur l'un des éléments visés à l'article 225-1 ;
- 5° A subordonner une offre d'emploi, une demande de stage ou une période de formation en entreprise à une condition fondée sur l'un des éléments visés à l'article 225-1 ;
- 6° A refuser d'accepter une personne à l'un des stages visés par le 2° de l'article L. 412-8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orsque le refus discriminatoire prévu au 1° est commis dans un lieu accueillant du public ou aux fins d'en interdire l'accè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3

Modifié par Loi n°2002-303 du 4 mars 2002 - art. 4 () JORF 5 mars 2002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

- 1°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état de santé, lorsqu'elles consistent en des opérations ayant pour objet la prévention et la couverture du risque décès, des risques portant atteinte à l'intégrité physique de la personne ou des risques d'incapacité de travail ou d'invalidité. Toutefois, ces discriminations sont punies d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précédent lorsqu'elles se fondent sur la prise en compte de tests génétiques prédictifs ayant pour objet une maladie qui n'est pas encore déclarée ou une prédisposition génétique à une maladie ;
- 2°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état de santé ou le handicap, lorsqu'elles consistent en un refus d'embauche ou un licenciement fondé sur l'inaptitude médicalement constatée soit dans le cadre du titre IV du livre II du code du travail, soit dans le cadre des lois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
- 3°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en matière d'embauche, sur le sexe lorsque l'appartenance à l'un ou l'autre sexe consti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ode du travail ou aux lois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la condition déterminante de l'exercice d'un emploi ou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Article 225-3-1

Créé par Loi n°2006-396 du 31 mars 2006 - art. 45 () JORF 2 avril 2006

Les délit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sont constitués même s'ils sont commis à l'encontre d'une ou plusieurs personnes ayant sollicité l'un des biens, actes, services ou contrats mentionnés à l'article 225-2 dans le but de démontrer l'existence du comportement discriminatoire, dès lors que la preuve de ce comportement est établie.

Article 225-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rticle 225-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1 bis : De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Article 225-4-1

Modifié par Loi n°2007-1631 du 20 novembre 2007 - art. 22 () JORF 21 novembre 2007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est le fait,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e tout autre avantage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ou d'avantage, de recruter une personne, de la transporter, de la transférer, de l'héberger ou de l'accueillir, pour la mettre à sa disposition ou à la disposition d'un tiers, même non identifié, afin soit de permettre la commission contre cette personne des infractions de proxénétisme, d'agression ou d'atteintes sexuelles, d'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de conditions de travail ou d'hébergement contraires à sa dignité, soit de contraindre cette personne à commettre tout crime ou délit.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4-2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4-1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 5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

- 1° A l'égard d'un mineur ;
- 2° A l'égard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A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
- 4° A l'égard d'une personne qui se trouvait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ou lors de son arriv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5° Lorsque la personne a été mise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
- 6° Dans des circonstances qui exposent directement la personne à l'égard de laquelle l'infraction est commise à un risque immédiat de mort ou de blessures de nature à entraîner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
- 7° Avec l'emploi de menaces, de contraintes, de violences ou de manoeuvres dolosives visant l'intéressé, sa famille ou une personne étant en relation habituelle avec lui ;
- 8°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de la personne victime de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4-1 ou par une personne qui a autorité sur elle ou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9° Par une personne appelée à participer, par ses fonctions, à la lutte contre la traite ou au maintien de l'ordre public.

Article 225-4-3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4-1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3 0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en bande organisée.

Article 225-4-4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4-1 commise en recourant à des tortures ou à des actes de barbarie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4 5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4-5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orsque le crime ou le délit qui a été commis ou qui devait être commis contre la personne victime de l'infraction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est puni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celle de l'emprisonnement encouru en application des articles 225-4-1 à 225-4-3, l'infraction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est punie des peines attachées aux crimes ou aux délits dont son auteur a eu connaissance et, si ce crime ou délit est accompagné de circonstances aggravantes, des peines attachées aux seules circonstances aggravantes dont il a eu connaissance.

Article 225-4-6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Article 225-4-7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2 () JORF 19 mars 2003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5-4-9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e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ection 2 : Du proxénétisme et des infractions qui en résultent.

Article 225-5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 proxénétisme est le fait, par quiconqu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

- 1° D'aider, d'assister ou de protéger la prostitution d'autrui ;
- 2° De tirer profit de la prostitution d'autrui, d'en partager les produits ou de recevoir des subsides d'une personne se livrant habituellement à la prostitution ;
- 3° D'embaucher, d'entraîner ou de détourner une personne en vue de la prostitution ou d'exercer sur elle une pression pour qu'elle se prostitue ou continue à le faire.

Le proxénétism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225-6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Est assimilé au proxénétisme et puni des peines prévues par l'article 225-5 le fait, par quiconqu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

- 1° De faire office d'intermédiaire entre deux personnes dont l'une se livre à la prostitution et l'autre exploite ou rémunère la prostitution d'autrui ;
- 2° De faciliter à un proxénète la justification de ressources fictives ;
- 3° De ne pouvoir justifier de ressources correspondant à son train de vie tout en vivant avec une personne qui se livre habituellement à la prostitution ou tout en étant en relations habituelles avec 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livrant à la prostitution ;
- 4° D'entraver l'action de prévention, de contrôle, d'assistance ou de rééducation entreprise par les organismes qualifiés à l'égard de personnes en danger de prostitution ou se livrant à la prostitution.

Article 225-7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 proxénétisme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

- 1° A l'égard d'un mineur ;
- 2° A l'égard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A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
- 4° A l'égard d'une personne qui a été incitée à se livrer à la prostitution soit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oit à son arriv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5°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de la personne qui se prostitue ou par une personne qui a autorité sur elle ou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6° Par une personne appelée à participer, de par ses fonctions, à la lutte contre la prostitution, à la protection de la santé ou au maintien de l'ordre public ;
- 7° Par une personne porteuse d'une arme ;
- 8° Avec l'emploi de la contrainte, de violences ou de manoeuvres dolosives ;
- 9°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sans qu'elles constituent une bande organisée ;
- 10°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5-7-1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 proxénétisme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300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à l'égard d'un mineur de quinze ans.

Article 225-8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 proxénétisme prévu à l'article 225-7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300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en bande organisé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5-9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 proxénétisme commis en recourant à des tortures ou des actes de barbarie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4500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Article 225-10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art. 51 JORF 19 mars 2003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51 () JORF 19 mars 2003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agissant directement ou par personne interposée :

- 1° De détenir, gérer, exploiter, diriger, faire fonctionner, financer ou contribuer à financer un établissement de prostitution ;

- 2° Détenant, gérant, exploitant, dirigeant, faisant fonctionner, finançant ou contribuant à financer un établissement quelconque ouvert au public ou utilisé par le public, d'accepter ou de tolérer habituellement qu'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livrent à la prostitution à l'intérieur de l'établissement ou de ses annexes ou y recherchent des clients en vue de la prostitution ;
- 3° De vendre ou de tenir à la disposition d'une ou de plusieurs personnes des locaux ou emplacements non utilisés par le public, en sachant qu'elles s'y livreront à la prostitution ;
- 4° De vendre, de louer ou de tenir à la disposition,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d'une ou plusieurs personnes, des véhicules de toute nature en sachant qu'elles s'y livreront à la prostitution.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1° et 2°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5-10-1

Cré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2° JORF 19 mars 2003

Le fait, par tout moyen, y compris par une attitude même passive, de procéder publiquement au racolage d'autrui en vue de l'inciter à des relations sexuelles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est puni de deu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os d'amende.

Article 225-11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5-11-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e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225-11-2

Cré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6 () JORF 5 avril 2006

Dans le cas où le délit prévu par le 1° de l'article 225-7 est commis à l'étrange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225-12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1°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5-5 à 225-10.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Section 2 bis : Du recours à la prostitution de mineurs ou de personnes particulièrement vulnérables

Article 225-12-1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3°, 4° JORF 19 mars 2003

Le fait de solliciter, d'accepter ou d'obtenir,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des relations de nature sexuelle de la part d'un mineur qui se livre à la prostitution, y compris de façon occasionnell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4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solliciter, d'accepter ou d'obtenir,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des relations sexuelles de la part d'une personne qui se livre à la prostitution, y compris de façon occasionnelle, lorsque cette personne présente une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du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Article 225-12-2

Modifi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6 () JORF 5 avril 2006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 000 euro d'amende :

- 1°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de façon habituelle ou à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

2° Lorsque la personne a été mise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communication ;

3° Lorsque les faits sont commis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4° Lorsque l'auteur des faits a délibérément ou par imprudence mis la vie de la personne en danger ou a commis contre elle des violenc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 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quinze ans.

Article 225-12-3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3° JORF 19 mars 2003

Dans le cas où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5-12-1 et 225-12-2 sont commis à l'étrange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225-12-4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0 3°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2 ter : De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Article 225-12-5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64 () JORF 19 mars 2003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est le fait par quiconqu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

- 1° D'organiser la mendicité d'autrui en vue d'en tirer profit ;
- 2° De tirer profit de la mendicité d'autrui, d'en partager les bénéfices ou de recevoir des subsides d'une personne se livrant habituellement à la mendicité ;
- 3° D'embaucher, d'entraîner ou de détourner une personne en vue de la livrer à la mendicité, ou d'exercer sur elle une pression pour qu'elle mendie ou continue de le faire ;
- 4° D'embaucher, d'entraîner ou de détourner à des fins d'enrichissement personnel une personne en vue de la livrer à l'exercice d'un service moyennant un don sur la voie publique.

Est assimilé à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le fait de ne pouvoir justifier de ressources correspondant à son train de vie tout en exerçant une influence de fait, permanente ou non, sur 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livrant à la mendicité ou en étant en relation habituelle avec cette ou ces dernières.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une amende de 45 000 Euros.

Article 225-12-6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64 () JORF 19 mars 2003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une amende de 75 000 Euros lorsqu'elle est commise :

- 1° A l'égard d'un mineur ;
- 2° A l'égard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A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
- 4° A l'égard d'une personne qui a été incitée à se livrer à la mendicité soit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oit à son arriv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5°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de la personne qui mendie ou par une personne qui a autorité sur elle ou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6° Avec l'emploi de la contrainte, de violences ou de manoeuvres dolosives sur la personne se livrant à la mendicité, sur sa famille ou sur une personne étant en relation habituelle avec elle ;
- 7°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s ou de complices, sans qu'elles constituent une bande organisée.

Article 225-12-7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64 () JORF 19 mars 2003

L'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d'autrui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 5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en bande organisée.

Section 3 : Des conditions de travail et d'hébergement contraires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Article 225-13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3 () JORF 19 mars 2003

Le fait d'obtenir d'une personne, dont la vulnérabilité ou l'état de dépendance sont apparents ou connus de l'auteur, la fourniture de services non rétribués ou en échange d'une rétribution manifestement sans rapport avec l'importance du travail accompli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14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4 () JORF 19 mars 2003

Le fait de soumettre une personne, dont la vulnérabilité ou l'état de dépendance sont apparents ou connus de l'auteur, à des conditions de travail ou d'hébergement incompatibles avec la dignité humain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15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5 () JORF 19 mars 2003

L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5-13 et 225-14 sont punie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200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à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Lorsqu'elles sont commises à l'égard d'un mineur, elles sont punie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2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à l'égard de plusieurs personnes parmi lesquelles figurent un

ou plusieurs mineurs, elles sont punie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5-15-1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36 () JORF 19 mars 2003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25-13 et 225-14, les mineurs ou les personnes qui ont été victimes des faits décrits par ces articles à leur arrivé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sont considérés comme des personnes vulnérables ou en situation de dépendance.

Article 225-16

Modifié par Loi n°98-657 du 29 juillet 1998 - art. 124 () JORF 31 juillet 1998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5-13 à 225-15.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du fonds de commerce destiné à l'hébergement de personnes et ayant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14.

Section 3 bis : Du bizutage

Article 225-16-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Hors les cas de violences, de menaces ou d'atteintes sexuelles, le fait pour une personne d'amener autrui, contre son gré ou non, à subir ou à commettre des actes humiliants ou dégradants lors de manifestations ou de réunions liées aux milieux scolaire et socio-éducatif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 500 euros d'amende.

Article 225-16-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5-16-1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sur 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Article 225-16-3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4 () JORF 18 juin 1998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commises lors de manifestations ou de réunions liées aux milieux scolaire et socio-éducatif prévues par les articles 225-16-1 et 225-16-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4° et 9° de l'article 131-39.

Section 4 : Des atteintes au respect dû aux morts.

Article 225-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Toute atteinte à l'intégrité du cadavre,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violation ou la profanation,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 tombeaux, de sépultures ou de monuments édifiés à la mémoire des morts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peine est porté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et à 30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linéa précédent ont été accompagnées d'atteinte à l'intégrité du cadavre.

Article 225-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rsque l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rticle précédent ont été commises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s personnes décédées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000 euros d'amende pour les infractions définies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225-17 et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pour celle définie au dernier alinéa de cet article.

Article 225-18-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11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5-17 et 225-18.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à 9° de l'article 131-39 ;
- 3° La peine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9 pour les infractions définies par l'article 225-18.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5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5-19

Modifié par Loi n°2006-911 du 24 juillet 2006 - art. 43 () JORF 25 juillet 2006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sections 1 et 3 d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prévus aux 2° et 3° de l'article 131-26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2°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 3° La fermetu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ou à titre définitif, de

l'un, de plusieurs ou de l'ensemble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ppartenant à la personne condamnée ;

4°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5°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ayant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225-14 ;

6°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5-1.

Article 225-20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sections 1 bis, 2, 2 bis et 2 ter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2° L'interdiction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3° L'interdiction de séjour ;

4° L'interdiction d'exploit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es établissements ouverts au public ou utilisés par le public énumérés dans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d'y être employé à quelque titre que ce soit et d'y prendre ou d'y conserver une quelconque participation financière ;

- 5°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6°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quitte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7° L'interdiction d'exercer,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
- 8°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225-21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64 I, 3° JORF 19 mars 2003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64 () JORF 19 mars 2003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sections 1 bis, 2 et 2 ter du présent chapitre.

Section 6 : Dispositions commun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aux personnes morales.

Article 225-22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5-10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e retrait définitif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

2° La fermeture,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la totalité de l'établissement ou des parties de l'établissement utilisées en vue de la prostitution ;

3° La confiscation du fonds de commerce.

Article 225-23

Créé par Loi 92-684 1992-07-22 JORF 23 juillet 1992 rectificatif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a fermeture temporaire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2°) de l'article 225-22 emporte suspension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pour la même durée.

Le délai de péremption de celle-ci est suspendu pendant la durée de la fermeture.

La fermeture définitive prévue à l'article 225-22 emporte retrait définitif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Article 225-24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5-5 à 225-10 encourent également :

1° La confiscation des biens mobiliers ayant servi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commettre l'infraction ainsi que les produits de l'infraction détenus par une personne autre que la personne se livrant à la prostitution elle-même ;

2° Le remboursement des frais de rapatriement de la ou des victimes.

Article 225-2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5 () JORF 10 mars 2004

Les personnes physiques et morales reconn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sections 1 bis et 2 du présent chapitre, à l'exception de celle prévue par l'article 225-10-1,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CHAPITRE VI : Des atteintes à la personnalité

Section 1 : De l'atteinte à la vie privée.

Article 226-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Article 226-2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onserver, porter ou laisser porter à la

connaissance du public ou d'un tiers ou d'utiliser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tout enregistrement ou document obtenu à l'aide de l'un des actes prévus par l'article 226-1.

Lorsque le délit prévu par l'alinéa précédent est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226-3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a fabrication, l'importation, la détention, l'exposition, l'offre, la location ou la vente, en l'absence d'autorisation ministérielle dont les conditions d'octroi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appareils conçus pour réaliser les opérations pouvant constituer l'infraction prévue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26-15 ou qui, conçus pour la détection à distance des conversations, permettent de réaliser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226-1 et figurant sur une liste dressé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ce même décret.

Est égalemen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réaliser une publicité en faveur d'un appareil susceptible de permettre la réalisation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6-1 et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226-15 lorsque cette publicité constitue une incitation à commettre cette infraction.

Article 226-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introduction ou le maintien dans le domicile d'autrui à l'aide de manœuvres, menaces, voies de fait ou contrainte, hors les cas où la loi le perme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6-5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6-6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6-1 et 226-2, l'action publique ne peut être exercée que sur plainte de la victime, de son représentant légal ou de ses ayants droit.

Article 226-7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Section 2 : De l'atteinte à la représentation de la personne.

Article 226-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ublier, par quelque voie que ce soit, le montage réalisé avec les paroles ou l'image d'une personne sans son consentement, s'il n'apparaît pas à l'évidence qu'il s'agit d'un montage ou s'il n'en est pas expressément fait mention.

Lorsque le délit prévu par l'alinéa précédent est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226-9

Les articles 226-5 et 226-7 sont applicables à la présente section.

Section 3 : De la dénonciation calomnieuse.

Article 226-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énonciation, effectuée par tout moyen et dirigée contre une personne déterminée, d'un fait qui est de nature à entraîner des sanctions judiciaires, administratives ou disciplinaires et que l'on sait totalement ou partiellement inexact, lorsqu'elle est adressée soit à un officier de justice ou de police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soit à une autorité ayant le pouvoir d'y donner suite ou de saisir l'autorité compétente, soit aux supérieurs hiérarchiques ou à l'employeur de la personne dénoncé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a fausseté du fait dénoncé résulte nécessairement de la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d'acquiescement, de relaxe ou de non-lieu déclarant que la réalité du fait n'est pas

établie ou que celui-ci n'est pas imputable à la personne dénoncée.

En tout autre cas, le tribunal saisi des poursuites contre le dénonciateur apprécie la pertinence des accusations portées par celui-ci.

Article 226-11

Lorsque le fait dénoncé a donné lieu à des poursuites pénales, il ne peut être statué sur les poursuites exercées contre l'auteur de la dénonciation qu'après la décision mettant définitivement fin à la procédure concernant le fait dénoncé.

Article 226-1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6-10.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Section 4 : De l'atteinte au secret

Paragraphe 1 : De l'atteinte au secret professionnel.

Article 226-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révélation d'une information à caractère secret par une personne qui en est dépositaire soit par état ou par profession, soit en raison d'une fonction ou d'une mission temporaire,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4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4 () JORF 7 mars 2007

L'article 226-13 n'est pas applicable dans les cas où la loi impose ou autorise la révélation du secret. En outre, il n'est pas applicable :

- 1° A celui qui informe les autorités judiciaires, médicales ou administratives de privations ou de sévices, y compris lorsqu'il s'agit d'atteintes ou mutilations sexuelles, dont il a eu connaissance et qui ont été infligées à un mineur ou à une personne qui n'est pas en mesure de se protéger en raison de son âge ou de son incapacité physique ou psychique ;
- 2° Au médecin qui, avec l'accord de la victime, porte à la connaissa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sévices ou privations qu'il a constatés, sur le plan physique ou psychique, dans l'exercice de sa profession et qui lui permettent de présumer que des violences physiques, sexuelles ou psychiques de toute nature ont été commises. Lorsque la victime est un mineur ou une personne qui n'est pas en mesure de se protéger en raison de son âge ou de son incapacité physique ou psychique, son accord n'est pas nécessaire ;
- 3° Aux professionnels de la santé ou de l'action sociale qui informent le préfet et, à Paris, le préfet de police du caractère dangereux pour elles-mêmes ou pour autrui des personnes qui les consultent et dont ils savent qu'elles détiennent une arme ou qu'elles ont manifesté leur intention d'en acquérir une.

Le signalement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ffectu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ne peut faire l'objet d'aucune sanction disciplinaire.

Paragraphe 2 : De l'atteint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Article 226-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commis de mauvaise foi, d'ouvrir, de supprimer, de retarder ou de détourner des correspondances arrivées ou non à destination et adressées à des tiers, ou d'en prendre frauduleusement connaissanc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commis de mauvaise foi, d'intercepter, de détourner, d'utiliser ou de divulguer des correspondances émises, transmises ou reçu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ou de procéder à l'installation d'appareils conçus pour réaliser de telles interceptions.

Section 5 : Des atteintes aux droits de la personne résultant des fichiers ou des traitements informatiques.

Article 226-16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y compris par négligence,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à des traitement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ans qu'aient été respectées les formalités préalables à leur mise en oeuvre prévues par la loi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y compris par négligence,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à un traitement qui a fait l'objet de l'une des mesures prévues au 2° du I de l'article 45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Article 226-16-1-A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orsqu'il a été procédé ou fait procéder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I ou le II de l'article 24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le fait de ne pas respecter, y compris par négligence, les normes simplifiées ou d'exonération établies à cet effet par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6-1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hors les cas où le traitement a été autoris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de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incluant parmi les données sur lesquelles il porte le numéro d'inscription des personnes au répertoire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personnes physiqu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7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ans mettre en oeuvre les mesures prescrites à l'article 34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8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collecter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ar un moyen frauduleux, déloyal ou illicit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8-1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ncernant une personne physique malgré l'opposition de cette personne, lorsque ce traitement répond à des fins de prospection, notamment commerciale, ou lorsque cette opposition est fondée sur des motifs légitim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9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de mettre ou de conserver en mémoire informatisée, sans le consentement exprès de l'intéressé,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qui,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font apparaître les origines raciales ou ethniques, les opinions politiques, philosophiques ou religieuses, ou les appartenances

syndicales des personnes, ou qui sont relatives à la santé ou à l'orientation sexuelle de celles-ci,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de mettre ou de conserver en mémoire informatisé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ncernant des infractions, des condamnations ou des mesures de sûreté.

Article 226-19-1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En cas de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océder à un traitement :

- 1° Sans avoir préalablement informé individuellement les personnes sur le compte desquelles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ont recueillies ou transmises de leur droit d'accès, de rectification et d'opposition, de la nature des données transmises et des destinataires de celles-ci ;
- 2° Malgré l'opposition de la personne concernée ou, lorsqu'il est prévu par la loi, en l'absence du consentement éclairé et exprès de la personne, ou s'il s'agit d'une personne décédée, malgré le refus exprimé par celle-ci de son vivant.

Article 226-20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conserver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au-delà de la durée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par la demande d'autorisation ou d'avis, ou par la déclaration préalable adressée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sauf si cette conservation est effectuée à des fins historiques, statistiques ou scientifiqu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de traiter à des fins autres qu'historiques, statistiques ou scientifiques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nservées au-delà de la duré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Article 226-21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par toute personne détentrice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à l'occasion de leur enregistrement, de leur classement, de leur transmission ou de toute autre forme de traitement, de détourner ces informations de leur finalité telle que définie par la disposition législative, l'acte réglementaire ou la décision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autorisant le traitement automatisé, ou par les déclarations préalables à la mise en oeuvre de ce traitemen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22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par toute personne qui a recueilli, à l'occasion de leur enregistrement, de leur classement, de leur transmission ou d'une autre forme de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ont la divulgation aurait pour effet de porter atteinte à la considération de l'intéressé ou à l'intimité de sa vie privée, de porter, sans autorisation de l'intéressé, ces données à la connaissance d'un tiers qui n'a pas qualité pour les recevoir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La divulgation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 a été commise par imprudence ou négligence. Dans les cas prévus aux deux alinéas précédents, la poursuite ne peut être exercée que sur plainte de la victime, de son représentant légal ou de ses ayants droit.

Article 226-22-1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 fait,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à un transfer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faisant l'objet ou destinées à faire l'objet d'un traitement vers un Etat n'appartenant pas à la Communauté européenne en violation des mesures prises par la Commiss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ou par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mentionnées à l'article 70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22-2

Cré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226-16 à 226-22-1, l'effacement de tout ou parti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faisant l'objet du traitement ayant donné lieu à l'infraction peut être ordonné. Les membres et les agent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sont habilités à constater l'effacement de ces données.

Article 226-23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26-19 sont applicables aux traitements non automatisé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ont la mise en oeuvre ne se limite pas à l'exercice d'activités exclusivement personnelles.

Article 226-24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14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7°,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6 : Des atteintes à la personne résultant de l'examen de s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ou de l'identification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Article 226-25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l'examen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à des fins autres que médicales ou de recherche scientifique, ou à des fins médicales ou de recherche scientifique, sans avoir recueilli préalablement son consen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6-10 du code civil,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26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4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détourner de leurs finalités médicales ou de recherche scientifique les informations recueillies sur une personne au moyen de l'examen de s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6-27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4 () JORF 7 août 2004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5 ()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à des fins médicales ou de recherche scientifique sans avoir recueilli son consen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6-11 du code civil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28

Modifié par Loi n°2007-1631 du 20 novembre 2007 - art. 13 (V) JORF 21 novembre 2007

Le fait de rechercher l'identification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lorsqu'il ne s'agit pas d'un militaire décédé à l'occasion d'une opération conduite par les forces armées ou les formations rattachées, à des fins qui ne seraient ni médicales ni scientifiques ou en dehors d'une mesure d'enquête ou d'instruction diligentée lors d'une procédure judiciaire ou de vérification d'un acte de l'état civil entreprise par les autorités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dans le cadr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1-6 du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ou de 1 5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divulguer d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ou de procéder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sans être titulaire de l'agrément prévu à l'article L. 113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226-29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4 () JORF 7 août 2004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226-25, 226-26, 226-27 et 226-28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6-30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4 () JORF 7 août 200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7°,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7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6-31

Créé par Loi n°94-653 du 29 juillet 1994 - art. 8 () JORF 30 juillet 199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5° Dans le cas prévu par les articles 226-1 à 226-3, 226-8, 226-15 et 226-28,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confiscation des appareils visés à l'article 226-3 est obligatoire.

Article 226-32

Créé par Loi n°94-653 du 29 juillet 1994 - art. 8 () JORF 30 juillet 199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226-28 et de la tentative de ces infractions ayant la qualité d'expert judiciaire encourent également la radiation de la liste sur laquelle elles sont inscrites.

CHAPITRE VII : Des atteintes aux mineurs et à la famille

Section 1 : Du délaissement de mineur.

Article 227-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délaissement d'un mineur de quinze ans en un lieu quelconqu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sauf si les circonstances du délaissement ont permis d'assurer la santé et la sécurité de celui-ci.

Article 227-2

Le délaissement d'un mineur de quinze ans qui a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de celui-ci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 délaissement d'un mineur de quinze ans suivi de la mort de celui-ci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Section 2 : De l'abandon de famille.

Article 227-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5-759 du 4 juillet 2005 - art. 19 () JORF 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uillet 2006

Le fait, pour une personne, de ne pas exécuter une décision judiciaire ou une convention judiciairement homologuée lui imposant de verser au profit d'un enfant mineur, d'un descendant, d'un ascendant ou du conjoint une pension, une contribution, des subsides ou des prestations de toute nature dues en raison de l'une des obligations familiales prévues par les titres V, VI, VII et VIII du livre Ier du code civil, en demeurant plus de deux mois sans s'acquitter intégralement de cette obliga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sont assimilées à des abandons de famille pour l'application du 3° de l'article 373 du code civil.

Article 227-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e personne 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27-3, à l'obligation de verser une pension, une contribution, des subsides ou des prestations de toute nature, de ne pas notifier son changement de domicile au créancier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ce changement,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Article 227-4-1

Cré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12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à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3 : Des atteintes à l'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Article 227-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refuser indûment de représenter un enfant mineur à la personne qui a le droit de le réclamer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227-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our une personne qui transfère son domicile en un autre lieu, alors que ses enfants résident habituellement chez elle, de ne pas notifier son changement de domicil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ce changement, à ceux qui peuvent exercer à l'égard des enfants un droit de visite ou d'hébergement en vertu d'un jugement ou d'une convention judiciairement homologué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Article 227-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5-759 du 4 juillet 2005 - art. 19 () JORF 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uillet 2006

Le fait, par tout ascendant, de soustraire un enfant mineur des mains de ceux qui exercent l'autorité parentale ou auxquels il a été confié ou chez qui il a sa résidence habituel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Article 227-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e personne autre que celles mentionnées à l'article 227-7 de soustraire, sans fraude ni violence, un enfant mineur des mains de ceux qui exercent l'autorité

parentale ou auxquels il a été confié ou chez qui il a sa résidence habituell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7-9

Modifié par Loi n°2002-305 du 4 mars 2002 - art. 16 () JORF 5 mars 2002

Les faits définis par les articles 227-5 et 227-7 sont puni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taux*] 45000 euros d'amende :

- 1° Si l'enfant mineur est retenu au-delà de cinq jours sans que ceux qui ont le droit de réclamer qu'il leur soit représenté sachent où il se trouve ;
- 2° Si l'enfant mineur est retenu indûment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227-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Si la personne coupable des faits définis par les articles 227-5 et 227-7 a été déchue de l'autorité parentale, ces faits sont puni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227-11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227-7 et 227-8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4 : Des atteintes à la filiation.

Article 227-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provoquer soit dans un but lucratif, soit par don, promesse, menace ou abus d'autorité, les parents ou l'un d'entre eux à abandonner un enfant né ou à naîtr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dans un but lucratif, de s'entremettre entre une personne désireuse d'adopter un enfant et un parent désireux d'abandonner son enfant né ou à naîtr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le fait de s'entremettre entre une personne ou un couple désireux d'accueillir un enfant et une femme acceptant de porter en elle cet enfant en vue de le leur remettre. Lorsque ces faits ont été commis à titre habituel ou dans un but lucratif, les peines sont portées au double.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7-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substitution volontaire, la simulation ou dissimulation ayant entraîné une atteinte à l'état civil d'un enfant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227-1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1°, 2°, 3°, 8° et 9° de l'article 131-39.

Section 5 : De la mise en péril des mineurs.

Article 227-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5-759 du 4 juillet 2005 - art. 19 () JORF 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uillet 2006

Le fait, par un ascendant ou toute autre personne exerçant à son égard l'autorité parentale ou ayant autorité sur un mineur de quinze ans, de priver celui-ci d'aliments ou de soins au point de compromettre sa santé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Constitue notamment une privation de soins le fait de maintenir un enfant de moins de six ans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un espace affecté au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dans le but de solliciter la générosité des passants.

Article 227-16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précédent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lle a entraîné la mort de la victime.

Article 227-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5-759 du 4 juillet 2005 - art. 19 () JORF 7 juillet 2005 en vigueur le 1er juillet 2006

Le fait, par le père ou la mère, de se soustraire, sans motif légitime, à ses obligations

légal au point de compromettre la santé, la sécurité, la moralité ou l'éducation de son enfant mineur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est assimilée à un abandon de famille pour l'application du 3° de l'article 373 du code civil.

Article 227-17-1

Modifié par Loi n°2005-380 du 23 avril 2005 - art. 8 () JORF 24 avril 2005

Le fait, par les parents d'un enfant ou toute personne exerçant à son égard l'autorité parentale ou une autorité de fait de façon continue, de ne pas l'inscrire dans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sans excuse valable, en dépit d'une mise en demeure de l'inspecteur d'académi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 5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 directeur d'établissement privé accueillant des classes hors contrat, de n'avoir pas pris, malgré la mise en demeure de l'inspecteur d'académie, les dispositions nécessaires pour que l'enseignement qui y est dispensé soit conforme à l'objet de l'instruction obligatoire, tel que celui-ci est défini par l'article L. 131-1-1 et L. 131-10 du code de l'éducation, et de n'avoir pas procédé à la fermeture de ces classes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 500 euros d'amende. En outre, le tribunal peut ordonner à l'encontre de celui-ci l'interdiction de diriger ou d'enseigner ainsi que la fermeture de l'établissement.

Article 227-17-2

Modifié par Loi n°2001-504 du 12 juin 2001 - art. 13 () JORF 13 juin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7-15 à 227-17-1.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Article 227-18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 fait de provoquer directement un mineur à faire un usage illicite de stupéfiant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quinze ans ou que les faits sont commis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infraction définie par le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227-18-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 fait de provoquer directement un mineur à transporter, détenir, offrir ou céder des stupéfiants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quinze ans ou que les faits sont commis dan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infraction définie par le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0 euros d'amende.

Article 227-1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 fait de provoquer directement un mineur à la consommation habituelle et excessive de boissons alcoolique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quinze ans ou que les faits sont commis dan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infraction définie par le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7-2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 fait de provoquer directement un mineur à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quinze ans, que le mineur est provoqué à commettre habituellement des crimes ou des délits ou que les faits sont commis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infraction définie par le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227-22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5 () JORF 7 mars 200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 fait de favoriser ou de tenter de favoriser la corruption d'un mineur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C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le mineur est âgé de moins de quinze ans ou lorsque le mineur a été mis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ou que les faits sont commis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ou d'éducation ou dans les locaux de l'administration, ainsi que, lors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ou du public ou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celles-ci, aux abords de ces établissements ou locaux.

Les mêmes peines sont notamment applicables au fait, commis par un majeur, d'organiser des réunions comportant des exhibitions ou des relations sexuelles auxquelles un mineur assiste ou particip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1 0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faits ont été commis en bande organisée.

Article 227-22-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5 () JORF 7 mars 2007

Le fait pour un majeur de faire des propositions sexuelles à un mineur de quinze ans ou à une personne se présentant comme telle en utilisant un moyen de communication électron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C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 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propositions ont été suivies d'une rencontre.

Article 227-23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5 () JORF 7 mars 2007

Le fait, en vue de sa diffusion, de fixer, d'enregistrer ou de transmettre l'image ou la représentation d'un mineur lorsque cette image ou cette représentation présente un caractère pornographiqu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d'offrir, de rendre disponible ou de diffuser une telle image ou représentation,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 l'importer ou de l'exporter, de la faire importer ou de la faire exporter,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lorsqu'il a été utilisé, pour la diffusion de l'image ou de la représentation du mineur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un réseau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x alinéas précédents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onsulter habituellement un servic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mettant à disposition une telle image ou représentation ou de détenir une telle image ou représentation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30000 euros d'amende.

L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ont punie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50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bande organis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images pornographiques d'une personne dont l'aspect physique est celui d'un mineur, sauf s'il est établi que cette personne était âgée de dix-huit ans au jour de la fixation ou de l'enregistrement de son image.

Article 227-24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35 () JORF 7 mars 2007

Le fait soit de fabriquer, de transporter, de diffuser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et quel qu'en soit le support un message à caractère violent ou pornographique ou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dignité humaine, soit de faire commerce d'un tel messag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ce message est susceptible d'être vu ou perçu par un mineur.

Lorsque l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ont soumise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ou de la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227-2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 majeur, d'exercer sans violence, contrainte, menace ni surprise une atteinte sexuelle sur la personne d'un mineur de quinze an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227-26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4 6° JORF 7 mars 2007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227-25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taux*] 1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

- 2°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
- 3° Lorsqu'elle est commise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4° Lorsque le mineur a été mis en contact avec l'auteur des faits grâce à l'utilisation, pour la diffusion de message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d'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
- 5° Lorsqu'elle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agissant en état d'ivresse manifeste ou sous l'emprise manifeste de produits stupéfiants.

Article 227-2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atteintes sexuelles sans violence, contrainte, menace ni surprise sur un mineur âgé de plus de quinze ans et non émancipé par le mariage sont punies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s sont commises par un ascendant légitime, naturel ou adoptif ou par toute autre personne ayant autorité sur la victime ;
- 2° Lorsqu'elles sont commises par une personne qui abuse de l'autorité que lui confèrent ses fonctions.

Article 227-27-1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19 () JORF 18 juin 1998

Dans le cas où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7-22, 227-23 ou 227-25 à 227-27 sont commises à l'étrange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227-28

Lorsque l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227-18 à 227-21 et 227-23 sont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227-28-1

Modifié par Loi n°2002-305 du 4 mars 2002 - art. 13 (V) JORF 5 mars 200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7-18 à 227-26.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7°,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227-28-2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1 () JORF 13 décembre 2005

Lorsque l'atteinte sexuelle est commise sur la victime par une personne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la juridiction de jugement doit se prononcer sur le retrait total ou

partiel de cette autorité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78 et 379-1 du code civil.

Elle peut alors statuer sur le retrait de cette autorité en ce qu'elle concerne les frères et soeurs mineurs de la victime.

Si les poursuites ont lieu devant la cour d'assises, celle-ci statue sur cette question sans l'assistance des jurés.

Article 227-28-3

Cré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16 () JORF 5 avril 2006

Le fait de faire à une personne des offres ou des promesses ou de lui proposer des dons, présents ou avantages quelconques afin qu'elle commette à l'encontre d'un mineur l'un des crimes ou délits visés aux articles 222-22 à 222-31, 225-5 à 225-11, 227-22, 227-23 et 227-25 à 227-28 est puni, lorsque cette infraction n'a été ni commise ni tenté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45 000 Euros d'amende si cette infraction constitue un délit, et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 000 Euros d'amende si elle constitue un crime.

Section 6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227-2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définies à l'article 131-26 ;

- 2°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3°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4°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quitte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6° L'interdiction,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
- 7°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227-30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section 4 d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affichage ou de diffusion de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131-35.

Article 227-31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4 () JORF 13 décembre 2005

Les personn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7-22 à 227-27 peuvent également être condamnées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Article 227-32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8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227-18 et 227-18-1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Section 7 : Peine complémentaire commune aux personnes physiques et aux personnes morales

Article 227-33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6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227-22 et a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227-23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Section 1 : Du vol simple et des vols aggravés.

Article 311-1

Le vol est la soustraction frauduleuse de la chose d'autrui.

Article 311-2

La soustraction frauduleuse d'énergie au préjudice d'autrui est assimilée au vol.

Article 31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311-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0 () JORF 10 mars 2004

Le vol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

- 1° Lorsqu'il est commis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sans qu'elles constituent une bande organisée ;
- 2° Lorsqu'il est commis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 3° Lorsqu'il est commis par une personne qui prend indûment la qualité d'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
- 4°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violences sur autrui n'ayant pas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
- 5° Lorsqu'il est facilité par l'état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6° Lorsqu'il est commis dans un local d'habitation ou dans un lieu utilisé ou destiné à l'entrepôt de fonds, valeurs, marchandises ou matériels, en pénétrant dans les lieux par ruse, effraction ou escalade ;

- 7° Lorsqu'il est commis dans un véhicule affecté au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ou dans un lieu destiné à l'accès à un moyen de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
- 8°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un acte de destruction, dégradation ou détérioration ;
- 9° Lorsqu'il est commis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vraie ou supposé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le vol est commis dans deux des circonstance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Ell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 euros d'amende lorsque le vol est commis dans trois de ces circonstances.

Article 311-4-1

Cré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26 () JORF 10 septembre 2002

Le vol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par un majeur avec l'aide d'un ou plusieurs mineurs, agissant comme auteurs ou complic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150000 euros d'amende lorsque le majeur est aidé d'un ou plusieurs mineurs âgés de moins de treize ans.

Article 31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huit jours au plus.

Article 31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soit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soit par une personne porteuse d'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ou dont le port est prohib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n bande organisée est puni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Il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de violences sur autrui.

Il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soit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soit par une personne porteuse d'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ou dont le port est prohib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1-9-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un vol en bande organisée prévu par l'article 311-9 est exempté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vol en bande organisée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en cours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Article 311-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vol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précédé, accompagné ou suivi soit de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soit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1-11

Constitue, au sens des articles 311-4, 311-5, 311-6, 311-7, 311-9 et 311-10, un vol suivi de violences le vol à la suite duquel des violences ont été commises pour favoriser la fuite ou assurer l'impunité d'un auteur ou d'un complice.

Section 2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311-12

Modifié par Loi n°2006-399 du 4 avril 2006 - art. 9 () JORF 5 avril 2006

Ne peut donner lieu à des poursuites pénales le vol commis par une personne :

- 1° Au préjudice de son ascendant ou de son descendant ;
- 2° Au préjudice de son conjoint, sauf lorsque les époux sont séparés de corps ou autorisés à résider séparémen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e le vol porte sur des objets ou documents indispensables à la vie quotidienne de la victime, tels que des documents d'identité, relatifs au titre de séjour ou de résidence d'un étranger, ou des moyens de paiement.

Article 311-13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11-14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4 () JORF 10 mars 2004 en vigueur le 1er octobre 200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ette interdiction étant définitive ou proviso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1-6 à 311-10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1-3 à 311-5 ;

3°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5°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11-6 à 311-10 ;

6°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5-1.

Article 311-15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11-6 à 311-10.

Article 311-16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a peine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à titre définitif ou proviso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1-6 à 311-10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1-3 à 311-5 ;

3° La peine mentionnée au 8°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1 : D l'extorsion.

Article 312-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st le fait d'obtenir par violence, menace de violences ou contrainte soit une signature, un engagement ou une renonciation, soit la révélation d'un secret, soit la remise de fonds, de valeurs ou d'un bien quelconque.

L'extorsion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312-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0 () JORF 10 mars 2004

L'extorsion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huit jours au plus ;
- 2° Lorsqu'elle est commise au préjudice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Lorsqu'elle est commise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victim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vraie ou supposée.

Article 312-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2-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commise soit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soit par une personne porteuse d'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ou dont le port est prohib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2-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n bande organisée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Elle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de violences sur autrui ayant entraîné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Elle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lle est commise soit avec usage ou menace d'une arme, soit par une personne porteuse d'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ou dont le port est prohibé.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2-6-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2 () JORF 10 mars 2004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une extorsion en bande organisée prévue par l'article 312-6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e extorsion en bande organisée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infraction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auteurs ou complic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312-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xtorsion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précédée, accompagnée ou suivie soit de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soit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12-8

Constitue, au sens des articles 312-2, 312-3, 312-4, 312-6 et 312-7, une extorsion suivie de violences l'extorsion à la suite de laquelle des violences ont été commises pour favoriser la fuite ou assurer l'impunité d'un auteur ou d'un complice.

Article 312-9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311-12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Section 2 : Du chantage.

Article 312-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chantage est le fait d'obtenir, en menaçant de révéler ou d'imputer des faits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soit une signature, un engagement ou une renonciation, soit la révélation d'un secret, soit la remise de fonds, de valeurs ou d'un bien quelconque.

Le chantag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312-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rsque l'auteur du chantage a mis sa menace à exécution, la peine est portée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312-12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311-12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Section 2 bis : De la demande de fonds sous contrainte.

Article 312-12-1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65 () JORF 19 mars 2003

Le fait, en réunion et de manière agressive, ou sous la menace d'un animal dangereux, de solliciter, sur la voie publique, la remise de fonds, de valeurs ou d'un bien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os d'amende.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12-13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4°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ette interdiction étant définitive ou proviso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2-3 à 312-7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12-1, 312-2 et 312-10 ;
- 3°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5°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6°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selon les modalités de l'article 131-5-1 ;
- 7°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312-14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12-2 à 312-7.

Article 312-15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1 : De l'escroquerie.

Article 313-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croquerie est le fait, soit par l'usage d'un faux nom ou d'une fausse qualité, soit par l'abus d'une qualité vraie, soit par l'emploi de manoeuvres frauduleuses, de trompe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et de la déterminer ainsi, à son préjudice ou au préjudice d'un tiers, à remettre des fonds, des valeurs ou un bien quelconque, à fournir un service ou à consentir un acte opérant obligation ou décharge.

L'escroqueri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Article 313-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JORF 10 mars 2004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0 euros d'amende lorsque l'escroquerie est réalisée :

- 1°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 2° Par une personne qui prend indûment la qualité d'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
- 3° Par une personne qui fait appel au public en vue de l'émission de titres ou en vue de la collecte de fonds à des fins d'entraide humanitaire ou sociale ;
- 4° Au préjudice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 0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scroquerie est commise en bande organisée.

Article 313-3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311-12 sont applicables au délit d'escroquerie.

Section 2 : Des infractions voisines de l'escroquerie.

Article 31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filouterie est le fait par une personne qui sait être dans l'impossibilité absolue de payer ou qui est déterminée à ne pas payer :

- 1° De se faire servir des boissons ou des aliments dans un établissement vendant des boissons ou des aliments ;
- 2° De se faire attribuer et d'occuper effectivement une ou plusieurs chambres dans un établissement louant des chambres, lorsque l'occupation n'a pas excédé dix jours ;
- 3° De se faire servir des carburants ou lubrifiants dont elle fait remplir tout ou partie des réservoirs d'un véhicule par des professionnels de la distribution ;
- 4° De se faire transporter en taxi ou en voiture de place.

La filouterie est punie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Article 31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ans une adjudication publique, par dons, promesses, ententes ou tout autre moyen frauduleux, d'écarter un enchérisseur ou de limiter les enchères ou les soumissions,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225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accepter de tels dons ou promesses.

Est puni des mêmes peines :

- 1° Le fait, dans une adjudication publique, d'entraver ou de troubler la liberté des enchères ou des soumissions, par violences, voies de fait ou menaces ;
- 2° Le fait de procéder ou de participer, après une adjudication publique, à une remise aux enchères sans le concours de l'officier ministériel compétent ou d'une société de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agréée.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313-6-1

Cré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7 1° JORF 19 mars 2003

Le fait de mettre à disposition d'un tiers, en vue qu'il y établisse son habitation moyennant le versement d'une contribution ou la fourniture de tout avantage en nature, un bien immobilier appartenant à autrui, sans être en mesure de justifier de l'autorisation du propriétaire ou de celle du titulaire du droit d'usage de ce bien,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13-7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7 2°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313-1, 313-2, 313-6 et 313-6-1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3° La fermetu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5°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6°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 7°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313-8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7 3°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313-1, 313-2, 313-6 et 313-6-1 encourent également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Article 313-9

Modifi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7 4°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13-1 à 313-3 et à l'article 313-6-1.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1 : De l'abus de confiance.

Article 314-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bus de confiance est le fait par une personne de détourner, au préjudice d'autrui, des fonds, des valeurs ou un bien quelconque qui lui ont été remis et qu'elle a

acceptés à charge de les rendre, de les représenter ou d'en faire un usage déterminé.
L'abus de confianc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Article 314-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51 () JORF 10 mars 2004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0 euros d'amende lorsque l'abus de confiance est réalisé :

- 1° Par une personne qui fait appel au public afin d'obtenir la remise de fonds ou de valeurs soit pour son propre compte, soit comme dirigeant ou préposé de droit ou de fait d'une entreprise industrielle ou commerciale ;
- 2° Par toute autre personne qui, de manière habituelle, se livre ou prête son concours, même à titre accessoire, à des opérations portant sur les biens des tiers pour le compte desquels elle recouvre des fonds ou des valeurs ;
- 3° Au préjudice d'une association qui fait appel au public en vue de la collecte de fonds à des fins d'entraide humanitaire ou sociale ;
- 4° Au préjudice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Article 314-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0 euros d'amende lorsque l'abus de confiance est réalisé par un mandataire de justice ou par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soi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soit en raison de sa qualité.

Article 314-4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311-12 sont applicables au délit d'abus de confiance.

Section 2 : Du détournement de gage ou d'objet saisi.

Article 314-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 débiteur, un emprunteur ou un tiers donneur de gage, de détruire ou de détourner l'objet constitué en gag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e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314-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le saisi, de détruire ou de détourner un objet saisi entre ses mains en garantie des droits d'un créancier et confié à sa garde ou à celle d'un tier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e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3 : De l'organisation frauduleuse de l'insolvabilité.

Article 314-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un débiteur, même avant la décision judiciaire constatant sa dette, d'organiser ou d'aggraver son insolvabilité soit en augmentant le passif ou en diminuant l'actif de son patrimoine, soit en diminuant ou en dissimulant tout ou partie de ses revenus, soit en dissimulant certains de ses biens, en vue de se soustraire à l'exécution d'une condamnation de nature patrimoniale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répressive ou, en matière délictuelle, quasi délictuelle ou d'aliments,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civil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Commet le même délit le dirigeant de droit ou de fait d'une personne morale qui organise ou aggrave l'insolvabilité de celle-ci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linéa précédent en vue de la soustraire aux obligations pécuniaires résultant d'une condamnation prononcée en matière pénale, délictuelle ou quasi délictuelle.

Article 314-8

La juridiction peut décider que la personne condamnée comme complice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314-7 est tenue solidairement, dans la limite des fonds ou de la valeur vénale des biens reçus à titre gratuit ou onéreux, aux obligations pécuniaires résultant de la condamnation à l'exécution de laquelle l'auteur de l'infraction a voulu se soustraire.

Lorsque la condamnation de nature patrimoniale a été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répressive, le tribunal peut décider que la peine qu'il prononce ne se confondra pas

avec celle qui a été précédemment prononcé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urt qu'à compter de la condamnation à l'exécution de laquelle le débiteur a voulu se soustraire ; toutefois, elle ne court qu'à compter du dernier agissement ayant pour objet d'organiser ou d'aggraver l'insolvabilité du débiteur lorsque le dernier agissement est postérieur à cette condamnation.

Article 314-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314-7, les décisions judiciaires et les conventions judiciairement homologuées portant obligation de verser des prestations, subsides ou contributions aux charges du mariage sont assimilées aux condamnations au paiement d'aliments.

Section 4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14-10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314-1, 314-2 et 314-3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3° La fermetu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 4°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 5°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 6°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7°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314-11

Créé par Loi 92-685 1992-07-22 JORF 23 juillet 1992 rectificatif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314-5, 314-6 et 314-7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2°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314-1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14-1 et 314-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314-1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14-5, 314-6 et 314-7.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prévues aux 8° et 9° de l'article 131-39.

Section 1 : Du recel.

Article 32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recel est le fait de dissimuler, de détenir ou de transmettre une chose, ou de faire office d'intermédiaire afin de la transmettre, en sachant que cette chose provient d'un

crime ou d'un délit.

Constitue également un recel le fait, en connaissance de cause, de bénéficier, par tout moyen, du produit d'un crime ou d'un délit.

Le recel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Article 32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recel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il est commis de façon habituelle ou en utilisant les facilités que procur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orsqu'il est commis en bande organisée.

Article 32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s peines d'amende prévues par les articles 321-1 et 321-2 peuvent être élevées au-delà de 375000 euros jusqu'à la moitié de la valeur des biens recelés.

Article 321-4

Lorsque l'infraction dont provient le bien recelé est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celle de l'emprisonnement encouru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21-1 ou 321-2, le receleur est puni des peines attachées à l'infraction dont il a eu connaissance et, si cette infraction est accompagnée de circonstances aggravantes, des peines attachées aux seules circonstances dont il a eu connaissance.

Article 321-5

Le recel est assimilé, au regard de la récidive, à l'infraction dont provient le bien recelé.

Section 2 : Des infractions assimilées au recel ou voisines de celui-ci.

Article 321-6

Modifié par 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 art. 24 () JORF 24 janvier 2006

Le fait de ne pas pouvoir justifier de ressources correspondant à son train de vie ou de ne pas pouvoir justifier de l'origine d'un bien détenu, tout en étant en relations habituelles avec une ou plusieurs personnes qui soit se livrent à la commission de crimes ou de délits punis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et procurant à celles-ci un profit direct ou indirect, soit sont les victimes d'une de ces infractions, est puni d'une pein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faciliter la justification de ressources fictives pour des personnes se livrant à la commission de crimes ou de délits punis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et procurant à celles-ci un profit direct ou indirect.

Article 321-6-1

Créé par 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 art. 24 () JORF 24 janvier 2006

Les peines prévues par l'article 321-6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15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crimes et délits sont commis par un mineur sur lequel la personne ne pouvant justifier ses ressources a autorité.

Ell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20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infractions commises constituent les crimes ou délits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d'extorsion ou d'association de malfaiteurs, ou qu'elles constituent les crimes ou délits de trafic de stupéfiants, y compris en cas de relations habituelles avec une ou plusieurs personnes faisant usage de stupéfiants.

Ell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300 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e infraction mentionnée à l'alinéa précédent commise par un ou plusieurs mineurs.

Article 32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dont l'activité professionnelle comporte la vente d'objets mobiliers usagés ou acquis à des personnes autres que celles qui les fabriquent ou en font le commerce, d'omettre, y compris par négligence, de tenir jour par jour,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un registre contenant une description des objets acquis ou détenus en vue de la vente ou de l'échange et permettant l'identification de ces objets ainsi que celle des personnes qui les ont vendus ou apportés à l'échang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e personne, à l'exception d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qui organise, dans un lieu public ou ouvert au public, une manifestation en vue de la vente ou de l'échange d'objets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d'omettre, y compris par négligence, de tenir jour par jour,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un registre permettant l'identification des vendeurs.

Lorsque l'activité professionnelle définie au premier alinéa est exercée par une personne

morale, ou que l'organisateur de la manifestation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est une personne morale, l'obligation de tenir le registre incombe aux dirigeants de cette personne morale.

Article 32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visée à l'article précédent, d'apposer sur le registre prévu par cet article des mentions inexactes.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cette personne, de refuser de présenter ce registre à l'autorité compétente.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 personnes morales.

Article 321-9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5 ()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ette interdiction étant définitive ou tempora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2 et 321-4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1, 321-6, 321-7 et 321-8 ;

3° La fermeture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cette fermeture étant définitive ou tempora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2 et 321-4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1, 321-6, 321-7 et 321-8 ;

4°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tempora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2 et 321-4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1, 321-6, 321-7 et 321-8 ;

5°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6°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7°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8°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1 à 321-4 ;

9°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10°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321-10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1-1 à 321-4, peuvent être également prononcées les autr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pour les crimes ou les délits dont provient le bien recélé.

Article 321-10-1

Créé par 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 art. 24 () JORF 24 janvier 2006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321-6 et 321-6-1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 ou immeuble, divis ou indivis, dont elles n'ont pu justifier l'origine.

Peuvent également être prononcées l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pour les crimes ou les délits commis par la ou les personnes avec lesquelles l'auteur des faits était en relations habituelles.

Article 321-11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 à l'article 321-2.

Article 321-1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1-1 à 321-4, 321-7 et 321-8.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1-1 à 321-4,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1-7 et 321-8,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4°, 5°, 6°, 7°, 8°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7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Section 1 : Des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ne présentant pas de danger pour les personnes.

Article 322-1

Modifi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24 () JORF 10 septembre 2002

La destruction, la dégradation ou la détérioration d'un bien appartenant à autrui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sauf s'il n'en est résulté qu'un dommage léger.

Le fait de tracer des inscriptions, des signes ou des dessins, sans autorisation préalable, sur les façades, les véhicules, les voies publiques ou le mobilier urbain est puni de 3750 euros d'amende et d'une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orsqu'il n'en est résulté qu'un dommage léger.

Article 322-2

Modifié par Loi n°2003-88 du 3 février 2003 - art. 8 () JORF 4 février 2003

L'infraction défini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2-1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et celle définie au deuxième alinéa du

même article de 7500 euros d'amende et d'une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orsque le bien détruit, dégradé ou détérioré est :

- 1° Destiné à l'utilité ou à la décoration publiques et appartient à une personne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
- 2° Un registre, une minute ou un acte original de l'autorité publique ;
- 3° Un immeuble ou un objet mobilier classé ou inscrit, une découverte archéologique faite au cours de fouilles ou fortuitement, un terrain contenant des vestiges archéologiques ou un objet conservé ou déposé dans un musée de France ou dans les musées, bibliothèques ou archives appartenant à une personne publique, chargée d'un service public ou reconnue d'utilité publique ;
- 4° Un objet présenté lors d'une exposition à caractère historique, culturel ou scientifique, organisée par une personne publique, chargée d'un service public ou reconnue d'utilité publique.

Dans le cas prévu par le 3° du présent article, l'infraction est également constituée si son auteur est le propriétaire du bien détruit, dégradé ou détérioré.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2-1 est commise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personne propriétaire ou utilisatrice de ce bien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les peines encourues sont égaleme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 000 Euros d'amende.

Article 322-3

Modifié par Loi n°2003-88 du 3 février 2003 - art. 9 () JORF 4 février 2003

L'infraction défini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2-1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et celle définie au deuxième alinéa du

même article de 15000 euros d'amende et d'une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

- 1° Lorsqu'elle est commise par plusieurs personnes agissant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
- 2° Lorsqu'elle est facilitée par l'état d'une personne dont la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due à son âg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est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
- 3° Lorsqu'elle est commise au préjudice d'un magistrat, d'un juré, d'un avocat, d'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d'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d'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de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en vue d'influencer son comporteme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
- 4° Lorsqu'elle est commise au préjudice d'un témoin, d'une victime ou d'une partie civile, soit pour l'empêcher de dénoncer le fait, de porter plainte ou de déposer en justice, soit en raison de sa dénonciation, de sa plainte ou de sa déposition ;
- 5° Lorsqu'elle est commise dans un local d'habitation ou dans un lieu utilisé ou destiné à l'entrepôt de fonds, valeurs, marchandises ou matériels, en pénétrant dans les lieux par ruse, effraction ou escalade.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2-1 est commise à l'encontre d'un lieu de culte, d'un établissement scolaire, éducatif ou de loisirs ou d'un véhicule transportant des enfants, les peines encourues sont égaleme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322-4

La tentative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322-4-1

Cré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3 1° JORF 19 mars 2003

Le fait de s'installer en réunion, en vue d'y établir une habitation, même temporaire, sur un terrain appartenant soit à une commune qui s'est conformée aux obligations lui incombant en vertu du schéma départemental prévu par l'article 2 de la loi n° 2000-614 du 5 juillet 2000 relative à l'accueil et à l'habitat des gens du voyage ou qui n'est pas inscrite à ce schéma, soit à tout autre propriétaire autre qu'une commune, sans être en mesure de justifier de son autorisation ou de celle du titulaire du droit d'usage du terrain,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os d'amende.

Lorsque l'installation s'est faite au moyen de véhicules automobiles, il peut être procédé à leur saisie, à l'exception des véhicules destinés à l'habitation, en vue de leur confiscation par la juridiction pénale.

Section 2 : Des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dangereuses pour les personnes.

Article 322-5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5 () JORF 13 décembre 2005

La destruction, la dégradation ou la détérioration involontaire d'un bien appartenant à autrui par l'effet d'une explosion ou d'un incendie provoqués par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En cas de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les peines encourues sont portées à deux ans d'emprisonnement et à 30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e l'incendie de bois, forêts, landes, maqui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d'autrui,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eux ans d'emprisonnement et à 30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et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Si cet incendie est intervenu dans des conditions de nature à exposer les personnes à un dommage corporel ou à créer un dommage irréversible à l'environnement,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et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Si l'incendie a provoqué pour autrui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au moins huit jour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et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S'il a provoqué la mort d'une ou plusieurs personn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et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 000 Euros d'amende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Article 322-6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2 () JORF 10 mars 2004

La destruction, la dégradation ou la détérioration d'un bien appartenant à autrui par l'effet d'une substance explosive, d'un incendie ou de tout autre moyen de nature à cré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e l'incendie de bois, forêts, landes, maqui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d'autrui intervenu dans des conditions de nature à exposer les personnes à un dommage corporel ou à créer un dommage irréversible à l'environnement, les peines sont portées à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150 000 Euros d'amende.

Article 322-6-1

Cré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7 () JORF 10 mars 2004

Le fait de diffuser par tout moyen, sauf à destination des professionnels, des procédés permettant la fabrication d'engins de destruction élaborés à partir de poudre ou de substances explosives, de matières nucléaires, biologiques ou chimiques, ou à partir de tout autre produit destiné à l'usage domestique, industriel ou agrico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 000 Euros d'amende lorsqu'il a été utilisé, pour la diffusion des procédés, un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à destination d'un public non déterminé.

Article 322-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2 () JORF 10 mars 2004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322-6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a entraîné pour autrui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huit jours au plus.

Lorsqu'il s'agit de l'incendie de bois, forêts, landes, maqui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d'autrui, les peines sont portées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200 000 Euros d'amende.

Article 322-8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2 () JORF 10 mars 2004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322-6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elle est commise en bande organisée ;
- 2° Lorsqu'elle a entraîné pour autrui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 3° Lorsqu'elle est commise à raison de l'appartenance ou de l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de la personne propriétaire ou utilisatrice du bien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Lorsqu'il s'agit de l'incendie de bois, forêts, landes, maqui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d'autrui,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200 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22-9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32 () JORF 10 mars 2004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322-6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a entraîné pour autrui une mutilation ou un infirmité permanente.

Lorsqu'il s'agit de l'incendie de bois, forêts, landes, maqui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d'autrui, les peines sont portées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à 200 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22-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322-6 est punie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lle a entraîné la mort d'autrui.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322-11

La tentative du délit prévu par l'article 322-6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322-11-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5 () JORF 7 mars 2007

La détention ou le transport de substances ou produits incendiaires ou explosifs ainsi que d'éléments ou substances destinés à entrer dans la composition de produits ou engins incendiaires ou explosifs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rticle 322-6 ou d'atteintes aux personn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500 000 d'amende lorsque

ces faits sont commis en bande organisée.

Hors les cas prévus aux deux premiers alinéas,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la détention ou le transport sans motif légitime :

- 1° De substances ou produits explosifs permettant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rticle 322-6, lorsque ces substances ou produits ne sont pas soumis, pour la détention ou le transport, à un régime particulier ;
- 2° De substances ou produits incendiaires permettant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rticle 322-6 ainsi que d'éléments ou substances destinés à entrer dans la composition de produits ou engins incendiaires ou explosifs, lorsque leur détention ou leur transport ont été interdit par arrêté préfectoral en raison de l'urgence ou du risque de trouble à l'ordre public.

Section 3 : Des menaces de destruction, de dégradation ou de détérioration et des fausses alertes.

Article 322-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menace de commettre une destruction, une dégradation ou une détérioration dangereuses pour les personnes est punie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soit réitérée, soit matérialisée par un écrit, une image ou tout autre objet.

Article 322-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menace,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 commettre une destruction, une

dégradation ou une détérioration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orsqu'elle est faite avec l'ordre de remplir une condition.

La peine est porté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45000 euros d'amende s'il s'agit d'une menace de destruction, de dégradation ou de détérioration dangereuses pour les personnes.

Article 322-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communiquer ou de divulguer une fausse information dans le but de faire croire qu'une destruction, une dégradation ou une détérioration dangereuse pour les personnes va être ou a été commis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ommuniquer ou de divulguer une fausse information faisant croire à un sinistre et de nature à provoquer l'intervention inutile des secours.

Section 4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22-15

Modifié par Loi 2007-297 2007-03-05 art. 53 5° JORF 7 mars 200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ette interdiction étant définitive ou provisoire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2-6 à 322-10 e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322-1, 322-2, 322-3, 322-5, 322-12, 322-13 et 322-14 ;
- 3°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4°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2-7 à 322-10 ;
- 5°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citoyenneté, selon les modalités de l'article 131-5-1 ;
- 6°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à l'article 131-35-1.

Article 322-15-1

Créé par Loi 2003-239 2003-03-18 art. 53 2° JORF 19 mars 200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322-4-1 encourr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
- 2° La confiscation du ou des véhicules automobiles utilisés pour commettr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véhicules destinés à l'habitation.

Article 322-16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2-7 à 322-10.

Article 322-17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a peine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2-1, 322-3, 322-5, 322-12, 322-13 et 322-14 et sans limitation de durée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2-6 à 322-10.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322-18

Cré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25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2-6 à 322-11 peuvent également être condamnées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13.

CHAPITRE III :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Article 323-1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5 ()

Le fait d'accéder ou de se maintenir, frauduleusement, dans tout ou partie d'un système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orsqu'il en est résulté soit la suppression ou la modification de données contenues dans le système, soit une altération du fonctionnement de ce système, la peine est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323-2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5 ()

Le fait d'entraver ou de fausser le fonctionnement d'un système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32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5 ()

Le fait d'introduire frauduleusement des données dans un système de traitement automatisé ou de supprimer ou de modifier frauduleusement les données qu'il contien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323-3-1

Cré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6 ()

Le fait, sans motif légitime, d'importer, de détenir, d'offrir, de céder ou de mettre à disposition un équipement, un instrument, un programme informatique ou toute donnée conçus ou spécialement adaptés pour commettre une ou plusieur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323-1 à 323-3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respectivement pour l'infraction elle-même ou pour l'infraction la plus sévèrement réprimée.

Article 323-4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6 ()

La participation à un groupement formé ou à une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une ou de plusieur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323-1 à 323-3-1 est punie des peines prévues pour l'infraction elle-même ou pour l'infraction la plus sévèrement réprimée.

Article 323-5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de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de laquell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4° La fermetu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5° L'exclu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marchés publics ;

6°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7°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323-6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323-7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46 ()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323-1 à 323-3-1 est punie des mêmes peines.

CHAPITRE IV : Du blanchiment

Section 1 : Du blanchiment simple et du blanchiment aggravé

Article 324-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blanchiment est le fait de faciliter, par tout moyen, la justification mensongère de l'origine des biens ou des revenus de l'auteur d'un crime ou d'un délit ayant procuré à celui-ci un profit direct ou indirect.

Constitue également un blanchiment le fait d'apporter un concours à une opération de placement, de dissimulation ou de conversion du produit direct ou indirect d'un crime ou d'un délit.

Le blanchimen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Article 324-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blanchiment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0 euros d'amende :

- 1° Lorsqu'il est commis de façon habituelle ou en utilisant les facilités que procur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orsqu'il est commis en bande organisée.

Article 324-3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es peines d'amende mentionnées aux articles 324-1 et 324-2 peuvent être élevées jusqu'à la moitié de la valeur des biens ou des fonds sur lesquels ont porté les opérations de blanchiment.

Article 324-4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orsque le crime ou le délit dont proviennent les biens et les fonds sur lesquels ont porté les opérations de blanchiment est puni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celle de l'emprisonnement encouru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24-1 ou 324-2, le blanchiment est puni des peines attachées à l'infraction dont son auteur a eu connaissance et, si cette infraction est accompagnée de circonstances aggravantes, des peines attachées aux seules circonstances dont il a eu connaissance.

Article 324-5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e blanchiment est assimilé, au regard de la récidive, à l'infraction à l'occasion de laquelle ont été commises les opérations de blanchiment.

Article 324-6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à la présente section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2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324-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4-1 et 324-2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ette interdiction étant définitive ou temporaire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324-2 et d'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324-1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et d'utiliser les cartes de paiement ;
- 4°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5°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l'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cinq ans au plus ;
- 6° La confiscation d'un ou plusieurs véhicules appartenant au condamné ;
- 7° La confiscation d'une ou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le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8°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9°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
- 10°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
- 1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 quitte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12°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s biens du condamné,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Article 324-8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4-1 et 324-2.

Article 324-9

Créé par Loi n°96-392 du 13 mai 1996 - art. 1 ()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24-1 et 324-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LIVRE IV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

TITRE Ier : Des 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Article 410-1

Les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s'entendent au sens du présent titre de son indépendance, de l'intégrité de son territoire, de sa sécurité, de la forme républicaine de ses institutions, des moyens de sa défense et de sa diplomatie, de la sauvegarde de sa population en France et à l'étranger, de l'équilibre de son milieu naturel et de son environnement et des éléments essentiels de son potentiel scientifique et économique et de son patrimoine culturel.

CHAPITRE Ier : De la trahison et de l'espionnage.

Article 411-1

Les faits définis par les articles 411-2 à 411-11 constituent la trahison lorsqu'ils sont commis par un Français ou un militaire au service de la France et l'espionnage lorsqu'ils sont commis par toute autre personne.

Section 1 : De la livraison de tout ou partie du territoire national, de forces armées ou de matériel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Article 41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livrer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à une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à leurs agents soit des troupes appartenant aux forces armées françaises, soit tout ou partie du territoire national est puni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 crime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41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livrer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à une entreprise ou une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à leurs agents des matériels, constructions, équipements, installations, appareils affectés à la défense nationale est puni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Section 2 : Des intelligences avec une puissance étrangère.

Article 41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ntretenir des intelligences avec une puissance étrangère, avec 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avec leurs agents, en vue de

susciter des hostilités ou des actes d'agression contre la France, est puni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fournir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à une entreprise ou une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à leurs agents les moyens d'entreprendre des hostilités ou d'accomplir des actes d'agression contre la France.

Article 41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ntretenir des intelligences avec une puissance étrangère, avec 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avec leurs agents, lorsqu'il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Section 3 : De la livraison d'informations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Article 41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livrer ou de rendre accessibles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à 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à leurs agents d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dont l'exploitation, la divulgation ou la réunion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000 euros d'amende.

Article 41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recueillir ou de rassembler, en vue de les livrer à une puissance étrangère, à 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à leurs agents, d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dont l'exploitation, la divulgation ou la réunion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41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xercer, pour le compte d'une puissance étrangère, d'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ou de leurs agents, une activité ayant pour but l'obtention ou la livraison de dispositif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dont l'exploitation, la divulgation ou la réunion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Section 4 : Du sabotage.

Article 41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détruire, détériorer ou détourner tout document, matériel, construction, équipement, installation, appareil, dispositif technique ou système de traitement automatisé d'informations ou d'y apporter des malfaçons, lorsque ce fait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0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dans le but de servir les intérêts d'une puissance étrangère, d'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le même fait est puni de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300000 euros d'amende.

Section 5 : De la fourniture de fausses informations.

Article 411-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fournir, en vue de servir les intérêts d'une puissance étrangère, d'une entreprise ou organisation étrangère ou sous contrôle étranger, aux autorités civiles ou militaires de la France des informations fausses de nature à les induire en erreur et à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Section 6 : De la provocation aux crime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Article 411-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promesses, offres, pressions, menaces ou voies de fait, de provoquer directement à commettre l'un des crime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lorsque la provocation n'est pas suivie d'effet en raison de circonstances indépendantes de la volonté de son auteur,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CHAPITRE II : Des autres atteintes aux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Section 1 : De l'attentat et du complot.

Article 412-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Constitue un attentat le fait de commettre un ou plusieurs actes de violenc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L'attentat est puni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à 750000 euros d'amende lorsque l'attentat est commis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à l'infrac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Article 412-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Constitue un complot la résolution arrêtée entre plusieurs personnes de commettre un attentat lorsque cette résolution est concrétisée par un ou plusieurs actes matériels.

Le complot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à 300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Section 2 : Du mouvement insurrectionnel.

Article 412-3

Constitue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toute violence collectiv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ou à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u territoire national.

Article 41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quinz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225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à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 1° En édifiant des barricades, des retranchements ou en faisant tous travaux ayant pour objet d'empêcher ou d'entraver l'action de la force publique ;
- 2° En occupant à force ouverte ou par ruse ou en détruisant tout édifice ou installation ;
- 3° En assurant le transport, la subsistance ou les communications des insurgés ;
- 4° En provoquant à des rassemblements d'insurgés,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
- 5° En étant, soi-même, porteur d'une arme ;
- 6° En se substituant à une autorité légale.

Article 412-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300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articiper à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

- 1° En s'emparant d'armes, de munitions, de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ou de matériels de toute espèce soit à l'aide de violences ou de menaces, soit par le pillage, soit en désarmant la force publique ;
- 2° En procurant aux insurgés des armes, des munitions ou des substances explosives ou dangereuses.

Article 412-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mouvement insurrectionnel est puni de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000 euros d'amende.

Section 3 : De l'usurpation de commandement, de la levée de forces armées et de la provocation à s'armer illégalement.

Article 412-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le fait :

- 1° Sans droit ou sans autorisation, de prendre un commandement militaire quelconque ou de le retenir contre l'ordre des autorités légales ;
- 2° De lever des forces armées, sans ordre ou sans autorisation des autorités légales.

Article 412-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de provoquer à s'armer contre l'autorité de l'Etat ou contre une partie de la population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ovocation est suivie d'effet,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à 450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ovocation est commise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CHAPITRE III : Des autres atteintes à la défense nationale

Section 1 : Des atteintes à la sécurité des forces armées et aux zones protégées intéressant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413-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 provoquer des militaires appartenant aux forces armées françaises à passer au service d'une puissance étrangère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413-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ntraver le fonctionnement normal

du matériel militair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ntraver le mouvement de personnel ou de matériel militaire.

Article 413-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 provoquer à la désobéissance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s militaires ou des assujettis affectés à toute forme du service national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ovocation est commise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413-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articiper à une entreprise de démoralisation de l'armée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41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sans autorisation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s'introduire frauduleusement sur un terrain, dans une construction ou dans un engin ou appareil quelconque affecté à l'autorité militaire ou placé sous son contrô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41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ntraver le fonctionnement normal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entreprises, publics ou privés, intéressant la défense national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13-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dans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entreprises, publics ou privés, intéressant la défense nationale, de s'introduire, sans autorisation, à l'intérieur des locaux et terrains clos dans lesquels la libre circulation est interdite et qui sont délimités pour assurer la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du matériel ou du secret des recherches, études ou fabrication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d'une par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est procédé à la délimitation des locaux et terrains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et, d'autre par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utorisations d'y pénétrer peuvent être délivrées.

Article 413-8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13-2 et 413-5 à 413-7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2 : Des atteintes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413-9

Modifié par Loi n°94-89 du 1 février 1994 - art. 9 () JORF 2 février 1994 en vigueur le 1er mars 1994

Présentent un caractère d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u sens de la présente section l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intéressant la défense nationale qui ont fait l'objet de mesures de protection destinées à restreindre leur diffusion.

Peuvent faire l'objet de telles mesures l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dont la divulgation est de nature à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ou pourrait conduire à la découverte d'un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niveaux de classification d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présentant un caractère d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t les autorités chargées de définir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est organisée leur protection sont détermin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413-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dépositaire, soit par état ou profession, soit en raison d'une fonction ou d'une mission temporaire ou permanente, d'un renseignement, procédé, objet, document, donnée informatisée ou fichier qui a un caractère d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oit de le détruire, détourner, soustraire ou de le reproduire, soit de le porter à la connaissance du public ou d'une personne non qualifié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la personne dépositaire, d'avoir laissé détruire, détourner, soustraire, reproduire ou divulguer le renseignement, procédé, objet, document, donnée informatisée ou fichier visé à l'alinéa précédent.

Lorsque la personne dépositaire a agi par imprudence ou négligence, l'infraction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13-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non visée à l'article 413-10 de :

- 1° S'assurer la possession d'un renseignement, procédé, objet, document, donnée informatisée ou fichier qui présente le caractère d'un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
- 2° Détruire, soustraire ou reproduir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un tel renseignement, procédé, objet, document, donnée informatisée ou fichier ;
- 3° Porter à la connaissance du public ou d'une personne non qualifiée un tel renseignement, procédé, objet, document, donnée informatisée ou fichier.

Article 413-12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13-10 et à l'article 413-11 est punie des mêmes peines.

CHAPITRE IV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rticle 414-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n cas d'état de siège ou d'urgence déclaré, ou en cas de mobilisation générale ou de mise en garde décidée par le Gouvernement,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13-1 à 413-3 sont punies de trente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et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413-6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Dans les cas visés à l'alinéa qui précède, le fait, en vue de nuire à la défense nationale, de provoquer à commettr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rticle 413-2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et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413-6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14-2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11-2, 411-3, 411-6, 411-9 et 412-1 sera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que l'infraction ne se réalis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Article 414-3

Toute personne ayant participé au complot défini par l'article 412-2 sera exempte de peine si elle a, avant toute poursuite, révélé le complot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t permis l'identification des autres participants.

Article 414-4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11-4, 411-5, 411-7, 411-8 et 412-6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ou judiciaires,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es agissements incriminés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détent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détention criminelle.

Article 414-5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et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t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4°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14-6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chapitres Ier, II et IV du présent titre et aux articles 413-1 à 413-4, 413-10 et 413-11.

Article 414-7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t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414-8

Modifié par Loi n°2007-288 du 5 mars 2007 - art. 1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11-1 à 411-11 et 413-1 à 413-12 sont applicables aux actes mentionnés par ces dispositions qui seraient commis au préjudice :

- 1° Des puissances signataires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
- 2° De l'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Article 414-9

Modifié par Loi n°2007-288 du 5 mars 2007 - art. 2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11-6 à 411-11 et 413-9 à 413-12 sont applicables :

- 1° Aux informations échangées en vertu d'un accord de sécurité relatif à la protection des informations classifiées conclu entre la France et un ou des

Etats étrangers ou 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régulièrement approuvé et publié ;

- 2° Aux informations échangées entre la France et une institution ou un organe de l'Union européenne et classifiées en vertu des règlements de sécurité de ces derniers qui ont fait l'objet d'une publication au Journal officiel de l'Union européenne.

TITRE II : Du terrorisme

CHAPITRE 1er : Des actes de terrorisme.

Article 421-1

Modifié par Loi n°2005-1550 du 12 décembre 2005 - art. 17 ()

Constituent des actes de terrorisme, lorsqu'elles sont intentionnellement en relation avec une entrepri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ayant pour but de troubler gravement l'ordre public par l'intimidation ou la terreur, les infractions suivantes :

- 1°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l'enlèvement et la séquestration ainsi que le détournement d'aéronef, de navire ou de tout autre moyen de transport, définis par le livre II du présent code ;
- 2° Les vols, les extorsions, les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ainsi que les infractions en matière informatique définis par le livre III du présent code ;

- 3°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groupes de combat et de mouvements dissous définies par les articles 431-13 à 431-17 et les infractions définies par les articles 434-6 et 441-2 à 441-5 ;
- 4°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armes, de produits explosifs ou de matières nucléaires définies par les 2°, 4° et 5° du I de l'article L. 1333-9, les articles L. 2339-2, L. 2339-5, L. 2339-8 et L. 2339-9 à l'exception des armes de la 6e catégorie, L. 2341-1, L. 2341-4, L. 2342-57 à L. 2342-62, L. 2353-4, le 1° de l'article L. 2353-5, et l'article L. 2353-13 du code de la défense ;
- 5° Le recel du produit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1° à 4° ci-dessus ;
- 6° Les infractions de blanchiment prévues au chapitre IV du titre II du livre III du présent code ;
- 7° Les délits d'initié prévus à l'article L. 465-1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Article 421-2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8 ()

Constitue également un acte de terrorisme, lorsqu'il est intentionnellement en relation avec une entrepri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ayant pour but de troubler gravement l'ordre public par l'intimidation ou la terreur, le fait d'introduire dans l'atmosphère, sur le sol, dans le sous-sol, dans les aliments ou les composants alimentaires ou dans les eaux, y compris celles de la mer territoriale, une substance de nature à mettre en péril la santé de l'homme ou des animaux ou le milieu naturel.

Article 421-2-1

Constitue également un acte de terrorisme le fait de participer à un groupement

formé ou à une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un des actes de terrorisme mentionnés aux articles précédents.

Article 421-2-2

Créé par Loi n°2001-1062 du 15 novembre 2001 - art. 33 ()

Constitue également un acte de terrorisme le fait de financer une entreprise terroriste en fournissant, en réunissant ou en gérant des fonds, des valeurs ou des biens quelconques ou en donnant des conseils à cette fin, dans l'intention de voir ces fonds, valeurs ou biens utilisés ou en sachant qu'ils sont destinés à être utilisés, en tout ou partie, en vue de commettre l'un quelconque des actes de terrorisme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indépendamment de la survenance éventuelle d'un tel acte.

Article 421-2-3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45 ()

Le fait de ne pouvoir justifier de ressources correspondant à son train de vie, tout en étant en relations habituelles avec 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livrant à l'un ou plusieurs des actes visés aux articles 421-1 à 421-2-2,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Article 421-3

Le maximum d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our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421-1 est relevé ainsi qu'il suit lorsque ces infractions constituent des actes de terrorisme :

- 1° Il est porté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2° Il est porté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3° Il est porté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
- 4° Il est porté à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
- 5° Il est porté à dix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
- 6° Il est porté à sept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
- 7° Il est porté au double lorsque l'infraction est punie d'un emprisonnement de trois ans au plu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crimes, ainsi qu'aux délits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421-4

Modifi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46 ()

L'acte de terrorisme défini à l'article 421-2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350000 euros d'amende.

Lorsque cet acte a entraîné la mort d'une ou plusieurs personnes, il est puni de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de 750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 crime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421-5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Les actes de terrorisme définis aux articles 421-2-1 et 421-2-2 sont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225000 euros d'amende.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le groupement ou l'entente défini à l'article 421-2-1 est puni de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500 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u délit défini à l'article 421-2-2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421-6

Les peines sont portées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35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 groupement ou l'entente définie à l'article 421-2-1 a pour objet la préparation :

- 1° Soit d'un ou plusieurs crimes d'atteintes aux personnes visés au 1° de l'article 421-1 ;
- 2° Soit d'une ou plusieurs destructions par substances explosives ou incendiaires visées au 2° de l'article 421-1 et devant être réalisées dans des circonstances de temps ou de lieu susceptibles d'entraîner la mort d'une ou plusieurs personnes ;
- 3° Soit de l'acte de terrorisme défini à l'article 421-2 lorsqu'il est susceptible d'entraîner la mort d'une ou plusieurs personnes.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tel groupement ou une telle entente est puni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500 000 Euros d'amend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s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crime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CHAPITRE 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rticle 422-1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un acte de terrorisme est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e l'infraction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Article 422-2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un acte de terrorisme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ou judiciaires,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es agissements incriminés ou d'éviter que l'infraction n'entraîne mort d'homme ou infirmité permanent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celle-ci est ramené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Article 422-3

Modifié par Loi n°96-647 du 22 juillet 1996 - art. 6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Toutefois, le maximum de la durée de l'interdiction est porté à quinze ans en cas de crime et à dix ans en cas de délit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Toutefois, le maximum de la durée de l'interdiction temporaire est porté à dix ans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Toutefois, le maximum de la durée de l'interdiction est porté à quinze ans en cas de crime et à dix ans en cas de délit.

Article 422-4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titre.

Article 422-5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actes de terrorisme définis au présent t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422-6

Créé par Loi n°2001-1062 du 15 novembre 2001 - art. 33 ()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reconnues coupables d'actes de terrorisme encouro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Article 422-7

Le produit des sanctions financières ou patrimoniales prononcées à l'encontre des personnes reconnues coupables d'actes de terrorisme est affecté au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TITRE III : Des atteintes à l'autorité de l'Etat

CHAPITRE 1er : Des atteintes à la paix publique

Section 1 :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Article 43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ntraver, d'une manière concertée et à l'aide de menaces, l'exercice de la liberté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d'entraver, d'une manière concertée et à l'aide de coups, violences, voies de fait, destructions ou dégradations au sens du présent code, l'exercice d'une des libertés visées à l'alinéa précédent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2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rticle 431-1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Section 2 : De la participation délictueuse à un attroupement.

Article 431-3

Constitue un attroupement tout rassemblement de personnes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un lieu public susceptible de troubler l'ordre public.

Un attroupement peut être dissipé par la force publique après deux sommations de se disperser demeurées sans effet, adressées par le préfet, le sous-préfet, le maire ou l'un de ses adjoints,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responsable de la sécurité publique, ou tout autre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orteurs des insignes de leur fonction.

Il est procédé à ces sommations suivant des modalités propres à informer les personnes participant à l'attroupement de l'obligation de se disperser sans délai ; ces modalités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détermine également les insignes que doivent porter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Toutefois, les représentants de la force publique appelés en vue de dissiper un

attroupement peuvent faire directement usage de la force si des violences ou voies de fait sont exercées contre eux ou s'ils ne peuvent défendre autrement le terrain qu'ils occupent.

Article 43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celui qui n'est pas porteur d'une arme, de continuer volontairement à participer à un attroupement après les sommations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articiper à un attroupement en étant porteur d'une arm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Si la personne armée a continué volontairement à participer à un attroupement après les sommations,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provocation directe à un attroupement armé, manifestée soit par des cris ou discour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affichés ou distribués, soit par tout autre moyen de transmission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ovocation est suivie d'effet, la peine est portée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31-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31-5 et 431-6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31-8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431-5 et 431-6.

Section 3 : Des manifestations illicites et de la participation délictueuse à une manifestation ou à une réunion publique.

Article 43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

- 1° D'avoir organisé une manifestation sur la voie publique n'ayant pas fait l'objet d'une déclaration préalabl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loi ;

- 2° D'avoir organisé une manifestation sur la voie publique ayant été interdit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loi ;
- 3° D'avoir établi une déclaration incomplète ou inexacte de nature à tromper sur l'objet ou les conditions de la manifestation projetée.

Article 431-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articiper à une manifestation ou à une réunion publique en étant porteur d'une arm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11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431-10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31-12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431-10.

Section 4 : Des groupes de combat et des mouvements dissous.

Article 431-13

Constitue un groupe de combat, en dehors des cas prévus par la loi, tout groupement de personnes détenant ou ayant accès à des armes, doté d'une organisation hiérarchisée et susceptible de troubler l'ordre public.

Article 431-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articiper à un groupe de combat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articiper au maintien ou à la reconstitution, ouverte ou déguisée, d'une association ou d'un groupement dissous en application de la loi du 10 janvier 1936 sur les groupes de combat et les milices privé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 l'association ou le groupement maintenu ou reconstitué est un groupe de combat au sens de l'article 431-14,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rganiser un groupe de comba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1-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rganiser le maintien ou la reconstitution, ouverte ou déguisée, d'un groupe de combat dissous en application de la loi du 10 janvier 1936 précité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31-18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a décision ou d'un communiqué informant le public des motifs et du dispositif de celle-c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1-10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31-19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à la présente section.

Article 431-20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par la présente section.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431-21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1° La confiscation des biens mobiliers et immobiliers appartenant à ou utilisés par le groupe de combat ou l'association ou le groupement maintenu ou reconstitué ;

2° La confiscation des uniformes, insignes, emblèmes, armes et tous matériels utilisés ou destinés à être utilisés par le groupe de combat ou par l'association ou le groupement maintenu ou reconstitué.

CHAPITRE II : Des atteintes à l'administration publique commises par des 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

Section 1 : Des abus d'autorité dirigés contre l'administration.

Article 432-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de prendre des mesures destinées à faire échec à l'exécution de la loi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2-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infraction prévue à l'article 432-1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si elle a été suivie d'effet.

Article 432-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par une personne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ayant été officiellement informée de la décision ou de la circonstance mettant fin à ses fonctions, de continuer à les exercer,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Section 2 : Des abus d'autorité commis contre les particuliers

Paragraphe 1 : Des atteintes à la liberté individuelle.

Article 43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ordonner ou d'accomplir arbitrairement un acte attentatoir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l'acte attentatoire consiste en une détention ou une rétention d'une durée de plus de sept jours, la peine est portée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450000 euros d'amende.

Article 432-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yant eu connaissanc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une privation de liberté illégale, de s'abstenir volontairement soit d'y mettre fin si elle en a le pouvoir, soit, dans le cas contraire, de provoquer l'intervention d'une autorité compétent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visée à l'alinéa précédent ayant eu connaissanc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une privation de liberté dont l'illégalité est alléguée, de s'abstenir volontairement soit de procéder aux vérifications nécessaires si elle en a le pouvoir, soit, dans le cas contraire, de transmettre la réclamation à une autorité compétent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rivation de liberté, reconnue illégale, s'est poursuivie.

Article 432-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 agent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de recevoir ou retenir une

personne sans mandat, jugement ou ordre d'écrou établi conformément à la loi, ou de prolonger indûment la durée d'une déten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30000 euros d'amende.

Paragraphe 2 : Des discriminations.

Article 432-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41 ()

La discrimination définie à l'article 225-1, commise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lle consiste :

- 1° A refuser le bénéfice d'un droit accordé par la loi ;
- 2° A entraver l'exercice normal d'une activité économique quelconque.

Paragraphe 3 : Des atteintes à l'inviolabilité du domicile.

Article 432-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e s'introduire ou de tenter de s'introduire dans le domicile d'autrui contre le gré de celui-ci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Paragraphe 4 : Des atteintes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Article 432-9

Modifié par Loi n°2004-669 du 9 juillet 2004 - art. 121 ()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d'ordonner, de commettre ou de faciliter,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e détournement, la suppression ou l'ouverture de correspondances ou la révélation du contenu de ces correspondanc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e personne visée à l'alinéa précédent ou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x ouverts au public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ou d'un fournisseur de services de télécommunications,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d'ordonner, de commettre ou de faciliter,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interception ou le détournemen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transmises ou reçu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l'utilisation ou la divulgation de leur contenu.

Section 3 : Des manquements au devoir de probité

Paragraphe 1 : De la concussion.

Article 432-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e recevoir, exiger ou ordonner de percevoir à titre de droits ou contributions, impôts ou taxes publics, une somme qu'elle sait ne pas être due, ou

excéder ce qui est dû,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les mêmes personnes, d'accorder sous une forme quelconque et pour quelque motif que ce soit une exonération ou franchise des droits, contributions, impôts ou taxes publics en violation des textes légaux ou réglementaires.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Paragraphe 2 : De la corruption passive et du trafic d'influence commis par des 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

Article 432-11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de solliciter ou d'agré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

- 1° Soit pour accomplir ou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de son mandat ou faciliter par sa fonction, sa mission ou son mandat ;
- 2° Soit pour 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autorité ou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Paragraphe 3 : De la prise illégale d'intérêts.

Article 432-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par une personne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de prendre, recevoir ou conserv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 intérêt quelconque dans une entreprise ou dans une opération dont elle a, au moment de l'acte, en tout ou partie, la charge d'assurer la surveillance, l'administration, la liquidation ou le paiemen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Toutefois, dans les communes comptant 3 500 habitants au plus, les maires, adjoints ou conseillers municipaux délégués ou agissant en remplacement du maire peuvent chacun traiter avec la commune dont ils sont élus pour le transfert de biens mobiliers ou immobiliers ou la fourniture de services dans la limite d'un montant annuel fixé à 16000 euros.

En outre, dans ces communes, les maires, adjoints ou conseillers municipaux délégués ou agissant en remplacement du maire peuvent acquérir une parcelle d'un lotissement communal pour y édifier leur habitation personnelle ou conclure des baux d'habitation avec la commune pour leur propre logement. Ces actes doivent être autorisés, après estimation des biens concernés par le service des domaines, par une délibération motivée du conseil municipal.

Dans les mêmes communes, les mêmes élus peuvent acquérir un bien appartenant à la commune pour la création ou le développement de leur activité professionnelle. Le prix ne peut être inférieur à l'évaluation du service des domaines. L'acte doit être autorisé, quelle que soit la valeur des biens concernés, par une délibération motivée

du conseil municipal.

Pour l'application des trois alinéas qui précèdent, la commune est représent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2122-26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 maire, l'adjoint ou le conseiller municipal intéressé doit s'abstenir de participer à la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relative à la conclusion ou à l'approbation du contrat. En outr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21-18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conseil municipal ne peut décider de se réunir à huis clos.

Article 432-13

Modifié par Loi n°2007-148 du 2 février 2007 - art. 17 ()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ayant été chargée, en tant que fonctionnaire ou agent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ans le cadre des fonctions qu'elle a effectivement exercées, soit d'assurer la surveillance ou le contrôle d'une entreprise privée, soit de conclure des contrats de toute nature avec une entreprise privée ou de formuler un avis sur de tels contrats, soit de proposer directemen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s décisions relatives à des opérations réalisées par une entreprise privée ou de formuler un avis sur de telles décisions, de prendre ou de recevoir une participation par travail, conseil ou capitaux dans l'une de ces entreprises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suivant la cessation de ces fonctions.

Est punie des mêmes peines toute participation par travail, conseil ou capitaux dans une entreprise privée qui possède au moins 30 % de capital commun ou a conclu un contrat comportant une exclusivité de droit ou de fait avec l'une des entrepris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Pour l'application des deux premiers alinéas, est assimilée à une entreprise privée toute entreprise publique exerçant son activité dans un secteur concurrentiel et conformément aux règles du droit privé.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agent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s entreprises publiques,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dans lesquelles l'Etat ou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détienn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 du capital et des exploitants publics prévus par la loi n° 90-568 du 2 juillet 1990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à France Télécom.

L'infraction n'est pas constituée par la seule participation au capital de sociétés cotées en bourse ou lorsque les capitaux sont reçus par dévolution successorale.

NOTA : Loi 2007-148 du 2 février 2007 art. 45 III : Les articles 17 à 19 de la présente loi entrent en vigueur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u décret mentionné au VII de l'article 87 de la loi 93-122 du 29 janvier 1993, dans sa rédaction issue de la présente loi. Il s'agit du décret n° 2007-611 du 26 avril 2007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u 27 avril 2007.

Paragraphe 4 : Des atteintes à la liberté d'accès et à l'égalité des candidats dans les marchés publics et les délégations de service public.

Article 432-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ou exerçant les fonctions de représentant, administrateur ou agent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d'intérêt national chargé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et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locales ou par toute personne agissant pour le compte de l'une de celles susmentionnées de procurer ou de tenter de procurer à autrui un avantage injustifié par un acte contraire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ayant pour objet de garantir la liberté d'accès et l'égalité des candidats dans les marchés publics et les délégations de service public.

Paragraphe 5 : De la soustraction et du détournement de biens.

Article 432-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un comptable public, un dépositaire public ou l'un de ses subordonnés, de détruire, détourner ou soustraire un acte ou un titre, ou des fonds publics ou privés, ou effets, pièces ou titres en tenant lieu, ou tout autre objet qui lui a été remis en raison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u délit prévu à l'alinéa qui précèd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32-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orsque la destruction, le détournement ou la soustraction par un tiers des biens visés à l'article 432-15 résulte de la négligence d'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un comptable public ou d'un dépositaire public, celle-ci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Section 4 : Peines complémentaires.

Article 432-17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chapitre, peuvent être prononcées, à titre complémentaire,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ls, civique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es sommes ou objets irrégulièrement reçus par l'auteur d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4°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 432-7 et 432-1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CHAPITRE III : Des atteintes à l'administration publique commises par les particuliers

Section 1 : De la corruption active et du trafic d'influence commis par les particuliers.

Article 433-1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

- 1° Soit qu'elle accomplisse ou s'abstienne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de son mandat,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sa mission ou son mandat ;
- 2° Soit qu'elle abuse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autorité ou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éder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qui sollicite,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visé au 1° ou d'abuser de son influence dans les conditions visées au 2°.

Article 433-2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autorité ou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ou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à une personne,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qu'elle abuse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autorité ou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Section 2 : Des menaces et actes d'intimidation commis contre les personnes exerçant une fonction publique.

Article 433-3

Modifié par Loi n°2006-11 du 5 janvier 2006 - art. 97 ()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a menace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ou les biens proférée à l'encontre d'une personne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d'un magistrat, d'un juré, d'un avocat, d'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d'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d'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de l'inspection du

travail,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de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d'un sapeur-pompier professionnel ou volontaire, d'un gardien assermenté d'immeubles ou de groupes d'immeubles ou d'un agent exerçant pour le compte d'un bailleur des fonctions de gardiennage ou de surveillance des immeubles à usage d'habit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7-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dans l'exercice ou du fait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e menace proférée à l'encontre, et du fait de ces mêmes fonctions, du conjoint, des ascendants et des descendants en ligne directe de cette personne ou de toute autre personne vivant habituellement à son domicil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a menace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ou les biens proférée à l'encontre d'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ransport public de voyageurs ou de toute autr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insi que d'un professionnel de santé,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orsque la qualité de la victime est apparente ou connue de l'auteur.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 000 Euros d'amende lorsqu'il s'agit d'une menace de mort ou d'une menace d'atteinte aux biens dangereuse pour les personnes.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d'user de menaces, de violences ou de commettre tout autre acte d'intimidation pour obtenir d'une personne mentionnée au premier ou au deuxième alinéa soit qu'elle accomplisse ou s'abstienne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de son mandat,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sa mission ou son mandat, soit qu'elle abuse de son autorité vrai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autorité ou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Section 3 : De la soustraction et du détournement de biens contenus dans un dépôt public.

Article 433-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détruire, détourner ou soustraire un acte ou un titre, ou des fonds publics ou privés, ou des effets, pièces ou titres en tenant lieu ou tout autre objet, qui ont été remis, en raison de ses fonctions,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à un comptable public, à un dépositaire public ou à l'un de ses subordonnés,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u déli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est punie des mêmes peines.

Section 4 : De l'outrage.

Article 433-5

Modifi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45 ()

Constituent un outrage puni de 7500 euros d'amende les paroles, gestes ou menaces, les écrits ou images de toute nature non rendus publics ou l'envoi d'objets quelconques adressés à un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sa mission, e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sa dignité ou au respect dû à la fonction dont elle est investie.

Lorsqu'il est adressé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l'outrag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adressé à un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et que les

faits ont été commis à l'intérieur d'un établissement scolaire ou éducatif, ou, à l'occasion des entrées ou sorties des élèves, aux abords d'un tel établissement, l'outrag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en réunion, l'outrage prévu au premier alinéa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et l'outrage prévu au deuxième alinéa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433-5-1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113 ()

Le fait, au cours d'une manifestation organisée ou réglementée par les autorités publiques, d'outrager publiquement l'hymne national ou le drapeau tricolore est puni de 7 500 euros d'amende.

Lorsqu'il est commis en réunion, cet outrag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 500 euros d'amende.

Section 5 : De la rébellion.

Article 433-6

Constitue une rébellion le fait d'opposer une résistance violente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pour l'exécution des lois, des ordres de l'autorité publique, des décisions ou mandats de justice.

Article 433-7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La rébellion est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rébellion commise en réunion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433-8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La rébellion armé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a rébellion armée commise en réunion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433-9

Lorsque l'auteur de la rébellion est détenu, les peines prononcées pour le délit de rébellion se cumulent, par dérogation aux articles 132-2 à 132-5,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celles que l'intéressé subissait ou celles prononcées pour l'infraction à raison de laquelle il était détenu.

Article 433-10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4 ()

La provocation directe à la rébellion, manifestée soit par des cris ou des discour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affichés ou distribués, soit par tout autre moyen de transmission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est punie de deu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e le déli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est commis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Section 6 : De l'opposition à l'exécution de travaux publics.

Article 433-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s'opposer, par voies de fait ou violences, à l'exécution de travaux publics ou d'utilité publiqu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Section 7 : De l'usurpation de fonctions.

Article 433-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agissant sans titre, de s'immiscer dans l'exercice d'une fonction publique en accomplissant l'un des actes réservés au titulaire de cette fonction.

Article 433-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

- 1° D'exercer une activité dans des conditions de nature à créer dans l'esprit du public une confusion avec l'exercice d'une fonction publique ou d'une activité réservée aux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
- 2° D'user de documents ou d'écrits présentant, avec des actes judiciaires ou extrajudiciaires ou avec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provoquer une méprise dans l'esprit du public.

Section 8 : De l'usurpation de signes réservés à l'autorité publique.

Article 433-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publiquement et sans droit :

- 1° De porter un costume, un uniforme ou une décoration réglementés par l'autorité publique ;
- 2° D'user d'un document justificatif d'une qualité professionnelle ou d'un insigne réglementés par l'autorité publique ;
- 3° D'utiliser un véhicule dont les signes extérieurs sont identiques à ceux utilisés par l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ou les militaires.

Article 433-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publiquement, de porter un costume ou un uniforme, d'utiliser un véhicule, ou de faire usage d'un insigne ou d'un document présentant, avec les costumes, uniformes, véhicules, insignes ou documents distinctifs réservés aux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ou aux militaire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causer une méprise dans l'esprit du public.

Article 433-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s infractions définies par les articles 433-14 et 433-15 sont punie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ont pour objet de préparer ou de faciliter la commission d'un crime ou d'un délit.

Section 9 : De l'usurpation de titres.

Article 433-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usage, sans droit, d'un titre attaché à une profession réglementée par l'autorité publique ou d'un diplôme officiel ou d'une qualité dont les conditions d'attribution sont fixées par l'autorité publiqu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Section 10 : De l'usage irrégulier de qualité.

Article 433-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par le fondateur ou le dirigeant de droit ou de fait d'une entreprise qui poursuit un but lucratif, de faire figurer ou de laisser figurer, dans une publicité réalisée dans l'intérêt de l'entreprise qu'il se propose de fonder ou qu'il dirige :

- 1° Le nom, avec mention de sa qualité, d'un membre ou d'un ancien membre du Gouvernement, du Parlement, du Parlement européen, d'une assemblée délibérant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Conseil d'Etat, du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de la Cour de cassation, de la Cour des comptes, de l'Institut de France, du conseil de direction de la Banque de France ou d'un organisme collégial investi par la loi d'une mission de contrôle ou de conseil ;

2° Le nom, avec mention de sa fonction, d'un magistrat ou d'un ancien magistrat, d'un fonctionnaire ou d'un ancien fonctionnaire ou d'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

3° Le nom d'une personne avec mention de la décoration réglementée par l'autorité publique qui lui a été décerné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 banquier ou un démarcheur, de faire usage de la publicité visée à l'alinéa qui précède.

Section 11 : Des atteintes à l'état civil des personnes.

Article 433-18-1

Créé par Loi n°2007-293 du 5 mars 2007 - art. 36 ()

Le fait, pour une personne ayant assisté à un accouchement, de ne pas faire la déclaration prescrite par l'article 56 du code civil dans les délais fixés par l'article 55 du même cod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os d'amende.

Article 433-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fait, dans un acte public ou authentique ou dans un document administratif destiné à l'autorité publique et hors les cas où la réglementation en vigueur autorise à souscrire ces actes ou documents sous un état civil d'emprunt :

- 1° De prendre un nom ou un accessoire du nom autre que celui assigné par l'état civil ;
- 2° De changer, altérer ou modifier le nom ou l'accessoire du nom assigné par l'état civil.

Article 433-2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une personne engagée dans les liens du mariage, d'en contracter un autre avant la dissolution du précéden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officier public ayant célébré ce mariage en connaissant l'existence du précédent.

Article 433-2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Tout ministre d'un culte qui procédera, de manière habituelle, aux cérémonies religieuses de mariage sans que ne lui ait été justifié l'acte de mariage préalablement reçu par les officiers de l'état civil sera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Article 433-2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Toute personne qui donne aux funérailles un caractère contraire à la volonté du défunt ou à une décision judiciaire, volonté ou décision dont elle a connaissance, sera punie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Section 12 : Peines complémentair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433-22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433-23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433-1, 433-2 et 433-4, peut être également prononcée la confiscation des sommes ou objets irrégulièrement reçus par l'auteur d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Article 433-24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433-8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e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Article 433-25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sections 1, 6, 7, 9 et 10 d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6° et 7° de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prévue à l'article 131-21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HAPITRE IV : Des atteintes à l'action de justice

Section 1 : Des entraves à la saisine de la justice.

Article 434-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quiconque ayant connaissance d'un crime dont il est encore possible de prévenir ou de limiter les effets, ou dont les auteurs sont susceptibles de commettre de nouveaux crimes qui pourraient être empêchés, de ne pas en informer l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Sont exceptés d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sauf en ce qui concerne les crimes commis sur les mineurs de quinze ans :

- 1° Les parents en ligne directe et leurs conjoints, ainsi que les frères et soeurs et leurs conjoints, de l'auteur ou du complice du crime ;
- 2° Le conjoint de l'auteur ou du complice du crime, ou la personne qui vit notoirement en situation maritale avec lui.

Sont également exceptées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les personnes astreintes au secr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6-13.

Article 434-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orsque le crime visé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34-1 constitue une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prévue par le titre Ier du présent livre ou un acte de terrorisme prévu par le titre II du présent livre,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quiconque ayant eu connaissance de privations, de mauvais traitements ou d'atteintes sexuelles infligés à un mineur de quinze ans ou à une personne qui n'est pas en mesure de se protéger en raison de son âge, d'une maladie, d'une infirmité, d'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d'un état de grossesse, de ne pas en informer l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Sauf lorsque la loi en dispose autrement, sont exceptées d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les personnes astreintes au secr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6-13.

Article 434-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 fait, en vue de faire obstac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

- 1° De modifier l'état des lieux d'un crime ou d'un délit soit par l'altération, la falsification ou l'effacement des traces ou indices, soit par l'apport, le déplacement ou la suppression d'objets quelconques ;
- 2° De détruire, soustraire, receler ou altérer un document public ou privé ou un objet de nature à faciliter la découverte d'un crime ou d'un délit, la recherche des preuves ou la condamnation des coupables.

Lorsque les fa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commis par une personne qui, par ses fonctions, est appelée à concourir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4-1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41 ()

Le fait pour une personne ayant connaissance de la disparition d'un mineur de quinze ans de ne pas en informer l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en vue d'empêcher ou de retarder la mise en oeuvre des procédures de recherche prévues par l'article 74-1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434-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Toute menace ou tout autre acte d'intimidation à l'égard de quiconque, commis en

vue de déterminer la victime d'un crime ou d'un délit à ne pas porter plainte ou à se rétracter,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fournir à la personne auteur ou complice d'un crime ou d'un acte de terrorisme puni d'au moins dix ans d'emprisonnement un logement, un lieu de retraite, des subsides, des moyens d'existence ou tout autre moyen de la soustraire aux recherches ou à l'arrestation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de manière habituelle.

Sont exceptés d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

- 1° Les parents en ligne directe et leurs conjoints, ainsi que les frères et soeurs et leurs conjoints, de l'auteur ou complice du crime ou de l'acte de terrorisme ;
- 2° Le conjoint de l'auteur ou du complice du crime ou de l'acte de terrorisme, ou la personne qui vit notoirement en situation maritale avec lui.

Article 434-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receler ou de cacher le cadavre d'une personne victime d'un homicide ou décédée des suites de violence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Section 2 : Des entraves à l'exercice de la justice.

Article 434-7-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 magistrat, toute autre personne siégeant dans 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ou toute autorité administrative, de dénier de rendre la justice après en avoir été requis et de persévérer dans son déni après avertissement ou injonction de ses supérieurs est puni de 7500 euros d'amende et de l'interdiction de l'exercice des fonctions publiques pour une durée de cinq à vingt ans.

Article 434-7-2

Modifié par Loi n°2005-1549 du 12 décembre 2005 - art. 36 ()

Sans préjud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le fait, pour toute personne qui, du fait de ses fonctions, a connaissanc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d'informations issues d'une enquête ou d'une instruction en cours concernant un crime ou un délit, de révéler sciemment ces informations à des personnes qu'elle sait susceptibles d'être impliquées comme auteurs, coauteurs, complices ou receleurs, dans la commission de ces infractions, lorsque cette révélation est réalisée dans le dessein d'entraver le déroulement des investigations ou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orsque l'enquête ou l'instruction concerne un crime ou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relevant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3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434-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Toute menace ou tout acte d'intimidation commis envers un magistrat, un juré ou toute autre personne siégeant dans 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un arbitre, un interprète, un expert ou l'avocat d'une partie en vue d'influencer son comporteme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9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

- 1° Un magistrat, un juré ou toute autre personne siégeant dans 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
- 2° Un fonctionnaire au greffe d'une juridiction ;
- 3° Un expert nommé, soit par une juridiction, soit par les parties ;
- 4° Une personne chargée par l'autorité judiciaire ou par une juridiction administrative d'une mission de conciliation ou de médiation ;
- 5° Un arbitre exerçant sa mission sous l'empire du droit national sur l'arbitrage, de solliciter ou d'agré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en vue de l'accomplissement ou de l'abstention d'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Le fait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d'une personne visée aux 1° à 5°, ou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obtenir d'une de ces personnes l'accomplissement ou l'abstention d'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est puni des mêmes peines.

Lorsque l'infraction définie aux premier à septième alinéas est commise par un magistrat au bénéfice ou au détriment d'une personne faisant l'objet de poursuites criminelles, la peine est portée à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225 000 euros d'amende.

Article 434-9-1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434-9 toute décision ou tout avis favorab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à tout moment,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ou de proposer, sans droi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à une personne,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qu'elle abuse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434-9 une décision ou un avis favorable.

Article 434-10

Modifi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3 (V)

Le fait, pour tout conducteur d'un véhicule ou engin terrestre, fluvial ou maritime, sachant qu'il vient de causer ou d'occasionner un accident, de ne pas s'arrêter et de tenter ainsi d'échapper à la responsabilité pénale ou civile qu'il peut avoir encour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orsqu'il y a lieu à l'application des articles 221-6 et 222-19, les peines prévues par ces articles sont portées au double hor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1-6-1, 222-19-1 et 222-20-1.

NOTA : Loi 2003-495 du 12 juin 2003 art. 3 III :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34-10 du code pénal dans sa rédaction antérieure à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loi, demeure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commises avant cette entrée en vigueur.

Article 434-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quiconque connaissant la preuve de l'innocence d'une personne détenue provisoirement ou jugée pour crime ou délit, de s'abstenir volontairement d'en apporter aussitôt le témoignage aux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Toutefois, est exempt de peine celui qui apportera son témoignage tardivement, mais spontanément.

Sont exceptés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

- 1° L'auteur ou le complice de l'infraction qui motivait la poursuite, ses parents en ligne directe et leurs conjoints, ainsi que ses frères et soeurs et leurs conjoints ;

2° Le conjoint de l'auteur ou du complice de l'infraction qui motivait la poursuite, ou la personne qui vit notoirement en situation maritale avec lui. Sont également exceptées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les personnes astreintes au secr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26-13.

Article 434-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our toute personne ayant déclaré publiquement connaître les auteurs d'un crime ou d'un délit, de refuser de répondre aux questions qui lui sont posées à cet égard par un jug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témoignage mensonger fait sous serment devant toute juridiction ou devant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en exécution d'une commission rogatoir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Toutefois, le faux témoin est exempt de peine s'il a rétracté spontanément son témoignage avant la décision mettant fin à la procédure rendue par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Article 434-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témoignage mensonger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

1° Lorsqu'il est provoqué par la remise d'un don ou d'une récompense quelconque ;

2° Lorsque celui contre lequel ou en faveur duquel le témoignage mensonger a été commis est passible d'une peine criminelle.

Article 434-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user de promesses, offres, présents, pressions, menaces, voies de fait, manoeuvres ou artifices au cours d'une procédure ou en vue d'une demande ou défense en justice afin de déterminer autrui soit à faire ou délivrer une déposition, une déclaration ou une attestation mensongère, soit à s'abstenir de faire ou délivrer une déposition, une déclaration ou une attestation,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même si la subornation n'est pas suivie d'effet.

Article 434-15-1

Modifié par Loi n°2002-1138 du 9 septembre 2002 - art. 39 ()

Le fait de ne pas comparaître, de ne pas prêter serment ou de ne pas déposer, sans excuse ni justifica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ou devant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ur commission rogatoire par une personne qui a été citée par lui pour y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est puni de 3750 euros d'amende.

Article 434-15-2

Créé par Loi n°2001-1062 du 15 novembre 2001 - art. 31 ()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taux*] le fait, pour quiconque ayant connaissance de la convention secrète de déchiffrement d'un moyen de cryptologie susceptible d'avoir été utilisé pour préparer, faciliter ou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de refuser de remettre ladite convention aux

autorités judiciaires ou de la mettre en oeuvre, sur les réquisitions de ces autorités délivrées en application des titres II et III du livre Ier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 refus est opposé alors que la remise ou la mise en oeuvre de la convention aurait permis d'éviter la commission d'un crime ou d'un délit ou d'en limiter les effets,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434-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publication, avant l'intervention de la décision juridictionnelle définitive, de commentaires tendant à exercer des pressions en vue d'influencer les déclarations des témoins ou la décision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ou de jugement est punie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Article 434-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ux serment en matière civil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 interprète, en toute matière, de dénaturer la substance des paroles ou documents traduits est puni, selon les distinctions des articles 434-13 et 434-14,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000 euros d'amende ou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19

La subornation de l'interprète est réprim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434-15.

Article 434-2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 expert, en toute matière, de falsifier, dans ses rapports écrits ou ses exposés oraux, les données ou les résultats de l'expertise est puni, selon les distinctions des articles 434-13 et 434-14,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000 euros d'amende ou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21

La subornation de l'expert est réprim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434-15.

Article 434-2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bris de scellés apposés par l'autori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a tentative de bris de scellés est punie des mêmes peines.

Est puni des mêmes peines tout détournement d'objet placé sous scellés ou sous main de justice.

Article 434-2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endre le nom d'un tiers, dans des circonstances qui ont déterminé ou auraient pu déterminer contre celui-ci des poursuites pénal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2 à 132-5, les peines prononcées pour ce délit se cumulent,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celles qui auront été prononcées pour l'infraction à l'occasion de laquelle l'usurpation a été commise.

Est punie des peine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la fausse déclaration relative à l'état civil d'une personne, qui a déterminé ou aurait pu déterminer des poursuites pénales contre un tiers.

Section 3 : Des atteintes à l'autorité de la justice

Paragraphe 1 : Des atteintes au respect dû à la justice.

Article 434-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outrage par paroles, gestes ou menaces, par écrits ou images de toute nature non rendus publics ou par l'envoi d'objets quelconques adressé à un magistrat, un juré ou toute personne siégeant dans 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à l'occasion de cet exercice et tendant à porter atteinte à sa dignité ou au respect dû à la fonction dont il est investi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Si l'outrage a lieu à l'audience d'une cour, d'un tribunal ou d'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la peine est porté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et à 3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2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chercher à jeter le discrédit, publiquement par actes, paroles, écrits ou images de toute nature, sur un acte ou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dans des conditions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utorité de la justice ou à son indépendance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appliquent pas aux commentaires techniques ni aux actes, paroles, écrits ou images de toute nature tendant à la réformation, la cassation ou la révision d'une décision.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 voie de la presse écrite ou audiovisuelle,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qui régissent ces matières sont applicables en ce qui concerne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responsables.

L'action publique se prescrit par trois mois révolus, à compter du jour où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a été commise, si dans cet intervalle il n'a été fait aucun acte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Article 434-2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dénoncer mensongèrement à l'autorité judiciaire ou administrative des faits constitutifs d'un crime ou d'un délit qui ont exposé les autorités judiciaires à d'inutiles recherches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Paragraphe 2 : De l'évasion.

Article 434-27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94 ()

Constitue une évasion punissable le fait, par un détenu, de se soustraire à la garde à laquelle il est soumis.

L'évasion est punie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 l'évasion est réalisée par violence, effraction ou corruption, lors même que celles-ci auraient été commises, de concert avec le détenu, par un tier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434-28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paragraphe, est regardée comme détenue toute personne :

- 1° Qui est placée en garde à vue ;
- 2° Qui se trouve en instance ou en cours de présentation à l'autorité judiciaire à l'issue d'une garde à vue ou en exécution d'un mandat d'amener ou d'arrêt ;
- 3° Qui s'est vu notifier un mandat de dépôt ou un mandat d'arrêt continuant de produire effet ;
- 4° Qui exécute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ou qui a été arrêtée pour exécuter cette peine ;
- 5° Qui est placée sous écrou extraditionnel.

Article 434-29

Modifié par Loi 97-1273 1997-12-29 art. 1 JORF 31 décembre 1997

Constitue également une évasion punie des mêmes peines le fait :

- 1° Par un détenu placé dans un établissement sanitaire ou hospitalier, de se soustraire à la surveillance à laquelle il est soumis ;
- 2° Par tout condamné, de se soustraire au contrôle auquel il est soumis alors qu'il a fait l'objet d'une décision soit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oit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qu'il bénéficie soit du régime de la semi-liberté, soit d'une permission de sortir ;
- 3° Par tout condamné, de ne pas réintégrer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à l'issue d'une mesure de suspension ou de fractionnement de l'emprisonnement,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semi-liberté ou de permission de sortir ;
- 4° Par tout condamné placé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e neutraliser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le procédé permettant de détecter à distance sa présence ou son absence dans le lieu désign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434-30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194 ()

L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434-27 et au 1° de l'article 434-29 sont punie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ont été commises sous la menace d'une arme ou d'une substance explosive, incendiaire ou toxiqu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 euros d'amende lorsqu'il a été fait usage d'une arme ou d'une substance explosive, incendiaire ou toxique ou lorsque les faits sont commis en bande organisée, que les membres de cette bande soient ou non des détenus.

Article 434-31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2 à 132-5, les peines prononcées pour le délit d'évasion se cumulent,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celles que l'évadé subissait ou celles prononcées pour l'infraction à raison de laquelle il était détenu.

Article 434-3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de procurer à un détenu tout moyen de se soustraire à la garde à laquelle il était soumis.

Si le concours ainsi apporté s'accompagne de violence, d'effraction ou de corruption, l'infraction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Si ce concours consiste en la fourniture ou l'usage d'une arme ou d'une substance explosive, incendiaire ou toxique, l'infraction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3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toute personne chargée de sa surveillance, de faciliter ou de préparer, même par abstention volontaire, l'évasion d'un détenu.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à toute personne habilitée par ses fonctions à pénétrer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à approcher, à quelque titre que ce soit, des détenus.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si le concours apporté consiste en la

fourniture ou l'usage d'une arme ou d'une substance explosive, incendiaire ou toxique, l'infraction est punie de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225000 euros d'amende.

Article 434-34

Les personnes visées aux articles 434-32 et 434-33 peuvent être condamnées solidairement aux dommages-intérêts que la victime aurait eu le droit d'obtenir du détenu par l'exercice de l'action civile en raison de l'infraction qui motivait la détention de celui-ci.

Article 434-35

Modifi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73 ()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en quelque lieu qu'il se produise, de remettre ou de faire parvenir à un détenu, ou de recevoir de lui et de transmettre des sommes d'argent, correspondances, objets ou substances quelconques ainsi que de communiquer par tout moyen avec une personne détenue, en dehors des cas autorisés par les règlements.

La peine est porté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000 euros d'amende si le coupable est chargé de la surveillance de détenus ou s'il est habilité par ses fonctions à pénétrer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à approcher, à quelque titre que ce soit, des détenus.

Article 434-35-1

Créé par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 art. 73 ()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énétrer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d'en escalader l'enceinte sans y être habilité en vertu de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ou y avoir été autorisé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Article 434-36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paragraph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34-37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en qualité d'auteur ou de complic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paragraphe, sera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judiciaire ou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elle a permis d'éviter que l'évasion ne se réalise.

Paragraphe 3 : Des autres atteintes à l'autorité de la justice pénale.

Article 434-3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par un interdit de séjour, de paraître dans un lieu qui lui est interdi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our l'interdit de séjour de se soustraire aux mesures de surveillance prescrites par le juge.

Article 434-3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Dans le cas où un jugement a ordonné, à titre de peine, l'affichage d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le fait de supprimer, dissimuler ou lacérer totalement ou partiellement des affiches apposées est puni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e jugement ordonnera à nouveau l'exécution de l'affichage aux frais du condamné.

Article 434-4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orsqu'a été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l'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prévue aux articles 131-27 à 131-29, toute violation de cette interdiction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41

Modifi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25 ()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a viol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résultant des peines de suspension ou d'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d'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d'interdiction de paraître dans certains lieux ou de rencontrer certaines personnes, d'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d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d'interdiction de détenir un animal, d'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ou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de fermeture d'établissement ou d'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5-1, 131-6, 131-10, 131-14, 131-16 ou 131-17.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détruire, détourner ou tenter de détruire ou de détourner un véhicule immobilisé ou un véhicule, une arme, tout autre objet ou un animal confisqué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6, 131-10, 131-14 ou 131-16.

Est égalemen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e personne recevant la notification d'une décision prononçant à son égard, en application des articles précités, la suspension ou l'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ou la confiscation d'un véhicule, d'une arme, de tout autre objet ou d'un animal, de refuser de remettre le permis suspendu, annulé ou retiré, la chose ou l'animal confisqué à l'agent de l'autorité chargé de l'exécution de cette décision.

Article 434-4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viol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a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principale ou de peine complémentaire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434-4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rsqu'a été prononcée contre une personne morale l'une d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131-39, la violation par une personne physique des obligations qui en découlent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e fait, pour toute personne physique, de participer au maintien ou à la reconstitution, ouverte ou déguisée, d'une personne morale dont la dissolu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1° de l'article 131-39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dissolution a été prononcée pour une infraction commise en récidive, ou pour l'infraction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000 euros d'amende.

Section 4 : Peines complémentair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434-44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34-4 à 434-9-1, 434-11, 434-13 à 434-15, 434-17 à 434-23, 434-27, 434-29, 434-30, 434-32, 434-33, 434-35, 434-36 et 434-40 à 434-43 encourent également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434-9, 434-9-1, 434-16 et 434-25, peuvent être également ordonnés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434-9, 434-9-1 et 434-33 et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434-35, peut être également prononcée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tous les ca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st en outre encourue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Article 434-45

Modifié par Loi n°2003-495 du 12 juin 2003 - art. 5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u délit prévu par l'article 434-10 encourent

également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ne pouvan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Article 434-46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huitième alinéa de l'article 434-9, aux articles 434-9-1 et 434-30,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434-32 et à l'article 434-33.

Article 434-47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Les personnes morales reconnu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au huitième alinéa de l'article 434-9,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34-9-1 et aux articles 434-39 et 434-43 encour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6° et 7° de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prévue à l'article 131-21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 5° Pour les infractions prévu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434-43, la peine de dissolution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HAPITRE V : Des atteintes à l'administration publique et à l'action de la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des autres Etats étrangers et des autr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publiques

Section 1 : Des atteintes à l'administration publique

Sous-section 1 : De la corruption et du trafic d'influence passifs

Article 435-1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dans un Etat étranger ou au sein d'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publi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de son mandat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sa mission ou son mandat.

Article 435-2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d'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au sein d'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publique.

Sous-section 2 : De la corruption et du trafic d'influence actifs

Article 435-3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dans un Etat étranger ou au sein d'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publique,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obtenir qu'elle accomplisse ou s'abstienne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de son mandat,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sa mission ou son mandat.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à une personne visée au premier alinéa qui sollicite,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visé audit alinéa.

Article 435-4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à une personne,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qu'elle abuse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d'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au sein d'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publiqu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à toute personne qui sollicite,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es distinctions, des emplois, des marchés ou toute autre décision favorable d'une personne visée au premier alinéa.

Sous-section 3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435-5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Les organismes créés en application d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sont considérés comme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publique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Article 435-6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La poursuite des délits mentionnés aux articles 435-1 à 435-4 ne peut être engagée qu'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sauf lorsque les offres, promesses, dons, présents ou avantages quelconques sont soit proposés ou accordés à une personne qui exerce ses fonctions dans un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ou au sein ou auprè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ou d'un organisme créé en application d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soit sollicités ou agréés par une telle personne en vue de faire obtenir une décision favorable, ou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es fonctions.

Section 2 : Des atteintes à l'action de la justice

Sous-section 1 : De la corruption et du trafic d'influence passifs

Article 435-7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

- 1° Toute personne exerçant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dans un Etat étranger ou au sein ou auprès d'une cour internationale ;
- 2° Tout fonctionnaire au greffe d'une juridiction étrangère ou d'une cour internationale ;
- 3° Tout expert nommé par une telle juridiction ou une telle cour ou par les parties ;
- 4° Tout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conciliation ou de médiation par une telle juridiction ou par une telle cour ;

5° Tout arbitre exerçant sa mission sous l'empire du droit d'un Etat étranger sur l'arbitrage, de solliciter ou d'agré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en vue de l'accomplissement ou de l'abstention d'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Article 435-8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toute décision ou tout avis favorable d'une personne visée à l'article 435-7, lorsqu'elle exerce ses fonctions au sein ou auprès d'une cour internationale ou lorsqu'elle est nommée par une telle cour.

Sous-section 2 : De la corruption et du trafic d'influence actifs

Article 435-9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

- 1° Toute personne exerçant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dans un Etat étranger ou au sein ou auprès d'une cour internationale ;

- 2° Tout fonctionnaire au greffe d'une juridiction étrangère ou d'une cour internationale ;
- 3° Tout expert nommé par une telle juridiction ou une telle cour ou par les parties ;
- 4° Toute personne chargée d'une mission de conciliation ou de médiation par une telle juridiction ou une telle cour ;
- 5° Tout arbitre exerçant sa mission sous l'empire du droit d'un Etat étranger sur l'arbitrage,

pour lui-même ou pour autrui,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obtenir l'accomplissement ou l'abstention d'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à une personne mentionnée aux 1° à 5° qui sollicite,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en vue de l'accomplissement ou de l'abstention d'un acte de sa fonction.

Article 435-10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à une personne,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qu'elle abuse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toute décision ou avis favorable d'une personne visée à l'article 435-9, lorsqu'elle exerce ses fonctions au sein ou auprès d'une cour

internationale ou lorsqu'elle est nommée par une telle cour.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à toute personne qui sollicite,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ou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buser de son influence réelle ou supposée en vue de faire obtenir d'une personne visée au premier alinéa toute décision ou tout avis favorable.

Sous-section 3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435-11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La poursuite des délits mentionnés aux articles 435-7 à 435-10 ne peut être engagée qu'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sauf lorsque les offres, promesses, dons, présents ou avantages quelconques sont soit sollicités ou agréés par une personne qui exerce ses fonctions dans un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ou au sein ou auprè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soit proposés ou accordés à une telle personne, en vue de faire obtenir une décision ou un avis favorable, ou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es fonctions.

Sous-section 4 : Des autres entraves à l'exercice de la justice

Article 435-12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user de promesses, offres, présents, pressions, menaces, voies de fait, manoeuvres ou artifices à l'occasion d'une procédure ou en vue d'une demande ou défense en justice, dans un Etat étranger ou devant une cour internationale, afin de déterminer autrui soit à fournir une déposition, une déclaration ou une attestation mensongère, soit à s'abstenir de fournir une déposition, une déclaration ou une attestation, même si la subornation n'est pas suivie d'effet.

Article 435-13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user de menaces, de violences ou de commettre tout autre acte d'intimidation pour obtenir d'un magistrat, d'un juré, de toute personne siégeant dans une formation juridictionnelle ou participant au service public de la justice, ou d'un agent des services de détection ou de répression des infractions dans un Etat étranger ou dans une cour internationale, qu'il accomplisse ou s'abstienne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de sa miss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ou sa mission.

Section 3 : Peines complémentair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435-14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 4°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en outre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0 à 131-30-2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qui s'est rendu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Article 435-15

Cré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2 ()

Les personnes morales reconnu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435-3, 435-4, 435-9 et 435-10 encour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es peines prévues aux 2° à 7° de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CHAPITRE VI : De la participation à une activité mercenaire.

Article 436-1

Créé par Loi 2003-340 2003-04-14 art. 1 JORF 15 avril 2003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

- 1° Par toute personne, spécialement recrutée pour combattre dans un conflit armé et qui n'est ni ressortissante d'un Etat partie audit conflit armé, ni membre des forces armées de cet Etat, ni n'a été envoyée en mission par un Etat autre que l'un de ceux parties au conflit en tant que membre des forces armées dudit Etat, de prendre ou tenter de prendre une part directe aux hostilités en vue d'obtenir un avantage personnel ou une rémunération nettement supérieure à celle qui est payée ou promise à des combattants ayant un rang et des fonctions analogues dans les forces armées de la partie pour laquelle elle doit combattre ;
- 2° Par toute personne, spécialement recrutée pour prendre part à un acte concerté de violence visant à renverser les institutions ou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territoriale d'un Etat et qui n'est ni ressortissante de l'Etat contre lequel cet acte est dirigé, ni membre des forces armées dudit Etat, ni n'a été envoyée en mission par un Etat, de prendre ou tenter de prendre part à un tel acte en vue d'obtenir un avantage personnel ou une rémunération importants.

Article 436-2

Créé par Loi 2003-340 2003-04-14 art. 1 JORF 15 avril 2003

Le fait de diriger ou d'organiser un groupement ayant pour objet le recrutement, l'emploi, la rémunération, l'équipement ou l'instruction militaire d'une personne définie à l'article 436-1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Article 436-3

Créé par Loi 2003-340 2003-04-14 art. 1 JORF 15 avril 2003

Lorsque les faits mentionnés au présent chapitre sont commis à l'étrange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436-4

Créé par Loi 2003-340 2003-04-14 art. 1 JORF 15 avril 200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a décision ou d'un communiqué informant le public des motifs et du dispositif de celle-c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36-5

Créé par Loi 2003-340 2003-04-14 art. 1 JORF 15 avril 2003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à l'article 436-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TITRE IV : Des atteintes à la confiance publique

CHAPITRE Ier : Des faux.

Article 44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Constitue un faux toute altération frauduleuse de la vérité, de nature à causer un préjudice et accomplie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ans un écrit ou tout autre support d'expression de la pensée qui a pour objet ou qui peut avoir pour effet d'établir la preuve d'un droit ou d'un fait ayant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Le faux et l'usage de faux sont punis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4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ux commis dans un document délivré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aux fins de constater un droit, une identité ou une qualité ou d'accorder une autorisation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usage du faux mentionné à l'alinéa précédent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le faux ou l'usage de faux est commis :

- 1° So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
- 2° Soit de manière habituelle ;
- 3° Soit dans le dessein de faciliter la commission d'un crime ou de procurer l'impunité à son auteur.

Article 44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détention frauduleuse de l'un des faux documents définis à l'article 441-2 est punie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en cas de détention frauduleuse de plusieurs faux documents.

Article 44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ux commis dans une écriture publique ou authentique ou dans un enregistrement ordonné par l'autorité publique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usage du faux mentionné à l'alinéa qui précè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quinz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à 225000 euros d'amende lorsque le faux ou l'usage de faux est commis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ou de sa mission.

Article 44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ocurer frauduleusement à autrui un document délivré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aux fins de constater un droit, une identité ou une qualité ou d'accorder une autorisation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

- 1° Soit par un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
- 2° Soit de manière habituelle ;
- 3° Soit dans le dessein de faciliter la commission d'un crime ou de procurer l'impunité à son auteur.

Article 44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se faire délivrer indûment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ou par un organisme chargé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par quelque moyen frauduleux que

ce soit, un document destiné à constater un droit, une identité ou une qualité ou à accorder une autorisa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fournir une déclaration mensongère en vue d'obtenir d'une administration publique ou d'un organisme chargé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une allocation, un paiement ou un avantage indû.

Article 441-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Indépendamment des ca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 fait :

- 1° D'établir une attestation ou un certificat faisant état de faits matériellement inexacts ;
- 2° De falsifier une attestation ou un certificat originairement sincère ;
- 3° De faire usage d'une attestation ou d'un certificat inexact ou falsifié.

Les peines sont portées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à 45000 euros d'amen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en vue de porter préjudice au Trésor public ou au patrimoine d'autrui.

Article 441-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agissant dans l'exercice de sa profession, de solliciter ou d'agré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promesses, dons, présents ou avantages quelconques pour établir une attestation ou un certificat faisant état de faits matériellement inexacts.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ou d'user de voies de fait ou de menaces ou de propos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obtenir d'une personne agissant dans l'exercice de sa profession qu'elle établisse une attestation ou un certificat faisant état de faits inexacts.

La peine est porté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et à 75000 euros d'amende lorsque la personne visée aux deux premiers alinéas exerce une profession médicale ou de santé et que l'attestation faisant état de faits inexacts dissimule ou certifie faussement l'existence d'une maladie, d'une infirmité ou d'un état de grossesse, ou fournit des indications mensongères sur l'origine d'une maladie ou d'une infirmité ou sur la cause d'un décès.

Article 441-9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41-1, 441-2 et 441-4 à 441-8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41-10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et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une activité de nature professionnelle ou socia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Article 441-11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Article 441-12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HAPITRE II : De la fausse monnaie.

Article 442-1

Modifié par Loi n°2004-204 du 9 mars 2004 - art. 6 ()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pièces de monnaie ou des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ou émis par les institutions étrangères ou internationales

habilitées à cette fin est punie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450000 euros d'amend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a fabrication des pièces de monnaie et des billets de banque mentionnés à l'alinéa précédent réalisée à l'aide d'installations ou de matériels autorisés destinés à cette fin, lorsqu'elle est effectuée en violation d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institutions habilitées à émettre ces signes monétaires et sans l'accord de ces institutions.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442-2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Le transport, la mise en circulation ou la détention en vue de la mise en circulation des signes monétaire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mentionné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42-1 ou des signes monétaires irrégulièrement fabriqués mentionnés au deuxième alinéa de cet article sont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cédent alinéa sont punies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et de 450 000 euros d'amende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bande organisée.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132-23 relatif à la période de sûreté sont applicables aux infrac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Article 442-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 pièces de monnaie ou de billets de banque français ou étrangers n'ayant plus cours légal ou n'étant plus autorisés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4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a mise en circulation de tout signe monétaire non autorisé ayant pour objet de remplacer les pièces de monnaie ou les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42-5

Modifié par Loi n°2001-1168 du 11 décembre 2001 - art. 17 (V)

La fabrication, l'emploi ou la détention sans autorisation des matières, instruments, programmes informatiques ou de tout autre élément spécialement destinés à la fabrication ou à la protection contre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billets de banque ou des pièces de monnaie sont punis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taux*] d'amende.

Article 442-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Sont puni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fabrication, la vente, la distribution de tou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qui présentent avec les signes monétaires visés à l'article 442-1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faciliter l'acceptation desdit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au lieu et place des valeurs imitées.

Article 442-7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Le fait, pour celui qui a reçu les signes monétaire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visés à l'article 442-1 en les tenant pour bons, de les remettre en circulation après en avoir découvert les vices est puni de 7500 euros d'amende.

Article 442-8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42-2 et par les articles 442-3 à 442-7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42-9

Toute personne qui a tenté de commettre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sera exempte de peine si, ayant averti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lle a permis d'éviter que l'infraction ne se réalise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Article 442-10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par l'auteur ou le complic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42-1 à 442-4 est réduite de moitié si, ayant averti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ou judiciaires, il a permis de faire cesser les agissements incriminés et d'identifier,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oupables.

Article 442-11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et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42-1 à 442-6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une activité de nature professionnelle ou socia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Article 442-12

Modifié par Loi n°2003-1119 du 26 novembre 2003 - art. 78 ()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442-1 à 442-4.

Article 442-13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Dans tous les ca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peut être également prononcée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La confiscation des pièces de monnaie et des billets de banque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ainsi que des matières et instruments destinés à servir à leur fabrication est obligatoire.

Selon que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a porté sur des pièces de monnaie ou des billets de banque, les signes monétaire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sont remis à la Monnaie de Paris ou à la Banque de France, aux fins de destruction éventuelle. Leur sont également remis, aux mêmes fins, ceux des matériels et instruments confisqués

qu'elles désignent.

La confiscation de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visés à l'article 442-6 est également obligatoire. Elle entraîne remise de la chose confisquée à la Monnaie de Paris ou à la Banque de France, selon la distinction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aux fins de destruction éventuelle.

Article 442-1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442-13.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442-15

Créé par Loi n°2001-1168 du 11 décembre 2001 - art. 17 (V)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42-1, 442-2 et 442-5 à 442-14 sont applicables lorsque sont en cause les billets de banque et pièces de monnaie qui, bien que destinés à être mis en circulation, n'ont pas été encore émis par les institutions habilitées à cette fin et n'ont pas encore cours légal.

Article 442-16

Créé par Loi n°2007-297 du 5 mars 2007 - art. 66 ()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coupables des crimes et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42-1 à 442-3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CHAPITRE III : De la falsification des titres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émises par l'autorité publique.

Article 443-1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effets émis par le Trésor public avec son timbre ou sa marque ou des effets émis par les Etats étrangers avec leur timbre ou leur marque, ainsi que l'usage ou le transport de ces effet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sont puni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43-2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JORF 30 octobre 2007

Sont punis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timbres-poste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postales, ainsi que des timbres émis par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la vente, le transport, la distribution ou l'usage de ces timbres ou valeur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Article 443-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Sont puni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fabrication, la vente, le transport ou la distribution de tou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qui présentent, avec les titres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émises par l'Etat, l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ou les exploitants publics prévus par la loi n° 90-568 du 2 juillet 1990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faciliter l'acceptation desdit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au lieu et place des valeurs imitées.

Article 443-4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Sont punis de six mois d'emprisonnement et de 7500 euros d'amende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timbres-poste étrangers ou autres valeurs postales émises par le service des postes d'un pays étranger, ainsi que la vente, le transport, la distribution ou l'usage de ces timbres ou valeur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Article 443-5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43-6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une activité de nature professionnelle ou socia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Dans tous les cas, la confiscation du corps du délit est obligatoire. Elle entraîne remise à l'administration de la chose confisquée aux fins de destruction éventuelle.

Article 443-7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443-1 et 443-2.

Article 443-8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443-6.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HAPITRE IV : De la falsification des marques de l'autorité.

Article 444-1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soit du sceau de l'Etat, soit des timbres nationaux, soit des poinçons servant à marquer les matières d'or, d'argent ou de platine, ou l'usage de ces sceaux, timbres ou poinçon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Article 444-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usage frauduleux du sceau de l'Etat, des timbres nationaux ou des poinçons servant à marquer des matières d'or, d'argent ou de platin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Article 444-3

Modifié par Loi n°2007-1544 du 29 octobre 2007 - art. 41 () JORF 30 octobre 2007

Sont punies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

- 1°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sceaux, timbres ou marques d'une autorité publique, ou l'usage de ces sceaux, timbres ou marques,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
- 2°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papiers à en-tête ou imprimés officiels utilisés dans les assemblées instituées par la Constitution,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ou les juridictions, la vente, la distribution ainsi que l'usage de ces papiers ou imprimés ainsi contrefaisants ou falsifiés ;

3°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tampilles et de marques attestant l'intervention des services d'inspection ou de surveillance sanitaire de la France ou d'un pays étranger.

Article 444-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usage frauduleux des sceaux, marques, timbres, papiers, imprimés ou estampilles et marques attestant l'intervention des services d'inspection ou de surveillance sanitaire visés à l'article 444-3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444-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Sont punie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fabrication, la vente, la distribution ou l'utilisation d'imprimés qui présentent avec les papiers à en-tête ou imprimés officiels en usage dans les assemblées instituées par la Constitution,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ou les juridiction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causer une méprise dans l'esprit du public.

Article 444-6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444-7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crimes et délits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une activité de nature professionnelle ou socia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
- 3°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
- 4°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Dans tous les cas, la confiscation du corps du délit est obligatoire. Elle entraîne remise à l'administration de la chose confisquée aux fins de destruction éventuelle.

Article 444-8

L'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0, soit à titre définitif, soit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à l'encontre de tout étranger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Article 444-9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444-7.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CHAPITRE V : De la corruption des personnes n'exerçant pas une fonction publique

Section 1 : De la corruption passive et active des personnes n'exerçant pas une fonction publique.

Article 445-1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quiconque, de propos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une personne qui, sans êtr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ni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ni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exerce, dans le cadr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une fonction de direction ou un travail pou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ou pour un organisme quelconque,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obtenir qu'elle accomplisse ou s'abstienne d'accomplir un acte de son activité ou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on activité ou sa fonction, en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légales, contractuelles ou professionnelles.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à une personne visée au premier alinéa qui sollicite,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visé audit alinéa, en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légales, contractuelles ou professionnelles.

Article 445-2

Modifié par Loi n°2007-1598 du 13 novembre 2007 - art. 1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une personne qui, sans êtr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ni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ni investie d'un mandat électif public exerce, dans le cadr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une fonction de direction ou un travail pou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ou pour un organisme quelconque, de solliciter ou d'agréer, sans droit, à tout mom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offres, des promesses, des dons, des présents ou des avantages quelconques, pour elle-même ou pour autrui, afin d'accomplir ou de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on activité ou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on activité ou sa fonction, en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légales, contractuelles ou professionnelles.

Section 2 :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445-3

Créé par Loi n°2005-750 du 4 juillet 2005 - art. 3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445-1 et 445-2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445-4

Créé par Loi n°2005-750 du 4 juillet 2005 - art. 3 ()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445-1 et 445-2.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6° et 7°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a confisca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1,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à l'exception des objets susceptibles de restitution ;
- 4°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TITRE V : De la participation à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Article 450-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Constitue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tout groupement formé ou entente établie en vue de la préparation, caractérisée par un ou plusieurs faits matériels, d'un ou plusieurs crimes ou d'un ou plusieurs délits punis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es infractions préparées sont des crimes ou des délits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la participation à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est punie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000 euros d'amende.

Lorsque les infractions préparées sont des délits punis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la participation à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450-2

Toute personne ayant participé au groupement ou à l'entente définis par l'article 450-1 est exempte de peine si elle a, avant toute poursuite, révélé le groupement ou l'entente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t permis l'identification des autres participants.

Article 450-3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450-1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interdic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7,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
- 3° L'interdiction de séjour,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1.

Peuvent être également prononcées à l'encontre de ces personnes les autr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pour les crimes et les délits que le groupement ou l'entente avait pour objet de préparer.

Article 450-4

Créé par Loi n°98-468 du 17 juin 1998 - art. 22 ()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450-1.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450-5

Modifié par 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 art. 24 ()

Les personnes physiques et morales reconn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50-1 et à l'article 321-6-1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 leurs biens, quelle qu'en soit la nature,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LIVRE V : Des autres crimes et délits

TITRE Ier :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santé publique

CHAPITRE Ier :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éthique biomédicale

Section 1 : De la protection de l'espèce humaine.

Article 511-1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Es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se prêter à un prélèvement de cellules ou de gamètes, dans le but de faire naître un enfant génétiquement identique à une autre personne, vivante ou décédée.

Article 511-1-1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Dans le cas où le délit prévu à l'article 511-1 est commis à l'étranger par un Français ou par une personne résidant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6 et les dispositions de la seconde phrase de l'article 113-8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511-1-2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9 () JORF 7 août 2004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par don, promesse, menace, ordre, abus d'autorité ou de pouvoir, de provoquer autrui à se prêter à un prélèvement de cellules ou de gamètes, dans le but de faire naître un enfant génétiquement identique à une autre personne vivante ou décédée.

Est punie des mêmes peines la propagande ou la publicité, quel qu'en soit le mode, en faveur de l'eugénisme ou du clonage reproductif.

Section 2 : De la protection du corps humain.

Article 51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btenir d'une personne l'un de ses organe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apporter son entremise pour favoriser l'obtention d'un organe contre le paiement de celui-ci, ou de céder à titre onéreux un tel organe du corps d'autrui.

Les mêmes peines sont applicables dans le cas où l'organe obten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provient d'un pays étranger.

Article 511-3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15 ()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y compris dans une

finalité thérapeutique, sans que le consentement de celle-ci ait été recueill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123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sans que l'autorisation prévue aux deuxième et cinquième alinéas du même article ait été délivré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un tissu ou des cellules ou de collecter un produit en vue de don sur une personne vivante mineure ou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hormi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L. 1241-3 et L. 1241-4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51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btenir d'une personne le prélèvement de tissus, de cellules ou de produits de son corp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apporter son entremise pour favoriser l'obtention de tissus, de cellules ou de produits humain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ou de céder à titre onéreux des tissus, des cellules ou des produits du corps d'autrui.

Article 511-5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15 ()

Le fait de prélever un tissu ou des cellules ou de collecter un produit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sans qu'elle ait exprimé son consen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L. 124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élever sur une personne vivante mineure ou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des cellules hématopoïétiques issues de la moelle osseuse sans avoir respecté les conditions prévues, selon le cas, aux articles L. 1241-3 ou L. 1241-4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5-1

Cré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3°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des prélèvements à des fins scientifiques sur une personne décédée sans avoir transmis le protocole prévu à l'article L. 1232-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mettre en oeuvre un protocole suspendu ou interdit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recherche.

Article 511-5-2

Cré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3° JORF 7 août 2004 rectificatif JORF du 27 novembre 2004

I.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le fait de conserver et transformer à des fins scientifiques, y compris à des fins de recherche génétique, des organes, des tissus, des cellules ou du sang, ses composants et ses produits dérivés :

1° Sans en avoir fait la déclaration préalable prévue à l'article L. 1243-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2° Alors que le ministre chargé de la recherche s'est opposé à l'exercice de ces activités ou les a suspendues ou interdites.

II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conserver et transformer, en vue de leur cession pour un usage scientifique, y compris à des fins de recherche génétique, des organes, des tissus, des cellules ou du sang, ses composants et ses produits dérivés, sans avoir préalablement obtenu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L. 1243-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alors que cette autorisation est suspendue ou retirée.

Article 511-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recueillir ou de prélever des gamètes sur une personne vivante sans son consentement écrit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511-7

Modifi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4°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des prélèvements d'organes ou des greffes d'organes, à des prélèvements de tissus ou de cellules, à des greffes de tissus ou à des administrations de préparations de thérapie cellulaire, à la conservation ou à la transformation de tissus ou de préparations de thérapie cellulaire dans un établissement n'ayant pas obtenu l'autorisation prévue par les articles L. 1233-1, L. 1234-2, L. 1242-1, L. 1243-2 ou L. 1243-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après le retrait ou la suspension de cette autorisa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8

Modifi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5°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la distribution ou à la cession d'organes, de tissus, de produits cellulaires à finalité thérapeutique ou de produits humains en vue d'un don sans qu'aient été respectées les règles de sécurité sanitaire exigé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211-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8-1

Modifi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6° JORF 7 août 2004

Le fait de procéder à la distribution ou à la cession en vue d'un usage thérapeutique de tissus ou de préparations de thérapie cellulaire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243-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8-2

Modifié par Loi 2004-800 2004-08-06 art. 15 7° JORF 7 août 2004

Le fait d'importer ou d'exporter des organes, tissus, cellules et produits cellulaires à finalité thérapeutique,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prise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L. 1235-1 et L. 1245-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btenir des gamète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à

l'exception du paiement des prestations assurées par les établissements effectuant la préparation et la conservation de ces gamèt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apporter son entremise pour favoriser l'obtention de gamète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ou de remettre à des tiers, à titre onéreux des gamètes provenant de dons.

Article 511-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divulguer une information permettant à la fois d'identifier une personne ou un couple qui a fait don de gamètes et le couple qui les a reçu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recueillir ou de prélever des gamètes sur une personne vivante en vue d'une 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procéder aux tests de dépistage des maladies transmissibles exig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211-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océder à une insémination artificielle par sperme frais ou mélange de sperme provenant de dons en violation de l'article L. 1244-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subordonner le bénéfice d'un don de gamètes à la désignation par le couple receveur d'une personne ayant volontairement accepté de procéder à un tel don en faveur d'un couple tiers en violation de l'article L. 1244-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e recueil, de traitement, de conservation et de cession de gamètes provenant de dons sans avoir recueilli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L. 1244-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Section 3 : De la protection de l'embryon humain.

Article 511-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obtenir des embryons humain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apporter son entremise pour favoriser l'obtention d'embryons humains contre un paiement, quelle qu'en soit la forme, ou de remettre à des tiers, à titre onéreux, des embryons humains.

Article 511-16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obtenir des embryons humains sans respecter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2141-5 et L. 2141-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7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e procéder à la conception in vitro ou à la constitution par clonage d'embryons humains à des fins industrielles ou commerciales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utiliser des embryons humains à des fins industrielles ou commerciales.

Article 511-18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e procéder à la conception in vitro ou à la constitution par clonage d'embryons humains à des fins de recherch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8-1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e procéder à la constitution par clonage d'embryons humains à des fins thérapeutiques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

Article 511-19

I. - Le fait de procéder à une étude ou une recherche sur l'embryon humain :

1° Sans avoir préalablement obtenu le consentement écrit et l'autorisation visés à l'article L. 215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alors que cette autorisation est retirée, suspendue, ou que le consentement est révoqué ;

2°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législatives et réglementaires ou à celles fixées par cette autorisation,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II. - Le fait de procéder à une étude ou une recherche sur des cellules souches embryonnaires :

1° Sans avoir préalablement obtenu le consentement écrit et l'autorisation visés à l'article L. 215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alors que cette autorisation est retirée, suspendue, ou que le consentement est révoqué ;

2°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législatives et réglementaires ou à celles fixées par cette autorisa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9-1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à l'issue d'une interruption de grossesse, de prélever, conserver ou utiliser des tissus ou cellules embryonnaires ou fœtaux dans des conditions non conformes à celles prévues par les premier, deux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L. 124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pour des finalités autres que diagnostiques, thérapeutiques ou scientifique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19-2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

- 1° Le fait de conserver des cellules souches embryonnaires sans avoir obtenu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2151-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alors que cette autorisation est retirée ou suspendue ;
- 2° Le fait de conserver des cellules souches embryonnaires sans se conformer aux règles mentionné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51-7 du même code ;
- 3° Le fait de céder des cellules souches embryonnaires à des organismes non titulaires de l'autorisation délivr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2151-5 ou de l'article L. 2151-7 du même code ;
- 4° Le fait d'avoir cédé des cellules souches embryonnaires sans en avoir informé préalablement l'Agence de la biomédecine.

Article 511-19-3

Cré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le fait d'importer ou d'exporter, à des fins de recherche, des tissus ou des cellules embryonnaires ou foetaux sans avoir obtenu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2151-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511-2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océder au diagnostic prénatal sans avoir reçu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213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511-21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e méconnaîtr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2131-4 et L. 2131-4-1 relatifs au diagnostic préimplantatoir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22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e mettre en oeuvre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avoir recueilli l'autorisation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42-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de cette dernièr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23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e fait d'introduire des embryons humains sur le territoire où s'applique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de les sortir de ce territoire sans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L. 2141-9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Article 511-2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à des fins autres que celles définies à l'article L. 2141-2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Article 511-25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 I. - Le fait d'exercer les activités nécessaires à l'accueil d'un embryon humain dans des conditions fixées à l'article L. 2141-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1° Sans s'être préalablement assuré qu'a été obtenue l'autorisation judiciaire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udit article ;
 - 2° Ou sans avoir pris connaissance des résultats des tests de dépistage des maladies infectieuses exigés au sixième alinéa du même article ;
 - 3° Ou en de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septième alinéa du même article,
-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
- II.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divulguer une information nominative permettant d'identifier à la fois le couple qui a renoncé à l'embryon et le couple qui l'a accueilli.

Section 4 : Autres dispositions et peine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et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511-26

Modifié par Loi n°2004-800 du 6 août 2004 - art. 28 ()

La tentative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511-2, 511-3, 511-4, 511-5, 511-5-1, 511-5-2, 511-6, 511-9, 511-15, 511-16 et 511-19 est punie des mêmes peines.

Article 511-27

Créé par Loi n°94-653 du 29 juillet 1994 - art. 9 ()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dix ans au plus, d'exercer l'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ans l'exercice de laquell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rticle 511-28

Créé par Loi n°94-653 du 29 juillet 1994 - art. 9 ()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a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TITRE II : Autres dispositions

CHAPITRE unique : 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

Article 52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6-1224 du 5 octobre 2006 - art. 6 ()

Le fait, publiquement ou non, d'exercer des sévices graves, ou de nature sexuelle, ou de commettre un acte de cruauté envers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statue sur le sort de l'animal, qu'il ait été ou non placé au cours de la procédure judiciaire. Le tribunal peut prononcer la confiscation de l'animal et prévoir qu'il sera remis à une fondation ou à une association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qui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d'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non, de détenir un animal et d'exerc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ès lors que les facilités que procure cette activité ont été sciemment utilisées pour préparer ou commettre l'infraction. Cette interdiction n'est toutefois pas applicable à l'exercice d'un mandat électif ou de responsabilités syndicales.

Les personnes morales,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2 du code pénal, encourent les peines suivantes :

-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1-38 du code pénal ;
- les peines prévues aux 2°, 4°, 7°, 8° et 9° de l'article 131-39 du code pénal.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

Est punie des peine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toute création d'un nouveau gallodrome.

Est également puni des mêmes peines l'abandon d'un animal domestique,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à l'exception des animaux destinés au repeuplement.

Article 521-2

Créé par Loi n°94-653 du 29 juillet 1994 - art. 9 ()

Le fait de pratiquer des expériences ou recherches scientifiques ou expérimentales sur les animaux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511-1.

LIVRE VII : Dispositions applicabl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n Nouvelle-Calédonie et à Mayotte.

TITRE Ier : Dispositions applicabl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en Nouvelle-Calédoni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11-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le livre Ier, à l'exclusion de l'article 132-70-1, et les livres II à V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en Nouvelle-Calédonie et dans les territoir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s îles Wallis-et-Futuna.

NOTA: L'article 132-70-1 du code pénal a été abrogé par l'article 44 de la loi n° 98-349 du 11 mai 1998.

Article 711-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livres Ier à V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Article 71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16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En Nouvelle-Calédonie, dans les territoir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s îles Wallis-et-Futuna, les sanctions pécuniaires encourues en vertu du présent code sont prononcées en monnaie locale, compte tenu de la contre-valeur dans cette monnaie de l'euro.

Article 711-4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dans les territoires visés à l'article 711-1, les termes énumérés ci-après sont remplacés comme suit :

"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 - "département" par "territoire" ;

" - "préfet" et "sous-préfet" par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territoire".

"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ces territoires"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applicables localement".

CHAPITRE II : Adaptation du livre Ier.

Article 712-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1-35 est ainsi rédigé :

"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est faite par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r le Journal officiel du territoire, par une ou plusieurs autres publications de presse, ou par un ou plusieur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Les publications ou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chargés de cette diffusion sont désignés par la juridiction. Ils ne peuvent s'opposer à cette diffusion ".

Article 712-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7° de l'article 132-45 est ainsi rédigé :

"7° S'abstenir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pour la conduite desquels un permis est nécessaire. "

CHAPITRE III : Adaptation du livre II.

Article 713-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23-8 est rédigé comme suit :

"Le fait de pratiquer ou de faire pratiquer sur une personne une recherche biomédicale sans avoir recueilli le consentement libre, éclairé et exprès de l'intéressé,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tuteur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

Article 713-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2° et 3° de l'article 225-3 sont rédigés comme suit :

"2°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état de santé ou le handicap, lorsqu'elles consistent en un refus d'embauche ou un licenciement fondé sur l'inaptitude médicalement constatée dans le cadr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médecine du travail ou à la fonction publique applicables localement ;

"3°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en matière d'embauche, sur le sexe lorsque l'appartenance à l'un ou l'autre sexe consti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droit du travail ou de droit de la fonction publique, la condition déterminante de l'exercice d'un emploi ou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 "

Article 713-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5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5. - Le fait de procéder à l'étude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à des fins médicales sans avoir préalablement recueilli son consentement par écri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

"1° Lorsque l'étude est réalisé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judiciaire ;

"2° Ou lorsqu'à titre exceptionnel, dans l'intérêt de la personne et le respect de sa confiance, le consentement de celle-ci n'est pas recueilli. "

Article 71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7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7. - Le fait de rechercher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à des fins médicales sans recueillir préalablement son consentement par écri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

1° Lorsque l'étude est réalisé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judiciaire ;

2° Ou lorsqu'à titre exceptionnel, dans l'intérêt de la personne et le respect de sa confiance, le consentement de celle-ci n'est pas recueilli. "

Article 71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8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8. - Le fait de rechercher l'identification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lorsqu'il ne s'agit pas d'un militaire décédé à l'occasion d'une opération conduite par les forces armées ou les formations rattachées, à des fins qui ne seraient ni médicales ni scientifiques ou en dehors d'une mesure d'enquête ou d'instruction diligentée lors d'une procédure judiciair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ou de 15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divulguer d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ou de procéder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sans avoir fait l'objet d'un agrément délivré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CHAPITRE IV : Adaptation du livre III.

Article 714-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322-2 est rédigé comme suit :

"3° Un immeuble ou un objet mobilier classé ou inscrit ou protégé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une découverte archéologique faite au cours de fouilles ou fortuitement, un terrain contenant des vestiges archéologiques ou un objet conservé ou déposé dans des musées, bibliothèques ou archives appartenant à une personne publique, chargée d'un service public ou reconnue d'utilité publique."

CHAPITRE V : Adaptation du livre IV.

Article 715-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421-1 est rédigé comme suit :

"3° La fabrication ou la détention de machines, engins meurtriers ou explosifs définies à l'article 3 de la loi du 19 juin 1871 qui abroge le décret du 4 septembre 1870 sur la fabrication des armes de guerre :

- "- la production, la vente, l'importation ou l'exportation de substances explosive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 l'acquisition, la détention, le transport ou le port illégitimes de substances explosives ou d'engins fabriqués à l'aide desdites substance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 la détention, le port ou le transport d'armes et de munition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 l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L. 2341-1 et L. 2341-4 du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715-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32-9 est rédigé comme suit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e personne visée à l'alinéa précédent ou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autorisé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n matière de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ou d'un fournisseur de services de télécommunications,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d'ordonner, de commettre ou de faciliter,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interception ou le détournemen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transmises ou reçu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l'utilisation ou la divulgation de leur contenu."

Article 715-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432-12 est rédigé comme suit :

"Pour l'application des trois alinéas qui précèdent, la commune est représent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L. 122-12 du code des communes tel qu'il a été rendu

applicable localement et le maire, l'adjoint ou le conseiller municipal intéressé doit s'abstenir de participer à la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relative à la conclusion ou à l'approbation du contrat. En outr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121-15 du code des communes tel qu'il a été rendu applicable localement, le conseil municipal ne peut décider de se réunir à huis clos."

Article 715-4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432-13 est rédigé comme suit :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agent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s entreprises nationalisées,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dans lesquelles l'Etat ou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détienn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p. 100 du capital et des exploitants publics intervenant dans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Article 715-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443-3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443-3. - Sont puni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fabrication, la vente, le transport ou la distribution de tou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qui présentent, avec les titres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émises par l'Etat, l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ou les exploitants publics intervenant dans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faciliter l'acceptation desdit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au lieu et place des valeurs imitées."

CHAPITRE VI : Adaptation du livre V.

Article 716-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rticle 511-3 est ainsi rédigé :

Art. 511-3. -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sans avoir recueilli son consentement ou sans l'avoir préalablement éclairée sur les risques et les conséquences de l'act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sur un donneur vivant mineur ou sur un donneur vivant majeur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Toutefois, un prélèvement de moelle osseuse sur un mineur au profit de son frère ou de sa soeur peut être autorisé par un comité médical constitué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sous réserve du consentement de chacun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du mineur.

Les consentements prévus aux alinéas précédents sont exprimés devan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ou le magistrat désigné par lui. Ils peuvent être révoqués sans forme à tout moment.

En cas d'urgence, le consentement est recueilli par tout moyen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comité médical s'assure que le mineur a été informé du prélèvement envisagé en vue d'exprimer sa volonté, si celui-ci est apte. Le refus du mineur fait obstacle au prélèvement.

Article 716-1-1

Créé par Ordonnance n°98-773 du 2 septembre 1998 - art. 1 () JORF 4 septembre 1998

En Nouvelle-Calédonie, le fait de procéder à un prélèvement de moëlle osseuse en vue d'un don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 000 Euros d'amende.

Article 716-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11-5 est ainsi rédigé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élever un tissu ou des cellules ou de collecter un produit sur une personne vivante mineure ou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Article 716-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7 est ainsi rédigé :

"Art. 511-7.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prélèvements d'organes ou des transplantations d'organes, à des prélèvements ou des greffes de tissus, à la conservation ou à la transformation de tissus ou à la greffe de cellules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8 est ainsi rédigé :

"Art. 511-8. - Le fait de procéder à la distribution ou à la cession d'organes, de tissus, de cellules et produits humains en vue d'un don sans qu'aient été respectées les règles de sécurité sanitaires exigée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1 est ainsi rédigé :

"Art. 511-11. - Le fait de recueillir ou de prélever des gamètes sur une personne vivante en vue d'une 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procéder aux tests de dépistage des maladies transmissibles exigés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2 est ainsi rédigé :

"Art. 511-12. - Le fait de procéder à une insémination artificielle par sperme frais ou mélange de sperme provenant de don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3 est ainsi rédigé :

"Art. 511-13. - Le fait de subordonner le bénéfice d'un don de gamètes à la désignation par le couple receveur d'une personne ayant volontairement accepté de procéder à un tel don en faveur d'un couple tiers anonym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4 est ainsi rédigé :

"Art. 511-14.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e recueil, de traitement, de conservation et de cession de gamètes provenant de dons hors d'un établissement ou organisme à but non lucratif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6 est ainsi rédigé :

"Art. 511-16. - Le fait d'obtenir des embryons humains sans autorisation préalable de l'autorité judiciair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autorité judiciaire ne peut délivrer une telle autorisation qu'à titre exceptionnel, au vu du consentement écrit du couple à l'origine de la conception ou, si l'un des membres du couple est décédé, du membre survivant, et après avoir vérifié

que l'acte ne tombe pas sous le coup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511-24 et que le couple receveur offre des garanties d'accueil satisfaisantes à l'enfant à naître.

"Est également puni d'une pein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d'obtenir un embryon humain :

"- si l'anonymat entre le couple accueillant l'embryon et celui y ayant renoncé n'est pas respecté ;

"- ou si le couple accueillant l'embryon ne se trouve pas dans une situation où l'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recours à un tiers donneur ne peut aboutir."

Article 716-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9 est ainsi rédigé :

"Art. 511-19. -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océder à une étude ou à une expérimentation sur l'embryon.

"L'alinéa précédent n'est pas applicable à une étude réalisée, à titre exceptionnel, à des fins médicales à condition qu'elle ne porte pas atteinte à l'embryon et qu'elle concerne l'embryon issu d'un couple ayant donné son consentement par écrit,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constitué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716-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0 est ainsi rédigé :

"Art. 511-20. - Le fait de procéder au diagnostic prénatal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1 est ainsi rédigé :

"Art. 511-21. - Le fait de procéder à un diagnostic préimplantatoire sans que soit attestée, par un médecin exerçant son activité dans un établissement mentionné à l'article 511-20, la forte probabilité pour le couple de donner naissance à un enfant atteint d'une maladie généti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reconnue comme incurable au moment du diagnostic,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océder à un diagnostic préimplantatoire :

"1° Sans avoir recueilli par écrit le consentement des deux membres du couple ;

"2° Ou à d'autres fins que de rechercher l'affection, de la prévenir et de la traiter ;

"3° Ou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

Article 716-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2 est ainsi rédigé :

"Art. 511-22.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4 est ainsi rédigé :

"Art. 511-24.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lorsque celles-ci ne répondent pas à la demande parentale d'un couple ou lorsque le couple bénéficiaire n'est pas composé d'un homme et d'une femme vivants, en âge de procréer, mariés ou en mesure d'apporter la preuve d'une vie commune d'au moins deux ans et ayant préalablement consenti au transfert des embryons ou à l'insémination artificiel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en vue d'un objet autre que de remédier à une infertilité dont le caractère pathologique a été médicalement diagnostiqué ou d'éviter la transmission à un enfant d'une maladi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Article 716-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5 est ainsi rédigé :

"Art. 511-25. - Le fait de procéder au transfert d'un embryon sans avoir pris connaissance des résultats des tests de dépistage de maladies infectieuses exigé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en vigueur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16-16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rticle 521-2 est ainsi rédigé :

"Art. 521-2. - Le fait de pratiquer des expériences ou recherches scientifiques ou expérimentales sur les animaux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521-1."

CHAPITRE VII :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717-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tout directeur ou salarié, de solliciter ou d'agré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insu et sans autorisation de son employeur, des offres ou des promesses, des dons, présents, escomptes ou primes pour accomplir ou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définies à l'alinéa précédent ou d'en prendre l'initiative.

Dans les ca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le tribunal peut également prononcer,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prévue par l'article 131-26.

Article 717-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en diffusant,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s informations mensongères ou calomnieuses, en jetant sur le marché des offres destinées à troubler les cours ou des sur-offres faites au prix demandé par les vendeurs, ou en utilisant tout autre moyen frauduleux, d'opérer ou de tenter d'opérer la hausse ou la baisse artificielle du prix de biens ou de services ou d'effets publics ou privé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orsque la hausse ou la baisse artificielle des prix concerne des produits alimentaires, la peine est porté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45000 euros d'amende.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Article 717-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précédent.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38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6°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TITRE II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Mayott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21-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le livre Ier à l'exclusion de l'article 132-70-1, et les livres II à V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à Mayotte.

Article 721-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à Mayotte, les termes énumérés ci-après sont remplacés comme suit :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 "cour d'assises" par "cour criminelle" ;
- "département" par "collectivité" ;
- "préfet" et "sous-préfet" par "représentant du Gouvernement".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la collectivité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applicables localement.

CHAPITRE II : Adaptation du livre Ier.

Article 722-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7° de l'article 132-45 est ainsi rédigé :

"7° S'abstenir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pour la conduite desquels un permis est nécessaire."

CHAPITRE III : Adaptation du livre II.

Article 723-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23-8 est rédigé comme suit :

"Le fait de pratiquer ou de faire pratiquer sur une personne une recherche biomédicale sans avoir recueilli le consentement libre, éclairé et exprès de l'intéressé,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tuteur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Article 723-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I. - Le 1° de l'article 223-11 est rédigé comme suit :

"1° Après la fin de la 10e semaine de grossesse, sauf si elle est pratiquée pour un motif thérapeutique. "

II. - Le 3° de l'article 223-11 est rédigé comme suit :

"3° Dans un lieu autre qu'un établissement d'hospitalisation public ou qu'un établissement d'hospitalisation privé satisfaisant aux conditions prévu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723-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2° et 3° de l'article 225-3 sont rédigés comme suit :

"2°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état de santé ou le handicap, lorsqu'elles consistent en un refus d'embauche ou un licenciement fondé sur l'inaptitude médicalement constatée dans le cadr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médecine du travail ou à la fonction publique applicables localement ;

"3° Aux discriminations fondées, en matière d'embauche, sur le sexe lorsque l'appartenance à l'un ou l'autre sexe consti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droit du travail ou de droit de la fonction publique, la condition déterminante de l'exercice d'un emploi ou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

Article 723-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5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5. - Le fait de procéder à l'étude des caractéristiqu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à des fins médicales sans avoir préalablement recueilli son consentement par écri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

"1° Lorsque l'étude est réalisé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judiciaire ;

"2° Ou lorsque, à titre exceptionnel, dans l'intérêt de la personne et le respect de sa confiance, le consentement de celle-ci n'est pas recueilli."

Article 723-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7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7. - Le fait de rechercher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à des fins médicales sans recueillir préalablement son consentement par écrit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

"1° Lorsque l'étude est réalisé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judiciaire ;

"2° Ou lorsque, à titre exceptionnel, dans l'intérêt de la personne et le respect de sa confiance, le consentement de celle-ci n'est pas recueilli."

Article 723-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226-28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26-28. - Le fait de rechercher l'identification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d'une personne, lorsqu'il ne s'agit pas d'un militaire décédé à l'occasion d'une opération conduite par les forces armées ou les formations rattachées, à des fins qui ne seraient ni médicales ni scientifiques ou en dehors d'une mesure d'enquête ou d'instruction diligentée lors d'une procédure judiciair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ou de 1

5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divulguer d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ou de procéder à l'identification d'une personne par ses empreintes génétiques sans avoir fait l'objet d'un agrément délivré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IV : Adaptation du livre III.

Article 724-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322-2 est rédigé comme suit :

"3° Un immeuble ou un objet mobilier classé ou inscrit ou protégé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une découverte archéologique faite au cours de fouilles ou fortuitement, un terrain contenant des vestiges archéologiques ou un objet conservé ou déposé dans des musées, bibliothèques ou archives appartenant à une personne publique, chargée d'un service public ou reconnue d'utilité publique."

CHAPITRE V : Adaptation du livre IV.

Article 725-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421-1 est rédigé comme suit :

"3° La fabrication ou la détention de machines, engins meurtriers ou explosifs définies à l'article 3 de la loi du 19 juin 1871 qui abroge le décret du 4 septembre 1870 sur

la fabrication des armes de guerre ;

"- la production, la vente, l'importation ou l'exportation de substances explosive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l'acquisition, la détention, le transport ou le port illégitimes de substances explosives ou d'engins fabriqués à l'aide desdites substance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la détention, le port ou le transport d'armes et de munitions en infraction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

"- l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L. 2341-1 et L. 2341-4 du code de la défense ;"

Article 725-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32-9 est rédigé comme suit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une personne visée à l'alinéa précédent ou un agent d'un exploitant de réseau de télécommunications autorisé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n matière de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ou d'un fournisseur de services de télécommunications,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d'ordonner, de commettre ou de faciliter, hors les cas prévus par la loi, l'interception ou le détournemen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transmises ou reçu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l'utilisation ou la divulgation de leur contenu."

Article 725-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432-12 est rédigé comme suit :

"Pour l'application des trois alinéas qui précèdent, la commune est représent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22-12 du code des communes tel qu'il a été rendu applicable localement et le maire, l'adjoint ou le conseiller municipal intéressé doit s'abstenir de participer à la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relative à la conclusion ou à l'approbation du contrat. En outre, par dérogation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121-15 du code des communes tel qu'il a été rendu applicable localement, le conseil municipal ne peut décider de se réunir à huis clos."

Article 725-4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432-13 est rédigé comme suit :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aux agent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s entreprises nationalisées,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dans lesquelles l'Etat ou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détienne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lus de 50 p. 100 du capital et des exploitants publics intervenant dans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Article 725-5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33-20 et 433-21 ne sont applicables qu'aux personnes ayant le statut civil de droit commun.

Article 725-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443-3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443-3. - Sont punis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a fabrication, la vente, le transport ou la distribution de tou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qui présentent, avec les titres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émises par l'Etat, l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ou les exploitants publics intervenant dans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de la post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faciliter l'acceptation desdits objets, imprimés ou formules au lieu et place des valeurs imitées."

CHAPITRE VI : Adaptation du livre V.

Article 726-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3 est ainsi rédigé :

"Art. 511-3. -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sans avoir recueilli son consentement ou sans l'avoir préalablement éclairée sur les risques et les conséquences de l'act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élever un organe sur un donneur vivant mineur ou sur un donneur vivant majeur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Toutefois, un prélèvement de moelle osseuse sur un mineur au profit de son frère ou de sa soeur peut être autorisé par un comité médical constitué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sous réserve du consentement de chacun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du mineur.

"Les consentements prévus aux alinéas précédents sont exprimés devan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ou le magistrat désigné par lui. Ils peuvent être révoqués sans forme à tout moment.

"En cas d'urgence, le consentement est recueilli par tout moyen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comité médical s'assure que le mineur a été informé du prélèvement envisagé en vue d'exprimer sa volonté, si celui-ci y est apte. Le refus du mineur fait obstacle au prélèvement."

Article 726-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11-5 est ainsi rédigé :

"Art. 511-5. -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élever un tissu ou des cellules ou de collecter un produit sur une personne vivante mineure ou sur une personne vivante majeure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légale."

Article 726-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7 est ainsi rédigé :

"Art. 511-7.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prélèvements d'organes ou des transplantations d'organes, à des prélèvements ou des greffes de tissus, à la conservation ou à la transformation de tissus ou à la greffe de cellules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8 est ainsi rédigé :

"Art. 511-8. - Le fait de procéder à la distribution ou à la cession d'organes, de tissus, de cellules et produits humains en vue d'un don sans qu'aient été respectées les règles de sécurité sanitaires exigée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1 est ainsi rédigé :

"Art. 511-11. - Le fait de recueillir ou de prélever des gamètes sur une personne vivante en vue d'une 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procéder aux tests de dépistage des maladies transmissibles exigés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6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2 est ainsi rédigé :

"Art. 511-12. - Le fait de procéder à une insémination artificielle par sperme frais ou mélange de sperme provenant de don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7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3 est ainsi rédigé :

"Art. 511-13. - Le fait de subordonner le bénéfice d'un don de gamètes à la désignation par le couple receveur d'une personne ayant volontairement accepté de procéder à un tel don en faveur d'un couple tiers anonyme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8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4 est ainsi rédigé :

Art. 511-14.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e recueil, de traitement, de conservation et de cession de gamètes provenant de dons hors d'un établissement ou organisme à but non lucratif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9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6 est ainsi rédigé :

"Art. 511-16. - Le fait d'obtenir des embryons humains sans autorisation préalable de l'autorité judiciaire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autorité judiciaire ne peut délivrer une telle autorisation qu'à titre

exceptionnel, au vu du consentement écrit du couple à l'origine de la conception ou, si l'un des membres du couple est décédé, du membre survivant, et après avoir vérifié que l'acte ne tombe pas sous le coup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511-24 et que le couple receveur offre des garanties d'accueil satisfaisantes à l'enfant à naître.

"Est également puni d'une pein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d'obtenir un embryon humain :

"- si l'anonymat entre le couple accueillant l'embryon et celui y ayant renoncé n'est pas respecté ;

"- ou si le couple accueillant l'embryon ne se trouve pas dans une situation où l'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sans recours à un tiers donneur ne peut aboutir."

Article 726-10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19 est ainsi rédigé :

"Art. 511-19. - Est puni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00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océder à une étude ou à une expérimentation sur l'embryon.

"L'alinéa précédent n'est pas applicable à une étude réalisée, à titre exceptionnel, à des fins médicales à condition qu'elle ne porte pas atteinte à l'embryon et qu'elle concerne l'embryon issu d'un couple ayant donné son consentement par écrit,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constitué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726-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0 est ainsi rédigé :

"Art. 511-20. - Le fait de procéder au diagnostic prénatal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1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1 est ainsi rédigé :

"Art. 511-21. - Le fait de procéder à un diagnostic préimplantatoire sans que soit attestée, par un médecin exerçant son activité dans un établissement mentionné à l'article 511-20, la forte probabilité, pour le couple, de donner naissance à un enfant atteint d'une maladie généti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reconnue comme incurable au moment du diagnostic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océder à un diagnostic préimplantatoire :

"1° Sans avoir recueilli par écrit le consentement des deux membres du couple ;

"2° Ou à d'autres fins que de rechercher l'affection, de la prévenir et de la traiter ;

"3° Ou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Article 726-13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2 est ainsi rédigé :

"Art. 511-22. -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hors d'un établissement autorisé à cet effe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26-14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4 est ainsi rédigé :

"Art. 511-24. -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lorsque celles-ci ne répondent pas à la demande parentale d'un couple ou lorsque le couple bénéficiaire n'est pas composé d'un homme et d'une femme vivants, en âge de procréer, mariés ou en mesure d'apporter la preuve d'une vie commune d'au moins deux ans et ayant préalablement consenti au transfert des embryons ou à l'insémination artificiel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de procéder à des activités d'assistance médicale à la procréation en vue d'un objet autre que de remédier à une infertilité dont le caractère pathologique a été médicalement diagnostiqué ou d'éviter la transmission à un enfant d'une maladi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Article 726-15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rticle 511-25 est ainsi rédigé :

"Art. 511-25. - Le fait de procéder au transfert d'un embryon sans avoir pris

connaissance des résultats des tests de dépistage de maladies infectieuses exigé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en vigueur localement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CHAPITRE VII :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727-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par tout directeur ou salarié, de solliciter ou d'agré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insu et sans l'autorisation de son employeur, des offres ou des promesses, des dons, présents, escomptes ou primes pour accomplir ou s'abstenir d'accomplir un acte de sa fonction ou facilité par sa fonction,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 fait, par quiconque, de céder aux sollicitations définies à l'alinéa précédent ou d'en prendre l'initiative.

Dans les ca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le tribunal peut également prononcer,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prévue par l'article 131-26.

Article 727-2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e fait, en diffusant,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des informations mensongères ou

calomnieuses, en jetant sur le marché des offres destinées à troubler les cours ou des sur-offres faites aux prix demandés par les vendeurs, ou en utilisant tout autre moyen frauduleux, d'opérer ou de tenter d'opérer la hausse ou la baisse artificielle du prix de biens ou de services ou d'effets publics ou privé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Lorsque la hausse ou la baisse artificielle des prix concerne des produits alimentaires, la peine est porté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45000 euros d'amende.

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s droits civiques, civils et de famill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26 ;
- 2°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31-35.

Article 727-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précédent.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1-38 ;
- 2° Les peines mentionnées aux 2°, 3°, 4°, 5°, 6° et 9° de l'article 131-39.

L'interdiction mentionnée au 2° de l'article 131-39 porte sur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LIV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TITRE III : Des peines

CHAPITRE Ier : De la nature des peines

SECTION 1 : Des peine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SOUS-SECTION 1 : De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de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de l'immobilisation du véhicule et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PARAGRAPHE 1 : De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Article R131-1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 juridiction qui prononce une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en limitant cette suspension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définit dans sa décision la nature de cette activité et fixe les diverses conditions, notamment de lieu et de temps, auxquelles l'usage du droit de conduire est subordonné ainsi que, le cas échéant, la ou les catégories de véhicules dont la conduite est autorisée.

Article R131-2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gent de l'autorité chargé d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prononçant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remet au condamné, en échange de son permis suspendu, un certificat établi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Ce certificat mentionne :

- 1° La date de la décision, la juridiction qui l'a prononcée et la durée de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
- 2°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et domicile de l'intéressé ;
- 3° Les références du permis de conduire ainsi que les diverses indications qui y sont portées, y compris éventuellement les limitations et restrictions de validité qu'il comporte ;
- 4° L'activité professionnelle en vue de laquelle la conduite est autorisée, les diverses conditions, notamment de lieu et de temps, auxquelles cette autorisation est subordonnée et, le cas échéant, la ou les catégories de véhicules dont la conduite est autorisée.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notamment au regard de l'article R. 123 du code de la route,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lorsque sont respectée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juridiction.

A l'issue de la période de suspension, le permis de conduire est restitué au condamné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contre remise du certificat.

PARAGRAPHE 2 : De l'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Article R131-3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 juridiction qui prononce une interdiction temporaire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définit dans sa décision la ou les catégories de véhicules dont la conduite est interdite et la durée de cette interdiction.

Article R131-4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orsque le condamné est titulaire d'un permis de conduire, l'agent de l'autorité chargé d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lui remet, en échange de ce permis, un certificat établi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Ce certificat mentionne :

- 1° La date de la décision, la juridiction qui l'a prononcée et la durée de l'interdiction de conduire ;
- 2°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profession et domicile de l'intéressé ;
- 3° Les références du permis de conduire ainsi que les diverses indications qui y sont portées, y compris éventuellement les limitations et restrictions de validité qu'il comporte ;
- 4° La ou les catégories de véhicules pour lesquelles le permis de conduire cesse d'être valable.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notamment au regard de l'article R. 123 du code de la route,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à l'exception de la ou des catégories de véhicules

pour lesquelles la juridiction a prononcé l'interdiction de conduire.

A l'issue de la période d'interdiction, le permis de conduire est restitué au condamné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contre remise du certificat.

PARAGRAPHE 3 : De l'immobilisation de véhicule.

Article R131-5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gent de l'autorité chargé d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justice prononçant une immobilisation de véhicule est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autorité de celui-ci,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R131-6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gent de l'autorité met en demeure le condamné de présenter son véhicule aux date et lieu qu'il fixe.

Article R131-7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immobilisation du véhicule est exécutée dans un local dont le condamné a la libre disposition dans le département de sa résidence. A défaut, elle est exécutée dans un lieu désigné par l'agent de l'autorité.

Le condamné remet à l'agent de l'autorité l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du véhicule immobilisé.

Un procès-verbal est dressé sur-le-champ, qui mentionne la date de la condamnation et

la juridiction qui l'a prononcée, la durée de l'immobilisation,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et domicile de l'intéressé, les date, heure et lieu d'immobilisation, les éléments d'identification du véhicule et son kilométrage.

Article R131-8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Pendant l'exécution de la peine, le véhicule est placé sous scellés et, en tant que de besoin, immobilisé par un moyen technique.

Article R131-9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gent de l'autorité a le droit d'accéder au lieu d'immobilisation du véhicule.

Il rend compt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tout incident d'exécution.

Article R131-10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immobilisation cesse et l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est restitué dès la fin de la peine.

Article R131-10-1

Créé par Décret n°2005-320 du 30 mars 2005 - art. 5 ()

Lorsque la peine d'immobilisation concerne un véhicule déjà immobilisé et mis en fourrièr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325-1-1 du code de la route, l'immobilisation effectuée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s'impute sur la durée de la peine.

NOTA: Décret n° 2005-320 du 30 mars 2005 art. 7 II : les dispositions du I de l'article 5 du présent décret sont applicables à la Nouvelle-Calédonie, en Polynésie française et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Article R131-11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immobilisation d'un véhicule ne fait obstacle ni aux saisies ou confiscations ordonnées par l'autorité judiciaire ni à l'action du créancier qui disposerait d'un droit réel constitué antérieurement au prononcé d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PARAGRAPHE 4 :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comprenant un article R 131-11-1 ainsi rédigé

Article R131-11-1

Cré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e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prévu par l'article 131-35-1 est dispensé,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articles R. 223-5 à R. 223-13 du code de la route, par les personnes agréées selon les modalités définies par ces articles.

Un arrêté conjoin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ministre chargé des transports peut fixer un programme et une durée de stage différents,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cinq jours.

Les frais de stage, à la charge du condamné, ne peuvent excéder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encour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SOUS-SECTION 2 :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ARAGRAPHE 1 : Des modalités d'habilitation des personnes morales et d'établissement de la list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A. : Des modalités d'habilitation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R131-12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chargé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les associations qui désirent obtenir l'habilitat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31-8 en font la demand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ressort dans lequel elles envisagent de mettre en oe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Po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chargé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la demande comporte :

- 1° La copie des statuts de la personne morale ;
- 2° Un extrait d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extraits K ou K bis) datant de moins de trois mois ;
- 3° Une copie des comptes annuels et des bilans du dernier exercice.

Pour les associations, la demande comporte :

- 1° La copie du Journal officiel portant publication de la déclaration de l'association ou, pour les associations déclarées dans les départements du Bas-Rhin, du Haut-Rhin et de la Moselle, une copie du registre des associations du tribunal d'instance ;
- 2° Un exemplaire des statuts et, s'il y a lieu, du règlement intérieur de l'association ;

- 3° La liste des établissements de l'association avec indication de leur siège ;
- 4° Un exposé indiquant les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e l'association et, le cas échéant, l'organisation et les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es comités locaux, ainsi que leurs rapports avec l'association ;
- 5° La mention d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nationalité, profession et domicile des membres du conseil d'administration et du bureau de l'association ainsi que, le cas échéant, ceux de leurs représentants locaux ;
- 6° Les pièces financières qui doivent comprendre les comptes du dernier exercice, le budget de l'exercice courant et un bilan ou un état de l'actif mobilier et immobilier et du passif.

Article R131-13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ocède à toutes diligences qu'il juge utiles. Il consulte le conseil départemental de prévention, qui a trois mois pour donner son avis. Il communique ensuite la demande d'habilitation au président du tribunal.

L'assemblée générale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du tribunal statue sur la demande d'habilitation, après rapport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à la majorité des membres présents.

La commission restreinte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dans les tribunaux où sa constitution est obligatoire, exerce les attribution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L'habilitation accordée est valable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rticle R131-14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En cas d'urgenc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ur proposition ou après avis conform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habiliter provisoirement la personne morale.

L'habilitation provisoire est valable jusqu'à la décision de la prochaine assemblée générale ou commission restreinte.

Article R131-15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a personne morale habilitée porte à la connaissanc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oute modification de l'un des élé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R. 131-12. Elle est tenue de faire parvenir chaque année le budget et ses comptes.

Article R131-16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habilitation peut être retirée selon la procédure prévue par l'article R. 131-13.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aisir l'assemblée générale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du tribunal ou la commission restreinte aux fins de retrait de l'habilitation.

En cas d'urgenc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ur proposition ou après avis conform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tirer provisoirement l'habilitation jusqu'à la décision de la prochaine assemblée générale ou commission restreinte.

B. : De l'établissement de la list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R131-17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chargé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et les associations qui désirent faire inscri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sur la liste prévue par l'article R. 131-36 (1) en font la demand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ressort dans lequel ils envisagent de faire exécuter ces travaux.

Pour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e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la demande mentionne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ainsi que les fonctions des représentants qualifiés.

Po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qui ne sont pas encore habilitées, la demande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st jointe à la demande d'habilitation. Po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éjà habilitées, elle comporte mention de la date de cette habilitation.

A la demande est annexée une note indiquant la nature et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s travaux proposés,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et qualité des personnes chargées de l'encadrement technique ainsi que le nombre de postes de travail susceptibles d'être offerts.

NOTA: (1) : Lire 131-36.

Article R131-18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ocède à toutes diligences et consultations utiles.

A cette fin, il adresse copie de la demande au conseil départemental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Article R131-19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Après 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donné son avis ou dix jours au plus tôt après l'avoir saisi,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end sa décision en tenant compte de l'utilité sociale des travaux proposés et des perspectives d'insertion sociale ou professionnelle qu'ils offrent aux condamnés.

Article R131-20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a radiation d'un travail inscrit sur la liste peut être prononcée selon la procédure prévue par l'article R. 131-19.

C. :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R131-21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s décisions relatives à l'habilitation provisoire des associations et à l'établissement de la list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sont communiquées a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outes les décisions relatives à l'habilitation ou au retrait d'habilitation des associations sont portées à la connaissance du garde des sceaux et du préfet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R131-22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2 ()

Les organismes mettant en oeuvre d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adressent chaque année un rapport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ARAGRAPHE 2 : De 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 : De la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fixant les modalités d'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R131-23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fixe les modalités d'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a décision précise :

- 1° L'organisme au profit duquel le travail sera accompli ;
- 2° Le travail ou les travaux que le condamné accomplira ;
- 3° Les horaires de travail.

La décision pris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peut être modifiée à tout moment.

Article R131-24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hoisit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armi ceux inscrits sur la liste de son ressort ou, avec l'accord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ur la liste d'un autre ressort.

Article R131-25

Lorsqu'un condamné exerce une activité salariée, la durée hebdomadaire cumulée de

cette activité e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e peut excéder de plus de douze heures la durée légale du travail.

Article R131-26

La durée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inclut pas les délais de route et le temps des repas.

Article R131-27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notifie sa décision au condamné et à l'organisme au profit duquel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era accompli. Il en donne av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R131-28

Avant d'exécuter sa peine, le condamné se soumet à un examen médical qui a pour but :

- 1° De rechercher s'il n'est pas atteint d'une affection dangereuse pour les autres travailleurs ;
- 2° De s'assurer qu'il est médicalement apte au travail auque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end l'affecter ;
- 3° De s'assurer, si le travail auque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end l'affecter doit s'exercer dans un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ublic ou privé de prévention ou de soins visé à l'article L. 10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l'expose à des risques de contamination, qu'il est immunisé contre les maladies mentionnées à cet article.

B. : Du contrôle de 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R131-29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assure de l'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oit par lui-même, soit par l'intermédiaire d'un agent de probation.

Si le travail à exécuter est inscrit sur la liste d'un autre ressort, il délègue son pouvoir de contrôl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Article R131-30

Pour chaque condamné, l'organisme au profit duquel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st effectué fait connaîtr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à l'agent de probation le responsable désigné pour assurer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technique du travail.

Article R131-3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agent de probation s'assure de l'exécution du travail auprès du responsable désigné. Il visite, le cas échéant, le condamné sur son lieu de travail.

Article R131-32

Le responsable désigné informe sans délai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agent de probation de toute violation de l'obligation de travail et de tout incident causé ou subi par le condamné à l'occasion de l'exécution de son travail.

Article R131-33

En cas de danger immédiat pour le condamné ou pour autrui ou en cas de faute

grave du condamné, le responsable désigné peut suspendre l'exécution du travail. Il en informe sans délai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agent de probation.

Article R131-34

L'organisme au profit duquel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 été accompli délivr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à l'agent de probation ainsi qu'au condamné un document attestant que ce travail a été exécuté.

SOUS-SECTION 3 : De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ARAGRAPHE 1 : Objet et durée du stage.

Article R131-35

Modifi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 à l'article 131-5-1 et rendu applicable aux mineurs de 13 à 18 ans par l'article 20-4-1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a pour objet de rappeler au condamné les valeurs républicaines de tolérance et de respect de la 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 et de lui faire prendre conscience de sa responsabilité pénale et civile ainsi que des devoirs qu'implique la vie en société. Il vise également à favoriser son insertion sociale.

Lorsqu'il concerne une personne condamnée pour une infraction commise avec la circonstance aggravante prévue par l'article 132-76, il rappelle en outre à l'intéressé l'existence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notamment ceux commis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Article R131-36

Modifi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a durée du stage de citoyenneté est fixée par la juridiction en tenant compte, pour le condamné majeur de ses obligations familiales, sociales ou professionnelles, pour le condamné mineur de ses obligations scolaires et de sa situation familiale. Elle ne peut excéder un mois.

La durée journalière de formation effective ne peut excéder six heures. Pour le mineur, elle doit être adaptée en fonction de son âge et de sa personnalité.

PARAGRAPHE 2 : Organisation du stage.

Article R131-37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e stage de citoyenneté est organisé en sessions collectives, continues ou discontinues, composées d'un ou plusieurs modules de formation adaptés à la personnalité des condamnés et à la nature de l'infraction commise. Pour les mineurs, les modules sont en outre adaptés à leur âge.

Ces sessions ont lieu soit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oit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Les stages sont mis en oeuvre sous le contrôle du délégué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xécution de la peine. Ils peuvent également être mis en oeuvre sous le contrôle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ou de probation.

Le contenu du stage de citoyenneté fait l'objet d'un projet élaboré par la personne ou le service chargé de procéder au contrôle de sa mise en oeuvre. Ce projet est valid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près avis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rticle R131-38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es modules du stage de citoyenneté peuvent être élaborés avec le concour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le cas échéant, de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ou de personnes physiques participant à des missions d'intérêt général, notamment d'accès au droit.

Lorsqu'un module de formation est élaboré avec l'une des 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il fait l'objet d'une convention ent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gissant au nom de l'Etat, et cette personne. Cette convention précise le contenu de ce module, sa durée, les objectifs particuliers qui lui sont assignés, les modalités de la prestation assurée par la personne privée ou publique ainsi que les modalités de financement des frais engagés.

PARAGRAPHE 3 : Déroulement et fin du stage.

Article R131-39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Préalablement à la mise en oeuvre du stage, la personne ou le service qui en a la charge reçoit le condamné et lui en expose les objectifs. Il lui précise les conséquences du non-respect de ses obligations résultant du stage, telles qu'elles découlent de l'article 434-41 ou telles qu'elles ont été, le cas échéant, fixées par la juridic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1-9.

Article R131-40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Une attestation de fin de stage est délivrée au condamné, qui l'adresse à la personne ou au service chargé d'en contrôler la mise en oeuvre.

PARAGRAPHE 4 : Dispositions spécifiques applicables aux mineurs.

Article R131-41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orsque le stage de citoyenneté concerne des mineurs, il est élaboré et mis en oeuvre sous le contrôle d'un service du secteur public de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Le projet de stage est transmis par le responsable de ce service au directeur départemental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Pour en autoriser la mise en oeuvre, le directeur recueille l'avis du juge des enfants et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où se déroulera habituellement le stage.

Article R131-42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a convention prévue à l'article R. 131-38 est passée entre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e cet article et le service du secteur public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Le directeur départemental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informe le juge des enfants e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identité des services mettant en oeuvre des stages de citoyenneté pour les mineurs dans le département et du contenu de ces stages.

Article R131-43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Les formalités prévues à l'article R. 131-39 sont accomplies en présence des parents, du tuteur, du responsable de l'établissement ou de la personne à qui le mineur est confié, ou ceux-ci dûment convoqués.

Le stage se déroule sous le contrôle et en présence permanente d'un personnel éducatif du service chargé de sa mise en oeuvre. En cas de difficulté d'exécution du stage liée notamment au comportement du mineur, le représentant du service peut en suspendre l'exécution. Il en informe alors sans délai le juge des enfants e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ur adresse un rapport.

Article R131-44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1 ()

En fin de stage, le service en charge de la mesure reçoit le mineur et les parents, le tuteur, le responsable de l'établissement ou la personne à qui le mineur est confié afin d'établir un bilan du déroulement du stage et de vérifier que ses objectifs ont été atteints.

Dans le délai d'un mois suivant la fin du stage, un rapport de synthèse est transmis par le service au juge des enfants e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US-SECTION 4 : De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Article R131-45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Dès que la condamnation est exécutoire, la personne condamnée à la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est inform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par son délégué qu'elle doit lui adresser, au plus tard à l'expiration du délai fixé pour indemniser la

victime ou procéder à la remise en état des lieux, la justification qu'il a été procédé à cette indemnisation ou à cette remise en état. Si l'indemnisation se fait en plusieurs fois selon des modalités fixées par la juridiction, la justification doit intervenir pour chaque versement, sauf décision contraire du procureur ou de son délégué.

Lorsque la réparation s'exécute en nature et consiste en une remise en état des lieux, ou en cas de retard dans l'indemnisation de la victime, le délégué du procureur peut convoquer le condamné, le cas échéant avec la partie civile, afin de faciliter l'exécution de la peine ou d'en vérifier l'exécution.

SOUS-SECTION 5 : De la peine de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Article R131-46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e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prévu à l'article 131-35-1 a pour objet de faire prendre conscience au condamné des conséquences dommageables pour la santé humaine et pour la société de l'usage de tels produits.

Article R131-47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R. 131-36 à R. 131-44 sont applicables à ces stages, dont les modules peuvent être élaborés avec le concours des personnes privées dont l'activité est d'assister ou d'aider les usagers de stupéfiants, telles que les associations de lutte

contre la toxicomanie et le trafic de stupéfiants prévues à l'article 2-1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i les frais du stage sont mis à la charge du condamné, ils ne peuvent excéder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encour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SOUS-SECTION 6 : De la peine de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Article R131-48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e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prévu à l'article 131-35-1 a pour objet de rappeler au condamné les obligations juridiques, économiques, sociales et morales qu'implique l'éducation d'un enfant.

Article R131-49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R. 131-36 à R. 131-44 sont applicables à ce stage, dont les modules peuvent être élaborés avec le concours des personnes publiques ou privées mettant en oeuvre les accompagnements parentaux prévus par l'article L. 141-1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ou les contrats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prévus par l'article L. 222-4-1 du même code.

Si les frais du stage sont mis à la charge du condamné, ils ne peuvent excéder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encour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SOUS-SECTION 7 : De la peine de confiscation d'un animal.

Article R131-50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orsque la juridiction qui prononce la peine de confiscation d'un animal prévue par l'article 131-21-1 ordonne que l'animal sera remis à une fondation ou à une association sans préciser l'identité de cette personne mora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et à exécution cette peine auprès de la personne morale qu'il détermine.

Article R131-51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orsqu'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99-1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animal confisqué a été placé au cours d'une procédure dirigée contre une personne qui n'en est pas propriétaire, la juridiction se prononce sur la mise à la charge du condamné des frais de placement.

Article R131-52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e mandataire de justice prévu par l'article 131-46 est choisi soit parmi les personnes inscrites sur la liste prévue par l'article L. 811-2 du code de commerce, soit parmi celles inscrites sur l'une des listes prévues par l'article 15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Toutefois, à titre exceptionnel, la juridiction peut, par décision motivée, désigner comme mandataire une personne physique ne figurant sur aucune des listes précitées mais ayant une expérience ou une qualification particulière.

Article R131-53

Cré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3 ()

Lorsqu'il existe, au sein d'une personne morale citée ou amenée à comparaître devant une juridiction de jugement, des représentants du personnel, le ministère public les avise de la date et de l'objet de l'audience, par lettre recommandée adressée dix jours au moins avant la date de l'audience.

Lorsque le personnel de cette personne morale est régie par les dispositions du code du travail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salariés, l'avis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est adressé au secrétaire du comité d'entreprise ou, le cas échéant, au secrétaire du comité central d'entreprise et, en l'absence de tels comités, aux délégués du personnel titulaire.

CHAPITRE II : Du régime des peines

SECTION 2 : Des modes de personnalisation des peines

SOUS-SECTION 4 :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R132-45

Cré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L'attestation de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prévue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131-35-1 est adressé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chargé du suivi de cette obligation.

CHAPITRE III : De l'extinction des peines et de l'effacement des condamnations

SECTION 2 : De la grâce.

Article R133-1

Créé par Décret n°95-152 du 7 février 1995 - art. 1 ()

Les recours en grâce sont instruits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après, le cas échéant, examen préalable par le ou les ministres intéressés.

Article R133-2

Créé par Décret n°95-152 du 7 février 1995 - art. 1 ()

Le décret de grâce, sign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contresigné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et, le cas échéant, le ou les ministres ayant procédé à l'examen préalable du recours.

LIVRE 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TITRE II : Des atteintes à la personne humaine

CHAPITRE VI : Des atteintes à la personnalité

SECTION 1 : De l'atteinte à la vie privée.

Article R226-1

Modifié par Décret n°97-757 du 10 juillet 1997 - art. 1 ()

La liste d'appareils prévue par l'article 226-3 est établie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er du décret n° 97-34 du 15 janvier 1997 relatif à la déconcentration d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individuelles, les autorisations prévues aux articles R. 226-3 et R. 226-7 sont délivrées par le Premier ministre.

Article R226-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Il est institué auprès du Premier ministre une commission consultative composée comme suit :

- 1°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 ou son représentant, président ;
- 2°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de la justice ;
- 3°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de l'intérieur ;
- 4°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de la défense ;
- 5°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s douanes ;
- 6°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 l'industrie ;
- 7° Un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s télécommunications ;
- 8° Un représenta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interceptions de sécurité ;
- 9° Un représentant du 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 ;
- 10° Deux personnalités choisies en raison de leur compétence, désignées par le Premier ministre.

La commission peut entendre, à titre d'expert, toute personne compétente.

Elle est saisie pour avis des projets d'arrêtés pri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R. 226-1 et R. 226-10. Elle peut formuler des propositions de modification de ces arrêtés.

Elle est également consultée sur les demandes d'autorisation présent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R. 226-3 et R. 226-7.

Le secrétariat de la commission est assuré par le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R226-3

La fabrication, l'importation, l'exposition, l'offre, la location ou la vente de tout appareil figurant sur la liste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1 est soumise à une autorisation délivrée par le Premier ministre,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2.

Article R226-4

La demande d'autorisation est déposée auprès d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 Elle comporte pour chaque type d'appareil :

- 1° Le nom et l'adresse du demandeur, s'il est une personne physique, ou sa dénomination et son siège, s'il est une personne morale ;
- 2° La ou les opér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pour lesquelles l'autorisation est demandée et, le cas échéant, la description des marchés visés ;
- 3° L'objet et les caractéristiques techniques du type de l'appareil, accompagnés d'une documentation technique ;
- 4° Le lieu prévu pour la fabrication de l'appareil ou pour les autres opér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
- 5° L'engagement de se soumettre aux contrôles nécessaires à la vérification du respect des indications fournies dans la demande d'autorisation.

Article R226-5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3 est délivré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six ans.

Elle peut fixer les conditions de réalisation de l'opération et le nombre des appareils concernés.

Article R226-6

Modifié par Décret n°97-757 du 10 juillet 1997 - art. 5 ()

Chaque appareil fabriqué, importé, exposé, offert, loué ou vendu doit porter la référence du type correspondant à la demande d'autorisation et un numéro d'identification individuel.

Article R226-7

L'acquisition ou la détention de tout appareil figurant sur la liste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1 est soumise à une autorisation délivrée par le Premier ministre,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2.

Article R226-8

Modifié par Décret n°97-757 du 10 juillet 1997 - art. 7 ()

La demande d'autorisation est déposée auprès d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 Elle comporte pour chaque type d'appareil :

- 1° Le nom et l'adresse du demandeur, s'il est une personne physique, ou sa dénomination et son siège, s'il est une personne morale ;
- 2° Le type de l'appareil et le nombre d'appareils pour la détention desquels l'autorisation est demandée ;

3° L'utilisation prévue ;

4° L'engagement de se soumettre aux contrôles nécessaires à la vérification du respect des indications fournies dans la demande d'autorisation.

Article R226-9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7 est délivré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trois ans.

Elle peut subordonner l'utilisation des appareils à des conditions destinées à en éviter tout usage abusif.

Elle est accordée de plein droit aux agents ou services de l'Etat habilités à réaliser des interceptions autorisées par la loi.

Article R226-10

Modifié par Décret n°97-757 du 10 juillet 1997 - art. 8 ()

Les titulaires de l'une des autoris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ne peuvent proposer, céder, louer ou vendre les appareils figurant sur la liste prévue à l'article R. 226-1 qu'aux titulaires de l'une des autoris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ou à l'article R. 226-7.

Ils tiennent un registre retraçant l'ensemble des opérations relatives à ces matériels. Le modèle de ce registre est déterminé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mentionnée à l'article R. 226-2.

Article R226-11

Les autorisations prévues à l'article R. 226-3 et à l'article R. 226-7 peuvent être retirées :

- 1° En cas de fausse déclaration ou de faux renseignement ;
- 2° En cas de modification des circonstances au vu desquelles l'autorisation a été délivrée ;
- 3° Lorsque le bénéficiaire de l'autorisation n'a pas respecté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ou les obligations particulières prescrites par l'autorisation ;
- 4° Lorsque le bénéficiaire de l'autorisation cesse l'exercice de l'activité pour laquelle a été délivrée l'autorisation.

Le retrait ne peut intervenir, sauf urgence, qu'après que le titulaire de l'autorisation a été mis à même de faire valoir ses observations.

Les autorisations prennent fin de plein droit en cas de condamnation du titulaire pour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6-1, 226-15 ou 432-9.

Article R226-12

Les personnes qui fabriquent, importent, détiennent, exposent, offrent, louent ou vendent des appareils figurant sur la liste prévue à l'article R. 226-1 doivent se mettre en conformité avec les prescrip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en sollicitant les autorisations nécessaires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e l'arrêté prévu à l'article R. 226-1.

Si l'autorisation n'est pas délivrée, ces personnes disposent d'un délai d'un mois pour procéder à la destruction de ces appareils ou pour les vendre ou les céder à une personne titulaire de l'une des autorisations prévues à l'article R. 226-3 ou à l'article R. 226-7. Il en est de même dans les cas d'expiration ou de retrait de l'autorisation.

LIVRE I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biens

TITRE II : Des autres atteintes aux biens

CHAPITRE Ier : Du recel et des infractions assimilées ou voisines

SECTION 2 : Des infractions assimilées au recel ou voisines de celui-ci

SOUS-SECTION 1 : Dispositions relatives aux personnes dont l'activité professionnelle comporte la vente ou l'échange de certains objets mobiliers.

Article R321-1

Toute personne soumise à l'obligation de tenir le registre d'objets mobilier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1-7 doit effectuer une déclaration préalable à la préfecture ou la sous-préfecture dont dépend son établissement principal. A Paris, la déclaration est faite à la préfecture de police.

En l'absence d'établissement fixe ouvert au public, le lieu du domicile ou, à défaut, la commune de rattachement mentionnée à l'article 7 de la loi n° 69-3 du 3 janvier 1969 est considéré comme le lieu d'établissement.

La déclaration comporte les indications suivantes : nom et prénoms du déclarant ; date et lieu de naissance ; nationalité ; lieu d'exercice habituel de la profession ; statut de l'entreprise ainsi qu'un extrait d'immatriculation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Il est remis un récépissé de déclaration qui doit être présenté à toute réquisition des

servic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des services fiscaux, des douanes ainsi que des servic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Article R321-2

En cas de changement du lieu de l'établissement principal,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R. 321-1 sont tenues de faire une déclaration au commissariat de police, ou, à défaut, à la mairie tant du lieu qu'elles quittent que de celui où elles vont s'établir. Le déplacement d'un établissement secondaire doit égalemen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commissariat de police ou, à défaut, à la mairie du lieu de l'établissement principal.

Il est remis un récépissé de ces déclarations.

Article R321-3

Le registre d'objets mobilier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21-7 doit comporter, outre la description des objets acquis ou détenus en vue de la vente ou de l'échange :

- 1° Les nom, prénoms, qualité et domicile de chaque personne qui a vendu, apporté à l'échange ou remis en dépôt en vue de la vente un ou plusieurs objets, ainsi que la nature, le numéro et la date de délivrance de la pièce d'identité produite par la personne physique qui a réalisé la vente, l'échange ou le dépôt, avec l'indication de l'autorité qui l'a établie ;
- 2° Lorsqu'il s'agit d'une personne morale, la dénomination et le siège de celle-ci ainsi que les nom, prénoms, qualité et domicile du représentant de la personne morale qui a effectué l'opération pour son compte, avec les références de la pièce d'identité produite.

La description de chaque objet comprend ses principales caractéristiques apparentes ainsi

que les noms, signatures, monogrammes, lettres, chiffres, numéros de série, emblèmes et signes de toute nature apposés sur lui et qui servent à l'identifier.

Les objets dont la valeur unitaire n'excède pas un montant fixé par un arrêté conjoin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re chargé du commerce et qui ne présentent pas un intérêt artistique ou historique peuvent être regroupés et faire l'objet d'une mention et d'une description communes sur le registre.

Article R321-4

Chaque objet exposé à la vente ou détenu en stock est affecté d'un numéro d'ordre.

Les objets mentionné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321-3 peuvent faire l'objet d'un numéro d'ordre commun.

Le numéro d'ordre est porté sur le registre et figure de manière apparente sur chaque objet ou lot d'objets.

Article R321-5

Le registre comporte également :

- 1° Le prix d'achat ou, en cas d'échange, d'acquisition à titre gratuit ou de dépôt en vue de la vente, une estimation de la valeur vénale de chaque objet ou lot d'objets ;
- 2° Le cas échéant, l'indication du classement ou de l'inscription de l'objet en application de la 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lorsqu'il en est donné connaissance au revendeur d'objets mobiliers.

Article R321-6

Les mentions figurant sur le registre sont inscrites à l'encre indélébile, sans blanc, rature ni abréviation.

Le registre est coté et paraphé par le commissaire de police ou, à défaut, par le maire de la commune où est situé l'établissement ouvert au public.

Lorsque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R. 321-1 possèdent plusieurs établissements ouverts au public, un registre est tenu pour chaque établissement.

Lorsque ces mêmes personnes ne possèdent pas d'établissement fixe ouvert au public, le registre est coté et paraphé par un commissaire de police ou un maire.

Le registre est conservé pendant 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sa date de clôture.

Article R321-7

Lorsque la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est une personne morale, les obliga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ous-section incombent aux dirigeants de celle-ci.

Article R321-8

Le modèle du registre d'objets mobiliers est déterminé par arrêté conjoint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re chargé du commerce.

SOUS-SECTION 2 : Dispositions concernant les manifestations publiques en vue de la vente ou de l'échange de certains objets mobiliers.

Article R321-9

Le registre tenu à l'occasion de toute manifestation mentionné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21-7 doit comprendre :

- 1° Les nom, prénoms, qualité et domicile de chaque personne qui offre à la vente ou à l'échange des objets mobiliers usagés ou acquis de personnes autres que celles qui les fabriquent ou en font commerce ainsi que la nature, le numéro et la date de délivrance de la pièce d'identité produite par celle-ci avec l'indication de l'autorité qui l'a établie ;
- 2° Lorsqu'il s'agit d'une personne morale, la dénomination et le siège de celle-ci ainsi que les nom, prénoms, qualité et domicile du représentant de la personne morale à la manifestation, avec les références de la pièce d'identité produite.

Article R321-10

Le registre doit être coté et paraphé par le commissaire de police ou, à défaut, par le maire de la commune du lieu de la manifestation.

Il est tenu à la disposition des servic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des services fiscaux, des douanes ainsi que des servic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pendant toute la durée de la manifestation.

Au terme de celle-ci et au plus tard dans le délai de huit jours, il est déposé à la préfecture ou à la sous-préfecture du lieu de la manifestation.

Article R321-11

Lorsque l'organisateur de la manifestation est une personne morale, les obliga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ous-section incombent aux dirigeants de celle-ci.

Article R321-12

Le modèle du registre est déterminé par arrêté conjoint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re chargé du commerce.

LIVRE IV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

TITRE Ier : Des 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HAPITRE III : Des autres atteintes à la défense nationale

SECTION 1 : Des atteintes à la sécurité des forces armées et aux zones protégées intéressant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R413-1

Les zones protégées que constituent les locaux et terrains clos mentionnés à l'article 413-7 sont délimit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Article R413-2

Le besoin de protection est déterminé par le ministre qui a la charge des installations, du matériel ou des recherches, études, fabrications à caractère secret qu'il désigne.

Les autorités dont relèvent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entreprises concernés peuvent recevoir par décret délégation pour déterminer ce besoin de protection.

Article R413-3

Lorsque l'activité principale du service, de l'établissement ou de l'entreprise relève du ministre ayant déterminé le besoin de protection, l'implantation et les limites des zones

protégées sont fixées par arrêté de ce ministre.

Lorsque l'activité principale du service, de l'établissement ou de l'entreprise relève d'un autre ministre, l'implantation et les limites de zones protégées sont fixées par arrêté conjoint de ce ministre et du ministre ayant déterminé le besoin de protection.

Les autorités dont relèvent c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entreprises peuvent recevoir par décret délégation pour prendre les arrêté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R413-4

Modifié par Décret n°2001-744 du 24 août 2001 - art. 3 ()

L'arrêté portant création d'une zone protégée est notifié au chef du service, de l'établissement ou de l'entreprise. Celui-ci prend alors, sous le contrôle de l'autorité qui a déterminé le besoin de protection, toutes dispositions pour rendre apparentes les limites de la zone et les mesures d'interdiction dont elle est l'objet.

Un exemplaire de l'arrêté est adressé, pour leur information et éventuellement aux fin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qui les concernent, au ministre de l'intérieur et aux préfets territorialement compétents.

Article R413-5

L'autorisation de pénétrer dans la zone protégée est donnée par le chef du service, de l'établissement ou de l'entreprise, selon les directives et sous le contrôle du ministre ayant déterminé le besoin de protection.

Toutefois, lorsque la zone a été instituée pour protéger des recherches, études ou fabrications qui doivent être tenues secrètes dans l'intérêt de la défense nationale, l'autorisation est délivrée par le ministre qui a déterminé le besoin de protection.

Dans tous les cas, l'autorisation est délivrée par écrit. Elle peut être retirée à tout moment dans les mêmes formes.

SECTION 2 : Des atteintes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R413-6

Modifié par Décret n°98-608 du 17 juillet 1998 - art. 10 ()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13-9, les niveaux de classification des renseignement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présentant un caractère d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insi que les autorités chargées de définir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est organisée leur protection sont déterminés par le décret n° 98-608 du 17 juillet 1998 relatif à la protection des secrets de la défense nationale.

TITRE III : Des atteintes à l'autorité de l'Etat

CHAPITRE Ier : Des atteintes à la paix publique

SECTION 2 : De la participation délictueuse à un attroupement.

Article R431-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31-3, l'autorité habilitée à procéder aux sommations avant de disperser un attroupement par la force :

- 1° Annonce sa présence en énonçant par haut-parleur les mots :
" Obéissance à la loi. Dispersez-vous " ;
- 2° Procède à une première sommation en énonçant par haut-parleur les mots :
" Première sommation : on va faire usage de la force " ;
- 3° Procède à une deuxième et dernière sommation en énonçant par haut-parleur les mots : " Dernière sommation : on va faire usage de la force ".

Si l'utilisation du haut-parleur est impossible ou manifestement inopérante, chaque annonce ou sommation peut être remplacée ou complétée par le lancement d'une fusée rouge.

Toutefois, si, pour disperser l'attroupement par la force, il doit être fait usage des armes, la dernière sommation ou, le cas échéant, le lancement de fusée qui la remplace ou la complète doivent être réitérés.

Article R431-2

Les autorités mentionné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31-3 doivent, pour procéder aux sommations, porter les insignes suivants :

- le préfet ou le sous-préfet : écharpe tricolore ;
- le maire ou l'un de ses adjoints : écharpe tricolore ;
-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nationale : écharpe tricolore ;
-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 brassard tricolore.

LIVRE V : Des autres crimes et délits

CHAPITRE Ier : 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

Article R511-1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4 du 18 septembre 2000 - art. 11 ()

Les prescriptions relatives aux expériences ou recherches scientifiques ou expérimentales

sur les animaux mentionnées à l'article 511-2 sont fixées par le décret n° 87-848 du 19 octobre 1987 pris pour l'application de cet article et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4-3 du code rural.

LIVRE VI : Des contraventions

T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R610-1

Les contraventions, ainsi que les classes dont elles relèvent,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s en Conseil d'Etat.

Article R610-2

Modifié par Décret n°2001-883 du 20 septembre 2001 - art. 1 ()

Les dispositions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121-3 sont applicables aux contraventions pour lesquelles le règlement exige une faute d'imprudence ou de négligence.

Le complice d'une contravention au sens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121-7 est puni conformément à l'article 121-6.

Article R610-3

Le montant des amendes encourues pour les cinq classes de contraventions est fixé par l'article 131-13.

Article R610-4

Les contraventions punies d'une amende dont le taux est proportionnel au montant ou à la valeur exprimée en numéraire du préjudice, des réparations ou de l'objet de l'infraction constituent d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dont la peine d'amende ne peut excéder les montants fixés par le 5° de l'article 131-13.

Article R610-5

La violation des interdictions ou le manquement aux obligations édictées par les décrets et arrêtés de police sont punis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TITRE II : Des contraventions contre les personnes

CHAPITRE Ier : D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contre les personnes

SECTION 1 : De la diffamation et de l'injure non publiques.

Article R621-1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CHAPITRE II : D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contre les personnes

SECTION 1 : Des atteintes in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n'ayant entraîné auc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Article R622-1

Modifié par Décret n°2001-883 du 20 septembre 2001 - art. 2 ()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R. 625-3, le fait,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3, de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autrui sans qu'il en résulte d'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SECTION 2 : De la divagation d'animaux dangereux.

Article R622-2

Le fait, par le gardien d'un animal susceptible de présent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de laisser divaguer cet animal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CHAPITRE III : D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contre les personnes

SECTION 1 : Des menaces de violences.

Article R623-1

Hor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7 et 222-18, la menace de commettre des violences contre une personne, lorsque cette menace est soit réitérée, soit matérialisée par un écrit, une image ou tout autre objet,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SECTION 2 : Des bruits ou tapages injurieux ou nocturnes.

Article R623-2

Les bruits ou tapages injurieux ou nocturnes troublant la tranquillité d'autrui sont punis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Le fait de faciliter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SECTION 3 : De l'excitation d'animaux dangereux.

Article R623-3

Le fait, par le gardien d'un animal susceptible de présent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d'exciter ou de ne pas retenir cet animal lorsqu'il attaque ou poursuit un passant, alors même qu'il n'en est résulté aucun dommag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SECTION 4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nt le commerce de certains matériels susceptibles d'être utilisés pour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Article R623-4

Le fait, par une personne titulaire de l'une des autoris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de ne pas tenir le registre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R. 226-10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CHAPITRE IV : D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contre les personnes

SECTION 1 : Des violences légères.

Article R624-1

Hor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3 et 222-14, les violences volontaires n'ayant entraîné auc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sont punies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trois ans au plus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 fait de faciliter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SECTION 2 : De la diffusion de messages contraires à la décence.

Article R624-2

Le fait de diffuser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des lieux publics des messages contraires à la décenc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Est puni de la même peine le fait, sans demande préalable du destinataire, d'envoyer ou de distribuer à domicile de tels messages.

Les personnes coupables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 fait de faciliter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SECTION 3 : De la diffamation et de l'injure non publiques présentant un caractère raciste ou discriminatoire.

Article R624-3

Modifié par Décret n°2005-284 du 25 mars 2005 - art. 1 ()

La diffamation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Est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de leur handicap.

Article R624-4

Modifié par Décret n°2005-284 du 25 mars 2005 - art. 2 ()

L'injure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Est punie de la même peine l'injure non publique commise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de leur handicap.

Article R624-5

Les personn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24-3 et R. 624-4

encourent, outre les peines d'amende prévues par ces articles,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Article R624-6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24-3 et R. 624-4.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SECTION 4 : Du manquement à l'obligation d'assiduité scolaire.

Article R624-7

Modifié par Décret n°2006-583 du 23 mai 2006 - art. 6 ()

Le fait, pour l'un ou l'autre parent d'un enfant soumis à l'obligation scolaire ou pour toute personne exerçant à son égard l'autorité parentale ou une autorité de fait de façon continue, après avertissement donné par l'inspecteur d'académie et mise en

oeuvre des procédures définies à l'article R. 131-7 du code de l'éducation, de ne pas imposer à l'enfant l'obligation d'assiduité scolaire sans faire connaître de motif légitime ou d'excuse valable ou en donnant des motifs d'absence inexact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e fait de faciliter, par aide ou assistance, la commission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CHAPITRE V : D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contre les personnes

SECTION 1 : Des violences.

Article R625-1

Hor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3 et 222-14, les violences volontaires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u travail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huit jours sont punies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trois ans au plus ;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6°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vingt heures.

Le fait de faciliter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

SECTION 2 : Des atteintes in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Article R625-2

Modifié par Décret n°2003-642 du 11 juillet 2003 - art. 1 ()

Hor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20 et 222-20-1, le fait de causer à autrui,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3,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trois moi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25-3

Modifié par Décret n°2001-883 du 20 septembre 2001 - art. 4 ()

Le fait, par la violation manifestement délibérée d'une obligation particulière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prévue par la loi ou le règl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égrité d'autrui sans qu'il en résulte d'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25-4

Les personnes coupables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25-2 et R. 625-3 encourent, outre les peines d'amende prévues par ces articles,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trois ans au plus ;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
- 6°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 vingt heures.

Article R625-5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25-2 et R. 625-3.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Article R625-6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x articles R. 625-2 et R. 625-3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3 : De la provocation non publique à la discrimination, à la haine ou à la violence.

Article R625-7

Modifié par Décret n°2005-284 du 25 mars 2005 - art. 3 ()

La provocation non publique à la discrimination, à la haine ou à la violence à l'égard d'une personne ou d'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Est punie de la même peine la provocation non publique à la haine ou à la violence à l'égard d'une personne ou d'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de leur handicap, ainsi que la provocation non publique, à l'égard de ces mêmes personnes, aux discrimin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Les personnes coupables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4°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 vingt heur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5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nt le commerce de certains matériels susceptibles d'être utilisés pour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Article R625-9

Le fait, par une personne titulaire de l'une des autoris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R. 226-3, de proposer, céder, louer ou vendre un appareil figurant sur la liste visée à

l'article R. 226-1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R. 226-10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6 : Des atteintes aux droits de la personne résultant des fichiers ou des traitements informatiques

Article R625-10

Créé par Décret 2005-1309 2005-10-20 art. 90 JORF 22 octobre 2005

Lorsque cette information est exigée par la loi,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e fait, pour le responsable d'un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

- 1° De ne pas informer la personne auprès de laquelle sont recueillies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la concernant :

- a) De l'identité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et, le cas échéant, de celle de son représentant ;
 - b) De la finalité poursuivie par le traitement auquel les données sont destinées ;
 - c) Du caractère obligatoire ou facultatif des réponses ;
 - d) Des conséquences éventuelles, à son égard, d'un défaut de réponse ;
 - e) Des destinataires ou catégories de destinataires des données ;
 - f) De ses droits d'opposition, d'interrogation, d'accès et de rectification ;
 - g) Le cas échéant, des transfert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nvisagés à destination d'un Etat non membre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
- 2° Lorsque les données sont recueillies par voie de questionnaire, de ne pas porter sur le questionnaire les informations relatives :
- a) A l'identité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et, le cas échéant, à celle de son représentant ;
 - b) A la finalité poursuivie par le traitement auquel les données sont destinées ;
 - c) Au caractère obligatoire ou facultatif des réponses ;
 - d) Aux droits d'opposition, d'interrogation, d'accès et de rectification des personnes auprès desquelles sont recueillies les données ;
- 3° De ne pas informer de manière claire et précise toute personne utilisatric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a) De la finalité de toute action tendant à accéder, par voie de transmission électronique, à des informations stockées dans son équipement terminal de connexion ou à inscrire, par la même voie, des informations dans son équipement terminal de connexion ;
 - b) Des moyens dont elle dispose pour s'y opposer ;
- 4° De ne pas fournir à la personne concernée, lorsque l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n'ont pas été recueillies auprès d'elle, les informations énumérées au 1° et au 2° dès l'enregistrement des données ou, si une communication des données à des tiers est envisagée, au plus tard lors de la première communication des données.

Article R625-11

Créé par Décret 2005-1309 2005-10-20 art. 90 JORF 22 octobre 2005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e fait, pour le responsable d'un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e ne pas répondre aux demandes d'une personne physique justifiant de son identité qui ont pour objet :

- 1° La confirmation qu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la concernant font ou ne font pas l'objet de ce traitement ;
- 2° L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finalités du traitement, aux catégorie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traitées et aux destinataires ou aux catégories de destinataires auxquels les données sont communiquées ;
- 3° Le cas échéant, l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transfert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nvisagés à destination d'un Etat non membre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
- 4° La communication, sous une forme accessibl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qui la concernent ainsi que de toute information disponible quant à l'origine de celles-ci ;
- 5°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e connaître et de contester la logique qui sous-tend le traitement automatisé en cas de décision prise sur le fondement de celui-ci et produisant des effets juridiques à l'égard de l'intéressé.

Est puni de la même peine le fait de refuser de délivrer,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une copi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le concernant, le cas échéant, contre paiement d'une somme qui ne peut excéder le coût de la reproduction.

Les contraven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ne sont toutefois pas constituées si le refus de réponse est autorisé par la loi soit afin de ne pas porter atteinte au droit d'auteur, soit parce qu'il s'agit de demandes manifestement abusives, notamment par leur nombre, leur caractère répétitif ou systématique, soit parce que l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ont conservées sous une forme excluant manifestement tout risque d'atteinte à la vie privée des personnes concernées et pendant une durée n'excédant pas celle nécessaire aux seules finalités d'établissement de statistiques ou de recherche scientifique ou historique.

Article R625-12

Créé par Décret 2005-1309 2005-10-20 art. 90 JORF 22 octobre 2005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e fait, pour le responsable d'un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e ne pas procéder, sans frais pour le demandeur, aux opérations demandées par une personne physique justifiant de son identité et qui exige que soient rectifiées, complétées, mises à jour, verrouillées ou effacées l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la concernant ou concernant la personne décédée dont elle est l'héritière, lorsque ces données sont inexactes, incomplètes, équivoques, périmées, ou lorsque leur collecte, leur utilisation, leur communication ou leur conservation est interdite.

Article R625-13

Créé par Décret 2005-1309 2005-10-20 art. 90 JORF 22 octobre 2005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contraven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TITRE III : Des contraventions contre les biens

CHAPITRE Ier : D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contre les biens

SECTION unique : Des menaces de destruction, de dégradation ou de détérioration n'entraînant qu'un dommage léger.

Article R631-1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322-13, la menace de commettre une destruction, une dégradation ou une détérioration n'entraînant qu'un dommage léger, lorsqu'elle est soit réitérée, soit matérialisée par un écrit, une image ou tout autre objet,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CHAPITRE II : D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contre les biens

SECTION unique : De l'abandon d'ordures, déchets, matériaux ou autres objets.

Article R632-1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4 () JORF 28 septembre 2007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R. 635-8,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le fait de déposer, d'abandonner, de jeter ou de déverser, en lieu public ou privé, à l'exception des emplacements désignés à cet effet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des ordures, déchets, déjections, matériaux, liquides insalubres ou tout autre objet de quelque nature qu'il soit, y compris en urinant sur la voie publique, si ces faits ne sont pas accomplis par la personne ayant la jouissance du lieu ou avec son autorisation.

Est puni de la même peine le fait de déposer ou d'abandonner sur la voie publique des ordures, déchets, matériaux ou tout autre objet de quelque nature qu'il soit, en vue de leur enlèvement par le service de collecte, sans respecter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notamment en matière de jours et d'horaires de collecte ou de tri des ordur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CHAPITRE III : D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contre les biens

SECTION 1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nt la vente ou l'échange de certains objets mobiliers.

Article R633-1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lorsqu'elle est requise par l'autorité compétente, de s'abstenir de présenter le récépissé de déclaration prévu au dernier alinéa du même articl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Article R633-2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d'omettre de faire figurer de manière apparente sur un objet ou lot d'objets exposé à la vente ou détenu en stock le numéro d'ordre correspondant,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R. 321-4,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Article R633-3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d'omettre de faire parapher le registre d'objets mobiliers prévu à l'article R. 321-3,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R. 321-6,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Article R633-4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33-1, R. 633-2 et R. 633-3.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SECTION 2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manifestations publiques en vue de la vente ou de l'échange de certains objets mobiliers.

Article R633-5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21-7, d'omettre de faire parapher le registre prévu par l'article R. 321-9,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R. 321-10,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4-41.

CHAPITRE IV : Des contraventions de la quatrième classe contre les biens

SECTION 1 : Des menaces de destruction, de dégradation ou de détérioration ne présentant pas de danger pour les personnes.

Article R634-1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322-13, la menace de commettre une destruction, une dégradation ou une détérioration ne présentant pas de danger pour les personnes, lorsqu'elle est soit réitérée, soit matérialisée par un écrit, une image ou tout autre objet,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CHAPITRE V : D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contre les biens

SECTION 1 : Des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dont il n'est résulté qu'un dommage léger.

Article R635-1

La destruction, la dégradation ou la détérioration volontaires d'un bien appartenant à autrui dont il n'est résulté qu'un dommage léger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suspens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u permis de conduire, cette suspension pouvant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
- 2°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3°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4° Le retrait du permis de chasser,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pendant trois ans au plus ;
- 5°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6°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 vingt heures.

Le fait de faciliter sciemment, par aide ou assistance, la préparation ou la consommation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es mêmes pein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2 : De la vente forcée par correspondance.

Article R635-2

Le fait d'adresser à une personne, sans demande préalable de celle-ci, un objet quelconque accompagné d'une correspondance indiquant que cet objet peut être accepté contre versement d'un prix fixé ou renvoyé à son expéditeur, même si ce renvoi peut être fait sans frais pour le destinatair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interdiction,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3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nt la vente ou l'échange de certains objets mobiliers.

Article R635-3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d'omettre de procéder aux déclarations prévues par ce même article et par l'article R. 321-2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35-4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à l'article R. 321-1, de recevoir, à titre gratuit ou onéreux, un objet mobilier d'un mineur non émancipé sans le consentement exprès des père, mère ou tuteur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35-5

Le fait, par une personne mentionné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21-7, d'omettre de déposer le registre prévu par l'article R. 321-9 auprès des services compétent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R. 321-10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35-6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x articles R. 635-3, R. 635-4 et R. 635-5.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Article R635-7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x articles R. 635-3, R. 635-4 et R. 635-5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4 : De l'abandon d'épaves de véhicules ou d'ordures, déchets, matériaux et autres objets transportés dans un véhicule.

Article R635-8

Modifié par Décret n°2007-1388 du 26 septembre 2007 - art. 4 ()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 fait de déposer, d'abandonner, de jeter ou de déverser, en lieu public ou privé, à l'exception des emplacements désignés à cet effet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soit une épave de véhicule, soit des ordures, déchets, déjections, matériaux, liquides insalubres ou tout autre objet de quelque nature qu'il soit, lorsque ceux-ci ont été transportés

avec l'aide d'un véhicule, si ces faits ne sont pas accomplis par la personne ayant la jouissance du lieu ou avec son autorisation.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TITRE IV : Des contraventions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CHAPITRE Ier : D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SECTION unique : De l'abandon d'armes ou d'objets dangereux.

Article R641-1

Le fait d'abandonner, en un lieu public ou ouvert au public, une arme ou tout autre objet présentant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et susceptible d'être utilisé pour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CHAPITRE II : D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SECTION 1 : Du défaut de réponse à une réquisition des autorité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

Article R642-1

Le fait, sans motif légitime, de refuser ou de négliger de répondre soit à une réquisition émanant d'un magistrat ou d'une autorité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soit, en cas d'atteinte à l'ordre public ou de sinistre ou dans toute autre situation présentant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à une réquisition émanant d'une 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SECTION 2 : Des atteintes à la monnaie.

Article R642-2

Le fait d'accepter, de détenir ou d'utiliser tout signe monétaire non autorisé ayant pour objet de remplacer les pièces de monnaie ou les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peine de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signes monétaires vis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21 et 131-48.

Article R642-3

Le fait de refuser de recevoir des pièces de monnaie ou des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selon la valeur pour laquelle ils ont cour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Article R642-4

Le fait d'utiliser comme support d'une publicité quelconque des pièces de monnaie ou des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ou émis par les institutions

étrangères ou internationales habilitées à cette fin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peine de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signes monétaires vis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21 et 131-48. Les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42-13 sont applicables.

CHAPITRE III : D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SECTION 1 : De l'usurpation de signes réservés à l'autorité publique.

Article R643-1

Hor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433-15,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le fait de porter publiquement un costume ou un uniforme ou de faire usage d'un insigne ou d'un document présentant avec des costumes, uniformes, insignes ou documents réglementés par l'autorité publique une

ressemblance de nature à causer une méprise dans l'esprit du public.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SECTION 2 : De l'utilisation de poids ou mesures différents de ceux établi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en vigueur.

Article R643-2

L'utilisation de poids ou mesures différents de ceux qui sont établi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en vigueur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CHAPITRE IV : D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SECTION 1 : De l'accès sans autorisation à un terrain, une construction, un engin ou un appareil militaires.

Article R644-1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413-5, le fait, sans autorisation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pénétrer, séjourner ou circuler sur un terrain, dans une construction ou dans un engin ou appareil quelconque affecté à l'autorité militaire ou placé sous son contrôl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interdiction d'accès aux terrains, constructions, engins ou appareils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fait l'objet d'une signalisation particulière lorsque aucune marque distinctive ne signale qu'ils sont affectés à l'autorité militaire ou placés sous son contrôle.

SECTION 2 : Des entraves à la libre circulation sur la voie publique.

Article R644-2

Le fait d'embarrasser la voie publique en y déposant ou y laissant sans nécessité des matériaux ou objets quelconques qui entravent ou diminuent la liberté ou la sûreté de

passag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SECTION 3 : De la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nt les professions exercées dans les lieux publics.

Article R644-3

Le fait, sans autorisation ou déclaration régulière, d'offrir, de mettre en vente ou d'exposer en vue de la vente des marchandises ou d'exercer toute autre profession dans les lieux publics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réglementaires sur la police de ces lieux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CHAPITRE V : D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contre la nation, l'Etat ou la paix publique

SECTION 1 : Du port ou de l'exhibition d'uniformes, insignes ou emblèmes rappelant ceux d'organisations ou de personnes responsables de crimes contre l'humanité.

Article R645-1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 fait, sauf pour les besoins d'un film, d'un spectacle ou d'une exposition comportant une évocation historique, de porter ou d'exhiber en public un uniforme, un insigne ou un emblème rappelant les uniformes, les insignes ou les emblèmes qui ont été portés ou exhibés soit par les membres d'une organisation déclarée criminelle en application de l'article 9 du statut du tribunal militaire international annexé à l'accord de Londres du 8 août 1945, soit par une personne reconnue coupable par une juridiction française ou internationale d'un ou plusieurs crimes contre l'humanité prévus par les articles 211-1 à 212-3 ou mentionnés par la loi n° 64-1326 du 26 décembre 1964.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au plus, une arme soumise à autorisation ;
- 2° La confiscation d'une ou de plusieurs armes dont le condamné est propriétaire ou dont il a la libre disposition ;
- 3°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4°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vingt à cent vingt heures.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2 : Des dessins, levés ou enregistrements effectués sans autorisation dans une zone d'interdiction fixée par l'autorité militaire.

Article R645-2

Le fait, dans une zone d'interdiction fixée par l'autorité militaire et faisant l'objet d'une signalisation particulière, d'effectuer, sans l'autorisation de cette autorité, des dessins, levés ou des enregistrements d'images, de sons ou de signaux de toute natur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

SECTION 3 : Des atteintes à l'état civil des personnes.

Article R645-3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 fait, par un officier d'état civil ou une personne déléguée par lui en vertu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 du décret n° 62-921 du 3 août 1962 :

- 1° De contrevenir aux dispositions réglementaires concernant la tenue des registres et la publicité des actes d'état civil ;
- 2° De ne pas s'assurer de l'existence du consentement des père, mère ou autres personnes lorsque la loi le prescrit pour la validité d'un mariage ;
- 3° De recevoir, avant le temps prescrit par l'article 228 du code civil, l'acte de mariage d'une femme ayant déjà été mariée.

Les contraven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constituées même lorsque la nullité des actes de l'état civil n'a pas été demandée ou a été couverte.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

Article R645-4

Le fait, par une personne ayant assisté à un accouchement, de ne pas faire la déclaration prescrite par l'article 56 du code civil dans les délais fixés par l'article 55 du même cod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45-5

Le fait, par une personne ayant trouvé un enfant nouveau-né, de ne pas faire la déclaration prescrite par l'article 58 du code civil ou, si elle ne consent pas à se

charger de l'enfant, de ne pas le remettre à l'officier d'état civil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Article R645-6

Le fait de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à l'inhumation d'un individu décédé sans que cette inhumation ait été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officier public, dans le cas où une telle autorisation est prescrite, ou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et réglementaires relatives aux délais prévus en cette matière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a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4 : De la soustraction d'une pièce produite en justice.

Article R645-7

Le fait, pour une personne ayant produit, dans une contestation judiciaire, un titre, une pièce ou un mémoire, de le soustrair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a peine encourue par les personnes morales est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5 : De l'utilisation d'un document délivré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comportant des mentions devenues incomplètes ou inexactes.

Article R645-8

L'usage d'un document délivré par une administration publique aux fins de constater un droit, une identité ou une qualité ou d'accorder une autorisation, lorsque les mentions invoquées par l'intéressé sont devenues incomplètes ou inexacte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5 bis : De l'usurpation de fonction ou de titre de délégué ou de médiateur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R645-8-1

Créé par Décret n°2004-1021 du 27 septembre 2004 - art. 4 ()

Le fait d'accomplir les actes réservés aux délégués ou médiateur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ser du titre attaché à ces fonctions, sans y avoir été habilité ou après avoir fait l'objet d'un retrait d'habilitation,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contraven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SECTION 6 : Du refus de restitution de signes monétaires contrefaits ou falsifiés.

Article R645-9

Modifié par Décret n°2007-259 du 27 février 2007 - art. 8 (V)

Le fait, par une personne ayant reçu des pièces de monnaie ou billets de banque ayant cours légal en France contrefaits ou falsifiés, de refuser de les remettre ou de les faire remettre à la Banque de France ou à l'établissement public La Monnaie de Paris,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38-2 du code des instruments monétaires et des médaille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peine de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signes monétaires vis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21 et 131-48. Les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42-13 sont applicables.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7 : De l'altération ou de la contrefaçon des timbres-poste ou des timbres émis par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Article R645-10

L'altération des timbres-poste ou des timbres émis par l'administration des finances dans le but de les soustraire à l'oblitération et de permettre ainsi leur réutilis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 l'infraction définie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peine de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timbres vis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21 et 131-48.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Article R645-11

La contrefaçon ou la falsification des timbres-poste ou autres valeurs fiduciaires postales périmés, français ou étrangers, ainsi que l'usage de ces timbres ou valeurs fiduciaires contrefaits ou falsifiés, sont punis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es personnes morales peuvent être déclarées responsables pén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21-2, des infrac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Les peines encouru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nt :

- 1° 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1-41 ;
- 2°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La peine de confiscation est obligatoire pour les timbres et autres valeurs fiduciaires postales vis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21 et 131-48.

La récidive des contraven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132-11 et 132-15.

SECTION 8 : De l'intrusion dans les établissements scolaires

Article R645-12

Le fait de pénétrer dans l'enceinte d'un établissement scolaire, public ou privé, sans y être habilité en vertu de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ou y avoir été autorisé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es personnes coupables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suivantes :

- 1° La confiscation de la chose qui a servi à commettre l'infraction ou de la chose qui en est le produit ;
- 2° 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pour une durée de 20 à 120 heures.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

TITRE V : Des autres contraventions

CHAPITRE III : Des contraventions de la troisième classe

SECTION UNIQUE : Des atteintes involontaires à la vie ou à l'intégrité d'un animal.

Article R653-1

Le fait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s règlements, d'occasionner la mort ou la blessure d'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CHAPITRE IV : Des contraventions de la quatrième classe

SECTION UNIQUE : Des mauvais traitements envers un animal.

Article R654-1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511-1, le fait, sans nécessité, publiquement ou non, d'exercer volontairement des mauvais traitements envers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

CHAPITRE V : D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SECTION UNIQUE : D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d'un animal.

Article R655-1

Le fait, sans nécessité, publiquement ou non, de donner volontairement la mort à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

LIVRE VII : Dispositions applicabl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n Nouvelle-Calédonie et à Mayotte.

TITRE Ier : Dispositions applicables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en Nouvelle-Calédoni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R711-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les livres Ier à VI de la deuxième partie du présent code (Décrets en Conseil d'Etat), à l'exception des articles R. 321-1 à R. 321-12, R. 633-1 à R. 633-5, R. 635-3 à R. 635-7 et R. 645-6, sont applicables en Nouvelle-Calédonie et dans les territoir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s îles Wallis-et-Futuna.

Article R711-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s livres Ier à VI de la deuxième partie du présent code (Décrets en Conseil d'Etat) sont applicables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Article R711-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aux territoires visés à l'article R. 711-1, les termes

énumérés ci-après sont remplacés comme suit :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tribunal d'instance" par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 "département" par "territoire" ;
- "préfet" et "sous-préfet" par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territoire" ;
- "Banque de France " par " Institut d'émission d'outre-mer".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ces territoires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applicables localement.

Article R712-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R. 131-2 est rédigé comme suit :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au regard du code de la route applicable localement,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lorsque sont respectée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juridiction. "

Article R712-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131-4 est rédigé comme suit :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au regard du code de la route applicable localement,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à l'exception de la ou des catégories de véhicules pour lesquelles la juridiction a prononcé l'interdiction de conduire."

Article R712-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1° de l'article R. 131-12 est rédigé comme suit :

"1° La copie du Journal officiel ou du Journal officiel du territoire portant publication de la déclaration de l'association. "

Article R712-4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 deuxièm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R. 131-13 est rédigée comme suit :

"Il consulte, lorsqu'ils existent, les organismes ou services locaux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qui ont trois mois pour donner leur avis."

Article R712-5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 deuxième phrase de l'article R. 131-18 est rédigée comme suit :

"Il adresse copie de la demande aux organismes ou services locaux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lorsqu'ils existent ; ceux-ci ont trois mois pour donner leur avis."

Article R712-6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rticle R. 131-25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R. 131-25. - Lorsqu'un condamné exerce une activité salariée, la durée hebdomadaire cumulée de cette activité e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ne peut excéder de plus de douze heures la durée légale de travail en vigueur localement."

Article R712-7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R. 131-28 est rédigé comme suit :

"3° De s'assurer, si le travail auque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end l'affecter doit s'exercer dans un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ublic ou privé de prévention ou de soins et l'expose à des risques de contamination, qu'il est immunisé contre l'hépatite B, la diphtérie, le tétanos, la poliomyélite et la fièvre typhoïde, ainsi que contre les maladies prévu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R712-8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R. 131-36 est rédigé comme suit :

"Lorsque le personnel de cette personne morale est régi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salariés, l'avis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est adressé au secrétaire du comité d'entreprise ou, le cas échéant, au secrétaire du comité central d'entreprise et, en l'absence de tels comités, aux délégués du personnel titulaire."

CHAPITRE III : Adaptation du livre II.

Néant.

CHAPITRE IV : Adaptation du livre III.

Néant.

CHAPITRE V : Adaptation du livre IV.

Néant.

CHAPITRE VI : Adaptation du livre V.

Article R716-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rticle R. 511-1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R. 511-1. - Les prescriptions relatives aux expériences ou recherches scientifiques ou expérimentales sur les animaux mentionnées à l'article 521-2 sont fixé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CHAPITRE VII : Adaptation du livre VI.

TITRE II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Mayott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R721-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les livres Ier à VI de la

deuxième partie du présent code (Décrets en Conseil d'Etat) sont applicables à Mayotte.

Article R721-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à Mayotte, les termes énumérés ci-après sont remplacés comme suit :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tribunal d'instance" par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 "département" par "collectivité territoriale" ;
- "préfet" et "sous-préfet " par " représentant du Gouvernement" ;
- "Banque de France " par "Institut d'émission d'outre-mer".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la collectivité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applicables localement.

CHAPITRE II : Adaptation du livre Ier.

Article R722-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R. 131-2 est rédigé comme suit :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au regard du code de la route applicable localement,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lorsque sont respectée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juridiction."

Article R722-2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131-4 est rédigé comme suit :

"Le certificat doit comporter, en outre, une photographie récente du condamné et indiquer qu'il vaut, au regard du code de la route applicable localement, justification du droit de conduire, à l'exception de la ou des catégories de véhicules pour lesquelles la juridiction a prononcé l'interdiction de conduire."

Article R722-3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 deuxièm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R. 131-13 est rédigé comme suit :

"Il consulte, lorsqu'ils existent, les organismes ou services locaux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qui ont trois mois pour donner leur avis."

Article R722-4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 deuxième phrase de l'article R. 131-18 est rédigée comme suit :

"Il adresse copie de la demande aux organismes ou services locaux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lorsqu'ils existent ; ceux-ci ont trois mois pour donner leur avis."

Article R722-5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article R. 131-25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R. 131-25. - Lorsqu'un condamné exerce une activité salariée, la durée hebdomadaire cumulée de cette activité ne peut excéder de plus de douze heures la durée légale de travail en vigueur localement."

Article R722-6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3° de l'article R. 131-28 est rédigé comme suit :

"3° De s'assurer, si le travail auque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end l'affecter doit s'exercer dans un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ublic ou privé de prévention ou de soins et l'expose à des risques de contamination, qu'il est immunisé contre l'hépatite B, la diphtérie, le tétanos, la poliomyélite et la fièvre typhoïde, et ainsi que contre les maladies prévues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R722-7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 art. 75 (V) JORF 13 juillet 2001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R. 131-36 est rédigé comme suit :

"Lorsque le personnel de cette personne morale est régi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salariés, l'avis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est adressé au secrétaire du comité d'entreprise ou, le cas échéant, au secrétaire du comité central d'entreprise et, en l'absence de tels comités, aux délégués du personnel titulaires."

CHAPITRE III : Adaptation du livre II.

Néant.

CHAPITRE IV : Adaptation du livre III.

Néant.

CHAPITRE V : Adaptation du livre IV.

Néant.

CHAPITRE VI : Adaptation du livre V.

Néant.

CHAPITRE VII : Adaptation du livre VI.

Néant.